

Economic Outlook

nabo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2009.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2009.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세계대공황 이후 가장 혹독했던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과 실물경제의 침체가 점차 진정되면서 우리 경제는 당초 우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공조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은 바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또다시 발휘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많은 문제에 직면했던 것과 같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뒤에도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기관들과 일부 기업들은 정부지원이 불가피해질 정도로 위기관리능력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권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책이 부족하다면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의 정상적 성장경로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장잠재력의 향상, 경쟁력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가계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국회에 제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경제여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및 성장주도산업의 변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등을 중기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보다 긴 안목으로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차 례

요 약 / 1

I.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 23	
가. 세계경제성장률	23
나. 세계교역량	35
2. 지역별 경제 전망 / 40	
가. 선진국경제	40
나. 개도국경제	46
3.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달러화 전망 / 58	
가. 2009년 동향	58
나. 2010년 이후 전망	59
4. 유가 전망 / 65	
가. 2009년 동향	65
나. 2010년 이후 전망	66
5. 국제금리 전망 / 75	
가. 2009년 동향	75
나. 2010년 이후 전망	76
6. 더블 딥 가능성 점검 / 82	
가. 고용 없는 경기회복	82
나. 가계부채조정과 저축률	86
다. 출구전략	88
라. 상업용 부동산대출과 소비자대출	91
7.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5년간 경제지표 비교 / 96	
가. 세계GDP	96
나. 세계교역량	98
다. 소비자물가	98
라. 실질상품가격지수	100
마. 재정수지적자비율	101

II. 국내경제 전망

1. 생산구조 / 105	
가. 저탄소 녹색산업	105
나. 고령화	117
다. 고용 없는 성장	126
2. 잠재성장률 / 139	
가. 잠재국내총생산(Potential GDP) 추정 방법론	139
나. 자본스톡의 추이 및 전망	141
다. 노동투입의 추이 및 전망	144
라.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및 전망	156
마.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158
3. 지출부문별 / 165	
가. 경제성장률	165
나. 민간소비	182
다. 건설투자	198
라. 설비투자	213
마. 대외거래	229
4. 고용 / 255	
가. 고용 동향	255
나. 중기 고용 전망	262
5. 물가 / 267	

표 차례

[표 I-1]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30
[표 I-2]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31
[표 I-3] 지역국별 GDP 비중 변동 추이	34
[표 I-4] 지역별 및 국별 수출입 비중 추이	38
[표 I-5] 해외 경제여건 전망	39
[표 I-6] 중기 미국 경제지표 전망	41
[표 I-7] 미국 잠재GDP 부문별 기여도 전망	42
[표 I-8] 중기 유럽경제 전망	43
[표 I-9] 중기 일본경제 전망	46
[표 I-10] 중국경제 전망	47
[표 I-11]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	50
[표 I-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향방	64
[표 I-13] 주요 예측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67
[표 I-14] 1990년 이후 중국의 1차 에너지 생산과 소비 추이	68
[표 I-15] 세계 원유시장의 구조변화	70
[표 I-16] 세계상품 원자재소비와 지역별 비중	74
[표 I-17] 금융위기 전후 국제금리 전망	81
[표 I-18] 주요국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및 감세 규모	88
[표 I-19] 미국의 재정수지 전망	89
[표 I-20]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 추이	91
[표 II-1] 주요국 에너지원별 공급비중	109
[표 II-2] 투자와 에너지 효율 제고 효과	110
[표 II-3] OECD 국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10

[표 II-4] 에너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추이 국제비교	111
[표 II-5] 탄소세 부과가 제조업 신출량, 고용 및 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	113
[표 II-6] 제조업 업종별 탄소세 부과의 산출량 감소 효과	113
[표 II-7] 성장동력화 시기 및 육성 정책	114
[표 II-8]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재정투자계획	115
[표 II-9] 녹색 뉴딜 사업 재정소요	116
[표 II-10]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117
[표 II-11] 고령화 진행 속도	118
[표 II-12]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19
[표 II-13] 연령 및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120
[표 II-14] 연령계층별 제조업 취업자 추이	120
[표 II-15]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취업자 증감 추이	121
[표 II-16] 2010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자 규모	122
[표 II-17] 베이비붐 은퇴로 인한 조세부족액 규모	122
[표 II-18] 일본의 소비지출 항목별 추이	125
[표 II-19] 주요 고용지표 추이	127
[표 II-20]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의 국가별 비교	130
[표 II-21] 제조업 업종별 및 규모별 노동투입량 추	133
[표 II-22] 피용자보수 및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140
[표 II-23] 순자본스톡 증가율 및 감가상각률 추이	142
[표 II-24] 최근의 자본스톡 추이	142
[표 II-25] 자본스톡 전망	143
[표 II-26] 주요 노동관련 지표 추이	145
[표 II-27]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추이	146
[표 II-28] 추계인구 주요항목별 추이	147
[표 II-29] 연령계층별 주요 노동투입변수의 추이	148
[표 II-30] 전산업 주당 근로시간 추이	149

[표 II-31] 주요 노동투입변수 전망	151
[표 II-32] 노동투입변수의 잠재수준 전망	156
[표 II-33] 실제 및 잠재 수준의 노동투입량 전망	156
[표 II-34] 투입요소별 실질성장 기여도 추이 및 전망	157
[표 II-35] 총요소생산성 전망	158
[표 II-36] 실질 성장률 및 잠재 성장률 추이	159
[표 II-37] 실질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전망	161
[표 II-38]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추이 및 전망	161
[표 II-39]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와의 전망 비교	165
[표 II-40] 경상GDP 및 1인당 GDP 전망	166
[표 II-41] 금리상승시 월 이자부담 추정	173
[표 II-42]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174
[표 II-43] 선진국 경제 성장률과 한국의 수출증가율의 상관계수	175
[표 II-44] 주요국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	179
[표 II-45] 기업구조조정 추진여건 비교	181
[표 II-46] 금리상승과 상장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181
[표 II-47] 최근 민간소비 동향	184
[표 II-48] 민간소비 전망	192
[표 II-49] 민간소비에 대한 주요 설명변수	194
[표 II-50] 설명변수와 민간소비의 시차상관계수	196
[표 II-51] GDP에 대한 건설투자 비중 추이	198
[표 II-52] 30대선도사업에 대한 중기 투자계획	201
[표 II-53] 녹색뉴딜 관련 건설투자	202
[표 II-54] 4대강살리기사업 투자일정	203
[표 II-55]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의 중기 경상GDP 전망	204
[표 II-56] 제2기 신도시 건설 현황	207
[표 II-57] 최근 설비투자 추이	214

[표 II-58]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216
[표 II-59] 주요 10대그룹 국내외 매출 및 영업이익 비중 추이	217
[표 II-60] 중기 설비투자 전망	218
[표 II-61] 주요 설비투자 설명 변수	223
[표 II-62] 설명변수와 설비투자의 시차상관계수	224
[표 II-63] 수출의 성장기여도 비중 추이	230
[표 II-64]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35
[표 II-65]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236
[표 II-66] 주요 품목의 수출비중 추이	237
[표 II-67] 자동차 판매량 전망	238
[표 II-68] 선종별 장기 신조선 수요전망	239
[표 II-69] 시나리오별 장기 신조선 수요전망	240
[표 II-70] 세계 조선국별 건조능력 전망	241
[표 II-71] 세계반도체시장전망	242
[표 II-72] 주요 품목별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	243
[표 II-73]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효과	248
[표 II-74] 지난 5년간 고용변수 추이	255
[표 II-75] 최근 주요 고용지표 추이	256
[표 II-76]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57
[표 II-77] 산업별 취업자 추이	259
[표 II-78] 산업부문별 취업계수 추이	261
[표 II-79] 주요 고용 지표 전망	263
[표 II-80] 외환위기 당시 GDP갭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271

그림 차례

[그림 I-1] 주요국 산업생산 추이	23
[그림 I-2]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24
[그림 I-3] 주요국 고용 추이	25
[그림 I-4] 주요국 은행 대출환경지수 추이	26
[그림 I-5] 주요국 은행의 CDS스프레드 추이	26
[그림 I-6] 선진국 주가 추이	27
[그림 I-7] 개도국 주가 추이	27
[그림 I-8] 골드만삭스 글로벌 금융 상황지수 추이	28
[그림 I-9] 주요국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추이	28
[그림 I-10] 주요국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29
[그림 I-11] 세계 GDP성장률 전망	32
[그림 I-12] 지역별 GDP성장률 전망	33
[그림 I-13] 2009~2013년 해외경제환경 전망	35
[그림 I-14] 세계 교역량 추이	36
[그림 I-15] 글로벌 무역 환경지수 추이	37
[그림 I-16] 세계 소득에 대한 무역탄력성 추이	37
[그림 I-17] 세계무역량 전망	39
[그림 I-18] 유럽의 성장률 추이	43
[그림 I-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총수출 물량과 설비투자 추이 ..	44
[그림 I-20] 일본의 내수와 순수출 성장기여도 추이	45
[그림 I-21] 중국의 경기부양 대책투자 내역	47
[그림 I-22] 중국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48
[그림 I-23] 중국 도시와 농촌의 1인당 소비지출 추이	48

[그림 I-24] 중국의 소비성향 추이	49
[그림 I-25] 중국의 도시지역 고정투자액 내역	51
[그림 I-26] 중국 도시와 농촌의 소비지출 내역	51
[그림 I-27] 아시아 각국의 민간소비 비율	52
[그림 I-28] 중국 도시지역의 양노보험 가입률 추이	53
[그림 I-29] 중국 도시지역 종업원의 의료보험 가입률	53
[그림 I-30]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질 가치분소득 추이	54
[그림 I-31] 신흥국 직접투자 총 유입액 추이	55
[그림 I-32] 신흥국의 민간자금 유입액 추이	55
[그림 I-33] 해외 송금 수입액 상위 10개국	56
[그림 I-34] BRICs의 세대가처분소득 5,000달러 이상 가계 인구 추이	56
[그림 I-35] 신흥개도국의 소비확대 요인	57
[그림 I-36] BRICs 등 개도국 경제 발전과 내수 확대	57
[그림 I-37] 달러 인덱스 추이	58
[그림 I-38] 미국의 순자본 유출입액 추이	59
[그림 I-39] 미국의 순대외투자 포지션	60
[그림 I-40] 지역별 외환보유고 지수 추이	61
[그림 I-41] 개도국의 금리스프레드	62
[그림 I-42] 개도국의 외평채 발행액	62
[그림 I-43]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비율 전망	63
[그림 I-44] 글로벌 불균형 성장 전망	64
[그림 I-45] 달러인덱스와 유가, 금가격의 변동 추이	65
[그림 I-46] 상품가격과 원유가격 전망	66
[그림 I-47] OPEC의 잉여생산비율 추이	69
[그림 I-48] 세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금액	71
[그림 I-49] 세계 태양광 발전 산업 시장 전망	72
[그림 I-50] 태양전지 생산량 국가별 비중	73

[그림 I-51] 선진국의 국채수익률 추이	75
[그림 I-52] 글로벌 회사채스프레드 변동요인	76
[그림 I-53] 주요 선진국(G3) 양적완화정책과 글로벌 유동성	76
[그림 I-54] 중앙은행 총자산비율 추이	77
[그림 I-55] 지역별 재정수지 전망	78
[그림 I-56] 지역별 소비자물가 전망	79
[그림 I-57] 선진국의 산출량 갭 추이	80
[그림 I-58] 1997년 금융위기와 일본의 GDP갭	80
[그림 I-59] 1991년 금융위기와 스웨덴의 GDP갭	81
[그림 I-60] 더블딥과 장기 경기침체 시나리오	82
[그림 I-61] 최근과 IT 붐과 이후 OECD 실업률	83
[그림 I-62] 유로국가 GDP와 취업자 수 변동 추이	84
[그림 I-63] 주요국의 실업률 전망	85
[그림 I-64] 미국실질 GDP, 노동투입량, 노동생산성 추이	86
[그림 I-65] 미국 가계 순자산과 저축률 추이	87
[그림 I-66] 일본 가계금융순자산과 저축률 추이	87
[그림 I-67] 미국 통화 증가율과 다우존스지수 추이	89
[그림 I-68] 선진국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액	90
[그림 I-69] 주택착공과 자동차판매	90
[그림 I-70] 미국주택대출 연체율추이	92
[그림 I-71] 미국 소비자대출 연체율 추이	92
[그림 I-72] 미국 케이스윌러 주택가격지수	93
[그림 I-73] 미국 대출채권 대손상각비율 전망	94
[그림 I-74] 미국 소득계층별 순자산 규모 추이	94
[그림 I-75] 미국 소득계층별 채무 잔고	95
[그림 I-76] 세계 실질GDP성장률 평균	96
[그림 I-77] 지역별 GDP 성장률 평균	97

[그림 I-78] 세계 무역량 증감률 평균	98
[그림 I-79] 소비자물가 증가율 평균	99
[그림 I-80] 실질 상품가격지수 평균	100
[그림 I-81] 재정수지 적자 비율	101
[그림 II-1] 2009~2014년 국내경제 환경 전망	105
[그림 II-2] 세계 환경시장 전망	106
[그림 II-3] OECD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원별 증가율 비교	107
[그림 II-4] 풍력발전 세계시장 점유율	107
[그림 II-5] 일본의 태양 전지 산출량 추이	108
[그림 II-6] 에너지 수입/GDP 비중 국제비교	108
[그림 II-7]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112
[그림 II-8]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경제적 비중 주요국별 비교	112
[그림 II-9]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관계	114
[그림 II-10] 인구구조 변화 비교	118
[그림 II-11] 65세 이상 인구의 노후 준비 여부	123
[그림 II-12] 65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 방법	123
[그림 II-13]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	124
[그림 II-14]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126
[그림 II-15] 우리나라 취업자 수와 GDP	126
[그림 II-16] 광의의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추이	128
[그림 II-17] 산업생산과 체감실업자수 증감률 추이	129
[그림 II-18] 우리나라 고용탄력성 추이	130
[그림 II-19] 기업규모별 종업원 수 연평균 증가율	131
[그림 II-20] 제조업 근로자수와 산업생산 추이	132
[그림 II-21]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134
[그림 II-22] 건설업 투자와 취업자 수 추이	134
[그림 II-23] 2004~2008년간 산업별 고용탄력성	135

[그림 II-24] 서비스업 취업자	136
[그림 II-25] 내수와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	137
[그림 II-26] 총고정자본형성, 자본스톡 추이 및 전망	143
[그림 II-27]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46
[그림 II-28] 전산업 주당 근로시간 추이	149
[그림 II-29] 생산가능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151
[그림 II-30] 총노동투입 추이 및 전망	152
[그림 II-31] 자연실업률과 실업률갭의 추이	155
[그림 II-32] 총요소생산성 추이 및 전망	158
[그림 II-33] 실질 및 잠재GDP 추이 및 전망	162
[그림 II-34] GDP갭 추이 및 전망	162
[그림 II-35]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167
[그림 II-36] 우리나라의 수출물량과 세계교역량 전망	168
[그림 II-37] 우리나라의 수출환경 전망	168
[그림 II-38] 내수 및 수출증가율 전망	169
[그림 II-39] 지출부문별 기여도 전망	170
[그림 II-40] 수출물량과 설비투자 추계지수 추이	171
[그림 II-41] 외환위기 전후 주요 업종의 자본 투입 증가율	171
[그림 II-42]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추이	172
[그림 II-43] 가계부채 부담 증가	173
[그림 II-44]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내경제 반등 요인	175
[그림 II-45] 미국의 수입물량과 한국의 수출물량 추이	176
[그림 II-46] 한국 및 동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성장 기여율 비교	176
[그림 II-47] OECD 국가의 경기순환과 경기선행지수 추이	177
[그림 II-48] 한국의 경기순환과 경기선행지수 추이	178
[그림 II-49] 미국의 GDP갭 전망	179
[그림 II-50] 우리나라의 순자본유입액 추이	180

[그림 II-51] 민간소비 추이	183
[그림 II-52] 국내소비 부문별 추이	184
[그림 II-53] 실질GDP, 실질GNI, 민간소비 추이	186
[그림 II-54] 교역조건 추이	186
[그림 II-55] 실질GDP 및 취업자 추이	187
[그림 II-56] 민간소비와 실질임금 추이	188
[그림 II-57] 민간소비와 가계신용 추이	189
[그림 II-58]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추이와 자산/부채비	190
[그림 II-59] 전국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득 및 소비 추이	191
[그림 II-60] 중기 민간소비 전망	192
[그림 II-61] 민간소비에 대한 주요 설명변수 추이	195
[그림 II-62] 주요 설명 변수가 대한 소비에 미치는 효과	197
[그림 II-63] 건설투자와 부문별 추이	199
[그림 II-64] 정부의 중기 SOC투자계획	203
[그림 II-65] 2000년 이후 주요 주택시장규제, 주택가격, 주택투자 추이 ..	205
[그림 II-66]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	208
[그림 II-67] 주택건설의 공공수주액에 민간수주액 비율 추이	209
[그림 II-68] 중기 건설투자 전망	211
[그림 II-69] 중기 건설투자 전망	212
[그림 II-70] 경제성장과 설비투자	213
[그림 II-71] 자본재 형태별 설비투자 추이	214
[그림 II-72] 중기 설비투자 전망	218
[그림 II-73] 예측모형의 시나리오별 설비투자 전망	219
[그림 II-74] 벡터오차수정모형의 금리 예측치	220
[그림 II-75] 벡터오차수정모형의 환율 예측치	220
[그림 II-76] 벡터오차수정모형의 GDP 예측치	221
[그림 II-77]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주가 예측치	221

[그림 II-78]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자본재상대가격 예측치	222
[그림 II-79] 설비투자와 GDP, 제조업 가동률의 순환변동치 추이	225
[그림 II-80] 설비투자와 자본재상대가격, 주가의 순환변동치 추이	225
[그림 II-81] 설비투자와 환율, 금리의 순환변동치 추이	226
[그림 II-82]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수출의 순환변동치 추이	226
[그림 II-83] 주요 변수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227
[그림 II-84] 주요 변수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228
[그림 II-85] GDP 대비 수출비중 추이	229
[그림 II-86] 주요 국가의 수출증가율 추이	232
[그림 II-87] 주요 국가의 산업생산 추이	232
[그림 II-88] 중기 수출 전망	233
[그림 II-89]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출비중 추이	244
[그림 II-90] 총수입물량 및 증가율 추이	245
[그림 II-91] 성질별 수입기여도 및 수입증 추이	246
[그림 II-92] 중기 수입 전망	247
[그림 II-93]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효과 구성비	248
[그림 II-94] 내수와 수입의 증가율 추이	249
[그림 II-95] 세계경제성장률 및 국제유가 추이	250
[그림 II-96] 중국의 석유소비비중 및 증가율 추이	251
[그림 II-97] 경상수지 추이	252
[그림 II-98] 중기 경상수지 전망	253
[그림 II-99] 여행수입 및 지급 추이	254
[그림 II-100] 해외신규법인, 해외투자금액 및 사업서비스 추이	254
[그림 II-101]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의 전년동기차 추이	257
[그림 II-102] 산업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258
[그림 II-103]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259
[그림 II-104] 서비스업 주요 부문별 취업자 증감추이	260

[그림 II-105]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261
[그림 II-106] 취업의 탄력성 추이	262
[그림 II-107] 외환위기사 성장과 고용	264
[그림 II-108] 최근의 성장과 고용	265
[그림 II-109] 물가 상승률 추이	267
[그림 II-110] 수입물가, 원유수입단가, 환율 추이	268
[그림 II-111] GDP 추이	268
[그림 II-112] GDP갭 및 소비자물가 추이	269
[그림 II-113]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	270
[그림 II-114]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전후 화폐유통속도 순환치	272
[그림 II-115]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 추이	273
[그림 II-116] 교역조건과 디플레이터의 정관계	274
[그림 II-117] 세계경제성장률과 디플레이터의 역관계	274
[그림 II-118] GDP디플레이터 전망	275
[그림 II-119]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의 중기 비교	276

요 약

1. 경제성장률 전망

- 2010년 중 3.8%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경제는 2011년 중 3.9%, 2012년 중 4.2%, 2013년 중 4.5%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는 2010년 중 실질경제성장률이 4.0%,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 2010년부터 2013년 중 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6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와의 전망 비교]

(단위: %, %p)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성장률	국회예산처(A)	-1.0	3.8	3.9	4.2	4.5
	정부(B)	-1.5	4.0	5.0	5.0	5.0
	격차(B-A)	-0.5	0.2	1.1	0.8	0.5
경상성장률	국회예산처(A)	1.9	6.4	6.1	6.5	6.9
	정부(B)	1.1	6.6	7.6	7.6	7.6
	격차(B-A)	-0.8	0.2	1.5	1.1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4% 2011년 중 6.1%, 2012년 중 6.5%, 2013년 중 6.9%로 연평균 6.5%를 나타낼 전망
 - 한편 2010년 정부의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6%, 2011년부터 2013년 중 7.6%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정부의 경상GDP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8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완만한 소득증가로 2008년 19,106달러에 달했던 1인당GDP는 2013년 25,835달러(35.2%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경상GDP 및 1인당 GDP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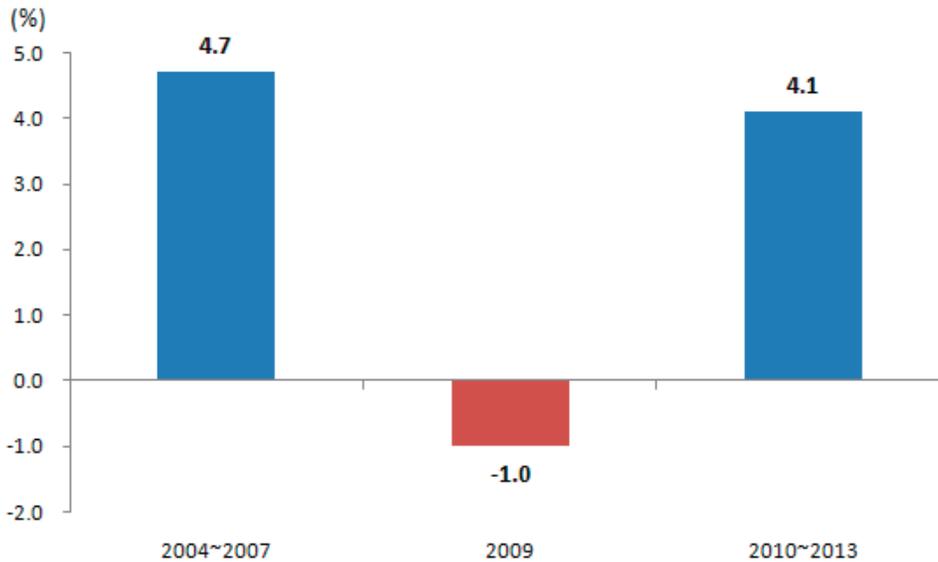
	경상GDP		1인당GDP (달러)	평균환율 (원)	인구 (천명) ¹⁾
	조원	10억달러			
2000	603	534	11,350	1,131	47,008
2001	651	505	10,656	1,291	47,357
2002	721	576	12,092	1,251	47,622
2003	767	644	13,448	1,192	47,859
2004	827	722	15,037	1,145	48,039
2005	865	845	17,548	1,024	48,138
2006	909	951	19,692	956	48,297
2007	975	1,049	21,655	929	48,456
2008	1,024	929	19,106	1,103	48,607
2009	1,043	811	16,642	1,286	48,747
2010	1,110	936	19,149	1,186	48,875
2011	1,178	1,045	21,322	1,128	48,989
2012	1,254	1,181	24,067	1,061	49,083
2013	1,340	1,270	25,835	1,055	49,163

주: 1) 인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추계인구를 이용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글로벌 금융위기기간(2008년부터 2009년)을 제외한 2010년~2013년의 국내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1%로 2004년~2007년(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4.7%)보다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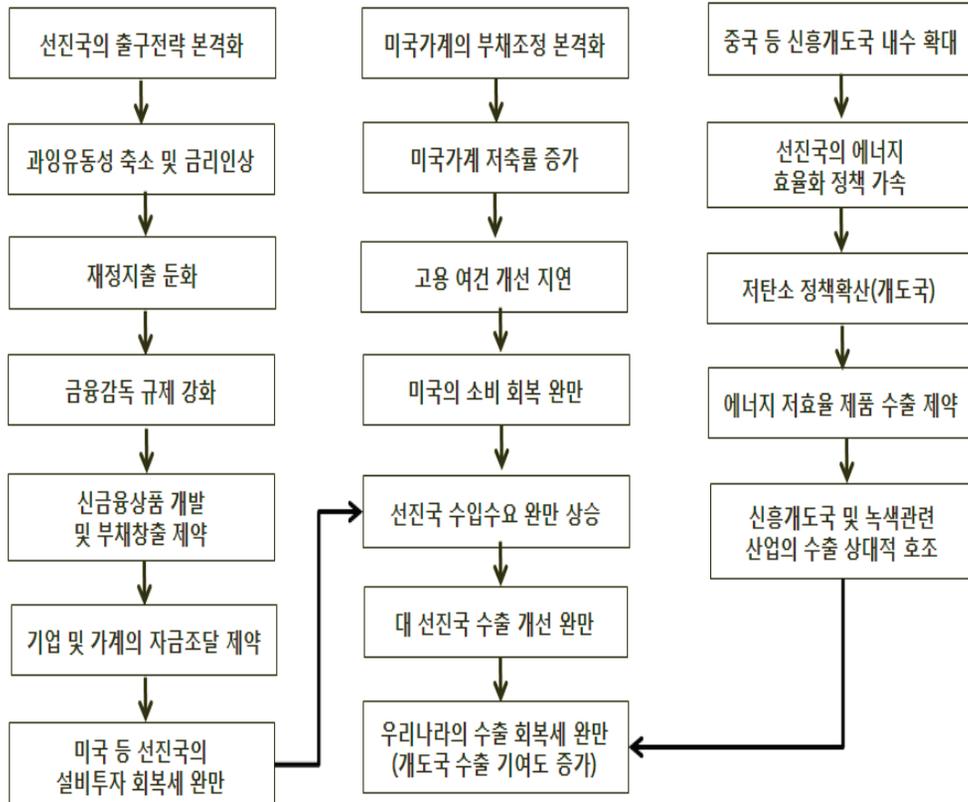


주: 연평균성장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10년~2013년 중 국내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1.1%p → 2009~2013년 중 0.5%p)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3.7%p → 2010~2013년 중 3.4%p)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수출환경이 개선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대개도국 수출의존도(개도국의

내수확대 정책 예상)가 더욱 증가하는 반면에 대선진국 수출의존도(소비 회복지연)는 낮아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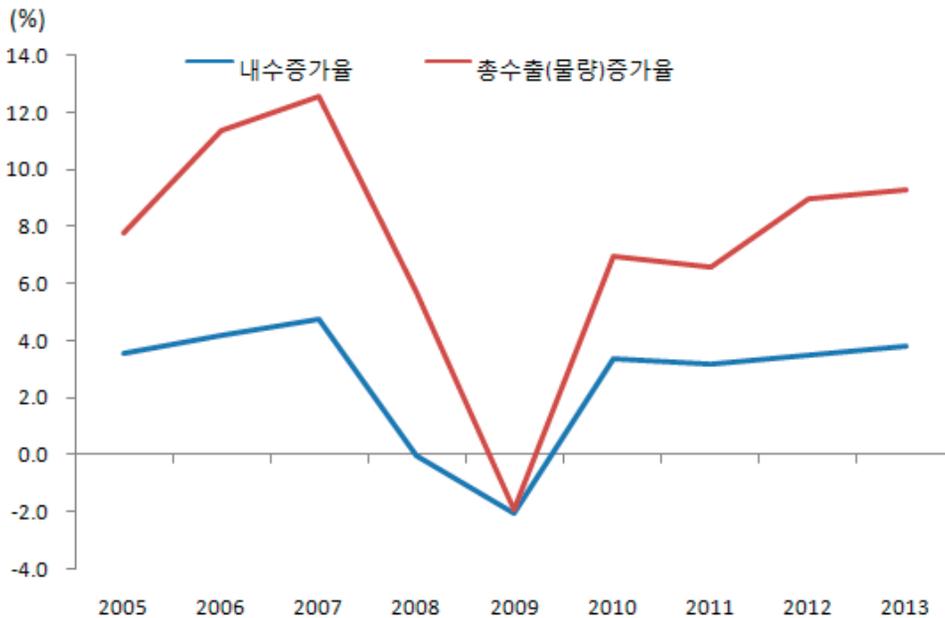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수출환경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진전, 출구전략 본격화로 인한 금리인상 등이 예상되기 때문임

[내수 및 수출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09년 2/4분기 이후 반등세를 보인 국내경제성장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2010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첫째, 2009년 중 급반등세를 보인 세계경제와 교역량이 2010년 이후 매우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둘째, 과거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의 경기지표 움직임을 보면 위기 이후 주요 경제 지표들의 변동 폭이 축소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특히 IT버블 붕괴 이후) 때문임
 - 셋째,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1.0	3.8	3.9	4.2	4.5
민간소비(%)	-1.5	2.6	2.6	3.0	3.2
건설투자(%)	3.0	2.7	2.9	2.0	1.8
설비투자(%)	-14.1	9.8	7.5	9.0	10.5
총수출(%)	-1.9	7.0	6.6	9.0	9.3
총수입(%)	-7.1	8.8	6.1	8.2	8.7
경상수지(억달러)	340	147	108	112	91
상품수지(억달러)	502	399	384	421	419
상품수출(%)	-14.7	14.3	10.6	12.4	12.8
상품수입(%)	-25.2	19.8	12.1	12.7	14.0
소비자물가(%)	2.8	2.5	2.5	2.7	2.8
실업률(%)	3.7	3.5	3.3	3.4	3.3
취업자수 증감(%)	-0.6	0.7	0.8	0.9	1.0
금리(국고채 3년, %, 평균)	4.1	4.8	4.8	4.9	5.0
환율(원/달러, 평균)	1,286	1,186	1,128	1,061	1,055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상품수출입은 국제수지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기간별 거시경제지표 전망 비교]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경제성장률(%)	4.7	4.1	4.2	3.1
민간소비(%)	3.7	2.9	3.1	2.0
건설투자(%)	0.7	2.4	0.1	2.5
설비투자(%)	6.7	9.2	4.9	4.5
총수출(%)	12.9	8.0	11.4	6.0
총수입(%)	10.6	8.0	9.2	5.0
경상수지(억달러)	136.0	114.4	96.0	159.5
상품수지(억달러)	316	406	265	425
상품수출(%)	17.9	12.5	17.2	7.1
상품수입(%)	19.0	14.6	19.6	6.7
소비자물가(%)	2.8	2.6	3.2	2.7
실업률(%)	3.5	3.4	3.5	3.4
취업자수 증감(%)	1.4	0.9	1.3	0.6
금리(국고채 3년, %, 평균)	4.6	4.9	4.7	4.7
환율(원/달러, 평균)	1,013.4	1,107.5	1,031.3	1,144.5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상품수출입은 국제수지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2. 잠재성장률

- 잠재성장률은 2009~2013년 중 연평균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잠재성장률은 3.5%로 2008년(3.9%)에 비해 0.4%p 하락하고 2010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3.8%가 될 전망이다
 - 향후 5년 중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각각 0.3%p와 1.8%p로 동일하지만,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0.4%p 하락해 1.6%p가 될 것으로 추정됨
 - 2009~2013년 중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3.1%, 2009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4.1%로 전망되어 동기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GDP갭을 보면 2008년 0.3%에서 2009년 -4.2%, 2010년 -3.9%, 2011년 -3.7%, 2012년 -3.3%, 2013년 -2.7% 등으로 나타나 2013년에도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와 같이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과 2011년 연평균 5.7% 성장해야 하며, 2013년까지 잠재GDP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의 성장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 위와 같은 잠재성장률 전망치와 정부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제한 잠재성장률 전망치인 2010년 4%내외, 2011~2013년 5%내외(2010~2013년 연평균 4.7% 내외)와는 상당한 차이(1%p내외)가 존재함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대비, 연평균 %)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성장률	-1.0	3.8	3.9	4.2	4.5
잠재성장률	3.5	3.6	3.7	3.8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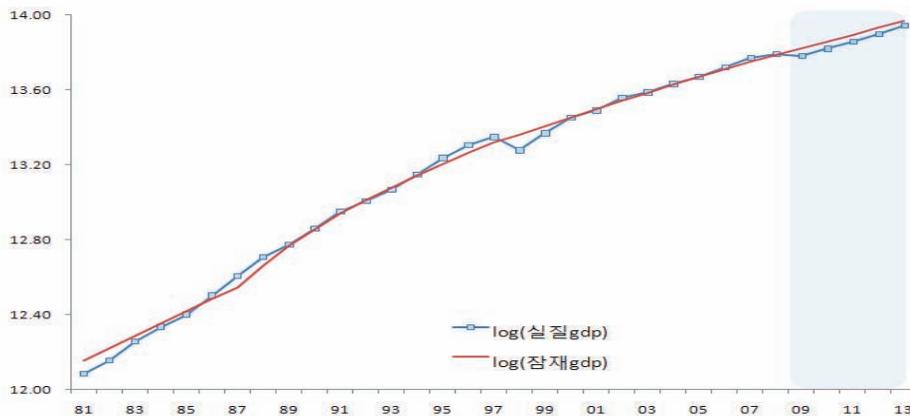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추이 및 전망]

(단위: 연평균 %, %p)

기간	잠재성장률	요인별 잠재성장 기여도		
		노동	자본	중요소생산성
1981~1990	7.8	1.3	4.8	1.6
1991~2000	6.0	0.8	3.4	1.8
2001~2008	4.2	0.3	2.2	1.8
2004~2008	4.1	0.3	2.0	1.8
2009~2013	3.7	0.3	1.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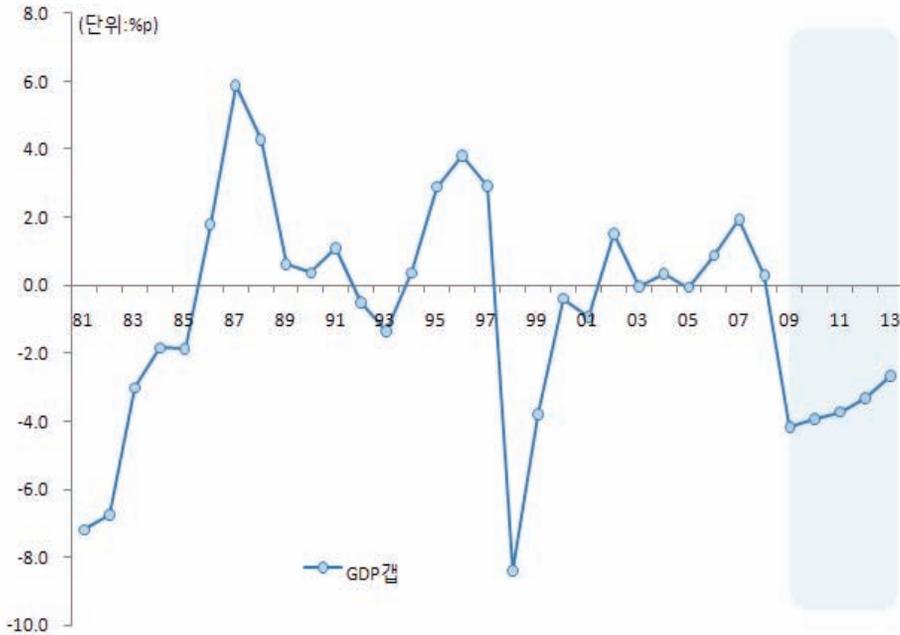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실질 및 잠재GDP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GDP갭 추이 및 전망]



주: GDP갭은 실질GDP의 잠재GDP 수준으로부터의 퍼센티지 갭으로 계산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잠재성장률 전망 비교]

(단위: 전년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NABO 전망치	3.5	3.6	3.7	3.8	3.8
정부 전망치	-	4% 내외	5% 내외	5% 내외	5% 내외

자료: 기획재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

3. 부문별 전망

3-1.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의 연평균(3.7%)보다 0.8%p 감소할 전망
 -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5%, 2010년과 2011년 2.6%,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0%,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 부진의 중요한 요인은 첫째는 낮은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함께 전망 기간(2010~2013년) 중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0.9%로 2004~2007년(연평균 1.4%)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임
 - 둘째는 소비자물가가 2010~2013년 중 연평균 2.6%로 비교적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명목임금상승률은 연평균 5% 내외를 기록해 실질임금상승률은 2.4% 정도로 지난 4년(2004~2007년) 중 연평균 실질임금상승률 3.5%보다 1.1%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금리가 전망치(2010~2013년 연평균 4.9%;국고채 3년 만기 기준)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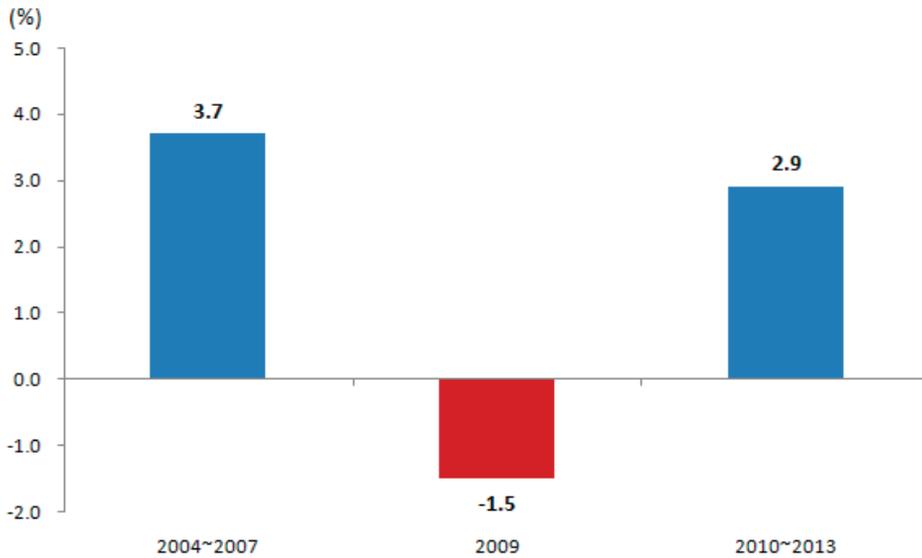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대비, %)

연도별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1.5	2.6	2.6	3.0	3.2	3.1	2.0	3.7	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민간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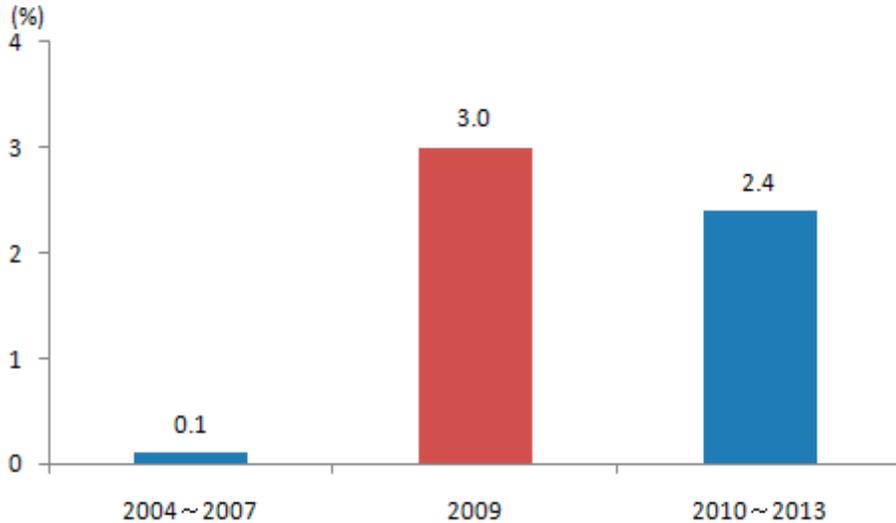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2. 건설투자

□ 건설투자증가율은 2010~2013년 중 연평균 2.4% 증가할 전망이다

- 4대강살리기사업을 비롯한 녹색뉴딜사업 및 30대선도프로젝트 등 대규모 SOC투자는 2010~2011년에 큰 폭 증가할 전망이다
- 주택 관련 규제완화 및 저금리 힘입어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도시건설에 따른 주택투자는 2011~2012년에 가장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로는 2010년 2.7%, 2011년 2.9%, 2012년 2.0%, 2013년 1.8%를 나타낼 전망이다

[건설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지는 않을 전망
 - SOC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분야에는 국비투입이 2010~2013년 중 연평균 2.0% 증가하는 데 그침
 - 또한 경상경제성장률도 정부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SOC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물류 등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한 잠재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경제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 시 건설투자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

3-3.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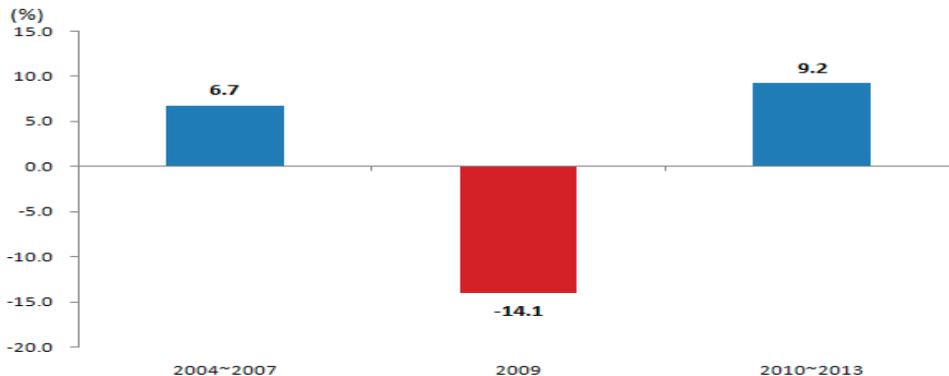
- 설비투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9.2% 증가해 위기 전 4년(2004~2008) 평균 6.7%에 비해 2.4%p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10년 설비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저금리, 그리고 기저효과 등으로 9.8% 증가하겠으나, 2011년에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7.5%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201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를 상회하고, 민간소비 증가도 3%대로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상대 가격 하락과 금리안정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각각 9.0%,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설비투자 전망]

(단위: 전년대비, %)

연도별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14.1	9.8	7.5	9.0	10.5	4.9	4.5	6.7	9.2

[설비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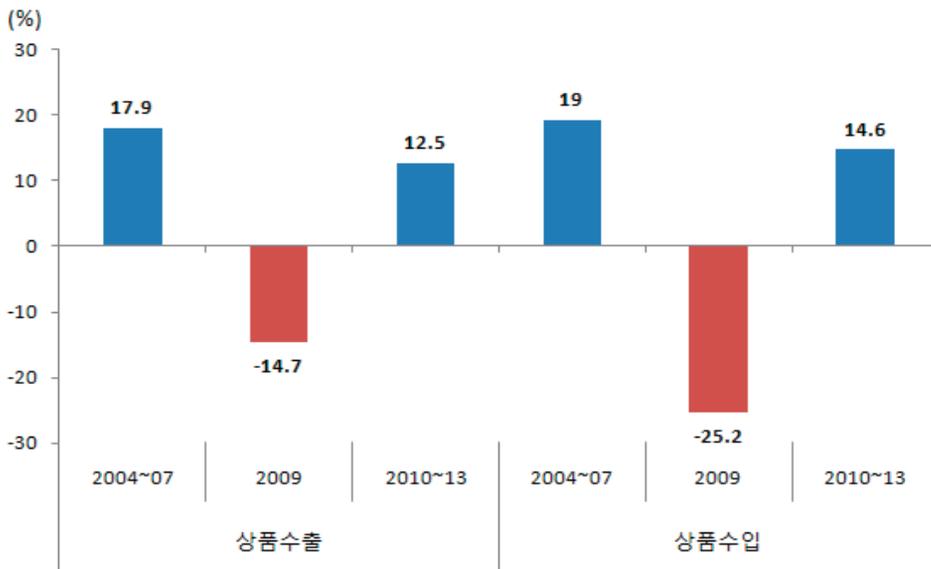
3-4. 수출·입

- 2010~2013년 기간 중 상품수출 증가세는 완만히 둔화되어 연평균 12.5%(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17.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세계교역량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이외에도 원화강세 기조로 채산성 및 수출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임
 - 경기회복세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수출증가는 개도국 중심이 될 전망
 -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시장확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박수출도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로 수출 증가율을 전망해보면 금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4.7% 감소하고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2010년 14.3% 증가한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0.6%, 12.4% 12.8% 증가할 전망
 - 통관기준 수출은 2009년 15.8% 감소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3.2%, 10.6%, 12.3%, 12.7% 증가 전망
- 2010~2013년 기간 중 상품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14.6%(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19.0%에 비해 둔화될 것임
 -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하면 국제원유 및 비원유 원자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수입증가율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수입증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은 수출 감소, 내수부진 및 국

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5.2% 감소하고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9.8%, 12.1%, 12.7%,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통관기준 수입은 2009년 25.4% 감소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9.8%, 12.1%, 12.6%, 14.0% 증가 전망

[수출·입(국제수지 기준) 전망]



주: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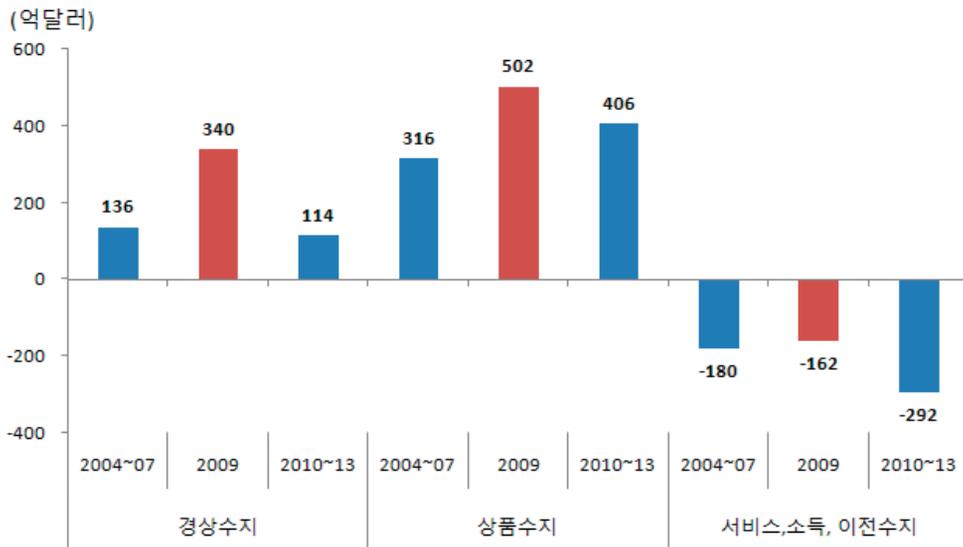
3-5. 국제수지 전망

- 경상수지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4~2007년의 연평균 136억 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0~2013년까지 상품수지는 2004~2007년의 연평균 316억 달러 흑자

에서 연평균 406억 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수지를 비롯한 기타수지(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9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 서비스수지는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2010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적자폭이 다시 증가할 전망
- 연도별 경상수지는 2009년 3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47억 달러 흑자, 108억 달러 흑자, 112억 달러 흑자, 91억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은 점차 축소 전망

[경상수지 전망]



주: 연평균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4. 고용

- 취업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0.9% 증가해 2004~2007년 중 연평균 증가율 1.4%(32.4만명)보다 0.5%p(11만 여명) 감소하고, 동기간 실업률은 3.4%로 0.1%p 감소할 전망
 -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도 줄어 실업률은 3.5%, 취업자는 14.5만(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에도 고용사정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10년에 이어 2.6%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설비 투자의 증가세도 2010년 9.8%에서 7.5%로 둔화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여력이 크게 나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2012년과 2013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4%대로 회복되면서 고용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고용 확대 폭이 크지 않을 전망임

[주요 고용 지표 전망]

(단위: %, 천명)

	연도별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실업률	3.7	3.5	3.3	3.4	3.3	3.5	3.4	3.5	3.4
취업자	-0.6 (-135)	0.7 (145)	0.8 (170)	0.9 (200)	1.0 (220)	1.3 (288)	0.6 (120)	1.4 (324)	0.9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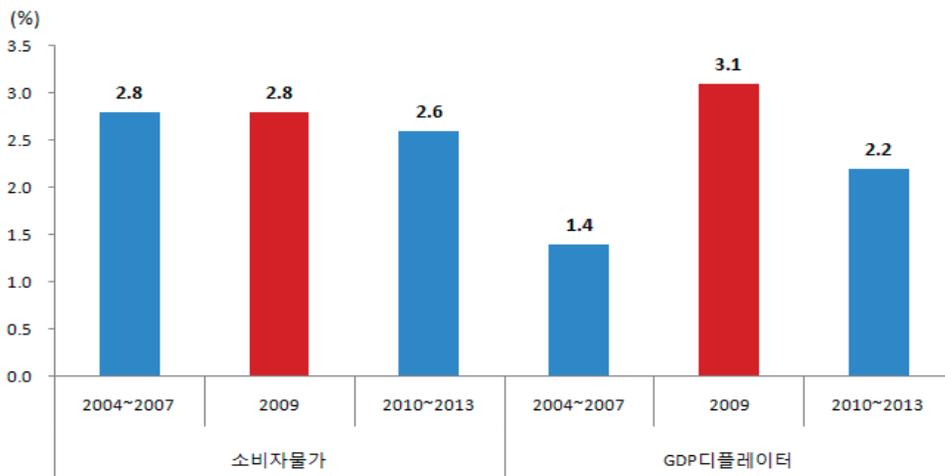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물가 및 경상GDP

- 소비자물가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6%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2.8%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2013년 중에 GDP갭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아져 물가압력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GDP갭은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차감(%갭)한 것으로 GDP갭이 낮으면 물가압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
 - 반면 연도별 보면 2010~2011년 2.5%, 2012년 2.7%, 2013년 2.8%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저금리 및 신용확대정책)에 힘입어 향후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 화폐유통속도의 상승으로 물가압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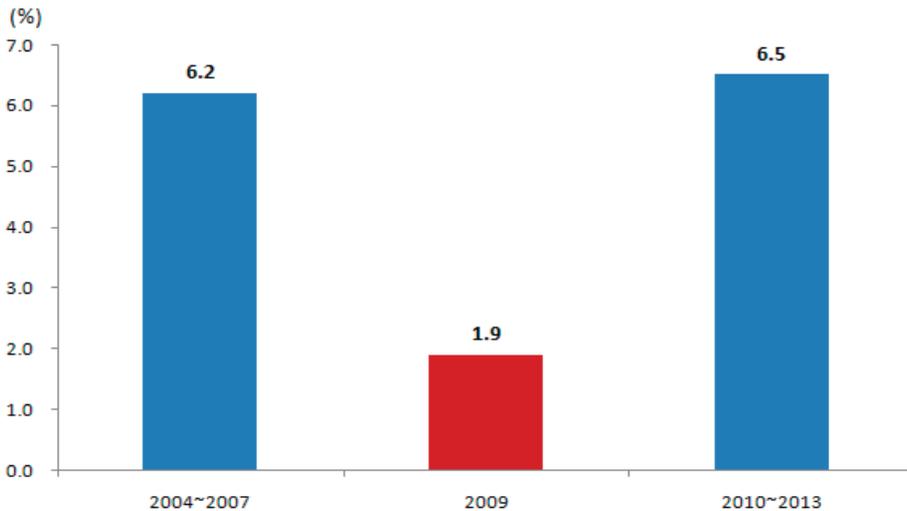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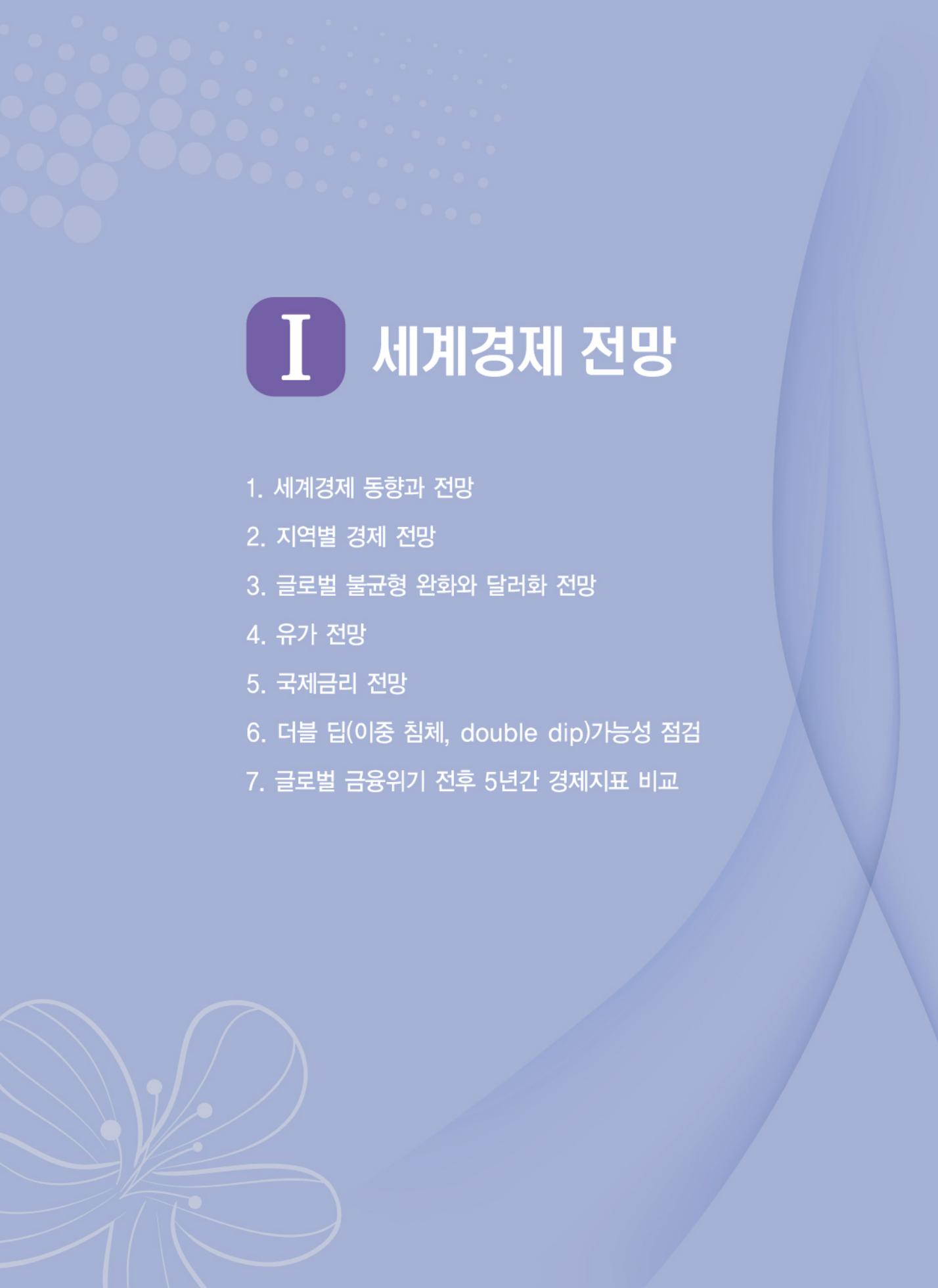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GDP디플레이터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1.4%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2005~2006년 중 이례적으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여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된 것이 2004~2007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임
 - 한편 2010~2013년 기간 중에는 교역조건이 완만히 악화될 것으로 보여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다소 하회하게 될 것임
- 2010~2013년 중 경상GDP성장률은 연평균 6.5%로 2004~2007년 중 6.2%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교역조건 악화세가 완만하여 상대적으로 순수출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기 때문임
 - 연도별로는 2010~2011년 중에는 6%대 초반, 2012~2013년 중에는 6% 중후반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경상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I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2. 지역별 경제 전망
3.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달러화 전망
4. 유가 전망
5. 국제금리 전망
6. 더블 딥(이중 침체, double dip)가능성 점검
7.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5년간 경제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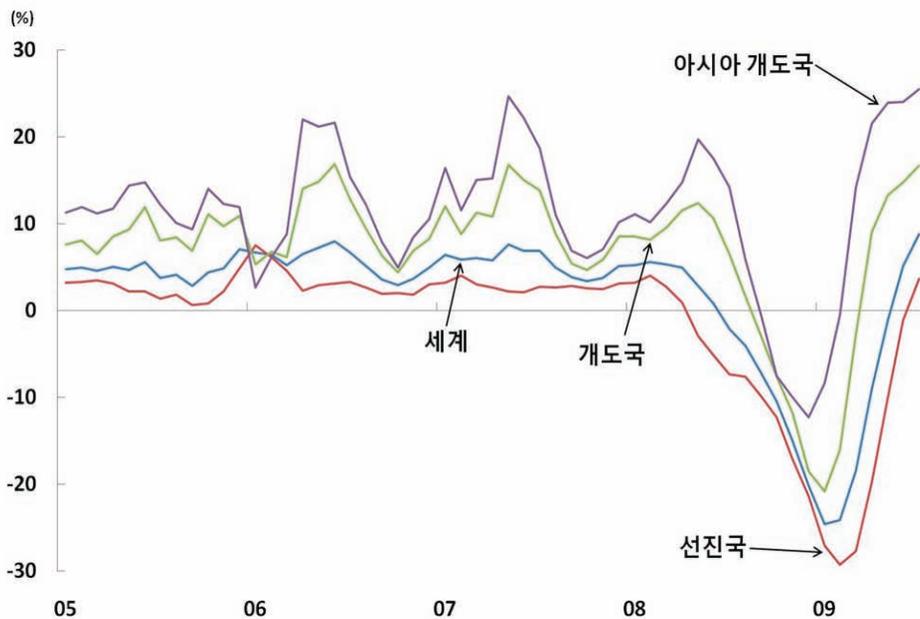
1.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가. 세계경제성장률

(1) 2009년 동향

2009년 세계경제는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안정화정책 등 국제적인 정책공조에 힘입어 세계산업생산이 반등하면서 2009년 1/4분기를 바닥으로 2/4분기 이후 “V”자형의 빠른 반등세를 보여 주고 있다([그림 I-1]).

[그림 I-1] 주요국 산업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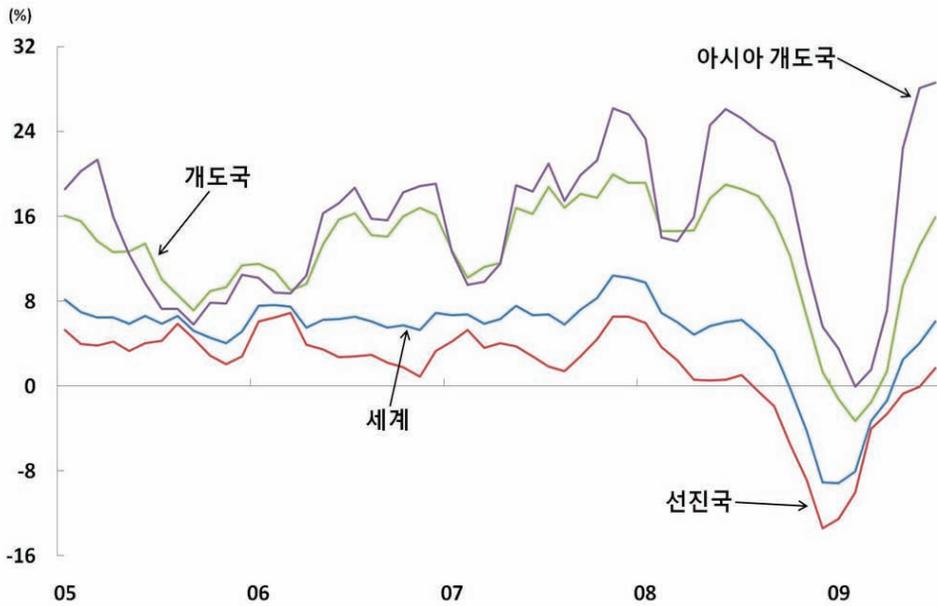
주: 전년동기비 3개월 이동평균.

자료: IMF, Datastream.

지역별 산업생산추이를 비교해 보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개도국 중에서

도 아시아개도국이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세를 보여 주고 있다. 세계소매판매도 2009년 1/4분기를 바닥으로 빠른 반등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세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의 소매판매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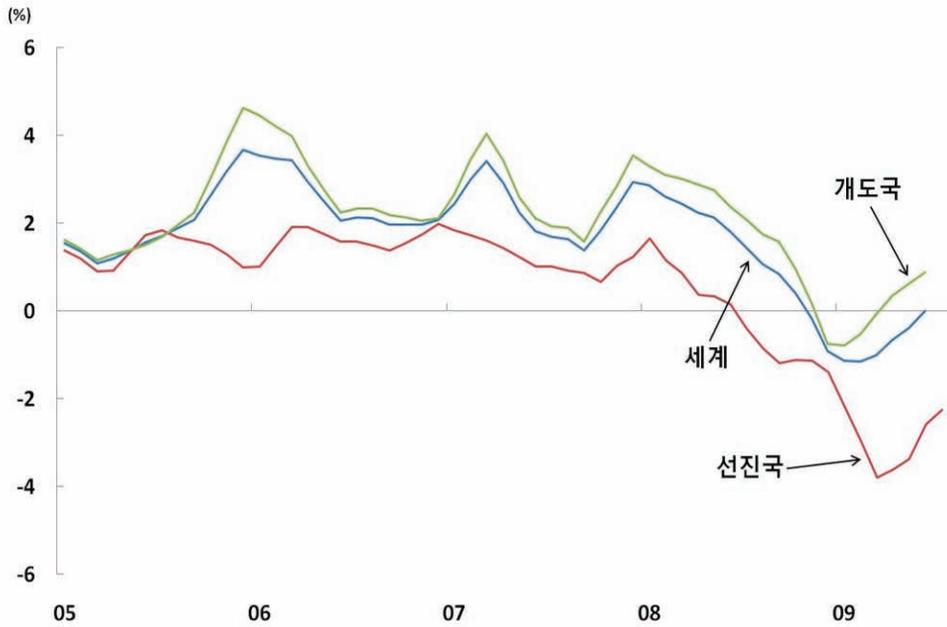
[그림 1-2]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주: 전년동기비 3개월 이동평균.
 자료: IMF, Datastream.

세계고용지표도 2009년 2/4분기 이후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그림 1-3]). 하지만 고용지표는 생산 및 소매판매보다는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고용증가세는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개도국의 고용증가세는 소폭이나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도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더 현저한 모습이다.

[그림 1-3] 주요국 고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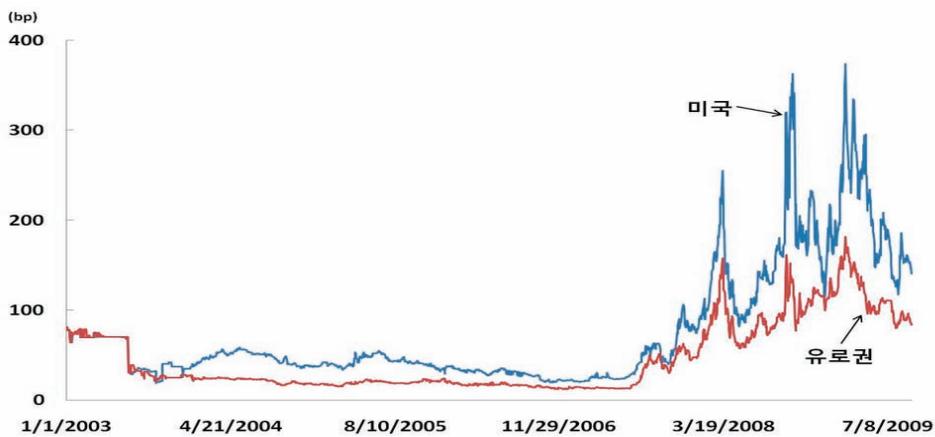
주: 전년동기비 3개월 이동평균.
 자료: IMF, Datastream.

세계 실물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빠르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선진국 금융시장은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양적금융완화정책 등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단기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대출 엄격화지수 하락)되었고 금융안정화정책 등으로 주요 선진국 은행의 신용부도스왑(CDS)스프레드도 빠르게 하락 추세를 보였다.

[그림 1-4] 주요국 은행 대출환경지수(엄격화지수) 추이



[그림 1-5] 주요국 은행의 CDS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선진국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개도국 채권의 신용스프레드도 2009년 2월 말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보였다. 신용경색 완화와 실물경제 회복기대로 경기에 선행하는 각국의 주가도 빠르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6] 선진국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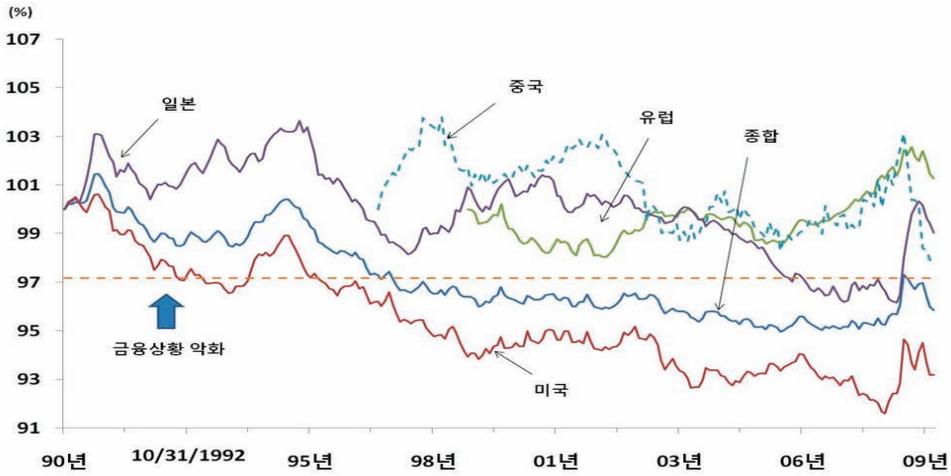
[그림 1-7] 개도국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신용경색 완화로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금융상황지수도 2009년 3월 초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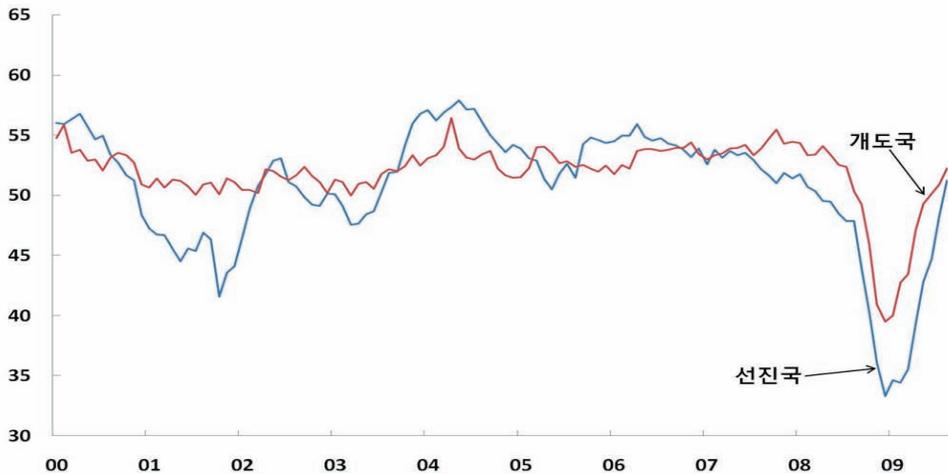
[그림 1-8] 골드만삭스 글로벌 금융 상황지수 추이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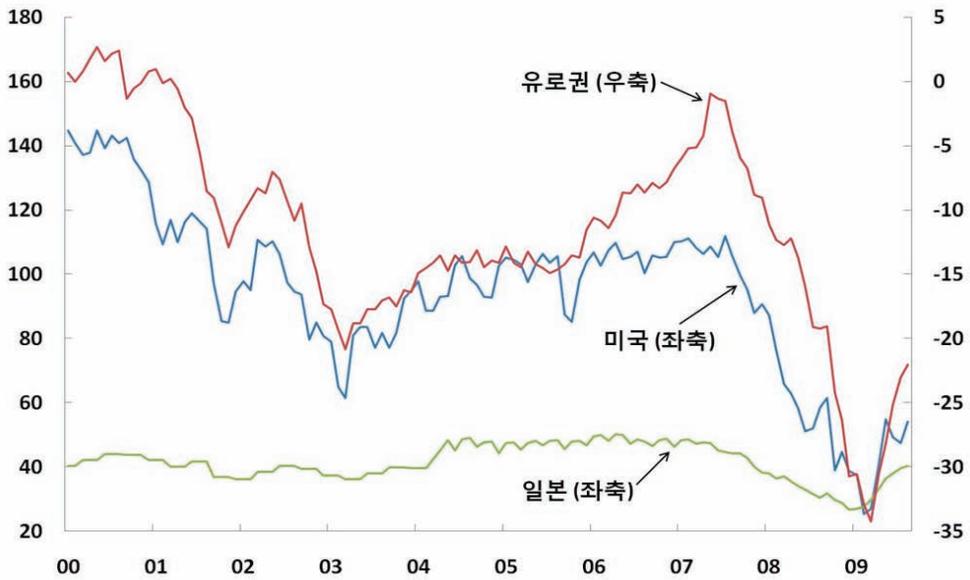
경기선행지수인 주요국 경기실사지수(그림 1-9)와 소비자심리지수(그림 1-10)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기가 단기적으로 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림 1-9] 주요국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10] 주요국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무역의 글로벌화 진전과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지표는 동조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실물경제지표 간의 연계성이 높아졌고 실물경제지표와 금융시장지표와의 연관성도 커졌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수입, 소매판매, 산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자 동아시아국가들의 생산, 수출, 소매판매도 동시에 일제히 침체국면으로 빠져 들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표 1-1]).

[표 1-1]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08				2009	
		1/4	2/4	3/4	4/4	1/4	2/4
미국	소매 판매	0.2	2.2	0.4	-5.4	-4.7	-4.3
	수입액	11.4	14.2	14.3	-4.7	-29.9	-34.7
	산업생산	1.4	-0.4	-3.2	-6.8	-11.5	-13.2
수출액 (통관)	한국	17.4	23.1	27.0	-9.9	-25.2	-20.5
	일본	5.9	1.8	3.2	-23.1	-46.9	-38.5
	중국	21.4	22.4	23.0	4.3	-19.7	-23.4
	대만	12.6	8.8	1.9	-23.7	-32.1	-26.2
산업 생산	한국	10.9	8.9	5.6	-11.3	-15.5	-6.2
	일본	2.4	0.8	-1.5	-10.7	-34.6	-27.8
	중국	28.0	29.1	27.2	9.2	6.5	-4.3
	대만	12.6	7.1	0.5	-21.2	-32.4	-16.6
소매 판매	한국	4.4	2.9	1.4	-4.2	-4.9	1.6
	일본	1.8	0.2	0.8	-1.5	-3.9	-2.8
	중국	20.6	22.2	23.2	20.6	15.0	15.0
	대만	4.7	2.0	-3.6	-6.7	-4.1	-2.4

자료: Bloomberg.

이에 따라 여타 선진국 경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계경제가 2008년 4/4분기 이후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하고 2009년 2/4분기 이후 동시에 반등한 것이다.

경제위기 전후 경제지표들의 연계성이 높아진 것은 세계무역과 금융시장이 개방 확대되고 통합화 된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정책 공조가 잘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선제 적인 정책 공조로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표 1-2]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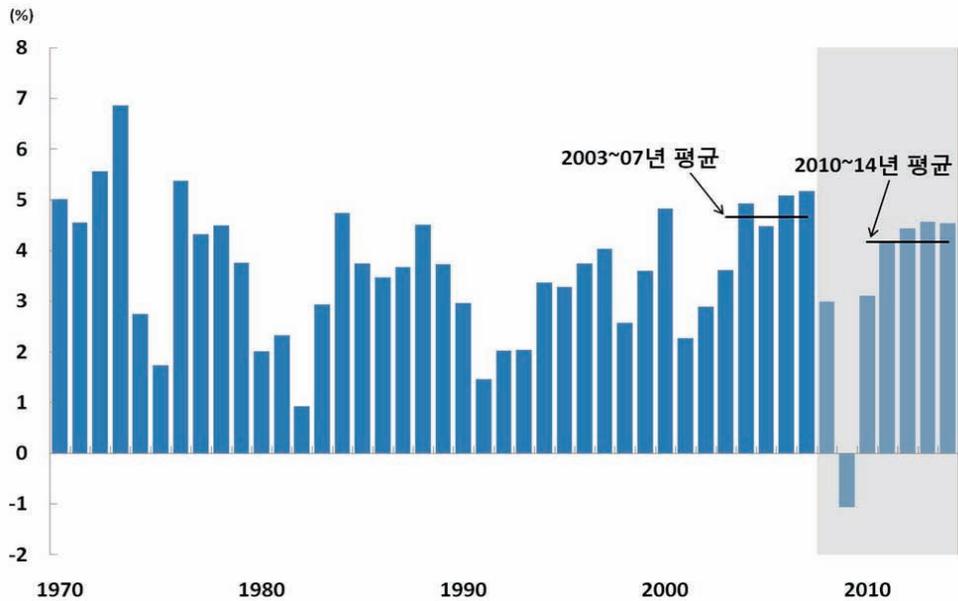
	2008. 1/4	2/4	3/4	4/4	2009. 1/4	2/4
일본	1.3	0.6	-0.3	-4.3	-8.7	-6.4
미국	2.0	1.6	0.0	-1.9	-3.3	-3.9
유로	2.2	1.5	0.5	-1.7	-4.9	-4.7
독일	2.9	2.0	0.8	-1.8	-6.7	-5.9
영국	2.5	1.8	0.5	-1.8	-4.9	-5.5
호주	3.4	3.0	2.4	0.7	0.3	0.6
중국	10.6	10.1	9.0	6.8	6.1	7.9
한국	54.5	4.3	3.1	-3.4	-4.2	-2.2
대만	6.3	4.6	-1.1	-8.6	-10.1	-7.5
인도	8.6	7.8	7.7	5.8	5.8	6.1

자료: Bloomberg.

(2) 2010년 이후 전망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경제(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기간 제외)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중 -1.1%성장한 세계경제는 2010년 중 3.1%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4.1%의 성장이 예상(연평균)되고 있다.

[그림 I-11] 세계 GDP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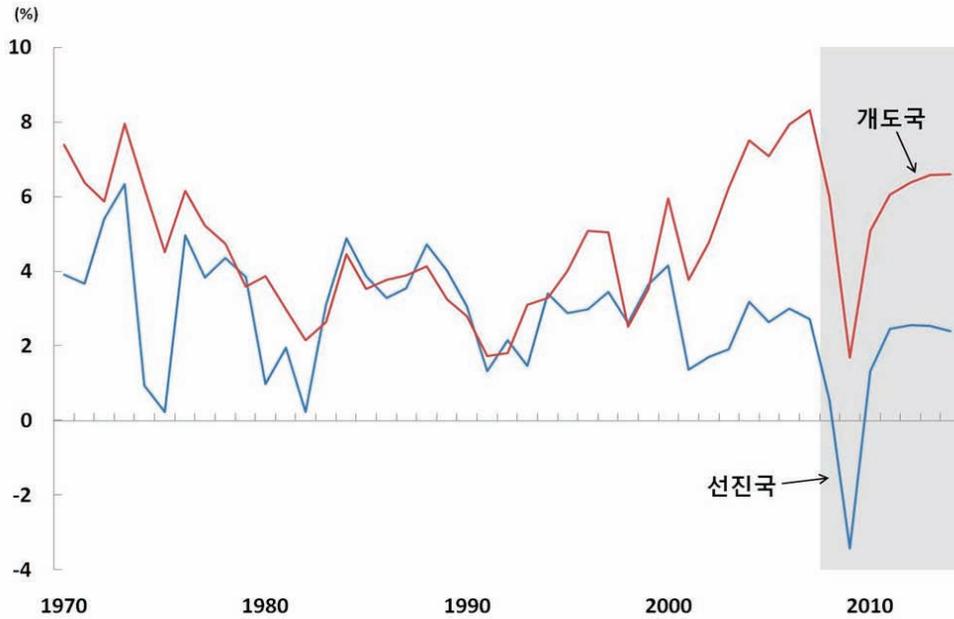


주: 전년동기비.

자료: IMF.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3년 중 세계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2%로 위기 이전(2003~2007년)의 연평균 성장률(4.7%)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I-11]). 지역별로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2%로 개도국의 경제성장률(6.0%)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진국 경제성장률과 개도국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부실채권처리 지속, 가계의 과잉부채 조정,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3년 중 세계경제성장 기여도중 개도국의 성장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2] 지역별 GDP성장률 전망



주: 전년동기비.
자료: Bloomberg.

2000년 이후 미국과 일본GDP가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GDP가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졌는데 상당기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중 미국과 일본GDP가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7%, 14.6%였으나 2008년 중 각각 23.5%, 8.1%로 낮아졌다. 반면에 중국GDP가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8%에서 2008년 중 7.3%로 높아졌다.

[표 1-3] 지역국별 GDP 비중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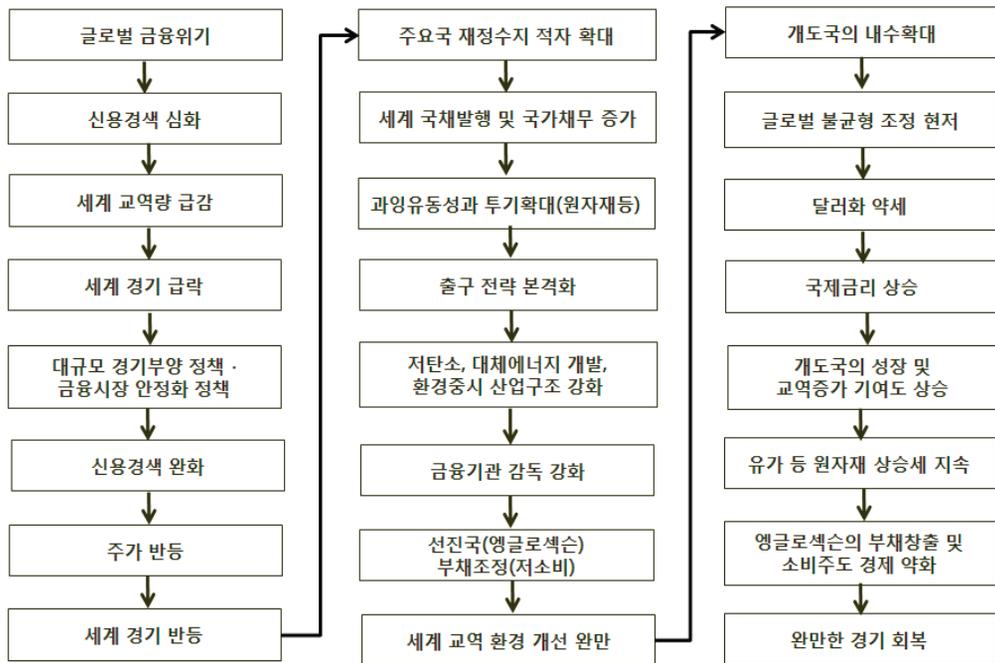
	GDP 비중(%)					2008년 GDP (10억달러)	1인당 GDP (달러)
	1985	1995	2000	2005	2008		
아시아	21.3	29.0	27.3	24.6	25.9	14,720	10,830
일본	10.5	17.8	14.6	10.1	8.1	4,924	38,559
중국	2.4	2.5	3.8	5.0	7.3	4,402	3,315
한국	0.8	1.8	1.7	1.9	1.6	947	19,505
인도	1.7	1.2	1.4	1.7	2.0	1,210	1,016
ASEAN	1.7	2.3	1.9	2.0	2.5	1,506	9,555
유럽	25.3	34.0	29.2	34.5	35.7	21,690	21,118
EU	24.0	30.9	26.6	30.6	30.3	18,374	35,775
유로	17.8	24.6	19.7	22.7	22.8	13,829	42,682
독일	5.0	8.5	6.0	6.2	6.0	3,668	44,660
프랑스	4.3	5.3	4.2	4.8	4.7	2,866	46,016
영국	3.6	3.9	4.6	5.1	4.4	2,674	43,785
NAFTA	37.0	28.0	35.0	31.9	27.8	16,864	34,174
미국	32.7	25.0	30.7	27.5	23.5	14,265	46,859
합계/평균	100.0	100.0	100.0	100.0	100.0	60,690	9,30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

중국과 여타 개도국들의 높은 경제성장 지속으로 이들 지역의 세계경제성
장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9년 2/4분기 이후 급등세를 보
인 세계경제는 2010년 이후 출국전략 본격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과잉부채
조정, 금융기관의 부채 창출 금융상품에 대한 감시강화 등으로 선진국 경기 회
복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여 선진국의 수입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

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은 내수부양을 통해 적정 성장률 유지하려 할 것이다.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선진국에 대한 무역환경의 개선은 크지 못할 것이나 내수확대 정책 등으로 개도국의 무역환경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3] 2009~2013년 해외경제환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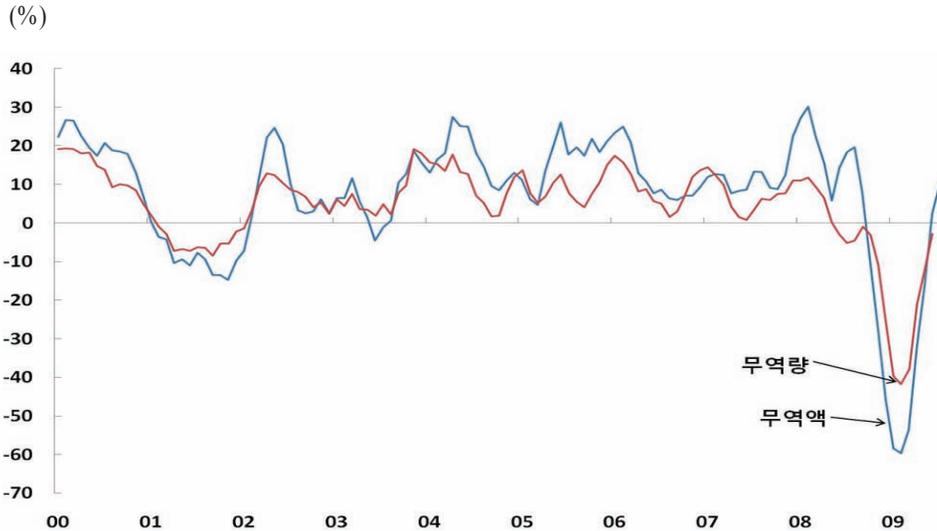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세계교역량

(1) 2009년 동향

2009년 중 세계교역량은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증가세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무역환경지수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기 이전의 증가세보다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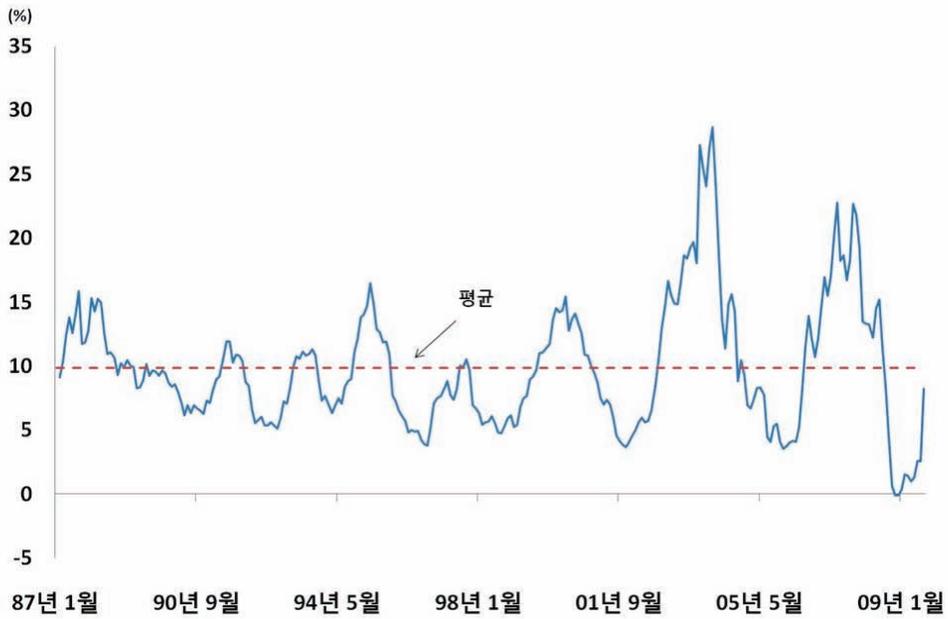
[그림 I-14]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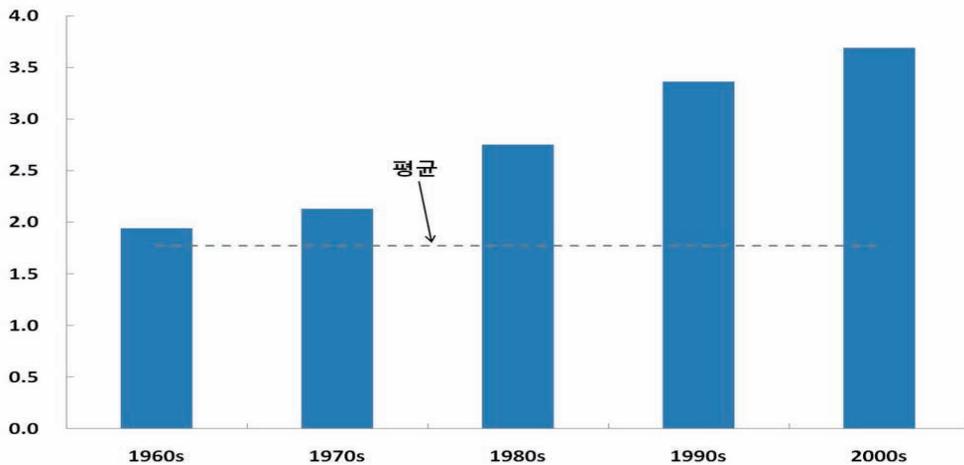
세계무역액도 장기침체국면에서는 벗어났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정상화되지는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글로벌화 진전으로 소득의 무역탄성치(세계교역량 증가율/ 세계소득 증가율)가 커졌다([그림 I-16]). 소득의 무역탄력성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세계교역량 변동 폭이 세계소득의 변동 폭 보다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지역별 교역량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개도국, 특히 아시아 개도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여 주고 있다([표 I-4]). 이에 따라 세계수출 중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졌다. 반면에 미국 등 NAFTA지역의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중 27.3%였던 아시아지역의 수출비중이 2008년 중 30.3%로 높아진 반면에 NAFTA지역은 19.2%에서 14.8%로 낮아졌다. 아시아지역의 수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중국의 수출비중이 크게 상승(2000년 : 3.9%, 2008년 : 8.8%)했기 때문이다. 한편 NAFTA지역의 수출 비중이 낮아진 것은 미국의 수출비중(2000년 : 12.3%, 2008년 : 9.4%)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15] 글로벌 무역 환경지수(전년동기비) 추이



자료: IMF.

[그림 1-16] 세계 소득에 대한 무역탄력성 추이



주: 무역탄성치 = 교역량증가율 / 소득증가율.

자료: IMF.

[표 1-4] 지역별 및 국별 수출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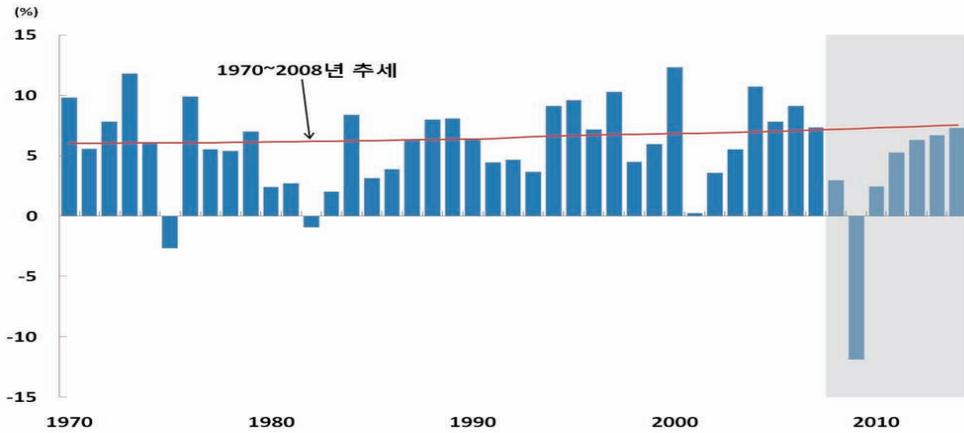
	수출(%)					수입(%)				
	1985	1995	2000	2005	2008	1985	1995	2000	2005	2008
아시아	20.7	26.9	27.3	27.8	30.3	24.2	28.7	36.5	40.7	39.3
일본	9.6	8.7	7.5	5.7	5.7	6.7	6.6	5.8	4.8	4.5
중국	1.5	2.9	3.9	7.3	8.8	2.2	2.5	3.4	6.2	6.6
한국	1.6	2.5	2.7	2.7	3.1	1.6	2.6	2.4	2.5	2.5
인도	0.5	0.6	0.7	1.0	1.1	0.8	0.7	0.8	1.3	1.3
ASEAN	2.7	4.0	4.5	3.9	4.5	3.3	4.5	3.7	3.7	3.3
유럽	45.1	47.0	42.0	43.3	46.4	43.1	44.1	40.2	41.7	37.4
EU	41.9	42.2	37.5	37.9	39.0	39.4	39.8	37.1	37.6	32.7
유로	31.4	33.5	29.3	29.7	30.5	30.3	31.0	28.1	28.5	24.6
독일	9.9	10.3	8.6	9.4	9.6	8.2	9.1	7.5	7.3	6.2
프랑스	5.5	5.6	4.7	4.2	4.4	5.6	5.4	4.7	4.6	4.1
영국	5.5	4.8	4.4	3.6	3.1	5.6	5.1	3.6	4.5	3.6
NAFTA	17.9	16.2	19.2	14.2	14.8	23.0	19.3	25.7	21.6	17.0
미국	11.8	11.5	12.3	8.7	9.4	18.2	15.0	19.2	16.3	1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 2010년 이후 전망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교역량 증가율(5.6%)은 197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소비지연으로 선진국의 수입이 빠르게 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수입수요 약화로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교역증가율은 내수확대 정책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7] 세계무역량 전망



주: 전년동기비.

자료: IMF.

[표 1-5] 해외 경제여건 전망

	2004~2008	2009~2013
세계경제의 미국 의존도	심화 후 완화	완화세 지속
글로벌 불균형	심화 후 완화(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후 축소)	완화세 지속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폭 빠른 축소)
자본의 미국 집중도	심화 후 완화	완화세 지속
선진국간의 성장률 격차 (미국과 여타 선진국)	확대 후 축소	축소 후 소폭 확대
달러화	보합세	약세 후 약보합
글로벌 물가	상승 후 둔화(개도국의 공산품 공급 급속 확대)	둔화 후 완만 상승
유가	급상승 후 급락	급락 후 반등 (반등 후 점차 상승)
글로벌 금리정책	급락 후 초저금리 지속	점차 상승(정상화)
선진국 부동산(영어권)	급등 후 급락	급락 후 회복
미국 경제	고성장 후 급감	침체 후 완만 상승
중국 경제	고성장 후 소폭 둔화	일시 둔화 후 재상승
세계 경제	고성장 후 급락	급락 후 완만 회복 (저성장 국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역별 경제 전망

가. 선진국경제

(1) 미국경제

2010년부터 2013년 중 미국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3%로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표 I-6]). 이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성장률 2.5%(연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지출부문별로 보면 2010년부터 2013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1.7%, 총 고정투자는 연평균 6.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동 기간 중 미국의 명목경제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각각 연평균 3.9%, 1.5%로 전망되어 2007년의 경제성장률(4.8%)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2.7%)보다 모두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2013년 중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IMF, Country Report, 2009.8)되고 있는데 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평균(2.4%)보다 1%p가 낮은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동시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표 I-7]). 동 기간 중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연평균)를 보면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 0.4%p,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0.4%p,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p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저성장세 지속으로 2014년에 가서야 GDP갭(실제GDP - 잠재GDP)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3년 중 미국의 3개월 TB금리 및 10년물 국채수익률은 각각 연평균 3%, 5.7%로 2009년 초를 바닥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2009년 초를 바닥으로 점차 상승하여 2011년에는 3.1%까지 완만히 성장할 것이나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출구전략과 가계부채 조정 등으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9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는 2012년 이후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이나 상승국면은 201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6] 중기 미국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실질GDP	2.0	1.1	-2.6	0.8	3.1	2.8	2.6	2.2
순수출	0.6	1.3	0.5	-0.2	0.0	0.2	0.2	0.1
총국내수요	1.4	-0.3	-2.9	1.0	3.0	2.5	2.3	2.1
민간소비	2.8	0.2	-0.6	1.0	2.1	2.0	1.5	1.3
총고정투자	-2.0	-3.5	-16.0	-2.1	8.2	10.2	9.6	8.3
설비투자	1.7	-3.0	-21.0	-0.1	13.2	15.0	15.0	13.8
건설투자	-17.9	-20.8	-20.6	1.1	12.0	14.0	14.0	12.7
명목GDP	4.8	3.3	-1.3	1.9	4.4	4.5	4.6	4.2
개인저축률	0.6	1.8	4.7	4.6	5.0	4.0	6.7	7.5
민간투자율	15.4	14.0	10.6	10.7	12.6	13.5	14.5	15.6
<고용 및 물가>								
산출물갭	1.7	0.2	-3.7	-3.8	-2.0	-0.9	-0.2	0.0
잠재GDP	2.8	2.6	1.4	0.9	1.2	1.6	1.9	2.0
소비자물가	2.9	3.8	-0.3	1.4	1.6	2.1	2.2	2.2
GDP디플레이터	2.7	2.2	1.3	1.0	1.3	1.7	2.0	2.0
<금융지표>								
중앙정부	-295	-650	-1,743	-1,257	-855	-667	-735	-788
재정수지(GDP대비, %)	-2.1	-4.6	-1,903	-8.7	-5.8	-4.5	-4.7	-4.8
3개월 TB	4.5	1.4	0.2	0.9	2.7	4.2	4.2	4.2
10년국채수익률	4.6	3.7	3.6	4.8	5.5	6.1	6.3	6.3
<국제수지>								
경상수지(10억달러)	-732	-688	-445	-464	-517	-548	-495	-474
상품수지(10억달러)	-831	-840	-657	-734	-791	-818	-810	-821
경상수지 비율(GDP대비, %)	-5.3	-4.8	-3.2	-3.2	-3.5	-3.5	-3.0	-2.8
수출물량	7.5	6.0	-17.3	3.9	6.1	6.2	6.6	6.2
수입물량	1.7	-4.1	-13.6	5.9	5.4	4.4	4.4	5.4
<저축률과 투자율, GDP대비>								
총국내저축률	14.2	11.9	11.0	11.3	12.8	13.6	14.9	15.9
가계저축률	0.4	1.4	3.6	3.5	3.8	4.4	5.2	5.9
기업저축률	13.2	12.6	13.1	12.8	11.7	10.7	11.2	11.6
총국내투자율	18.8	17.5	14.4	14.5	16.3	17.1	17.9	18.7

자료: IMF, "Country Report", 2009. 7.

[표 1-7] 미국 잠재GDP 부문별 기여도 전망

(단위: %, %p)

	1977-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잠재GDP	3.0	3.4	2.8	2.4	1.4	0.9	1.2	1.6	1.9	2.0
자본투입	1.3	1.6	1.2	1.0	0.6	0.1	0.3	0.5	0.7	0.8
자본스톡	1.3	1.7	1.4	1.1	0.5	0.1	0.3	0.5	0.7	0.8
가동률	0.0	-0.1	-0.2	0.0	0.1	0.0	0.0	0.0	0.0	0.0
노동투입	1.1	0.9	0.8	0.6	0.2	0.3	0.3	0.5	0.5	0.5
자연실업률	0.0	0.1	0.0	0.0	-0.5	-0.3	0.1	0.3	0.3	0.2
노동참가율	0.3	0.0	-0.1	-0.1	0.0	0.0	-0.3	-0.3	-0.3	-0.3
비용자연노동시간	-0.2	0.0	0.0	-0.1	-0.1	-0.1	0.1	-0.1	-0.1	-0.1
16세이상 노동인구	0.9	0.8	1.0	0.8	0.8	0.7	0.6	0.6	0.6	0.6
총요소생산성	0.7	0.9	0.8	0.7	0.7	0.6	0.6	0.6	0.7	0.7

자료: IMF, "Country Report", 2009. 7.

(2) 유럽 및 일본경제

2010년부터 2013년 중 유럽경제는 연평균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1-8]). 이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2%)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3%p,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경제도 내수에 의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유럽경제는 총고정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으로 소비와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유럽 경제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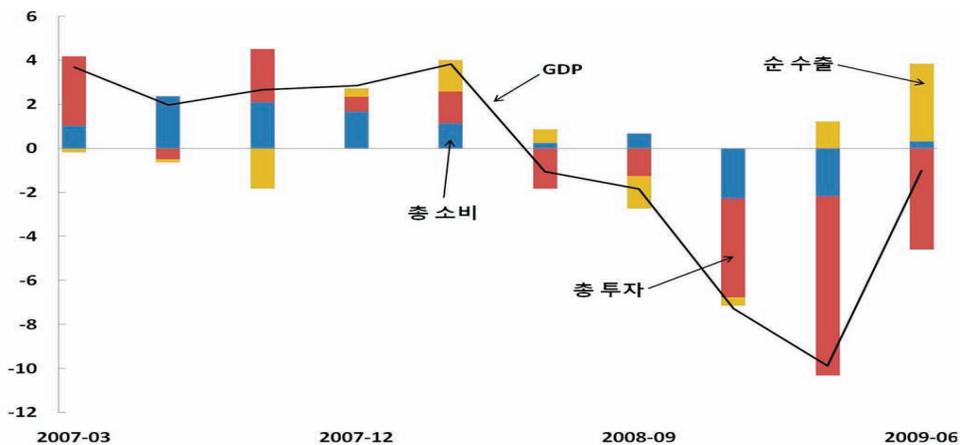
[표 1-8] 중기 유럽경제 전망

(단위: 전년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치		
								00-09	10-19	
실질 GDP	0.7	-4.1	0.5	1.2	1.6	1.7	1.7	1.4	1.5	
내수(기여도, %)	0.7	-3.0	0.3	0.9	1.5	1.6	1.7	1.3	1.4	
	민간최종소비 (전년비, %)	0.4	-0.8	0.5	1.1	1.5	1.5	1.5	1.4	1.4
	고정자본형성 (전년비, %)	-0.4	-9.9	-0.2	1.5	2.0	2.1	2.1	1.1	1.7
외수(기여도, %)	0.0	-1.1	0.2	0.3	0.2	0.0	-0.1	0.0	0.1	
소비자물가(전년비, %)	3.3	0.3	1.2	1.6	1.7	1.7	1.7	2.1	1.6	
경상수지(명목 GDP대비)	-1.1	-0.5	-0.2	0.1	0.0	-0.1	0.0	-0.2	0.0	
대달러환율	1.47	1.40	1.40	1.30	1.30	1.30	1.40	1.19	1.44	
소비자물가(전년비, %)	152	126	133	130	143	143	140	131	140	
ECB시장개입금리(기말)	2.50	1.00	1.00	1.75	2.50	3.00	3.25	2.88	2.90	
독일 10년 국채수익률(평균)	4.0	3.3	3.7	3.8	4.6	4.6	4.6	4.2	4.4	

자료: IMF, "Country Report", 2009. 7.

[그림 1-18] 유럽의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유럽경제도 2009년 1/4분기를 바닥으로 2013년까지 경기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경색 해소지연과 낮은 고용증가세 등으로 유럽경제의 성장속도도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중 4.1%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유럽경제는 2010년 중 0.5%, 2011년 1.2%, 2013년 1.7%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경제는 연평균 1.8% 성장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성장률(연평균 1.7%)과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6%p,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2%p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도 내수에 의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수출이 줄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감소했다. 수출위축으로 설비투자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국제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도 순수출과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빠르게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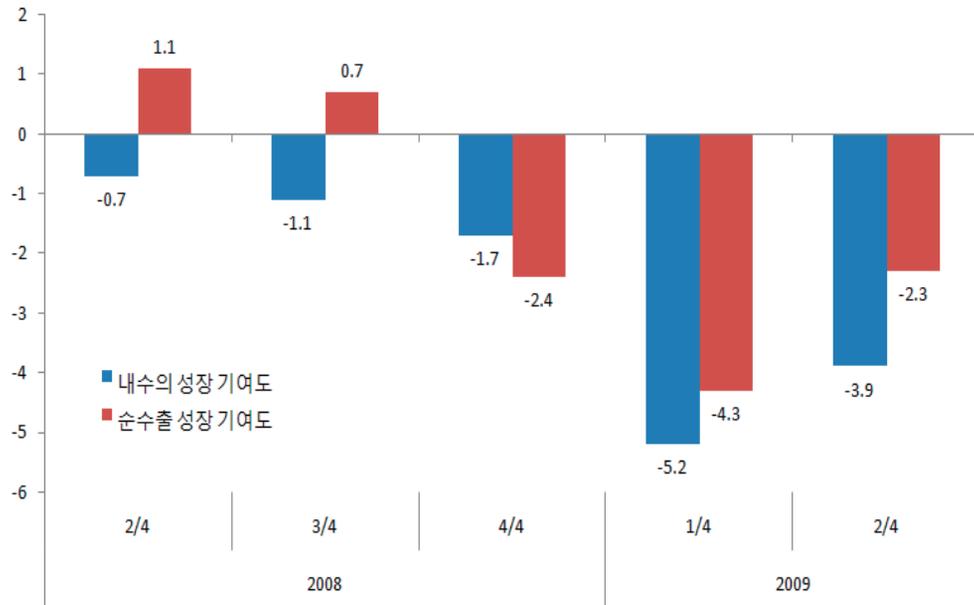
[그림 1-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총수출 물량과 설비투자 추이
(단위: %)



주: 전년동기비.
자료: 일본내각부.

[그림 1-20] 일본의 내수와 순수출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p)



주: 전년동기비.
자료: 일본내각부.

2009년 중 2.91%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일본경제는 2010년 중 1.5%, 2011년 2.0% 성장으로 성장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표 I-9]). 그러나 출구전략 본격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초를 바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경제도 2013년까지 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9] 중기 일본경제 전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치	
								00-09	10-19
명목GDP성장률 (조엔)	-3.5 (497.7)	-3.3 (481.3)	-0.1 (481.0)	1.2 (486.7)	2.0 (496.3)	1.8 (505.3)	2.0 (515.6)	-0.4	1.7
실질GDP	-3.2	-2.9	1.5	2.0	1.9	1.6	1.7	0.7	1.6
국내수요	-2.1	-2.8	0.8	1.9	2.0	1.7	2.0	0.4	1.6
민간수요	-2.5	-4.8	1.2	2.4	2.7	2.1	2.4	0.5	2.0
최종소비	-0.5	-0.4	1.0	1.9	2.0	1.9	1.9	0.8	1.7
주택투자	-3.1	-15.3	1.3	2.8	4.9	1.5	4.2	-4.4	2.7
설비투자	-9.6	-14.6	1.0	3.0	5.0	2.6	3.8	0.2	2.9
공적수요	-0.5	4.1	-0.3	0.1	-0.3	0.4	0.5	0.2	0.3
순수출기여도	<-1.2>	<-0.2>	<0.7>	<0.2>	<-0.1>	<-0.1>	<-0.2>	<0.3>	<0.0>
광공업생산	-12.7	-10.2	7.7	9.2	5.3	2.0	3.1	-1.1	3.6
국내기업물가	3.2	-4.9	0.3	0.6	1.2	1.5	0.9	0.0	1.1
소비자물가	1.1	-1.4	-0.6	0.0	0.7	0.9	0.9	-0.2	0.9
실업률(%)	4.1	5.7	5.7	5.3	4.8	4.5	4.2	4.7	4.4
경상수지(GDP대비)	2.5	3.6	3.8	3.8	3.7	3.3	3.2	3.4	2.7
환율(엔/달러, 평균)	100	90	95	100	110	110	100	111	98
10년 국채수익률	1.5	1.4	1.6	2.0	2.6	2.9	3.2	1.4	3.1

자료: 일본생명기초연구소, “중기경제전망”, 2009. 10.

나. 개도국경제

(1) 중국경제

2010년부터 2013년 중 중국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3%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I-10]).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경제성장률(2.3%)보다 3.6배 가량 높은 성장률이다.

[표 1-10] 중국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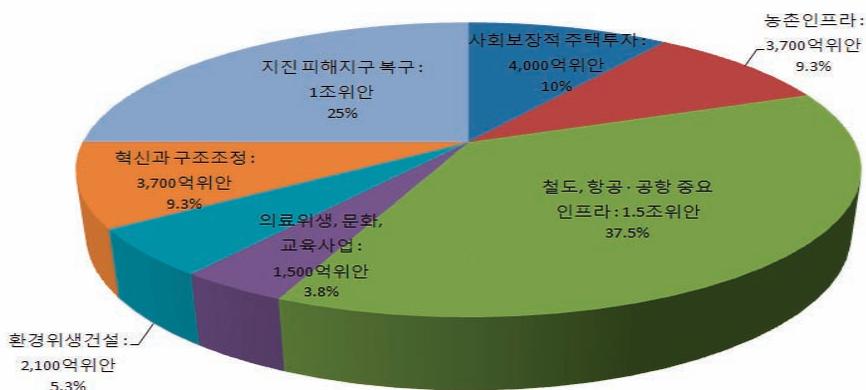
(단위: 전년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치	
								00-09	10-19
실질GDP(전년비, %)	9.0	7.5	8.2	8.2	8.4	8.4	8.1	9.7	8.0
소비자물가(%)	5.9	-0.5	1.2	2.0	2.2	2.5	2.5	1.9	2.3
1년 대출금리(말기준, %)	5.3	5.3	5.3	5.6	5.6	5.9	5.9	5.8	5.7
10년 국채금리(말기준, %)	2.8	3.7	4.5	5.0	5.5	6.0	6.0	3.7	5.5
대달러환율	6.9	6.8	6.7	6.6	6.5	6.4	6.3	7.9	6.3

자료: 일본생명기초연구소, “중기경제전망”, 2009. 10.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 효과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여타 선진국의 경기부양 규모 보다 큰 4조 위안을 투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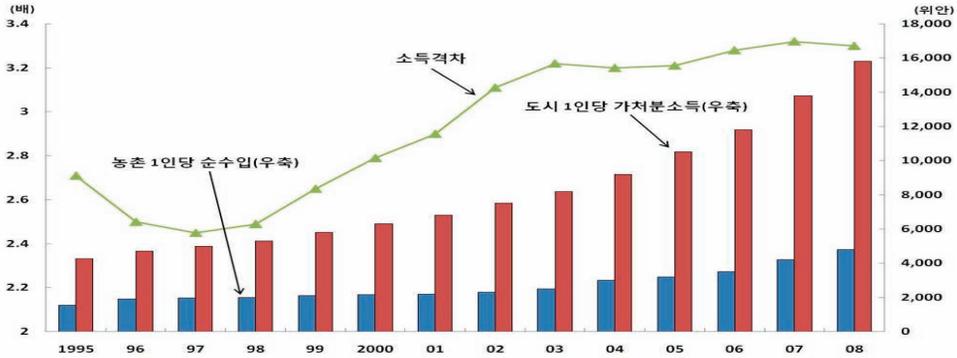
[그림 1-21] 중국의 경기부양 대책투자 내역(4조 위안)



자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200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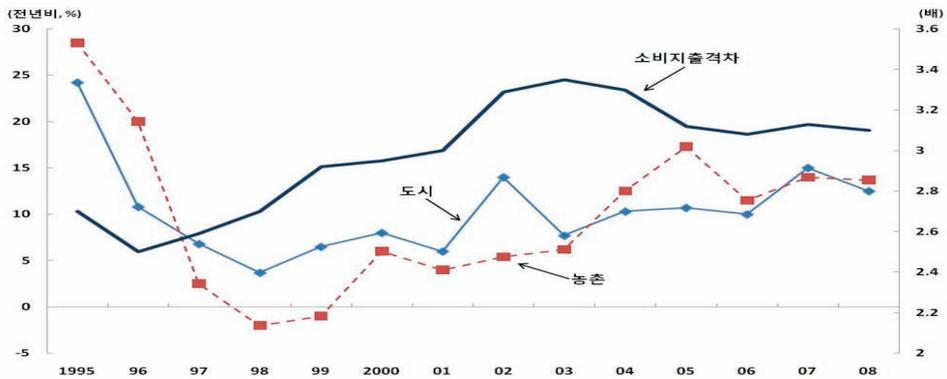
둘째, 중부와 서부의 개발 등 균형성장강화정책으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확대에 의한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중서부개발 및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륙과 농촌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중국의 내수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2002년 이후 농촌의 빠른 소득증대로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배율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림 1-22] 중국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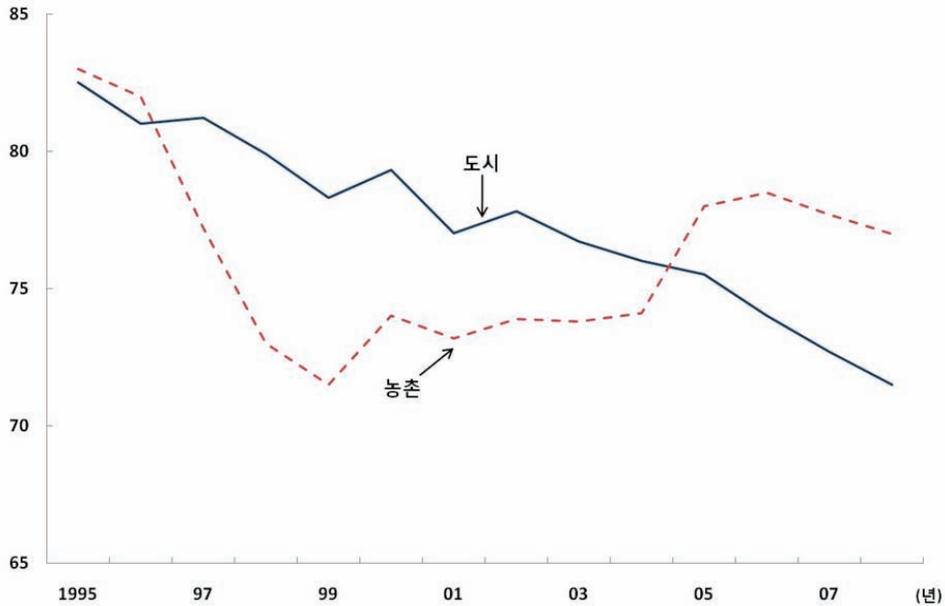
[그림 1-23] 중국 도시와 농촌의 1인당 소비지출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증대는 중국의 소비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주요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4] 중국의 소비성향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셋째,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는 도시화 전략을 통해 가계소득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중 4.6억 명이었던 도시인구가 2007년 중 5.9억 명으로 1.3배 늘었다(표 I-11). 동 기간 중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4배 늘었고, 소비재 판매액이 3.9배 증가하였다. 특히 내구재 보급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자동차 보유대수는 12.4배, 휴대폰 보유대수는 8.5배, 컴퓨터 보유대수는 5.5배나 증가하였다.

[표 1-11]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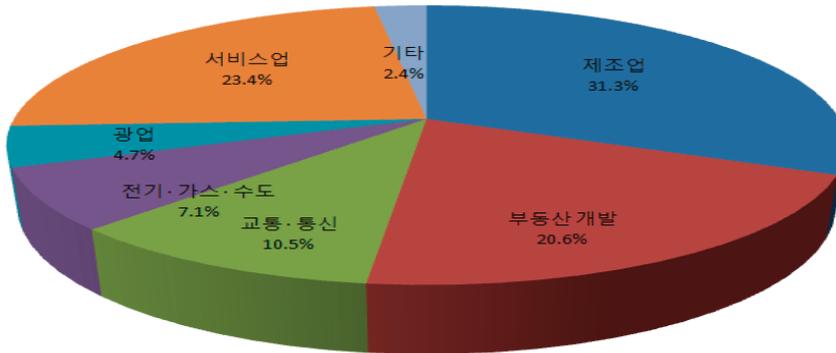
	2000(A)	2007(B)	B/A(배)
총인구(억명)	12.7	13.2	1.0
도시인구(억명)	4.6	5.9	1.3
1인당 가처분소득(달러) ¹⁾	759	1812	2.4
1인당 소비지출액(달러) ¹⁾	604	1143	1.9
소비재 판매액(억달러)	4126	11723	3.1
엔겔지수	39.4	36.3	0.9
100가구당 자동차 보유(대) ¹⁾	0.5	6.1	12.1
휴대폰 보유(대) ¹⁾	19.5	165.2	8.5
컴퓨터 보유(대) ¹⁾	9.7	53.8	5.5
비디오카메라 보유(대) ¹⁾	1.3	6.2	4.7
에어컨 보유(대) ¹⁾	30.8	95.1	3.1

주: 1) 도시가구 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도시의 진전으로 도시지역의 전력·도로·주택 등 고정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부동산개발, 교통통신, 전기가스부문의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고정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경제도 과거 제조업 설비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SOC 등 인프라 확충 투자,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투자 등 내수 중심의 균형성장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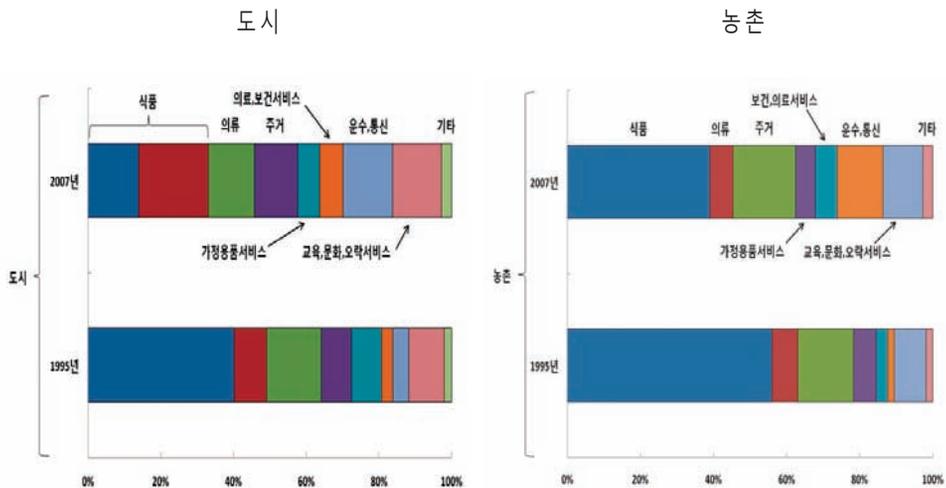
[그림 1-25] 중국의 도시지역 고정투자액 내역(2008년, 14.8조위안)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또한 도시화 진전으로 절대 빈곤 인구가 줄어드는 한편 중산층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 인구 비중 확대로 의료 및 보건, 운수 및 통신, 교육 및 문화 등과 같은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림 1-26] 중국 도시와 농촌의 소비지출 내역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넷째, 건강보험, 실업보험 및 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늘어날(저축률 하락)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가계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저축률이 높고 소비율이 매우 낮은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주도 성장이 제약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중국의 민간소비율은 35.6%로 인도네시아(63.5%), 태국(53.5%), 한국(54.1%)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며 중국경제에서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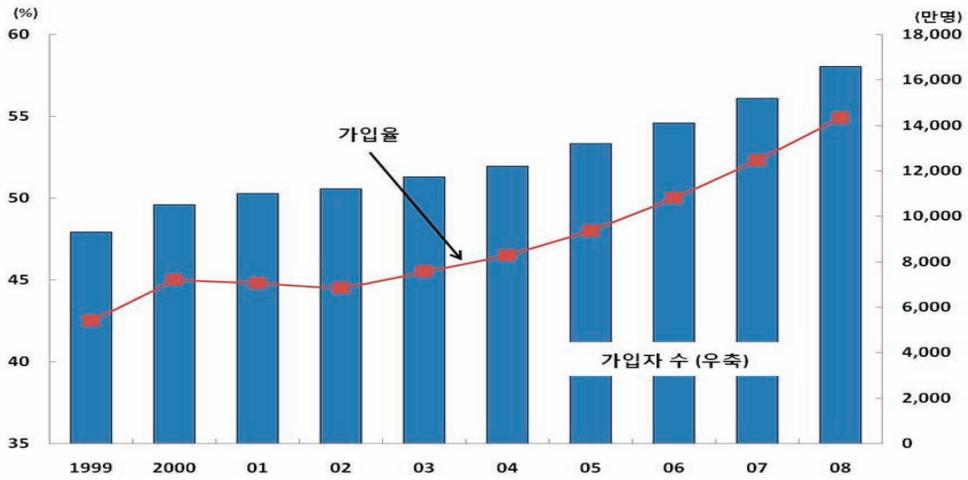
[그림 1-27] 아시아 각국의 민간소비 비율(명목 GDP대비, 2007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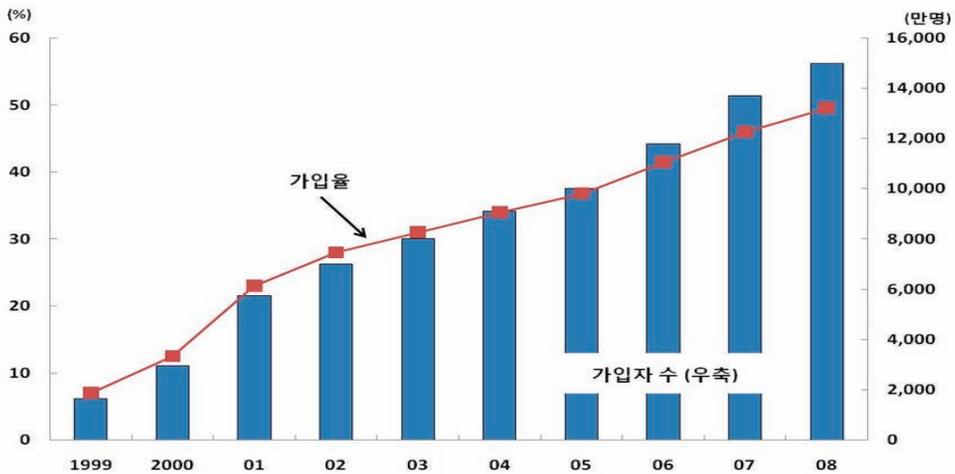
예를 들면 중국도시지역의 양노보험 가입률은 50%를 겨우 넘고 있고, 도시지역 종업원의 의료보험 가입률은 50%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의 결과로 중국의 양노보험 가입률과 의료보험 가입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저축률이 하락하고 소비가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8] 중국 도시지역의 양노보험 가입률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1-29] 중국 도시지역 종업원의 의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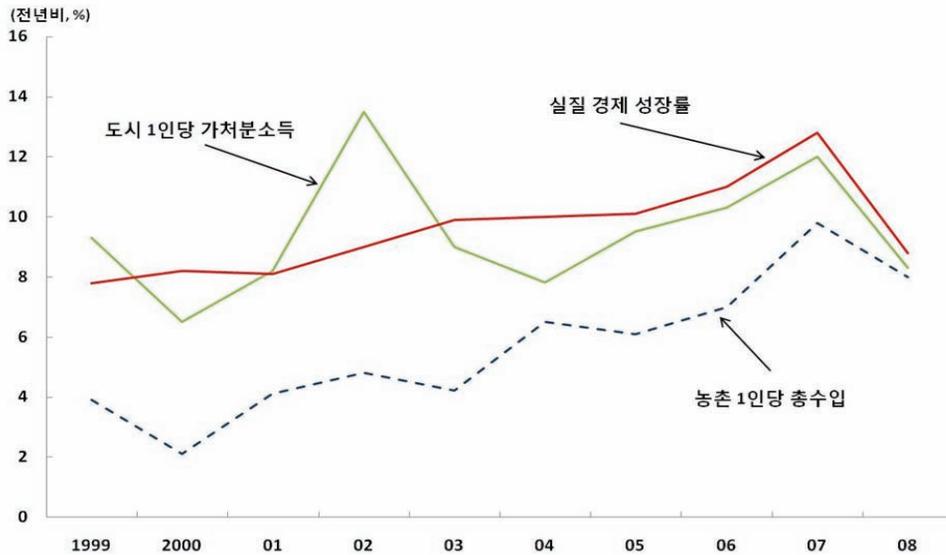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성장(높은 고용)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 확대 등으로 견조한 소비수준

이 한 단계 레벨 업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 급증과 위안화 절상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도 활발해 질 것이다. 또한 도로포장 확대와 자동차산업육성정책 등으로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늘면서 내수시장 규모도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30]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질 가처분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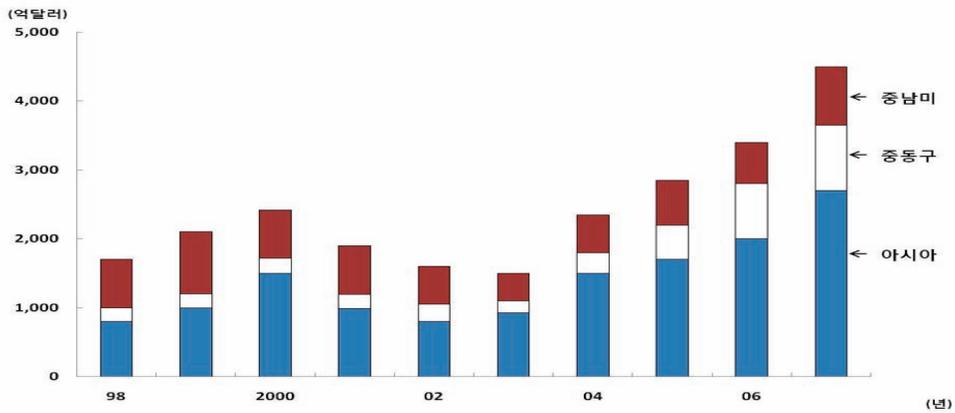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 여타 개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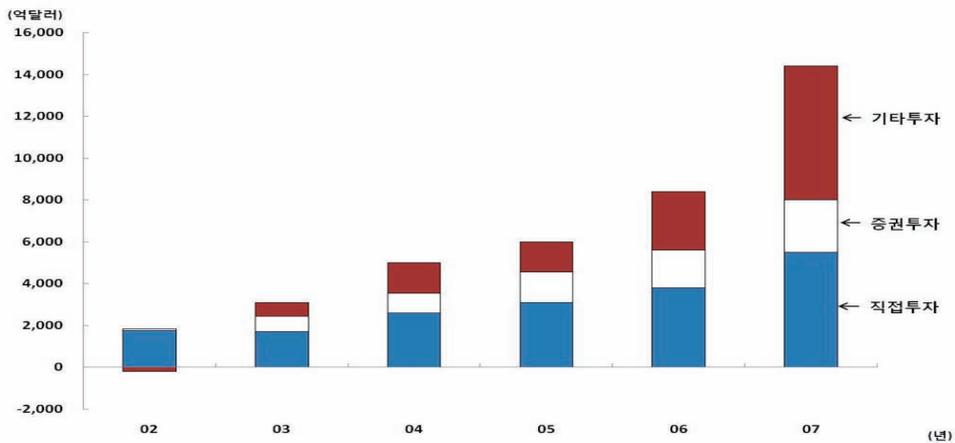
중국을 제외한 여타 개도국(인도, 브라질, 러시아, OPEC 등)들도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내수부양정책으로 인한 빠른 경기회복,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와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그리고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 용이해진 자금이용 여건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신흥개도국에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민간자본들이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I-31], [그림 I-32]).

[그림 1-31] 신흥국 직접투자 총 유입액 추이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그림 1-32] 신흥국의 민간자금 유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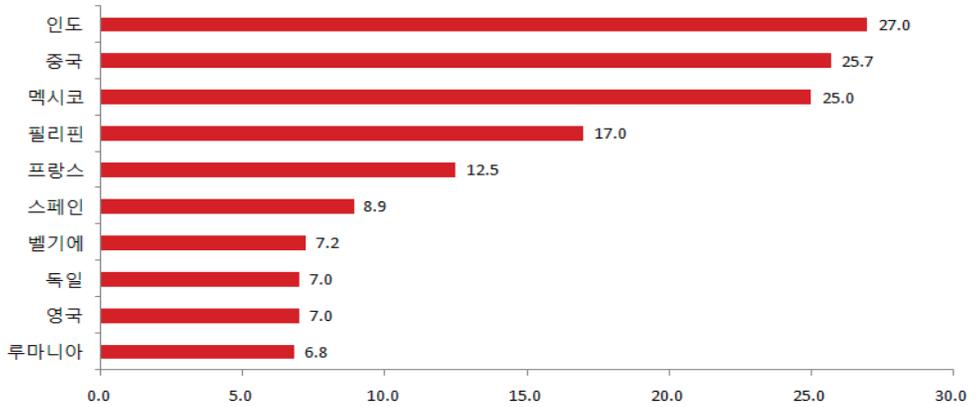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편 OPEC, 러시아, 중남미(브라질 등) 일부 원자재 수출 국가들은 에너지 부족 국인 중국 등 신흥개도국들의 빠른 경기 회복세로 원자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소득도 꾸준하게 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흥개도국 노동자들의 해외취업이 지속되어 신흥개도국들의 해외송금 유입액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림 1-33]).

[그림 1-33] 해외 송금 수입액 상위 10개국(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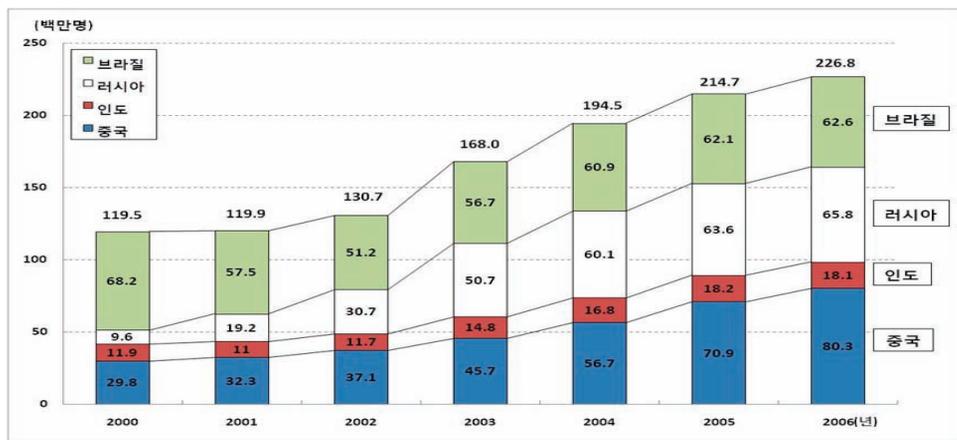
(단위: 10억달러)



자료: 세계은행,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2008".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신흥개도국들의 저소득 계층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에 중위소득 계층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신흥개도국들의 가처분소득 계층별 세대수 구성비 추이를 보면 5,000달러 이상의 중소득 계층의 구성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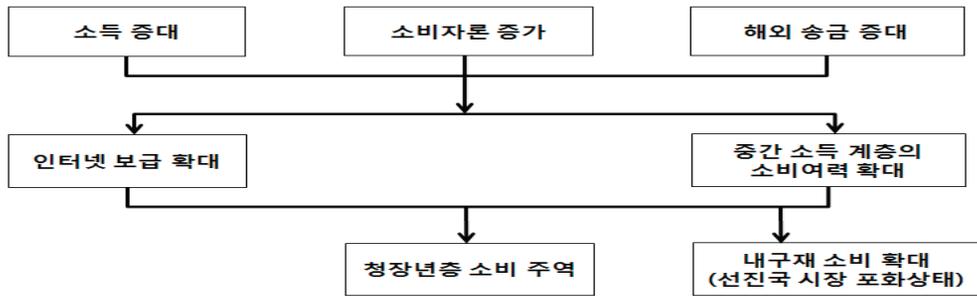
[그림 1-34] BRICs의 세대가처분소득 5,000달러 이상 가계 인구 추이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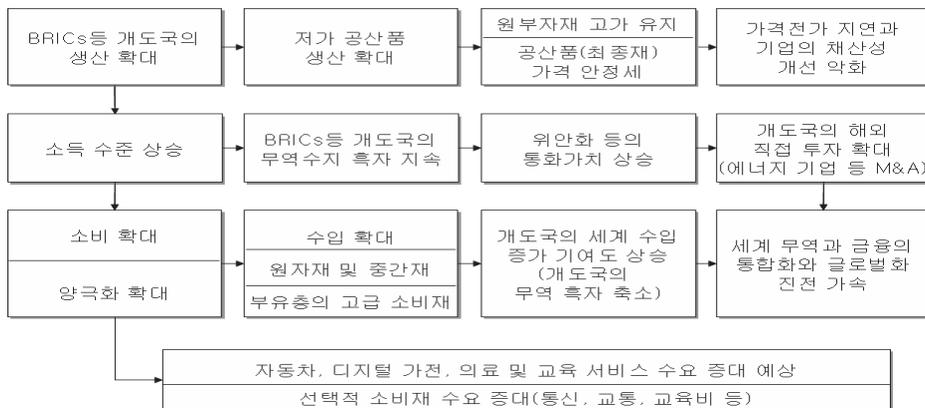
브릭스 국가들의 세대가처분소득이 5,000달러 이상인 인구가 2000년 1.2억 명에서 2006년 중 2.2억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개도국의 소득증가 특히 중간소득계층인구 증가, 신용카드사용 확대, 인터넷사용 확대 등으로 소비가 늘면서 소비구조가 점차 서구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다([그림 I-35]). 최근에는 브릭스 등 신흥개도국 경제는 국제금융위기로 수출환경 개선이 지연되자(해외수입수요 축소, 자국통화가치 상승 압력 등) 인프라 정비 등 내수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신흥국가의 내수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수출 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I-36]).

[그림 I-35] 신흥개도국의 소비확대 요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36] BRICs 등 개도국 경제 발전과 내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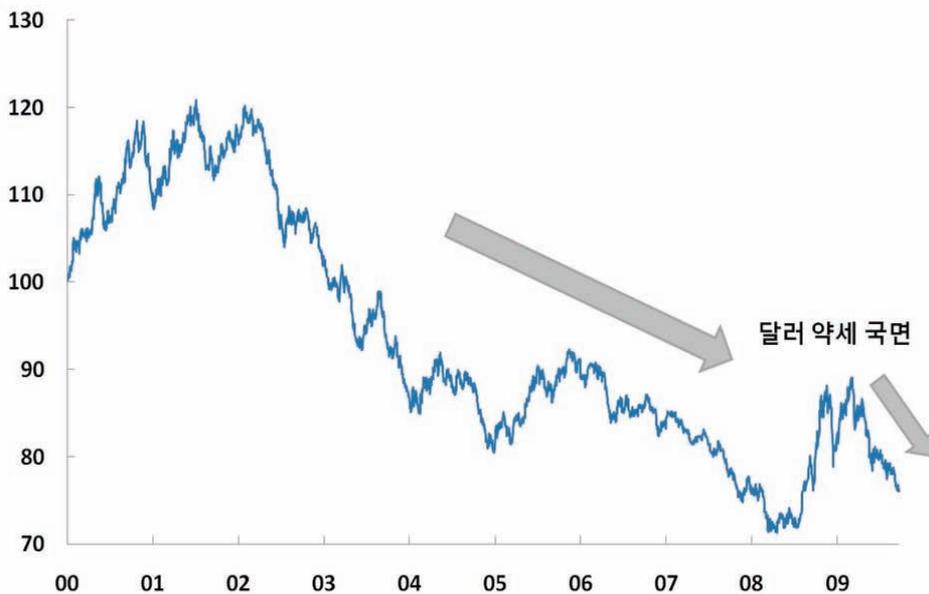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달러화 전망

가. 2009년 동향

2002년 이후 약세를 보였던 달러화는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화 이후 유로화에 대해 강세, 엔화에 대해 완만한 약세를 보였다. 2007년 말 달러당 111.7엔이었던 엔화 환율이 2009년 10월 21일 현재 90.6엔으로 18.83% 하락(엔화 가치 상승)하였다. 2007년 말 유로당 1.459달러였던 유로화는 2009년 10월 21일 현재 1.496달러로 2.55% 상승(유로화 가치 상승)한 반면 중국 위안화는 동기간 중 달러화에 대해 6.5% 상승(위안화 가치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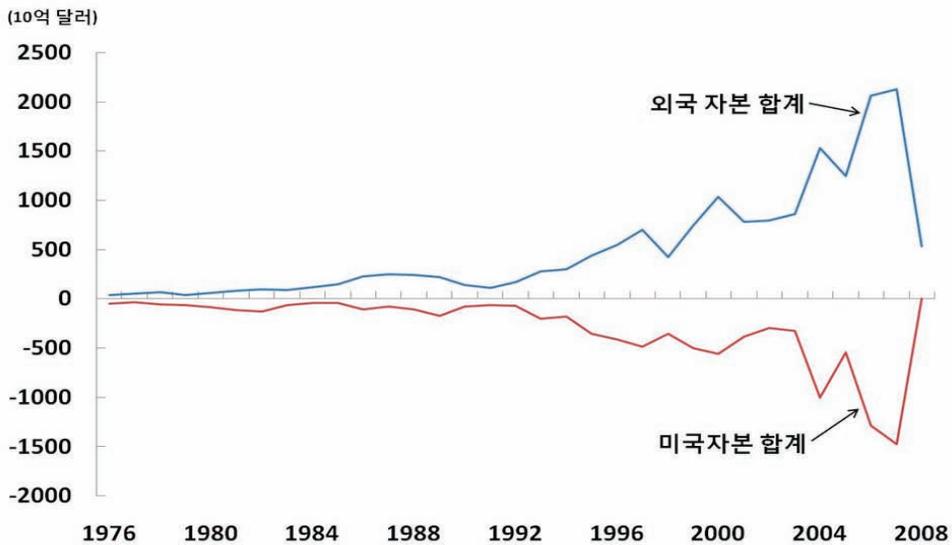
[그림 1-37]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되면서 달러화는 다시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미국으로의 해외자본유입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여타 선진국간의 금리 및 성장률 격차가 축소되자 미국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I-38]).

[그림 I-38] 미국의 순자본 유출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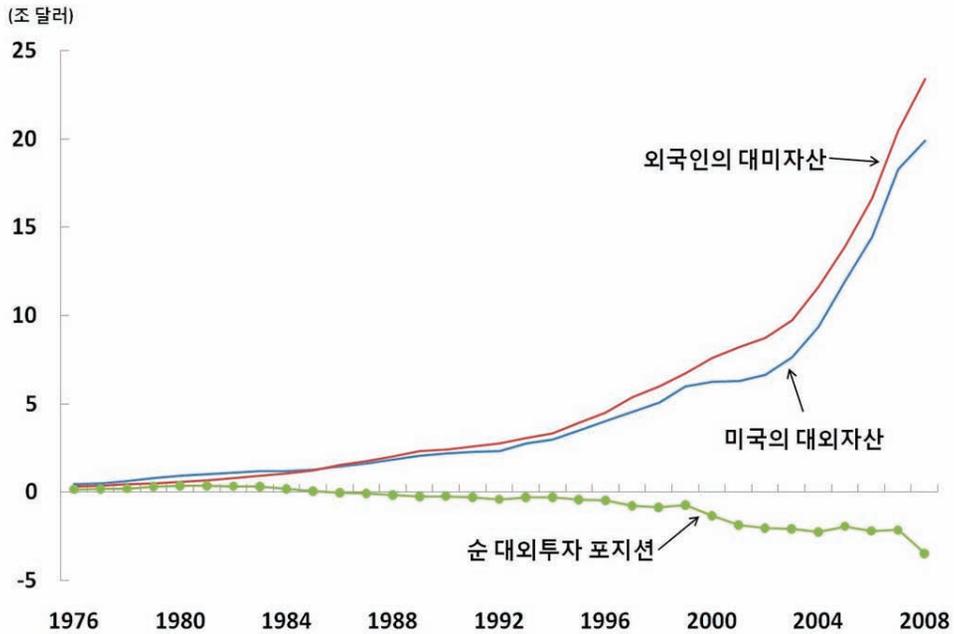


자료: IMF, Datastream.

나. 2010년 이후 전망

미국 달러화의 약보합세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적자 및 국채발행 확대로 미국의 순 대외투자 포지션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이다([그림 I-39]).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39] 미국의 순대외투자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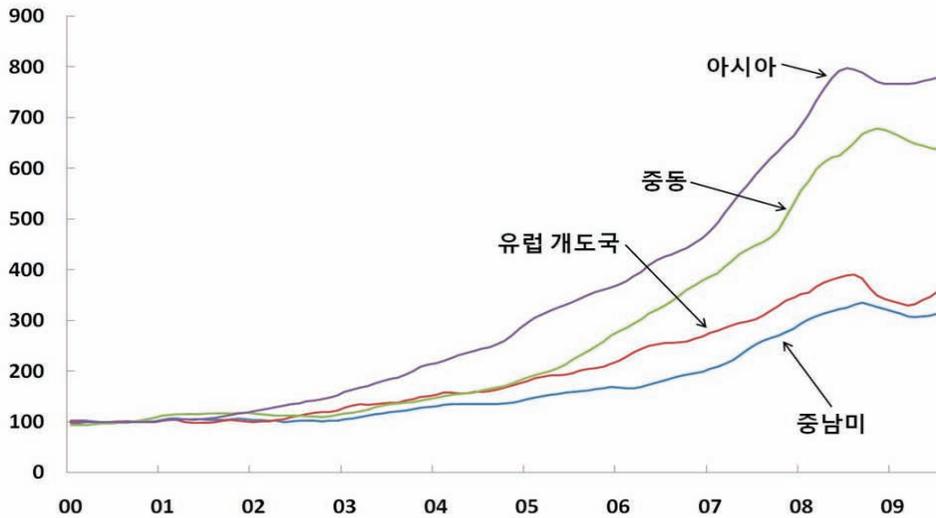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둘째, 수출환경 악화로 개도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개도국들의 달러화자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주택버블 기간 중 개도국은 크게 늘어나는 외환보유고로 선진국, 특히 미국의 우량자산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였다([그림 I-40]).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있고 미국자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미국금융자산 매입을 축소시키고 있다.

특히 달러표시 외화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달러화 자산의 비중을 점차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으로 해외 자금이 집중 유입되는 현상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그림 1-40] 지역별 외환보유고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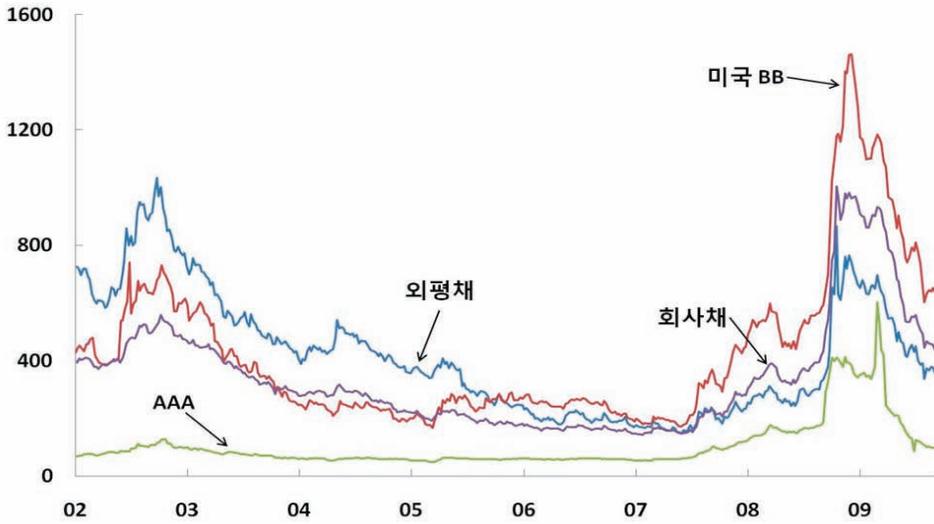


주: 2000년=100, 3개월 이동평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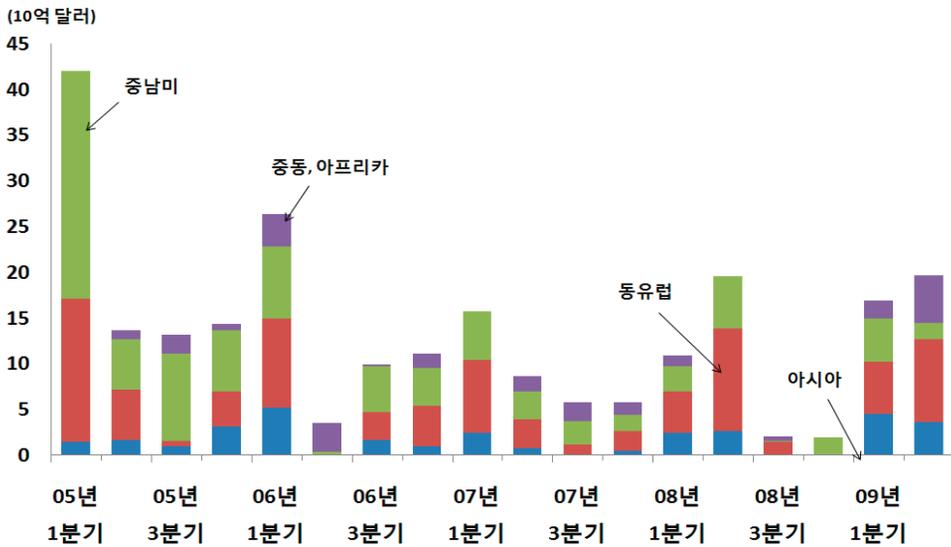
셋째,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개도국 통화는 해외자금유입이 늘면서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의 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외평채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되었고 외평채 발행도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1-42]). 이는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개도국경제가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개도국의 소득수준 상승으로 내수시장 확대, 위험관리 능력제고, 개도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과 통화가치 상승기대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1] 개도국의 금리스프레드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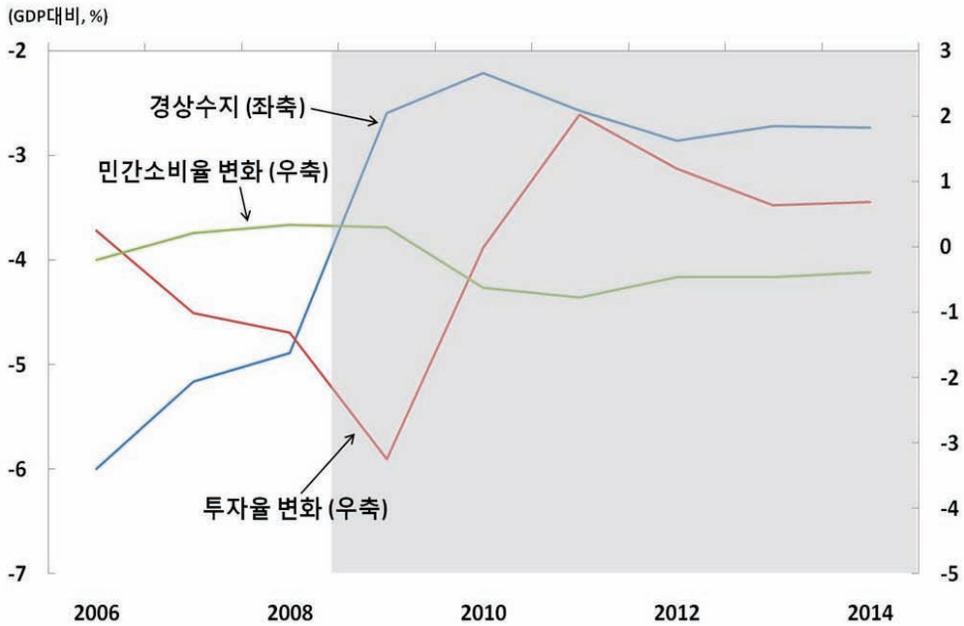
[그림 1-42] 개도국의 외평채 발행액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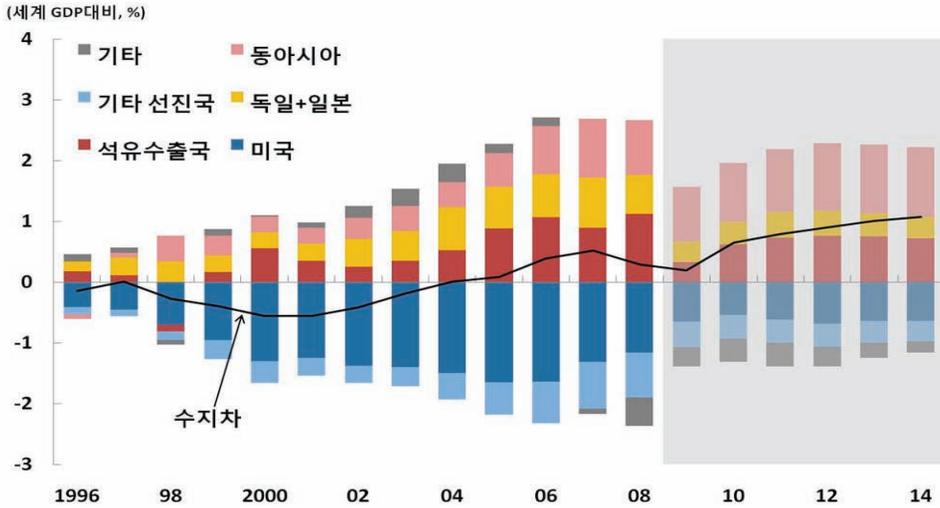
한편 미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소비둔화로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IMF는 중기적으로 미국의 GDP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비율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I-43]). 반면에 개도국은 내수부양 정책으로 인한 수입확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달러화는 선진국간(미국과 여타 선진국간) 금리격차 축소 추세, 성장률 및 생산성 격차 축소 지속, 미국의 대외신인도 약화(재정수지적자 확대) 등으로 약보합세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I-12]).

[그림 I-43]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비율(GDP대비)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10.

[그림 1-44] 글로벌 불균형(세계 GDP대비)성장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10.

[표 1-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향방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여타선진국간의 성장 격차 (영글로섹슨 vs 독일·일본)	확대	축소
미국과 여타 선진국간의 금리 격차	확대	축소
외국인의 대미(증권)	확대	축소
투자 및 자본의 집중도	일극(미국중심)주의	일극주의 완화 (아시아 비중 확대)
미국의 대외신뢰도 (금융시스템, 외채 등)	상승	약화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대 GDP 비율)	축소	확대
달러화	약보합 (금융위기 중 강세)	약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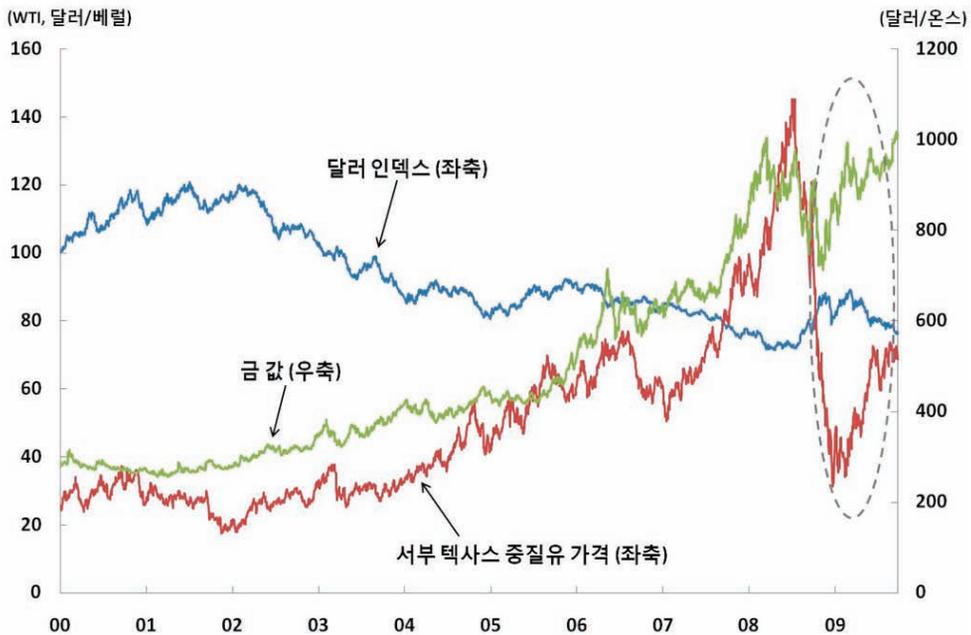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유가 전망

가. 2009년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세가 진행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8월 중 배럴당 116.6달러였던 국제유가(WTI)가 2009년 2월 말에는 44.8달러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69.4(2009년 9월 평균)달러로 올랐다.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유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금값도 달러화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도 등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1-45] 달러인덱스와 유가, 금가격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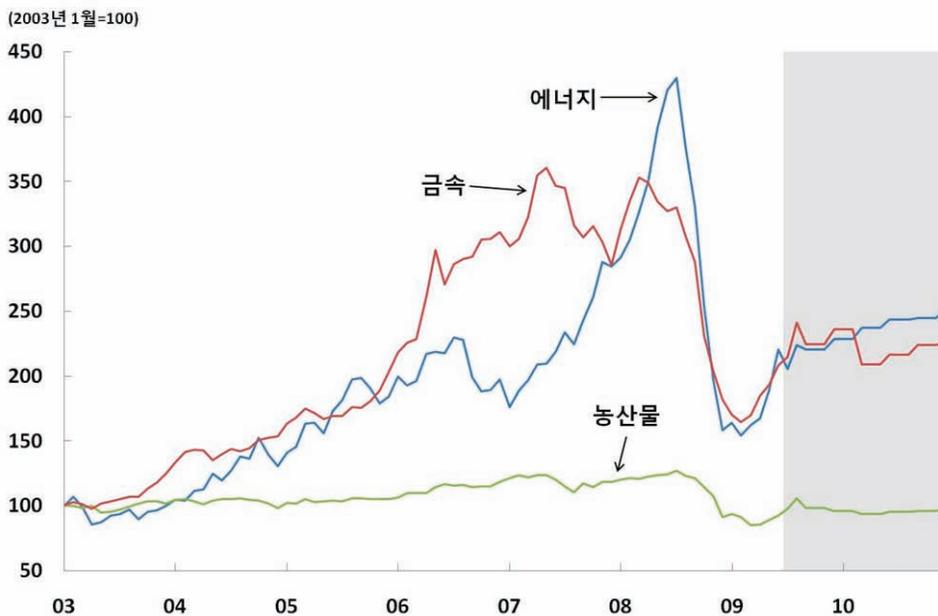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 2010년 이후 전망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의 유가(WTI 기준)는 연평균 7.5%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2010년 중 국제유가는 연평균 20%,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2011년과 2013년 중 유가는 연평균 4%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2009년 중 60.2달러였던 원유선물가격(WTI)이 2010년 중 배럴당 72.8달러(연평균), 2011년 중 77.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도 국제유가는 2009년을 바닥으로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로 미국 캠브리지에너지 연구소(CERA)에 따르면 기본시나리에서는 2011년 국제유가를 완만히 상승하지만 2011년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표 I-13]).

[그림 I-46] 상품가격과 원유가격 전망



자료: IMF.

[표 1-13] 주요 예측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

(단위: 기간평균, 달러/배럴)

		2008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CERA ²⁾ (8.6일)	기본 시나리오	97.1 [93.6]	60.8 [59.8]	45.7 [44.9]	59.8 [59.2]	67.1 [66.1]	70.5 [69.0]	65.3 [63.3]	76.0 [75.1]
	저유가 시나리오 ³⁾	97.1 [93.6]	54.9 [54.3]	45.7 [44.9]	59.8 [59.2]	60.0 [59.5]	54.0 [53.5]	48.0 [47.0]	46.0 [44.7]
	고유가 시나리오 ⁴⁾	97.1 [93.6]	66.6 [64.8]	45.7 [44.9]	59.8 [59.2]	78.0 [75.0]	83.0 [80.0]	90.4 [88.4]	106.5 [105.3]
CGES (9. 9일)	기본 시나리오	97.6	60.7	44.6	59.0	69.2	69.8	64.9	..
	저유가 시나리오	97.6	60.6	44.6	59.0	69.2	69.4	62.4	..
	고유가 시나리오	97.6	60.8	44.6	59.0	59.2	70.1	75.9	..
OEF(9. 28일)		97.7	62.4	45.0	59.1	58.3	77.0	71.5	..
JPMorgan(9. 22일)		98.5	61.9	45.7	59.9	70.0	72.0	70.0	..
Barclays Capital(10. 1일)		98.4	63.0	45.7	59.9	69.0	76.0	84.0	85.0
Deutsche Bank(9. 18일)		98.5	63.9	45.7	59.9	75.0	75.0	55.0	80.0
ICE 선물유가(10. 5일)		-	60.2	45.0	59.2	68.3	68.1	72.8	77.1
EIA(9. 9일) ⁵⁾		99.6	60.1	42.9	59.5	68.4	69.7	72.4	..
BNP Paribas(9. 16일)		-	59.7	45.7	59.9	68.3	65.0	78.0	90.0

주: 1) ()안은 전망시점. 2) []안은 Dubai유 기준.

3) 수요 감소. 4) 산유국 감소. 5) WTI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정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1.1% 증가에 그쳤던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9.9% 증가하였다. 2004년

중 하루 630만 배럴을 소비하는 중국경제는 2008년 중 780만 배럴, 2010년에는 85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원유수입액은 2005년 중 하루 300만 배럴에서 2010년에는 500만 배럴로 200만 배럴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원유생산은 점차 줄고 있어 원유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석탄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2005년 기준)중 석유의존도는 21.2%인 반면에 석탄의존도는 68.7%에 달하고 있다¹⁾([표 I-14]). 향후 중국 정부의 환경개선정책 강화 및 자동차 수요 급증 등으로 석유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I-14] 1990년 이후 중국의 1차 에너지 생산과 소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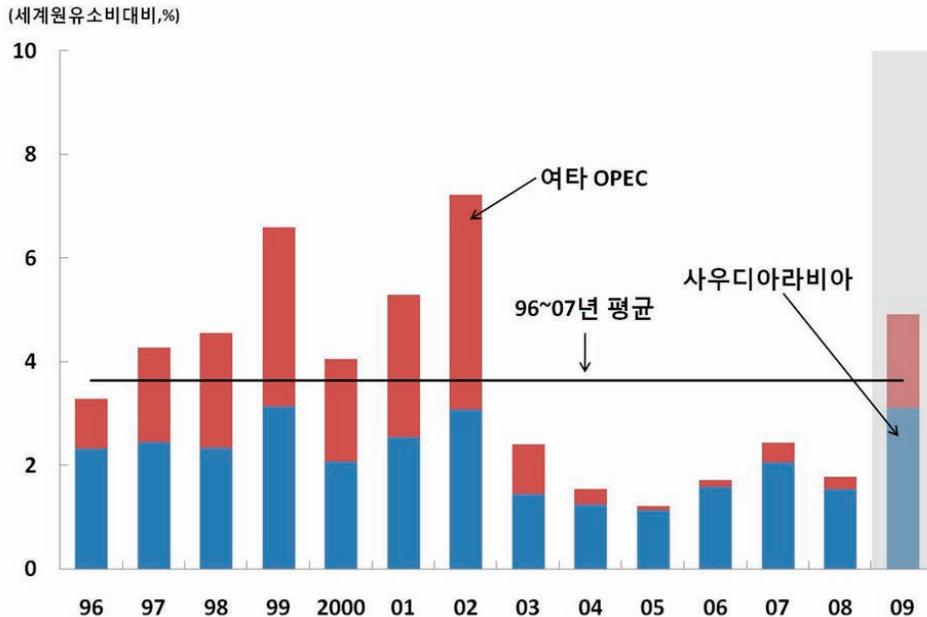
	생 산					소 비				
	합계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수력·원자력	합계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수력·원자력
1978~1980	0.8	0.1	1.0	2.5	11.6	2.7	3.8	-1.9	1.1	11.4
1981~1985	6.1	7.1	3.3	-2.2	8.7	4.9	6.0	1.0	-2.0	9.3
1986~1990	4.0	4.4	2.0	4.0	6.3	5.2	5.3	4.6	4.2	6.0
1991~1995	4.4	4.7	1.6	3.4	9.9	5.9	5.4	7.0	2.6	9.7
1996~2000	0.0	-0.9	1.7	8.1	3.0	1.1	-0.8	7.0	7.1	3.0
2001~2005	9.8	11.1	2.2	12.8	11.9	9.9	10.2	8.0	13.4	11.8

자료: 중국통계출판사, 「중국경제 통계 개요」, 2006.

1) 세계 에너지 소비 평균 구성비를 보면 전체 에너지 중 석탄의존도는 24.6%인 반면에 석유의존도는 34.6%이다.

둘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와 달러화 약세 등이 진행되면서 국제원유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유전의 노후화, 투자부진 지속 등으로 획기적인 생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유생산여력 약화로 석유의 잉여분이 과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최근 OPEC의 여유생산능력(1일 기준)은 200만 배럴로 1980년대 후반 500만 배럴 내지 600만 배럴 수준에 비해 1/3수준으로 낮아져 있다. OPEC회원국 중 사우디의 생산여력이 100만 배럴내지 160만 배럴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여타 OPEC회원국의 생산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비OPEC국가 중 미국, 북해산 석유, 중국의 석유생산은 정점을 지났고, 2010년 이후 러시아의 석유생산량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중 OPEC의 원유 잉여생산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2010년 이후 다시 2003년부터 2008년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7] OPEC의 잉여생산비율 추이



자료: IMF.

넷째,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다. 이란핵 문제, 이라크의 내분 등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위험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프리미엄이 상당기간 존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원유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산유국의 공급여력 약화, 개도국의 원유소비 증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이나 유가상승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상승속도에 비해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5] 세계 원유시장의 구조변화

	1960년대까지	1970~1980년대 중반 ¹⁾	198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²⁾	2000년대 초반 이후 ³⁾
유가수준	저유가	고유가	저유가	고유가
시장상황 (OPEC영향력)	메이저가 지배 (-)	국유화, 자원 민족주의(강화) → 공급자시장	국제원유시장 발달(약화) → 구매자시장	자원민족주의 재확산(강화) → 공급자시장
수요증가세 (소비증가율)	크게 증가(4.7%)		둔화(1.0%)	증가세 확대
공급능력	다소부족	점차 크게 확충	여유생산능력충분 →신규투자 부진	여유생산능력 고갈
가격결정방식	메이저업체가 공시	OPEC이 공시	현선물 시장	현선물 시장

주: 1) 1966 ~ 1980년 기준.

2) 1981 ~ 200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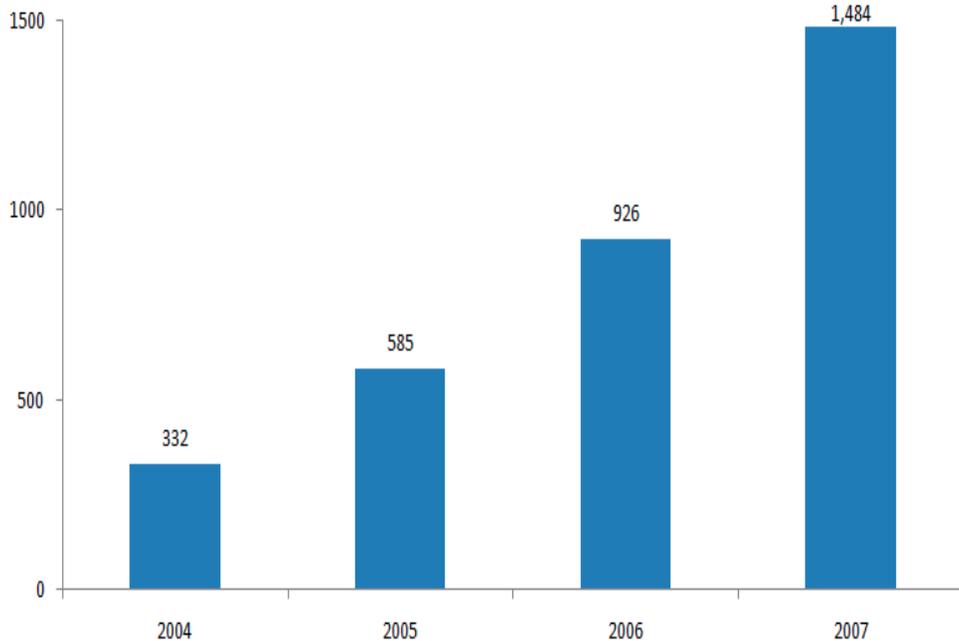
3) 2003 ~ 2007년 기준.

자료: 미 에너지연구원.

다만 선진국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으로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개발 확대(에너지사용 효율화투자 확대 등) 등은 중장기적으로 원유 등 에너지가격 상승을 제약할 것이다. 교토의정서(1997년)에 따라 2012년까지는 EU·일본 등 선진 38개국(미국 제외)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2007년 발리 로드맵 채택에 따라 2013년 이후에는 개도국 등 여타 국가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은 UN 기후변화협상이 2009년 12월을 시한으로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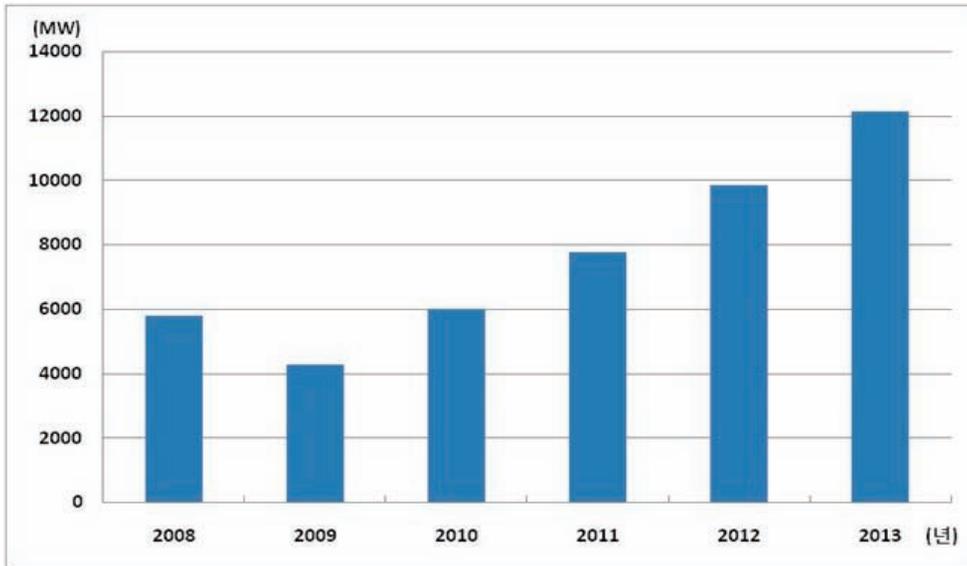
[그림 1-48] 세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금액

(단위: 억달러)



자료: REN21, “Global Trends in Sustainable Ennergy Investment”, 2008.

[그림 I-49] 세계 태양광 발전 산업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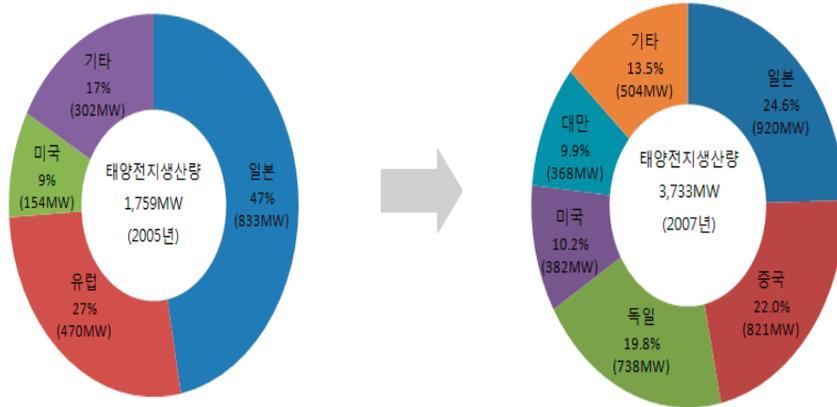


자료: IAEA, “Global Market Outlook For Photovoltaics Until 2013”.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들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 하원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2009년 6월 의결하였으며, EU는 2010년 7월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 제품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온실가스감축 기술을 발전시키고 탄소배출권 거래 인프라를 갖추는 등 녹색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경기부양정책 가운데 친환경사업 지원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유류에너지 대체 사용 및 하이브리드카 구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세계태양광 발전소,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I-50).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세계경제의 회복시에도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 탄력이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둔화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1-50] 태양전지 생산량 국가별 비중



자료: IEA “Trends in photovoltaic applications Survey report on selected IEA countries between 1992-2007”

한편 원유를 제외한 금속 가격도 국제유가와 유사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도국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알루미늄, 구리, 밀 등 기타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 원자재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2~2008년 중 개도국의 원유 누적소비 증가율은 24.8%로 동기간 중 세계 원유 누적소비 증가율(10.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02~2008년 중 개도국의 알루미늄 누적 소비 증가율은 88.8%로 동기간 중 세계 알루미늄 누적 소비 증가율(48.4%)보다 2배 수준에 달했다. 이 같은 개도국의 높은 원자재 소비 증가세는 개도국의 상대적인 높은 성장, 공업화 및 산업화 진전, 자원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즉 2002~2008년 중 개도국의 누적 경제성장률은 46.3%였으나 동기간 중 세계 누적 경제성장률은 29.2%였다.

2010~2013년 중 개도국의 상대적 고성장세 지속을 감안해 볼때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표 1-16] 세계상품 원자재소비와 지역별 비중

	세 계	개도국
<원유>		
누적소비 증가율(%)		
1985-2008	36.6	58.5
2002-2008	10.8	24.8
시장 점유율		
1993	-	43.1
2002	-	45.8
2008	-	51.8
<알루미늄>		
누적소비증가율		
1985-2008	92.5	140.6
2002-2008	48.4	88.8
시장점유율		
1993	-	32.4
2002	-	42.8
2008	-	59.2
<구리>		
누적소비증가율		
1985-2008	61.9	127.0
2002-2008	21.4	53.0
시장점유율		
1993	-	35.2
2002	-	49.3
2008	-	61.7
<밀>		
누적소비증가율		
1985-2008	27.6	20.3
2002-2008	7.8	7.7
시장점유율		
1993	-	76.9
2002	-	70.5
2008	-	70.7
<참고>		
실질GDP		
누적성장률		
1985-2008	84.1	110.6
2002-2008	29.2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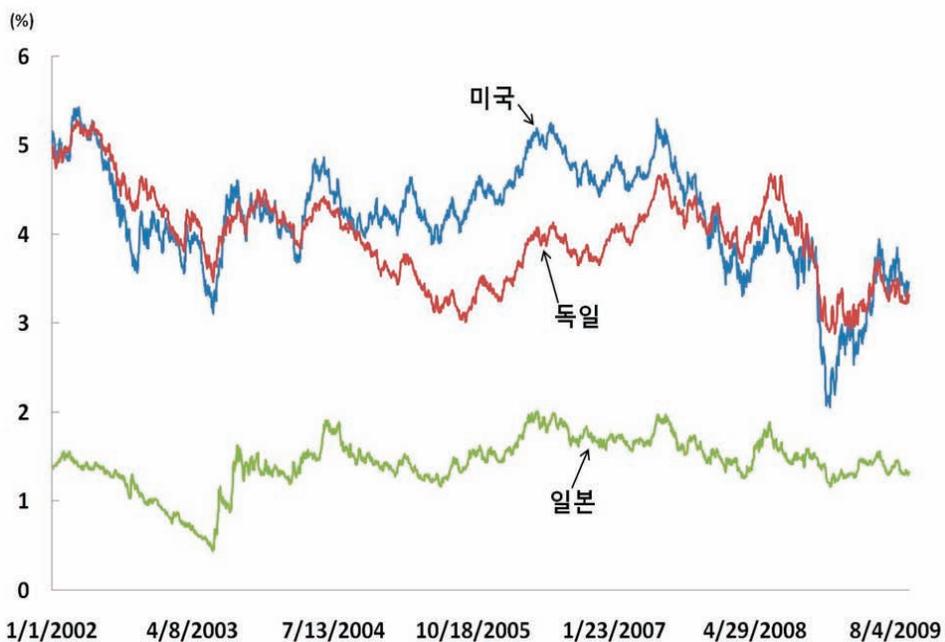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atastream.

5. 국제금리 전망

가. 2009년 동향

국제금융위기로 2.25%(2008년 12월)까지 하락했던 미국 국채금리(10년 만기)는 신용경색 완화 및 안전자산 선호도 약화 등으로 2009년 10월 현재 3.41%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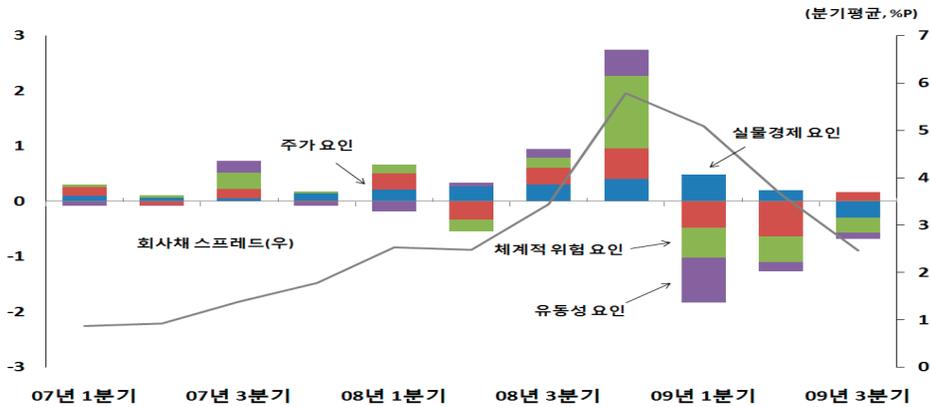
[그림 1-51] 선진국의 국채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경기회복 기대로 2009년 2/4분기 이후 글로벌 회사채 스프레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52] 글로벌 회사채스프레드 변동요인(기여도)



자료: IMF(2009. 6)

나. 2010년 이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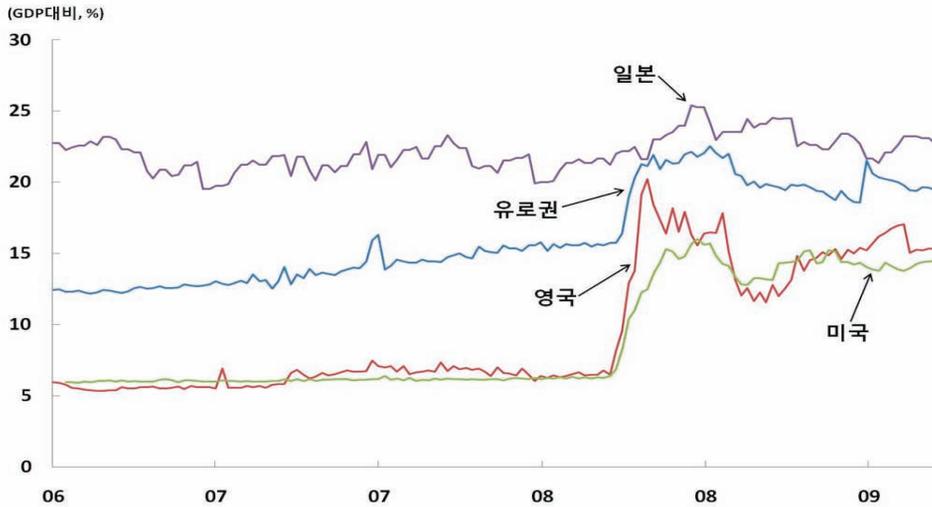
2010년 하반기 이후 국제장기금리는 상승추세를 보일 것이나 상승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첫째,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1-53] 주요 선진국(G3) 양적완화정책과 글로벌 유동성



자료: Bloomberg.

[그림 I-54] 중앙은행 총자산비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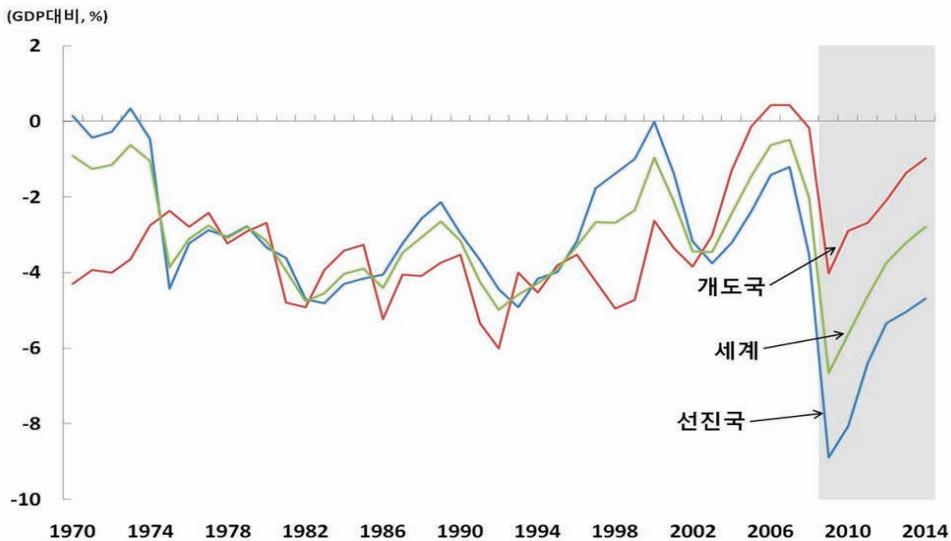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인하, 민간자산 매입을 통해 통화의 양적확대를 추진하여 경기부양 및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해 왔다([그림 I-53], [그림 I-54]).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데 주요국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대공황 당시 정책실패의 경험, 정치적 부담 등으로 조기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및 과도한 자산가격의 상승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강한 강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출구전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0년 하반기 중 초과지준 흡수 → 2011년 초 금리 인상 → 2012년 또는 2013년에 점진적 자산매각 프로그램 발표 등이다. 현재 연준은 역RP 및 기간물 예금을 도입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타 초과지준 흡수수단인 국채발행자금지원제도(SFP) 확대, 연준채권 발행, 지준율 인상 등은 실행 가능성이 낮고 자산매각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 실행에 국제공조가 필

요하다는 원칙적 합의(G20)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통화정책 및 출구전략 시기와 방법은 각국마다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시기를 살펴보면 경기회복이 빠르고 물가상승 압력이 큰 상당수 신흥시장국들은 2010년 1/4분기 중(또는 그 이전), 미국 등 경기회복이 완만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주요 선진국은 이보다 6개월 이상 늦은 2010년 4/4분기 또는 2011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2010~2011년 중 긴축기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정상 수준보다 낮아 실질적인 금융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발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채발행액 규모가 장기금리와의 상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정수지 확대는 장기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림 1-55] 지역별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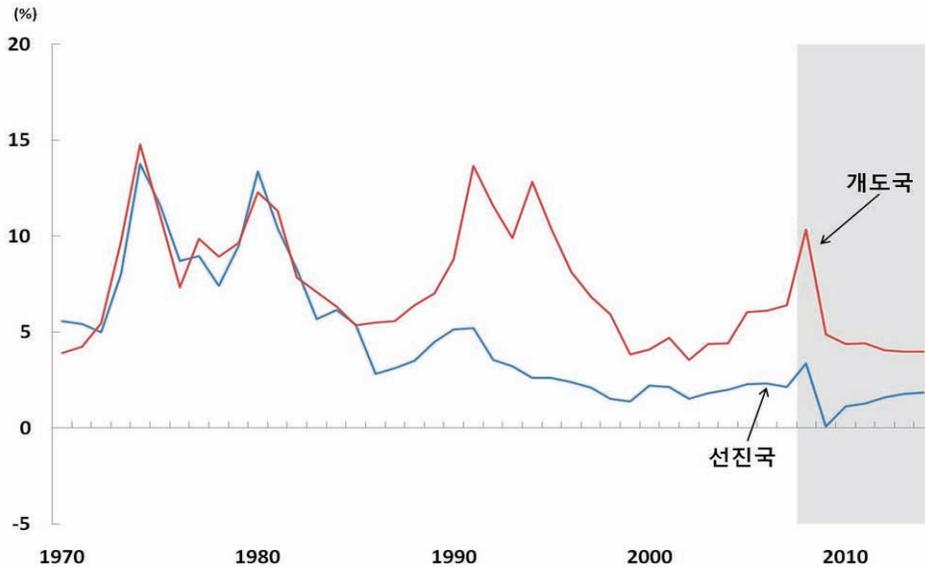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10.

한편 국제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GDP갭(잠재GDP - 실제GDP)의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정책

금리 인상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제금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 선진국들의 소비자물가는 2013년까지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 I-56] 지역별 소비자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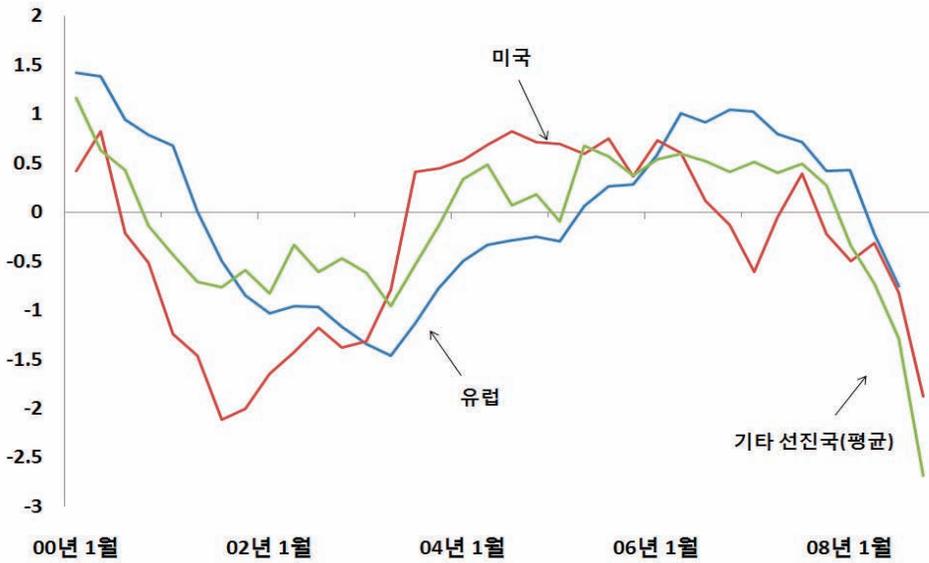


주: 전년동기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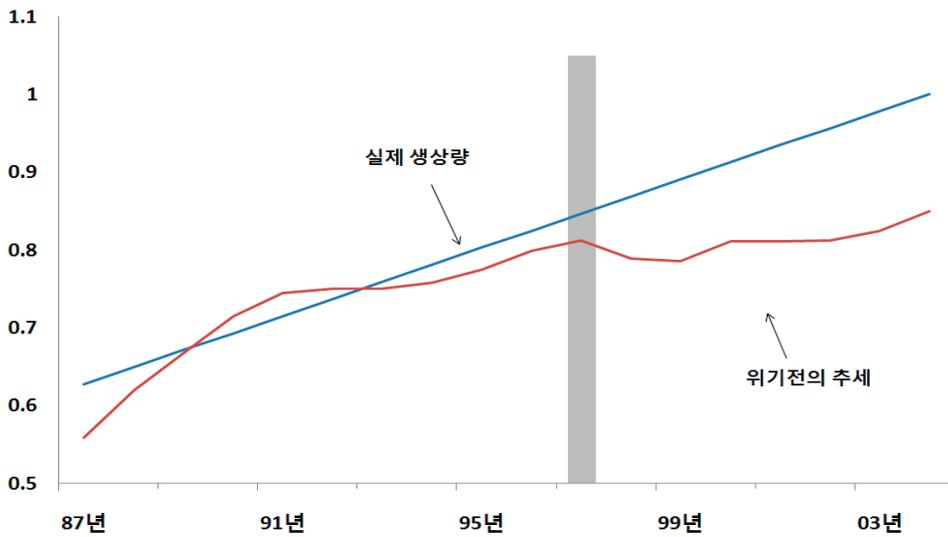
이처럼 소비자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GDP갭(실제GDP가 잠재GDP에 못 미치는 상태 지속, 즉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현상)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림 I-57]). 선진국의 핵심 소비자물가는 각국의 GDP갭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로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GDP갭이 빠르게 축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금융위기 경험국인 일본, 스웨덴, 태국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상당기간 GDP갭이 축소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58], [그림 I-59]).

[그림 1-57] 선진국의 산출량(GDP) 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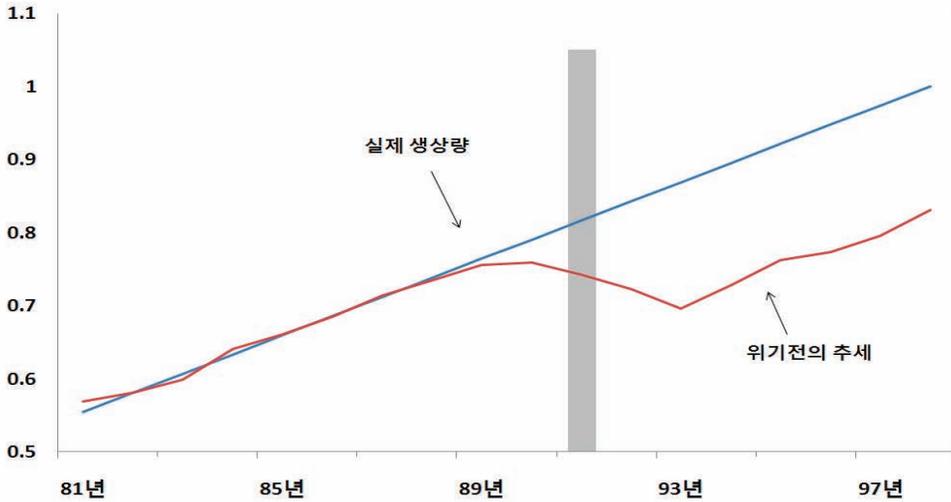
자료: IMF, Bloomberg.

[그림 1-58] 금융위기(1997년)와 일본의 GDP갭



자료: IMF, Bloomberg.

[그림 1-59] 금융위기(1991년)와 스웨덴의 GDP갭



자료: IMF, Bloomberg.

[표 1-17] 금융위기 전후 국제금리 전망

	금융위기국면 (2009년 1/4분기까지)	금융위기 완화국면 (2010년 이후)
정책금리(출구전략)	인하	점차 상승
글로벌유동성	확대	축소
경기	급격한 하강	반등 후 완만 상승
유가(물가)	급락	반등 후 점차 상승
미국인의 해외투자	급격한 축소	점차 확대
미국의 재정수지 (국채발행)	적자 축소 (둔화)	적자 대폭 확대 (급증)
미국의 자본수지 흑자	급증	둔화
국제 장기금리	하락	점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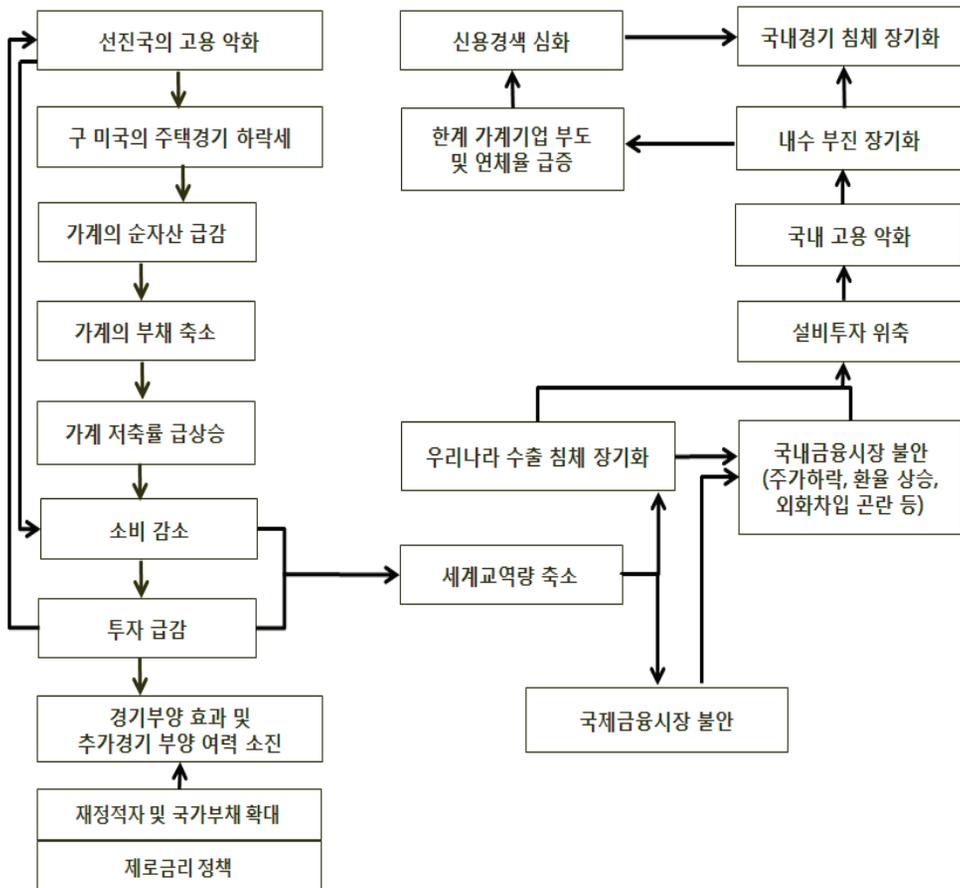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더블 딥(이중 침체, double dip)가능성 점검

가. 고용 없는 경기회복

일부 비관적인 경제전문가들은 고용 없는 경기회복, 과잉부채 축소를 위한 가계의 저축률상승, 출구전략 본격화 등으로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더블 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 1-60] 더블딥(double dip : 일시 경기회복 후 경기침체)과 장기 경기침체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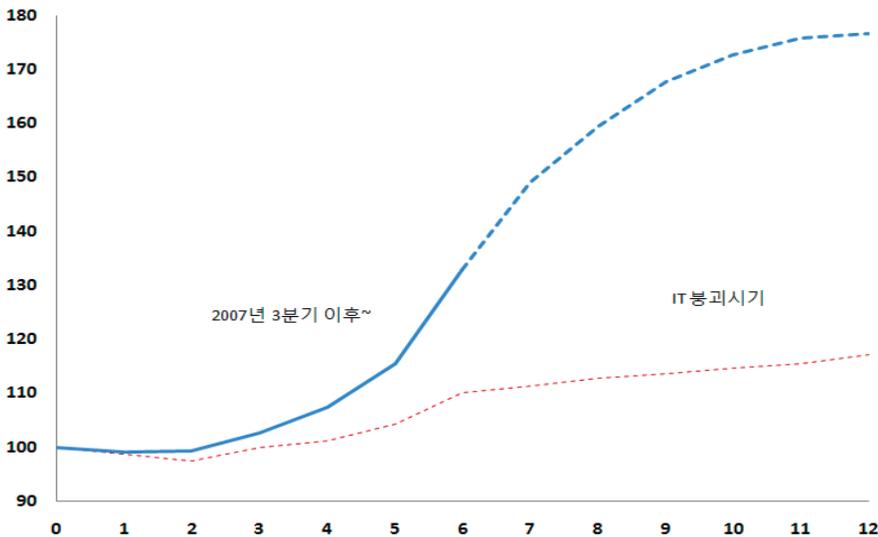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2/4분기를 주요 선진국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상승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나 주요 선진국 고용시장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2/4분기 이후 미국, 유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취업자수가 늘지 않고 있고 실업률은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4분기 중 8.1%였던 미국의 실업률이 3/4분기에는 9.6%로 높아졌다. 유로의 실업률도 1/4분기 중 8.8%에서 7월중 9.5%로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7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OECD국가의 실업자는 1,511만명(OECD, Tackling the Jobs Crisis, 2009.9)이 늘었다. OECD는 금번의 경기하강국면과 과거 경기하강국면을 비교해 볼 때 금번의 경기하강 국면에서 고용여건이 가장 나쁜 것으로 분석하였다. OECD국가의 최근의 실업률지수와 IT버블 붕괴 후 실업률지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이를 명확히 볼 수가 있다([그림 I-61]).

[그림 I-61] 최근과 IT 붕괴 이후 OECD 실업률

(단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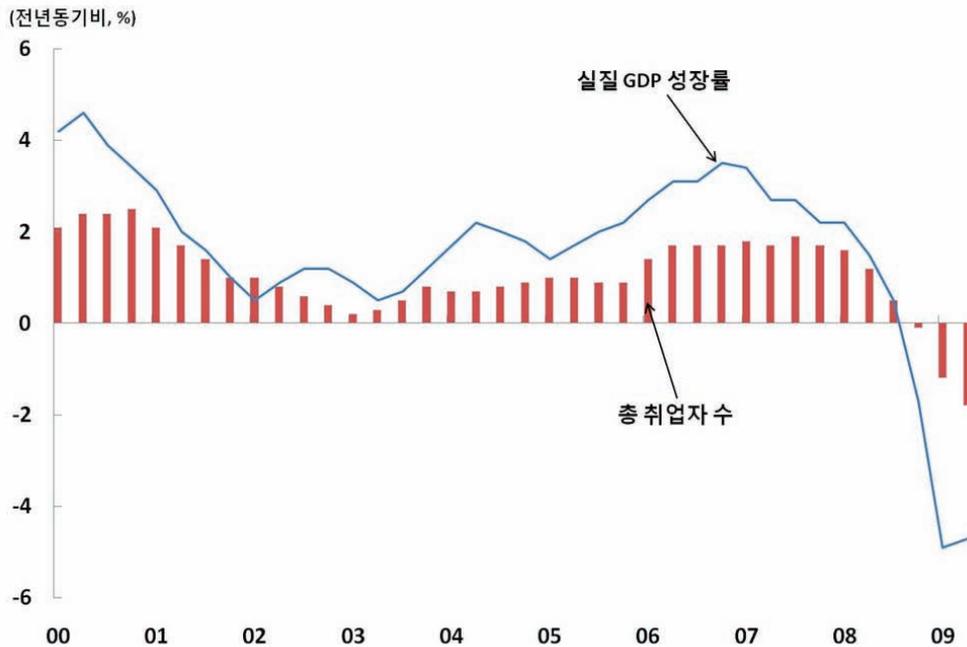


주: 위기직전의 실업률을 100으로 표준화.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2009. 9.

특히, 금번의 경기하강국면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를 보면 경제성장률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증가율 감소 폭은 좀처럼 축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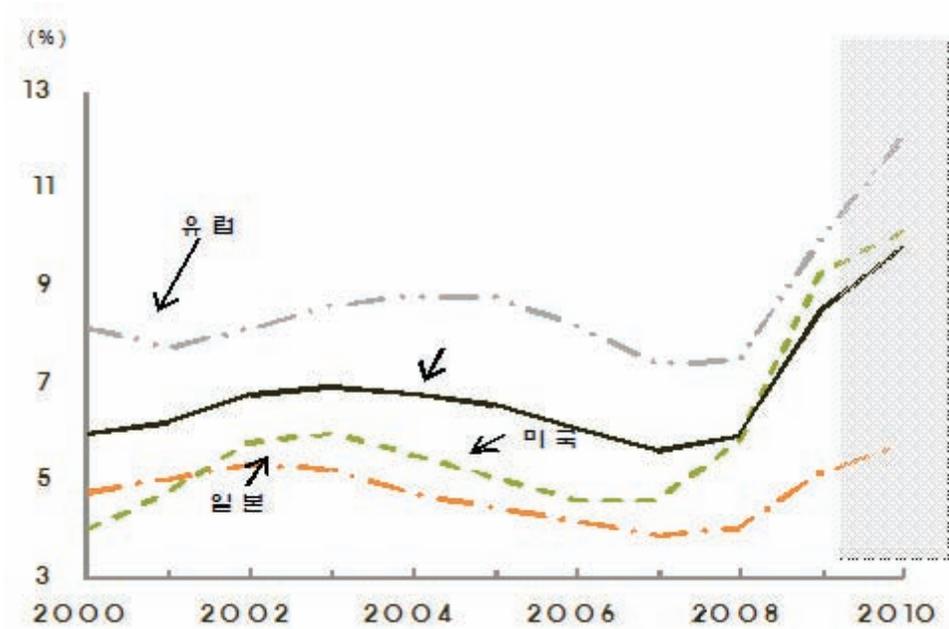
[그림 I-62] 유로국가 GDP와 취업자 수 변동 추이



자료: Bloomberg.

OECD(2009. 9)는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이 2009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I-63]). 미래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기업의 채산성 개선 지연 등으로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통한 비용축소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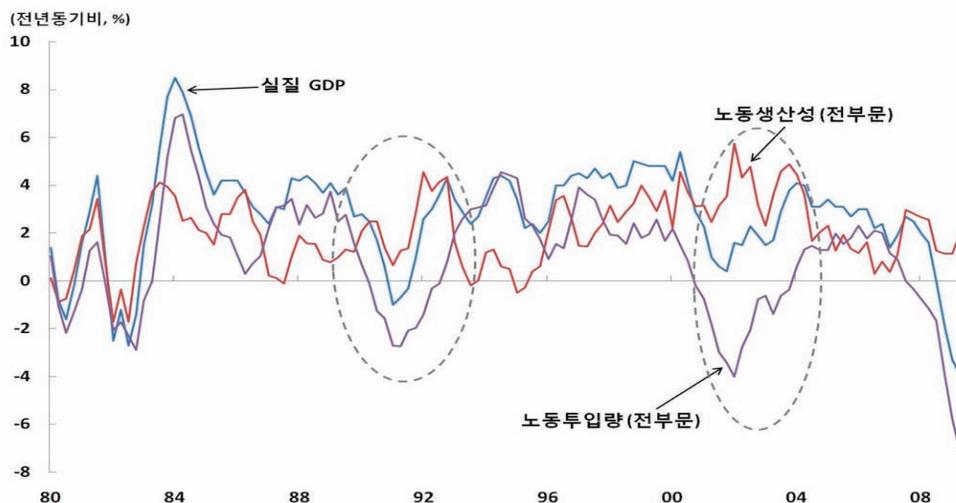
[그림 1-63] 주요국의 실업률 전망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9.

결론적으로 고용여건 개선의 지연이 선진국의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으로 소득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여건 개선 지연으로 소비 등 내수도 성장 탄력이 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실질GDP와 노동투입량 추이를 비교해 보면 경기가 바닥권에서 벗어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용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부진에 의한 더블 딥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림 I-64] 미국실질 GDP, 노동투입량,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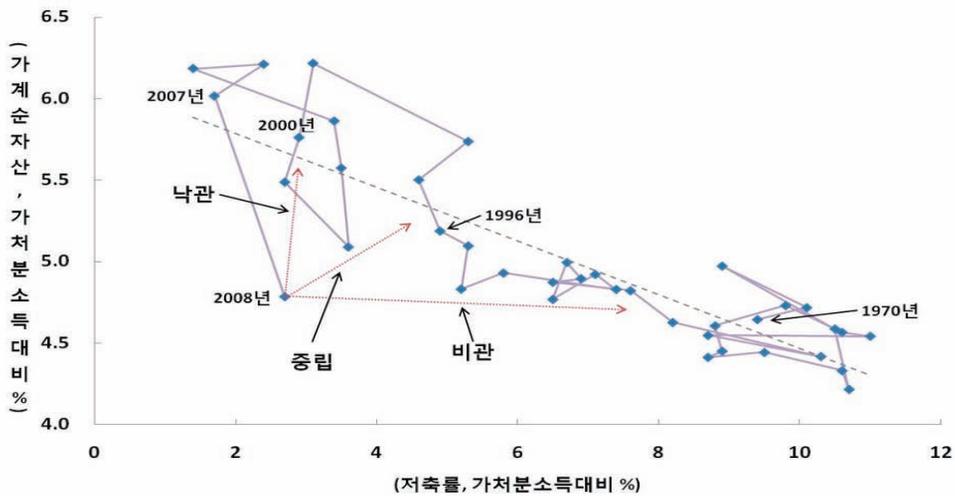
나. 가계부채조정과 저축률 상승

가계의 순자산 가격(주가와 주택 가격 하락의 영향)하락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가계저축률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가계의 자산가격이 하락하자 저축률이 상승국면으로 반전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14.2조 달러(주택론 10.5조 달러, 소비자론 2.6조 달러)로 2003년보다 43.4%가 증가하였다. 가치분 소득둔화와 주택가격의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은 미국가계 소비여력을 약화(저축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가계순자산과 저축률은 대체로 역의관계를 가진다([그림 I-65]).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순자산비율(가치분 소득 대비)이 저축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그림 I-66]). 이와 같이 주택 및 주가하락으로 주요 선진국 가계들의 자산가격이 낮아지면서 저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률 상승은 소비율 하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순자산가격 하락은 선진국들의 소비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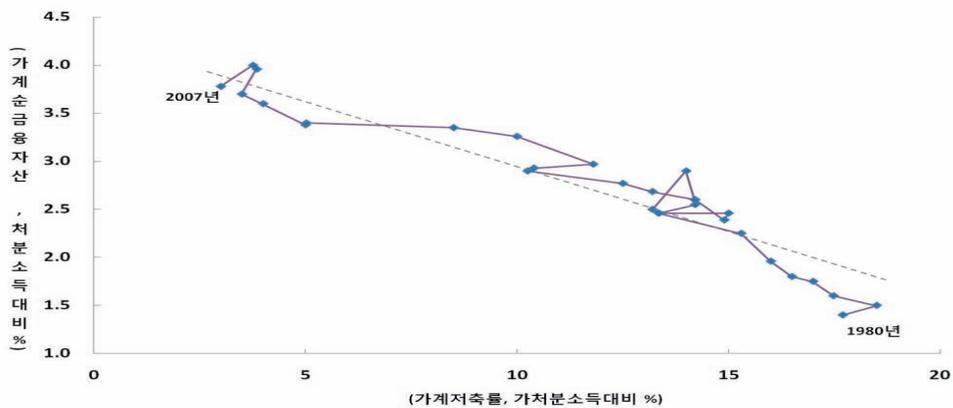
가계의 순자산 비율(순자산/가처분소득)과 저축률이 추세선 이하로 크게 하락했다. 미국가계의 저축률 상승 속도에 따라 미국의 소비율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가계의 저축률 상승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소비 회복세가 급락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림 1-65] 미국 가계 순자산과 저축률 추이(1970~2008년)



자료: Bloomberg.

[그림 1-66] 일본 가계금융순자산과 저축률 추이(1980~2007년)



자료: Bloomberg.

다. 출구전략 본격화

출구전략 본격화로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경기부양용 재정지출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재정에 의한 경기 부양효과는 약화될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 부담 확대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여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표 1-18] 주요국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및 감세 규모¹⁾

(단위: GDP대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재정지출	1.3	1.0	0.4	-0.3	0.9	0.7	2.3	1.7	3.1	2.7
사회간접자본	0.2	0.3	0.2	-0.1	0.4	0.4	1.3	1.6	2.9	-
중소기업지원	-	-	-	-	0.3	0.2	0.1	-	-	-
사회안전망	0.5	0.1	0.1	-	-	-	0.7	0.1	-	-
기타	0.5	0.6	0.2	-0.2	0.2	0.0	0.2	-	0.2	-
감세	0.7	0.8	1.0	0.2	0.6	1.3	0.1	0.1	-	-
개인소득세	0.3	0.6	0.2	0.2	0.5	1.0	-	-	-	-
간접세	-	-	0.8	-	-	-	-	-	-	-
법인세	0.4	0.2	-	-	0.1	0.2	0.1	-	-	-
총계	2.0	1.8	1.4	-0.1	1.5	2.0	2.4	1.8	3.1	2.7

주: 1) 자동안정화 기능 및 기타 비재량요인(금융부문 이익급감,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변동을 제외한 재량적 재정정책 규모.

2) 금융부문 지원 규모 제외.

자료: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2009. 4.

2009년과 2010년 중 미국의 기초재정적자 비율은 평균적으로 11% 수준에 이를 것이고 국가채무 비율(GDP대비)도 동기간 중 9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19] 미국의 재정수지(GDP대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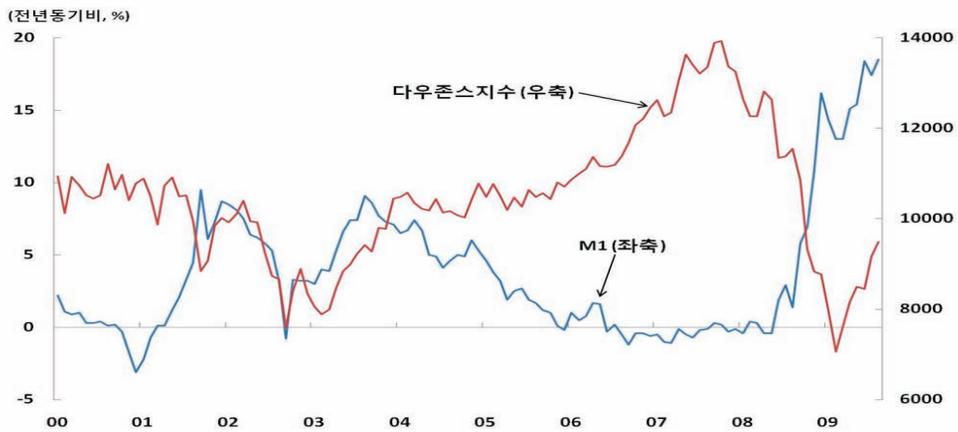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	20.0	21.0	29.2	26.3	24.4	23.8	24.2	24.5
세입	18.8	17.7	15.0	15.7	17.1	18.5	18.7	18.6
재정수지	-1.2	-3.2	-14.2	-10.6	-7.3	-5.4	-5.6	-5.9
기초재정수지	0.6	-1.4	-13.2	-9.7	-5.6	-2.9	-2.6	-2.6
재정수지(10억달러)	-161	-459	1,995	-1,505	-1,078	-828	-899	-994

자료: IMF, "Country Report", 2009. 7.

또한 금융안정화정책 및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 중국 등의 통화증가율도 급격히 높아졌다. 과잉유동성 환수를 위한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서서히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하반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정책금리 인상과 같은 출구전략이 시행되어 2010년 하반기 이후 실물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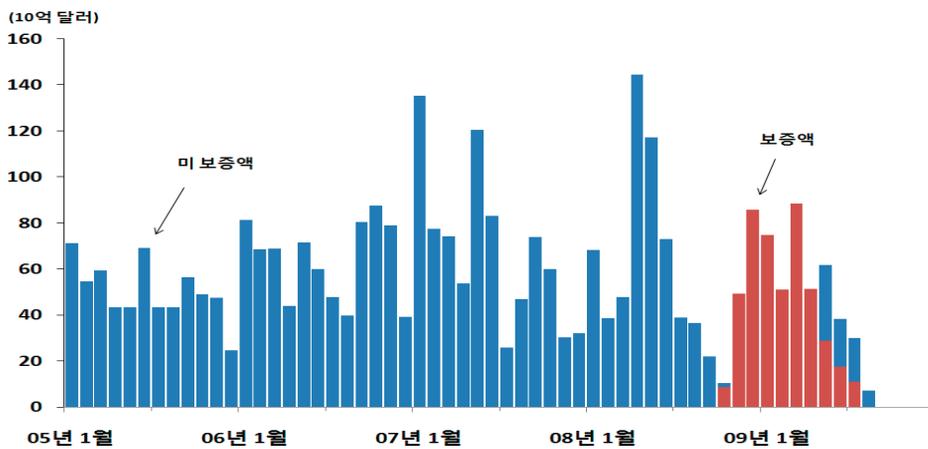
[그림 1-67] 미국 통화(M1) 증가율과 다우존스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특히 정부보증채권 발행액의 축소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환경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규주택구입 및 자동차구입에 주어졌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자동차소비와 주택구입 수요도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혜택에 힘입어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은 자동차 생산이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표 I-20])이었으나 세제혜택의 축소는 일시적인 생산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그림 I-68] 선진국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액



자료: Bloomberg.

[그림 I-69] 주택착공과 자동차판매



자료: 미 상무부.

[표 1-20]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일본	-20.0	-24.4	-24.5	-22.8	-17.4	-12.2	-2.8
독일	-14.2	21.5	39.9	19.4	39.7	40.5	29.5
프랑스	-7.9	-13.2	8.0	-7.1	11.8	7.0	-
이태리	-32.6	-24.4	0.2	-7.5	-8.6	12.4	-
스페인	-41.6	-48.8	-38.7	-45.6	-38.7	-15.9	-
영국	-30.9	-21.9	-30.5	-24.0	-24.8	-15.7	2.4
미국	-36.3	-38.4	-34.6	-34.2	-38.6	-30.4	-10.6
중국	-7.7	24.2	10.3	37.4	46.8	48.4	70.5

자료: 일본자동차공업협회.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이 완연하게 나타난 후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실행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은 2010년 하반기 중 초과기준 흡수, 2011년 초 금리 인상, 2012년 또는 2013년에 점진적 자산매각 프로그램 발표 등의 순서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출구전략의 속도와 강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점에서 출구전략에 의한 경기침체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라. 상업용 부동산대출과 소비자대출의 연체율 상승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업용부동산 등 부동산 대출연체율과 소비자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연체율로 금융기관들의 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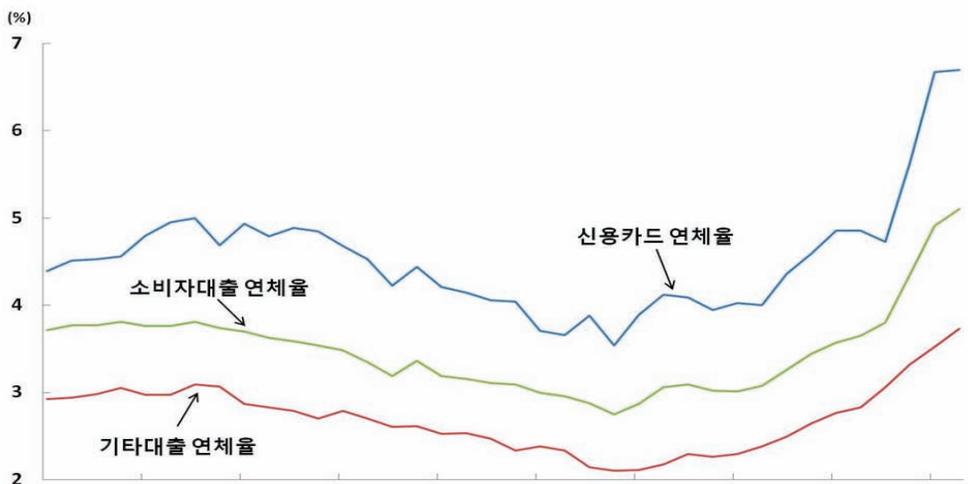
채권 처리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 부담 증가가 또 다시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1-70] 미국주택대출 연체율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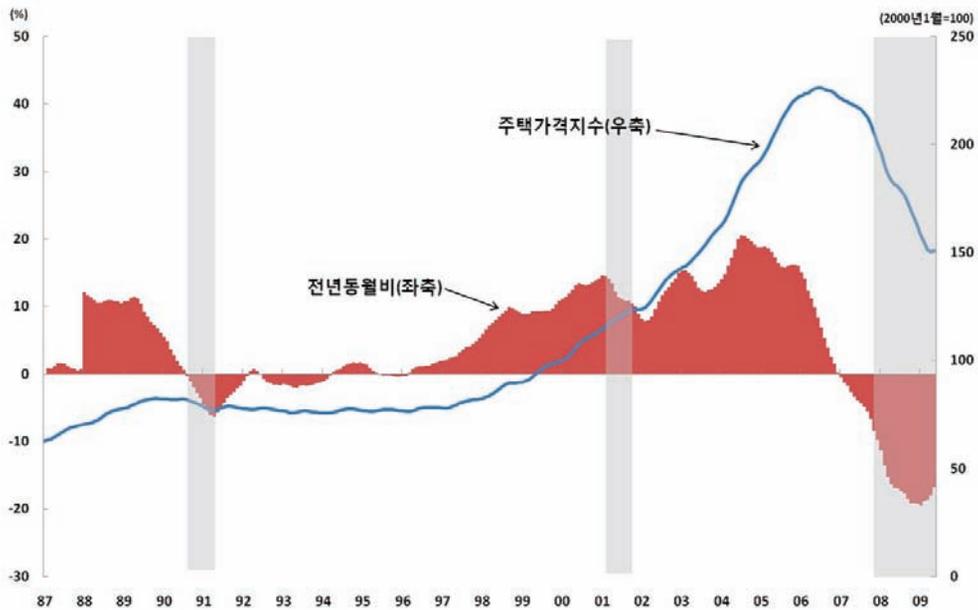
[그림 1-71] 미국 소비자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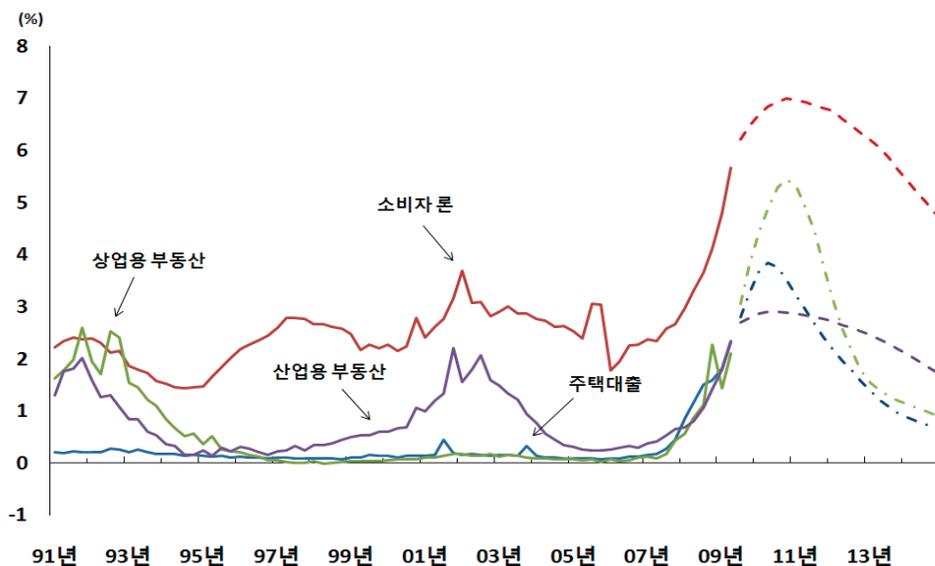
미국의 부동산가격이 2010년 하반기부터 회복내지 소폭 반등할 것으로(케이스실러 선물지수) 보고 있다([그림 I-72]). 한편 소득계층별 미국가계의 자산 및 부채, 소득추이를 비교해 보면 고소득층에 자산과 부채가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자산 손실이 가장 큰 계층은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74], [그림 I-75]). 부동산가격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관련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MF는 2010년 말이나 2011년부터 미국금융기관의 대손상각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계연체율 상승에 의한 더블 딥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그림 I-72]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10개 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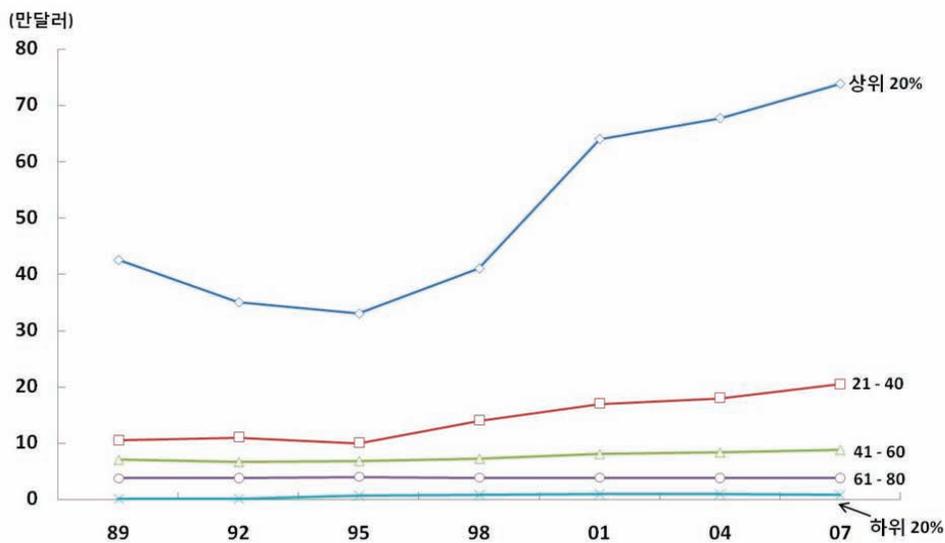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73] 미국 대출채권 대손상각비율 전망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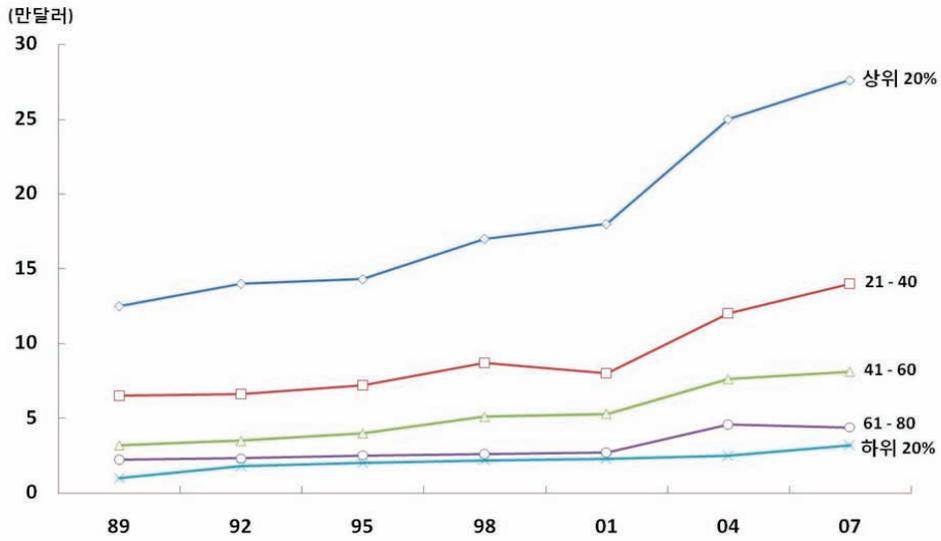
[그림 1-74] 미국 소득계층별 순자산(자산 - 부채) 규모 추이



주: 2007년 기준 실질가액.

자료: FRB.

[그림 1-75] 미국 소득계층별 채무 잔고



주: 2007년 기준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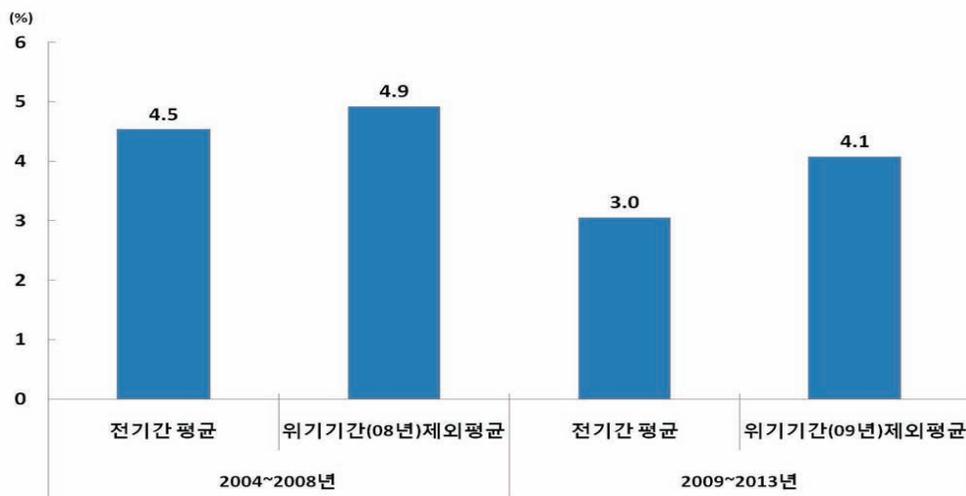
자료: FRB.

7.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5년간 경제지표 비교

가. 세계GDP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년부터 2009년까지)을 제외한 위기 후 4년(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계GDP성장률과(연평균) 위기 전 4년(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세계GDP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위기 전 4.9%성장에서 위기 후 4.1%로 0.8%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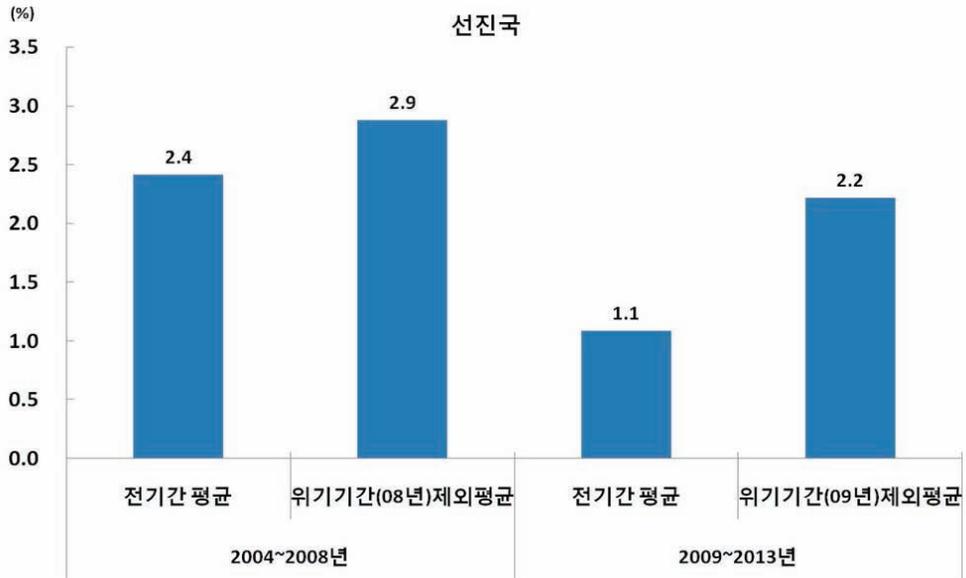
[그림 1-76] 세계 실질GDP성장률(전년동기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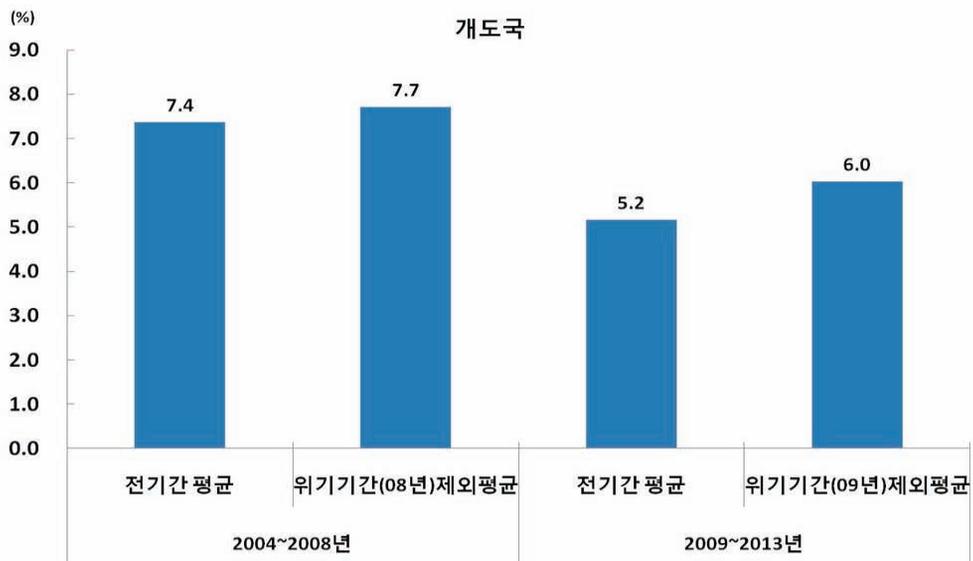
자료: IMF.

한편 지역별 성장률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 위기 전 2.9%성장률에서 위기 후 2.2% 성장으로 0.7%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개도국의 경우 7.7%에서 6.0%로 1.7%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GDP의 지역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미국은 0.6%p에서 0.2%p로 낮아지고 중국은 1.0%p에서 1.2%p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7] 지역별 GDP 성장률(전년동기비) 평균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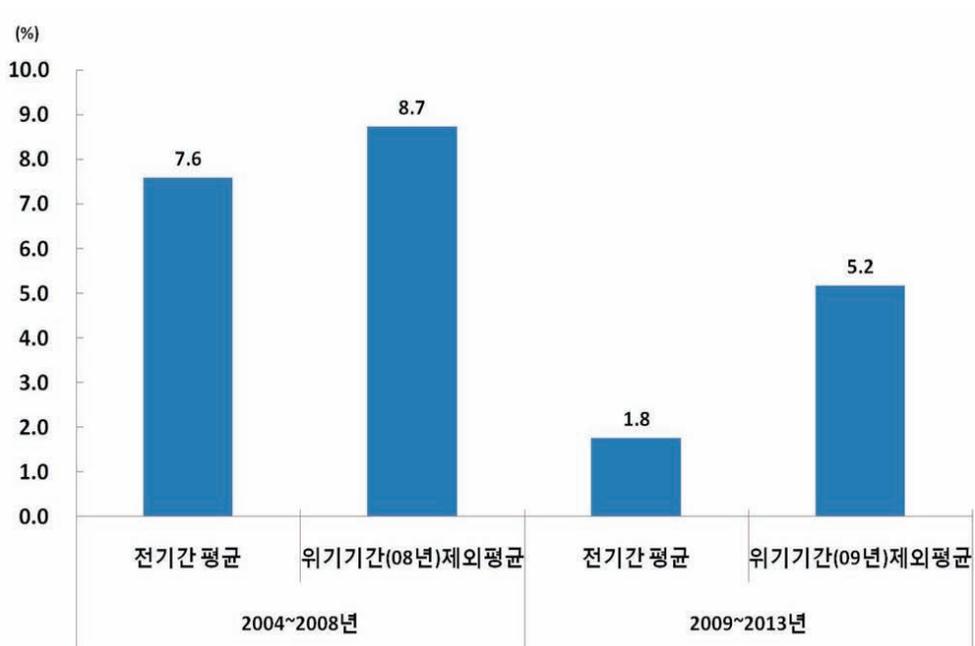


자료: IMF.

나. 세계교역량

위기 전 4년간 세계교역량(연평균)은 8.7% 증가에서 위기 후 5.2% 증가로 3.5%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78] 세계 무역량 증감률(전년동기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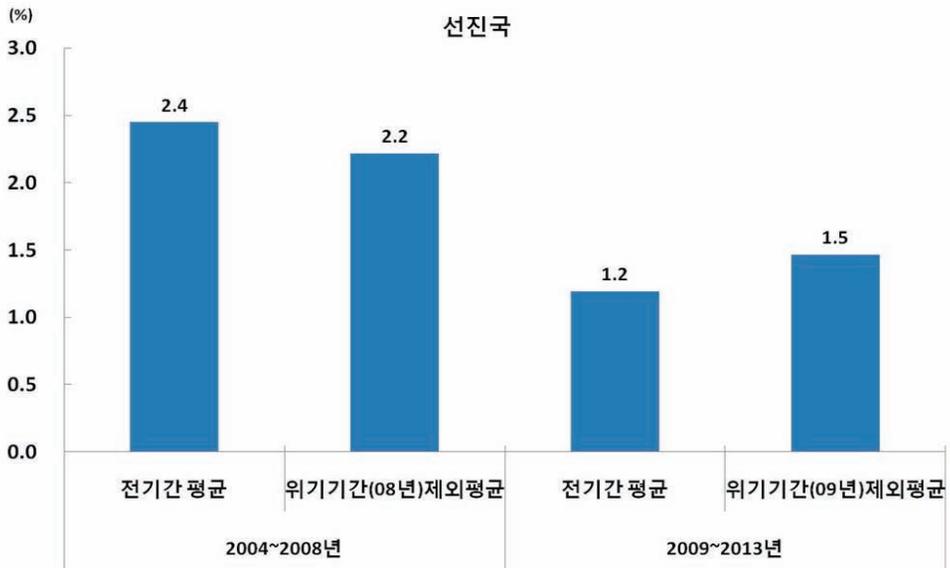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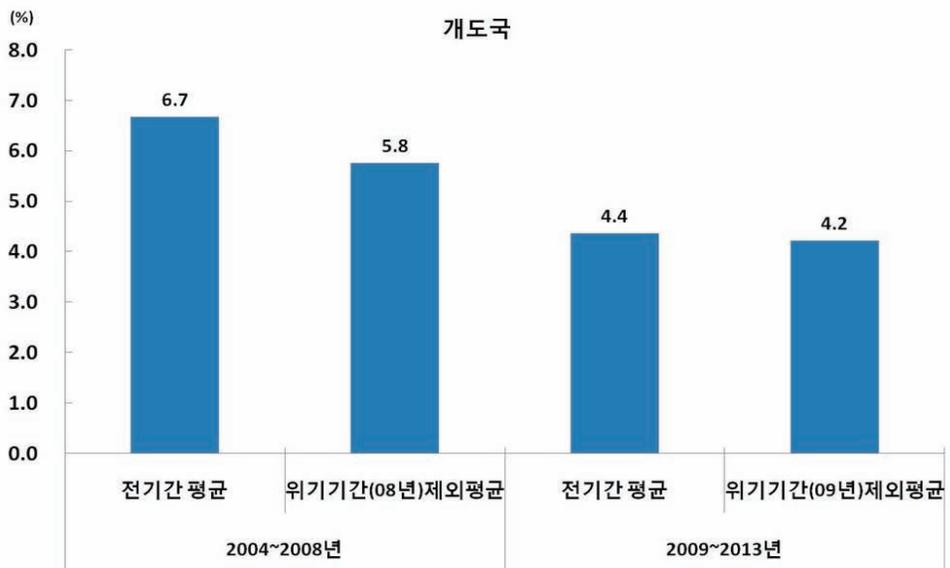
다. 소비자물가

위기 전 4년간 선진국소비자물가(연평균)는 2.2% 상승에서 위기 후 1.6% 상승으로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기 전 4년간 개도국소비자물가(연평균)는 5.8% 상승에서 위기 후 4.2% 상승으로 1.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79] 소비자물가 증가율(전년동기비) 평균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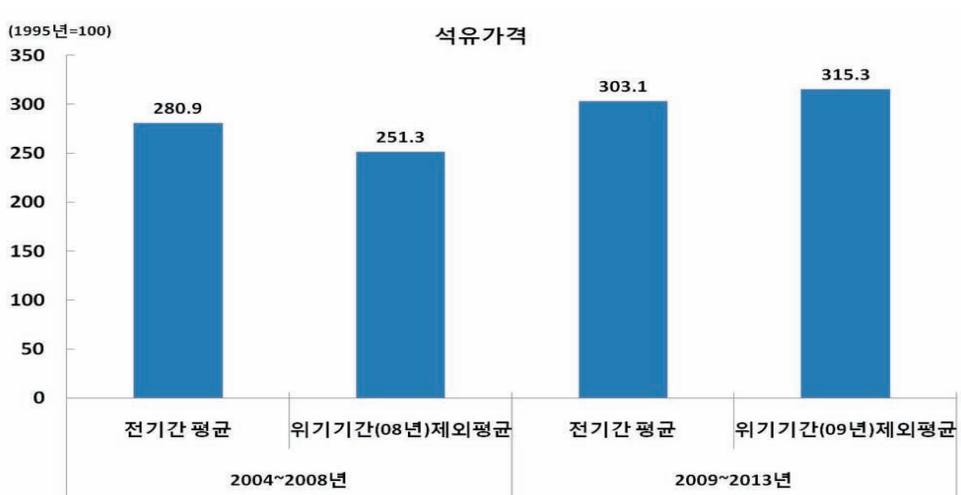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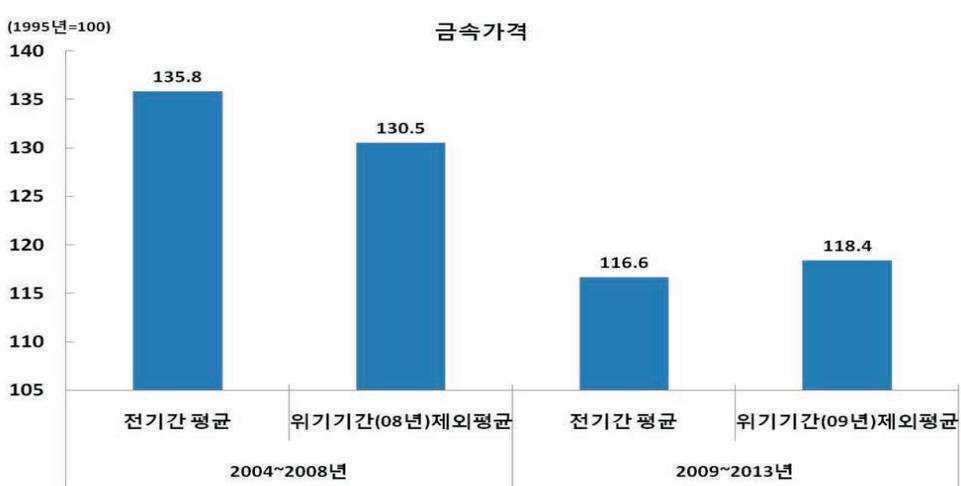
라. 실질상품가격지수

위기 전 4년간 석유실질 가격지수(연평균)는 252.3에서 위기 후 315.3으로 상승으로 25.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80] 실질 상품가격지수 평균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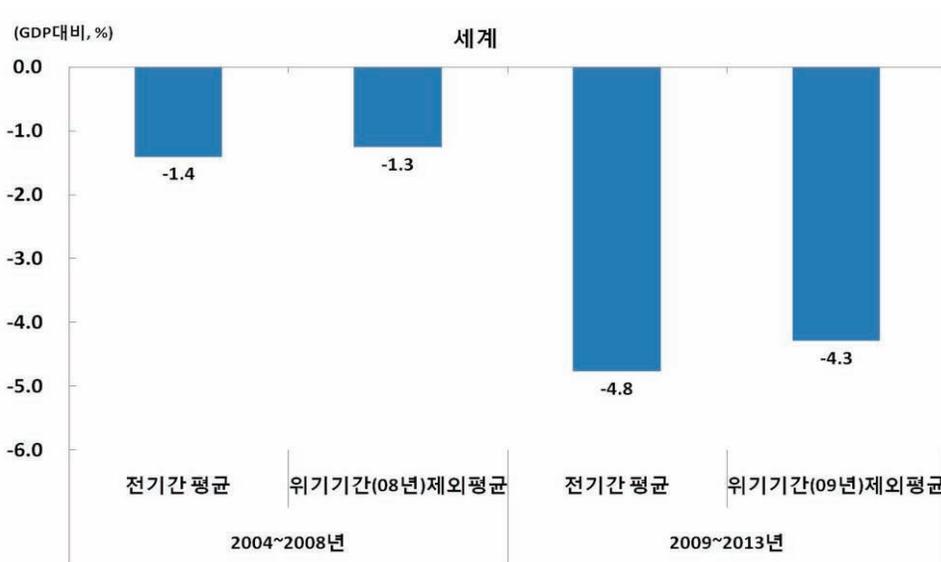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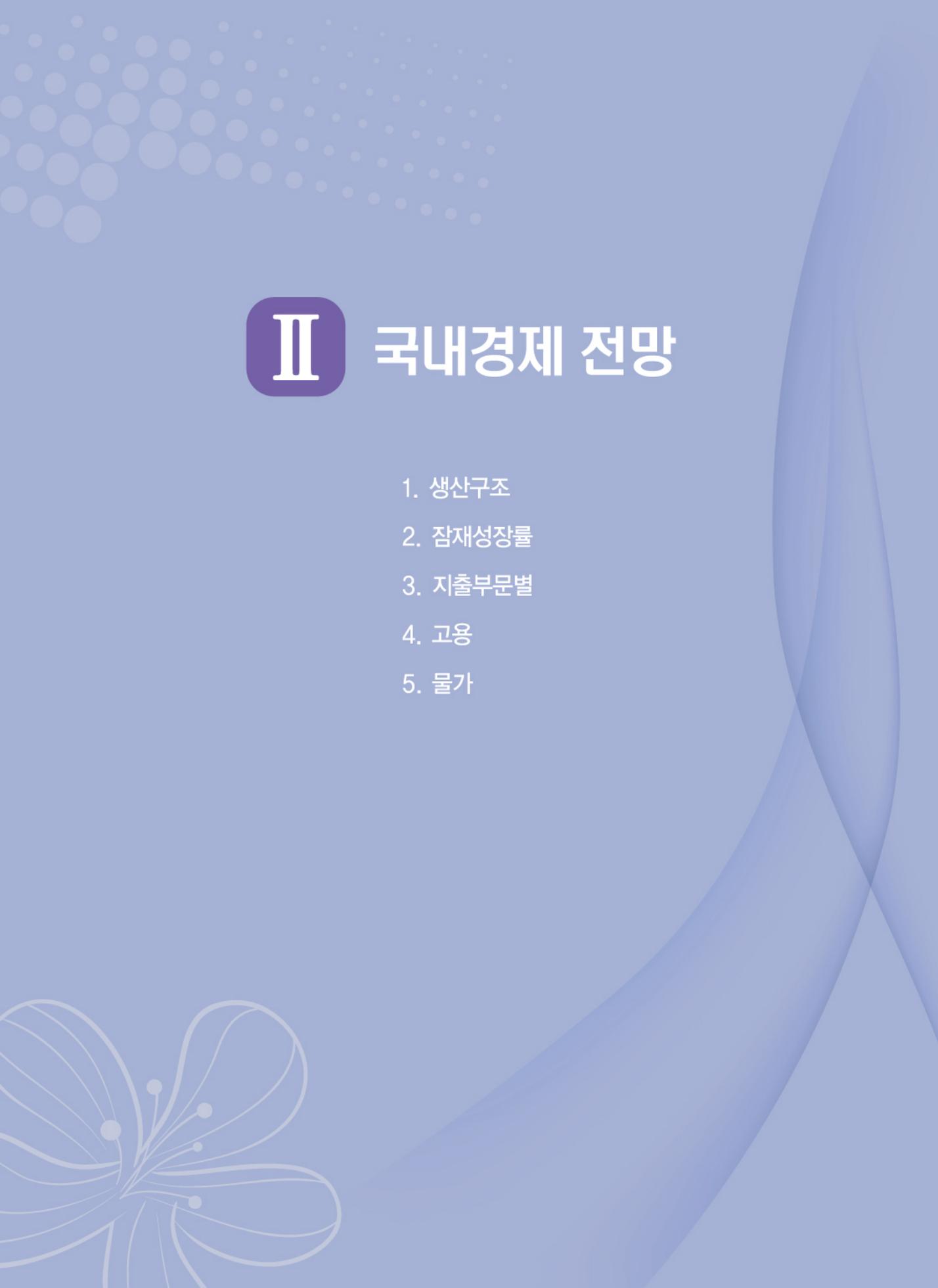
마. 재정수지적자비율(GDP대비)

위기 전 4년간 선진국의 재정수지적자비율(연평균)은 2.0%에서 위기 후 6.7%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1] 재정수지 적자 비율



자료: IMF.



II

국내경제 전망

1. 생산구조
2. 잠재성장률
3. 지출부문별
4. 고용
5.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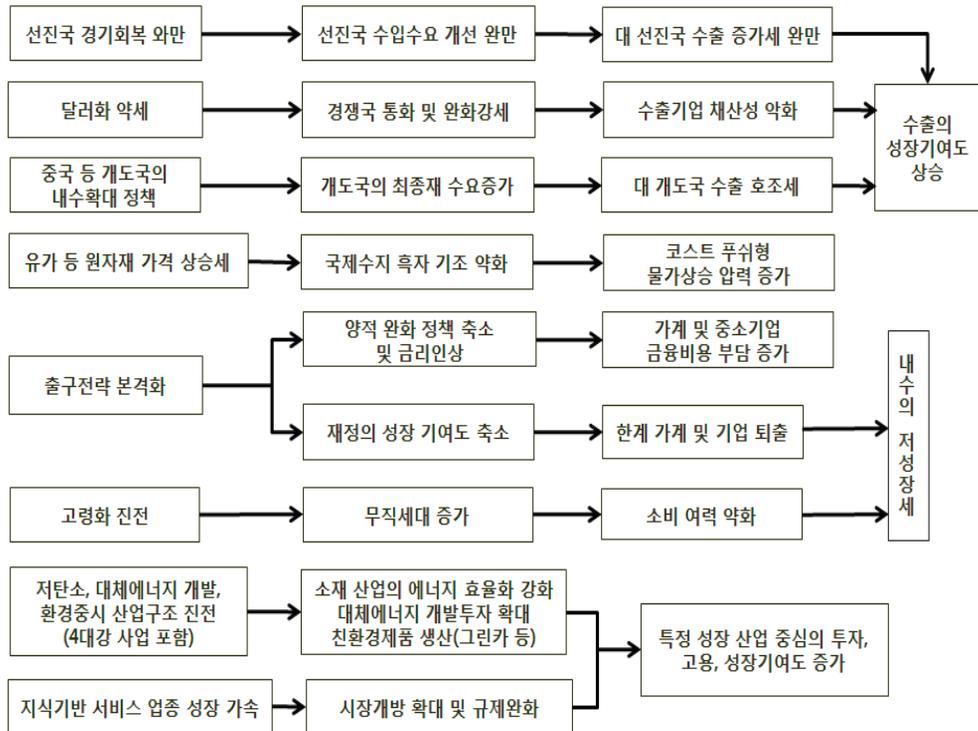
1. 생산구조

가. 저탄소 녹색산업 성장 주도

(1) 환경관련시장 급 확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경제는 선진국의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 금리인상, 고령화진전 등으로 내수도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등 개도국들의 내수 확대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확대에 이들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생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1] 2009~2014년 국내경제 환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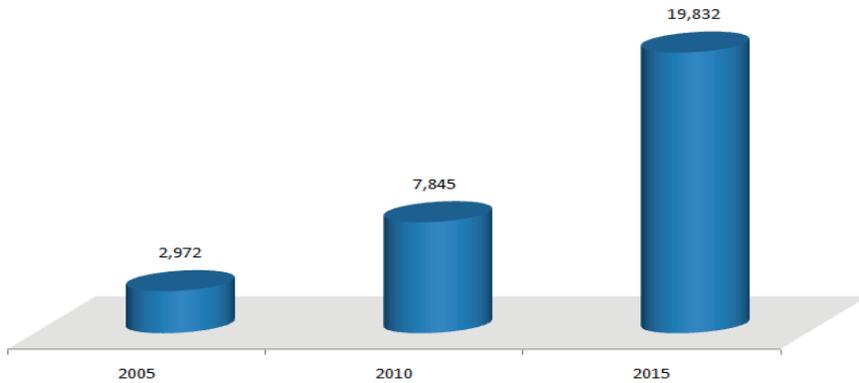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까지는 EU·일본 등 선진 38개국(미국 제외)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나 2013년 이후에는 개도국 등 여타 국가도 온실가스 감축(2007년 발리 로드맵 채택)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들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 하원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2009년 6월 의결하였으며, EU는 2010년 7월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환경 중시 제품의 생산 세계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 2,972억 달러에서 2015년 1조 9,832억 달러로 6, 7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II-2]).

[그림 II-2] 세계 환경시장 전망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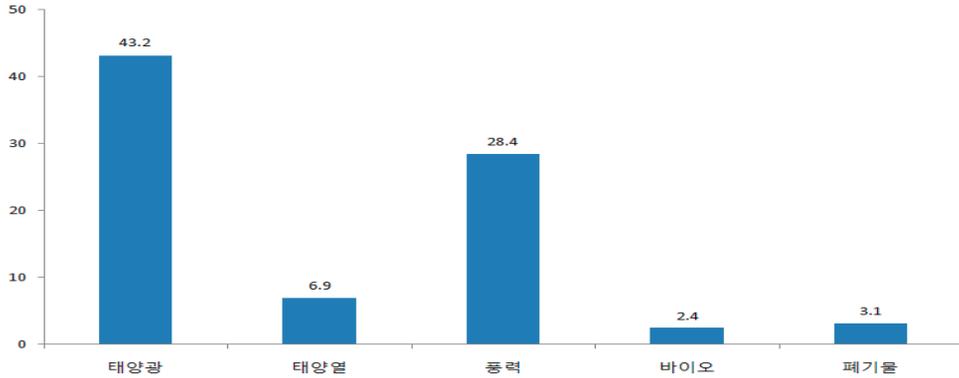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기획 현황”, 2008. 10.

주요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크게 늘림에 따라 세계태양광 발전소,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현재 세계 신·재생에너지 관련투자는 1,434억 달러로 2004년보다 3.4배 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본격화로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원별 증가율 추이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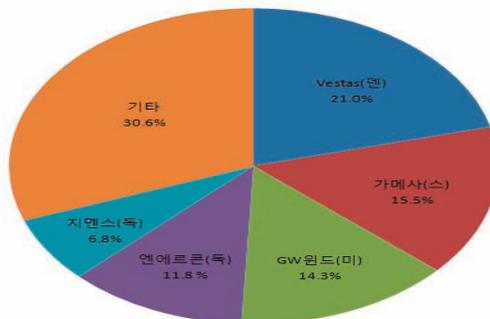
[그림 II-3] OECD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원별 증가율 비교(1995~2007년중 연평균)
(단위: %)



자료: IEA,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 2008.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2013년 중 세계 태양광 발전량이 2008년보다 2배가량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생산은 유럽 및 일본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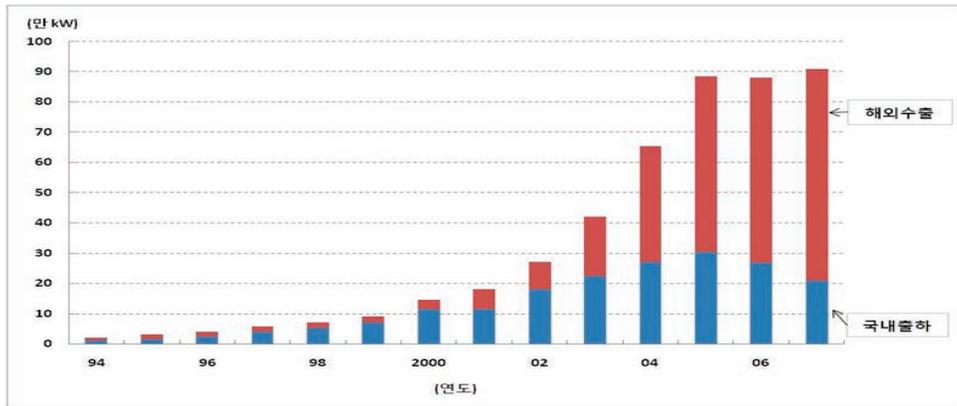
[그림 II-4] 풍력발전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 Goldman Sachs.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전지 및 전기자동차 등 일본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림 II-5] 일본의 태양 전지 산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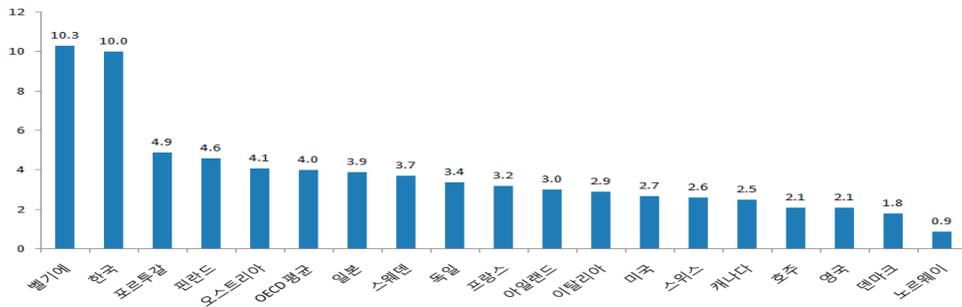


자료: 일본태양광발전협회.

주요국의 에너지원 공급비중을 보면 OECD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6.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율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6] 에너지 수입/GDP 비중 국제비교

(단위: %)



주: 2007년 기준.

자료: OECD.

[표 II-1] 주요국 에너지원별 공급비중

(단위: %)

	석탄	석유	LNG	원자력	신재생
OECD	20.8	39.3	22.6	10.6	6.7
미국	23.4	39.3	22.9	9.2	5.0
일본	21.9	46.0	15.9	13.2	3.1
독일	26.0	33.4	22.9	10.9	7.2
프랑스	5.0	32.9	14.3	42.7	10.6
한국	25.3	43.1	13.7	16.4	1.4

주: 2007년 기준(총 1차에너지 공급 기준)

자료: IEA,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 2008".

(2) 저탄소 녹색산업의 고성장

우리나라는 여타국에 비해 에너지의존도(에너지수입액 / GDP)가 10.3%로 OECD국가 중 벨기에 다음으로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투자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절약투자가 1% 증가(37.6억원)할 경우 에너지사용량이 48천toe내지 73천toe가 절약되고 이산화탄소배출량도 (78천tCO₂내지 118천tCO₂)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투자와 에너지 효율 제고 효과(1% 투자 증가 시)

	에너지절약투자		합리화 투자		자동화 투자	
투자액(억원)	37.6		737.2		699.6	
에너지 절약량(천toe)	48	73	210	279	223	364
이산화탄소 배출저감량(천tCO ₂)	78	118	338	449	359	585
단위투자비당 에너지 절약량(toe/백만원)	1.28	1.94	0.28	0.38	0.32	0.52
단위투자비당 이산화탄소 배출저감량(tCO ₂ /백만원)	2.07	3.14	0.46	0.61	0.51	0.84

주: 1) 제조업 8개 업종 대상.
 2) 왼편은 최소값이고 오른편은 최대값.
 3) 모든 수치는 2004년 기준.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5)

한편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 CO₂ 배출량이 세계 10위(2005년 기준, IEA)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큰 실정이며, 기후변화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2013년 이후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표 II-3] OECD 국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05)

관련지표	우리나라	순위	비고
배출량	5.9억 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증가율(1990-2004)	90.1%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1인당 배출량	12.28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1990-2004)	69.5%	1위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자료: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국무조정실, 2007.12)

우리나라는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녹색산업·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여 온실가스 감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90년부터 2005년 중 OECD평균(16.4%)보다 높은 97.6%가 증가했다.

[표 II-4] 에너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추이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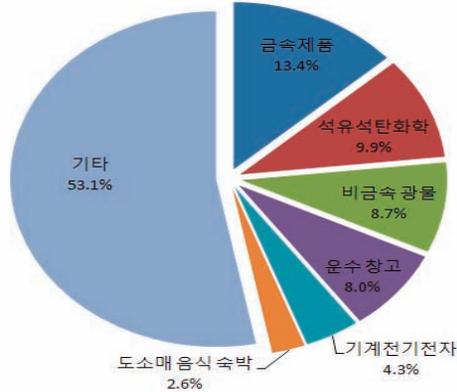
(단위: 백만 tCO₂)

	1990		1995	2000	2003	2005			1990~2005
	배출량	비중				비중	증가율	증가율	
전 세계	21,024	100.0	21,809	23,487	25,090	27,136	100.0	3.1	29.1
OECD	11,092	53.3	11,569	12,497	12,774	12,910	49.4	3.0	16.4
1 미국	4,851	23.3	5,109	5,701	5,712	5,817	21.4	0.4	19.9
2 중국	2,211	11.0	2,986	3,038	3,830	5,060	18.6	11.3	128.9
3 러시아	2,189	9.8	1,589	1,514	1,538	1,544	5.7	1.0	-29.5
4 일본	1,058	5.1	1,141	1,172	1,203	1,214	4.5	1.1	14.8
10 한국	227	1.1	362	428	454	449	1.7	-3.3	97.6

자료: IEA/OECD, "CO₂ Emission from Combustion", 2007.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될 경우, 녹색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고용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되나, 산업 전반(금속제품, 비금속광물업종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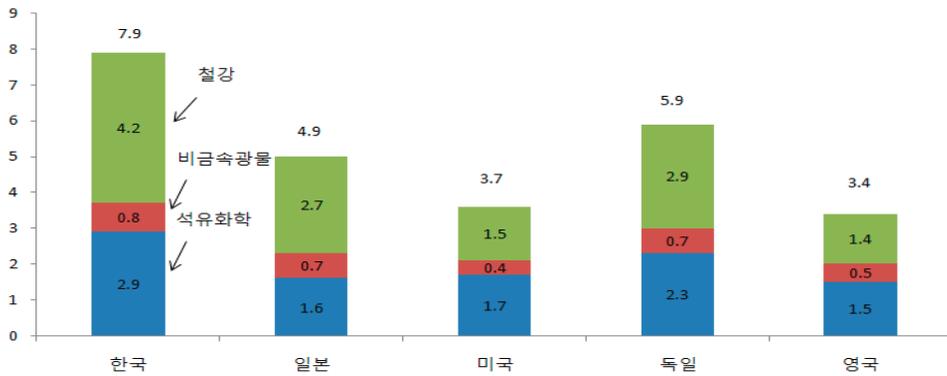
[그림 II-7]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04)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분석”, 2008. 9.

[그림 II-8]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경제적 비중 주요국별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분석”, 2008. 9.

탄소세(이산화탄소 톤당 50달러 부과)가 부과될 경우 제조업산출량은 1.19% (저감기술 도입한다고 가정), 고용은 0.69%, 이산화탄소는 8.7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II-5]). 업종별로 보면 1차금속의 산출량 감소가 가장 크고 (6.0%) 다음은 비금속광물(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6]).

[표 II-5] 탄소세 부과(이산화탄소 톤당 50달러 부과)가
제조업 산출량, 고용 및 CO₂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2013	2020	2030
저감기술 도입시	산출량	1.19	1.04	0.73
	고용	0.69	0.59	0.41
	CO ₂ 배출량	8.71	14.84	20.02
저감기술 미도입시	산출량	1.25	1.12	0.83
	고용	0.72	0.63	0.47
	CO ₂ 배출량	4.06	4.02	3.65

자료: 산업연구원, “CO₂ 배출 감축규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2009. 1.

[표 II-6] 제조업 업종별 탄소세 부과의 산출량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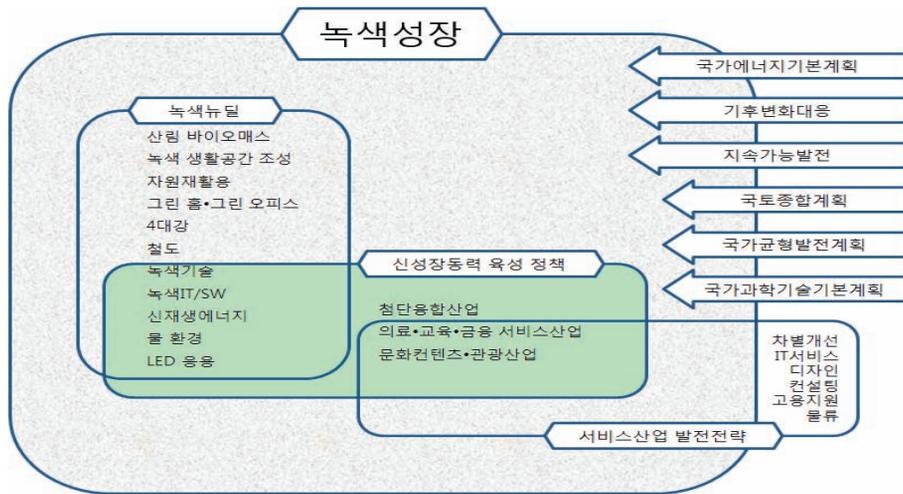
(단위: 감소율, %)

	2013	2020	2030
음식료	0.2	0.3	0.2
섬유	0.4	0.4	0.3
목재, 종이	1.7	1.4	1.2
인쇄, 출판	0.3	0.4	0.3
석유, 석탄	2.1	1.8	1.8
석유화학	1.3	1.1	0.8
비금속광물	3.9	3.2	2.5
1차금속	6.0	5.7	4.9
금속제품	0.4	0.3	0.2
기계류	0.2	0.2	0.1
전기·전자	0.1	0.1	0.1
정밀기계	0.1	0.1	0.1
수송기계	0.1	0.1	0.1
기타 제조품	0.2	0.2	0.1
제조업 평균	1.2	1.0	0.7

자료: 산업연구원, “CO₂ 배출 감축규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2009. 1.

한편 정부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비전으로 신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성장동력과 녹색뉴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은 서로 중첩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성속도에 따라 성장동력화 시기를 나누고 있다.

[그림 II-9]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관계



자료: 기획재정부.

[표 II-7] 성장동력화 시기 및 육성 정책

단기 (3~5년 성장동력화)	중기 (5~8년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조력·폐자원) · 방송통신융합산업 · IT융합시스템 · 글로벌 헬스케어 · MICE·관광 · 첨단 그린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태양·연료전지) · 고도 물처리 · 탄소저감에너지(원전플랜트) · 고부가 식품산업 · LED 응용 · 글로벌 교육서비스 · 녹색금융 · 콘텐츠·소프트웨어(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해양바이오연료) · 탄소저감에너지(CO2회수활용) · 그린수송시스템 · 로봇 응용 · 신소재·나노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 기술개발 · 제도개선·투자환경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 선점 · 시장창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원천기술 확보 · 인력양성 등

자료: 기획재정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기간 중(2009년부터 2013년)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부문에 재정투자는 연평균 14%에 달하고 있다. 녹색뉴딜 및 연계사업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4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표 II-8]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재정투자계획

(단위: 조원, %)

	2009	2010~2011	2012~201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8.6	29.2	19.2	56.9	14.0
신성장동력 창출	4.8	10.7	13.1	28.6	9.4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5.2	10.5	12.2	27.9	3.6
합 계	17.5	48.3	41.5	107.4	10.2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 7.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부문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투자유발, 생산 및 고용 확대가 여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9] 녹색 뉴딜 사업 재정소요

(단위: 억원)

사업명		재정소요				
		기반영(~2009)	추가소요(~2012)	합 계		
핵심 사업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845	7,577	9,422		
	^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527	
	9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개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	80,500	80,50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연계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37	19,901	25,038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437	1,666	2,103		
	수변지역 녹색화	331	7,669	8,000		
	환승시설 구축	1,782	3,396	5,178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0	1,544	1,744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	4,980	4,980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	3,000	3,000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340	340		
	전자문서 활용촉진	-	800	80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400	2,199	2,599		
	해외 물산업 진출	199	1,790	1,989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246	878	1,124		
	하수처리수 재이용	403	3,364	3,767		
	^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414	1,522	1,936	
	27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 확산	-	30	30	
		바이오에탄올(E5) 등 시범보급	-	272	272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362	10,858	11,220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546	2,262	2,808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	5,300	5,300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786	6,541	7,327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65	816	881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95	755	850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	13,356	13,356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	100	100	
		그린홈 닥터 양성	-	160	160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	1,130	1,130	
	에코로드 조성	-	310	310		
소규모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	360	360			
합 계		43,626	456,866	500,492		

주: 재정소요는 국고와 지자체 및 민간 부담분의 합계액으로 부처 제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2009. 1.

나. 고령화 진전

(1) 연령계층별 인구 전망

2008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중이 10.3%이고 2018년에는 14.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II-10]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1980	1990	1998	2000	2008	2010	2018	2026
총인구	38,124	42,869	46,287	47,008	48,607	48,875	49,340	49,039
0~14세	12,951	10,974	10,092	9,911	8,458	7,907	6,286	5,721
15~64세	23,717	29,701	33,126	33,702	35,133	35,611	35,979	33,099
65세이상	1,456	2,195	3,069	3,395	5,016	5,357	7,075	10,21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5.6	21.8	21.1	17.4	16.2	12.7	11.7
15~64세	62.2	69.3	71.6	71.7	72.3	72.9	72.9	67.5
65세이상	3.8	5.1	6.6	7.2	10.3	11.0	14.3	20.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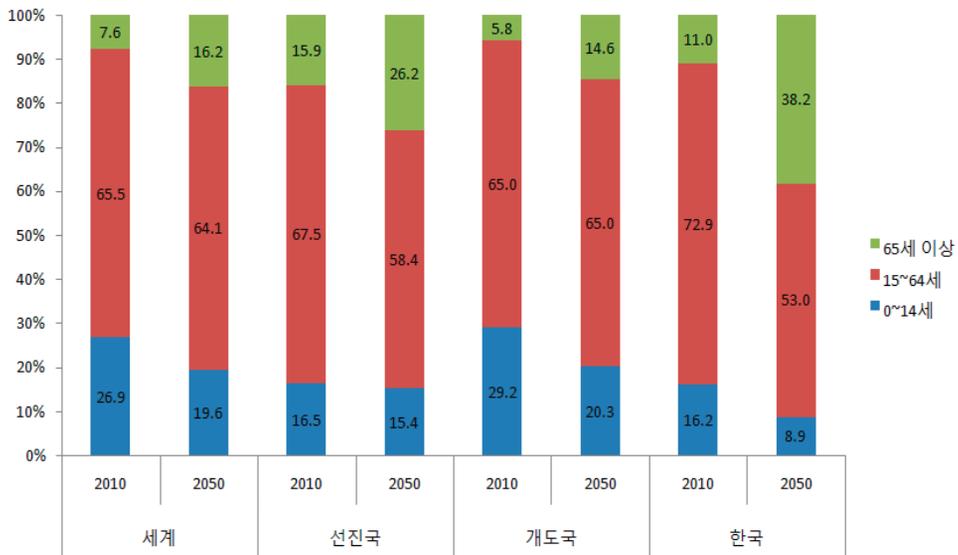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65세 인구비중 7%이상인 국가, 2000년)에서 불과 18년 만에 고령국가(65세 인구비중 14%이상인 국가, 2018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인구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8.2%로 높아져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11] 고령화 진행 속도(년도)

	도달연도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일본	1970	1994	2006
프랑스	1864	1979	2018
독일	1932	1972	2009
이탈리아	1927	1988	2006
미국	1942	2015	2036
한국	2000	2018	2026

자료: 통계청, UN.

[그림 II-10] 인구구조 변화 비교(2010년, 2050년)



자료: 통계청, Bloomberg.

2008년 현재 14.3%, 59.6% 인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와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가 2016년 중 각각 18.2%, 100.7%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12]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980	1990	1998	2000	2008	2010	2016	2020	2030
노년부양비(%)	6.1	7.4	9.3	10.1	14.3	15.0	18.2	21.7	37.7
노령화지수	11.2	20.0	30.4	34.3	59.3	67.7	100.7	125.9	213.8

주: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2) 내수부진하의 실버산업 활기

고령화진전으로 우리나라 전산업의 평균 연령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40.9세였던 우리나라 전산업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2005년에는 42.3세로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시 2015년 전산업의 평균연령은 47세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 현재 제조업의 평균연령은 39.2세(2000년 37.6세)인데 2015년에는 46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를 보면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장년층의 인구비중은 빠르게 줄고 있는(2000년 중 58.4%에서 2008년 중 46.8%로 하락) 반면에 40세부터 59세까지의 중장년층 인구비중은 크게 높아(2000년 중 36.3%에서 2008년 중 48.58%로 상승)졌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지 않으면 노동 및 복지 관련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를 초래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표 II-13] 연령 및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천명, 세, %)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제조 업		건설업, 전기가 수도사업	도매 및 소 매업	숙박 및 음 식점업	운수· 통신업	금융보 험 부 동산 임대업	사업서 비스업	공공행 정교육 보건사 회복지	오락문 화 개 인 서 비스업		
계	19,277 (100.0)	2,100 (100.0)	3,824 (100.0)	3,804 (100.0)	13,293 (100.0)	1,529 (100.0)	2,897 (100.0)	1,493 (100.0)	1,117 (100.0)	1,095 (100.0)	1,122 (100.0)	2,740 (100.0)	1,300 (100.0)	
19세이하	107	(0.1)	(1.1)	(1.1)	(0.5)	(0.1)	(0.6)	(1.2)	(0.2)	(0.1)	(0.3)	(0.4)	(0.8)	
20~29	3,348	(1.9)	(20.7)	(20.8)	(18.8)	(10.8)	(19.0)	(13.8)	(12.5)	(15.4)	(26.5)	(25.9)	(19.9)	
30~39	5,414	(6.5)	(31.7)	(31.7)	(30.5)	(31.0)	(30.5)	(23.1)	(27.3)	(31.7)	(36.1)	(33.1)	(29.5)	
40~49	5,533	(17.1)	(31.3)	(31.3)	(29.8)	(36.2)	(29.6)	(37.7)	(32.8)	(27.9)	(21.0)	(25.9)	(28.3)	
50~59	3,019	(24.1)	(12.4)	(12.3)	(15.3)	(18.1)	(14.3)	(19.2)	(21.5)	(14.6)	(10.8)	(12.0)	(15.8)	
60세 이상	12,857	(50.3)	(2.8)	(2.8)	(5.2)	(3.7)	(6.0)	(5.1)	(5.8)	(10.2)	(5.3)	(2.7)	(5.6)	
평균 연령	2000	40.9	55.7	37.6	37.6	39.1	40.7	39.0	40.5	40.4	40.1	36.6	37.1	39.1
	2005	42.3	58.5	39.2	39.2	40.7	42.3	40.7	42.6	43.1	42.3	38.2	38.2	40.6

주: 계에는 산업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

[표 II-14] 연령계층별 제조업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계	3,504 (100.0)	4,911 (100.0)	4,818 (100.0)	4,293 (100.0)	4,234 (100.0)	3,943 (100.0)
15~19세	346 (9.9)	252 (5.1)	136 (2.8)	81 (1.9)	26 (0.6)	14 (0.34)
20~29세	1,399 (39.9)	1,738 (35.4)	1,388 (28.8)	939 (21.9)	895 (21.1)	670 (17.0)
30~39세	961 (27.4)	1,511 (30.8)	1,753 (36.4)	1,565 (36.5)	1,286 (30.4)	1,174 (29.8)
40~49세	539 (15.4)	883 (18.0)	945 (19.6)	1,118 (26.0)	1,301 (30.7)	1,277 (32.4)
50~59세	205 (5.9)	410 (8.3)	441 (9.2)	444 (10.3)	553 (13.1)	635 (16.1)
60세 이상	54 (1.5)	117 (2.4)	155 (3.2)	146 (3.4)	173 (4.1)	192 (4.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수는 2007년부터 2009년 중 연평균 16.9만명 증가에서 2010년부터 2012년 중 연평균 11.3만명 증가로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II-15]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만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용률
전체	28.2	22.2	20.3	18.6	17.5	15.2	59.8
15~64세	20.3	15.7	14.7	13.4	11.8	8.7	63.3
- 15~19세	0.2	0.6	0.5	0.3	0.1	-0.2	6.6
- 20~49세	-9.3	-10.4	-14.7	-17.4	-17.3	-16.7	71.1
- 50~64세	29.4	25.5	29.0	30.5	29.1	25.7	66.0
65세 이상	7.9	6.6	5.6	5.2	5.7	6.4	31.1

주: 2007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분, 2008년 이후는 연령대별 고용률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앞 표의 연령대별 인구에 2007년 연령대별 고용률을 적용한 단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래인구추계」, 2006. 11.

고령화 진전으로 은퇴를 앞둔 중고령층 무직세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세부터 49세 미만의 고용률이 71.1%이나 50세부터 64세미만의 고용률은 66%로 낮아지고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1.1%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은퇴가 예상되는 베이비 붐 세대는 여타 세대에 비해 인구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구직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무직자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 베이비 붐 세대의 총 추정인구는 7.1백 만명이고 고용률은 74.%(취업자수 5.4백 만명)이고, 임금근로자 비율이 43.7%(임금근로자수 3.1백 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수는 2.2백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유입 경제활동인구 증가(5.5백 만명)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7.1백 만명) 부족 노동력수가 1.6백 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구 감소로 소득세 세수 부족액이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II-16] 2010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자 규모

	추정 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고용률 (%)	수(명)	비율 (%)	수(명)	
합 계	7,125,437	74.6	5,317,293	43.7	3,117,048	2,200,245
1955년생	663,319	65.9	437,127	34.5	228,845	208,282
1956년생	708,728	74.0	523,750	42.6	301,918	221,832
1957년생	742,633	74.0	548,806	42.6	316,362	232,444
1958년생	784,111	74.0	579,458	42.6	334,031	245,427
1959년생	823,550	74.0	608,603	42.6	350,832	257,771
1960년생	848,690	74.0	627,182	42.6	361,542	265,640
1961년생	858,141	78.0	669,350	47.9	411,050	258,300
1962년생	854,550	78.0	666,549	47.9	409,329	257,220
1963년생	841,625	78.0	656,468	47.9	403,138	253,329

주: 고용률,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8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각 연령별 비율을 적용.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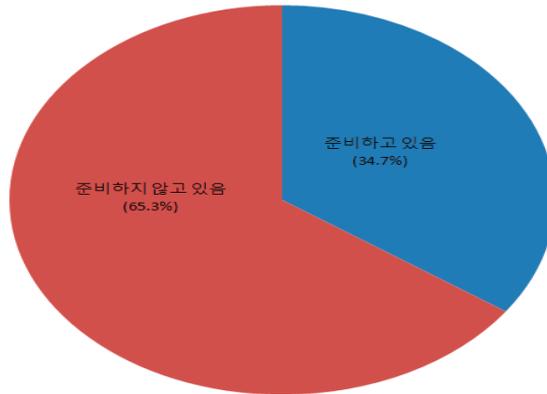
[표 II-17] 베이비붐 은퇴로 인한 조세부족액 규모

구 분	규모(2010년 기준)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수	7,125,347명
신규 유입 경제활동 생산가능 인구(1995~2003년생) 수	5,472,018명
부족한 인구 수	1,653,539명
조세 부족액(부족한 인구수 × 2009년 기준 1인당 조세부담액 467만원)	7,7조원

자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기획재정부, “2009년 국제 세 입예산[안] 및 중기 국제 수입전망”.

한편 고령자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고령자들의 소비여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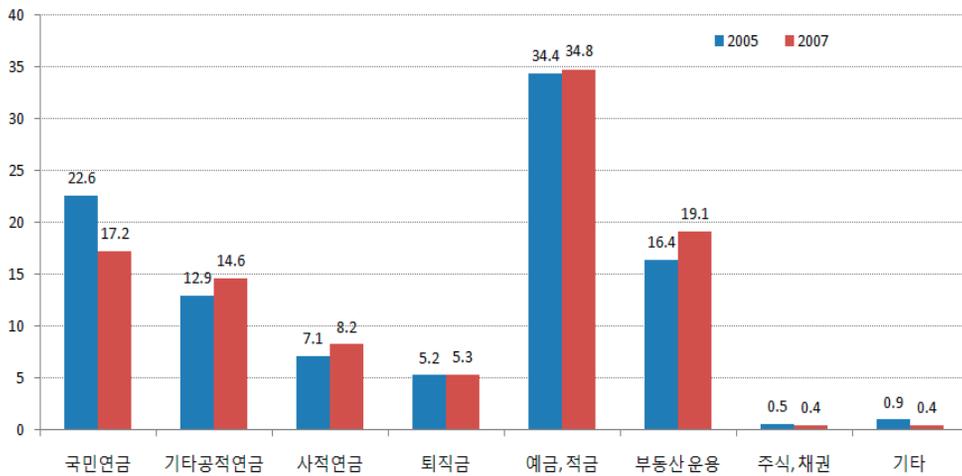
[그림 II-11] 65세 이상 인구의 노후 준비 여부(2007년)



자료: 통계청.

[그림 II-12] 65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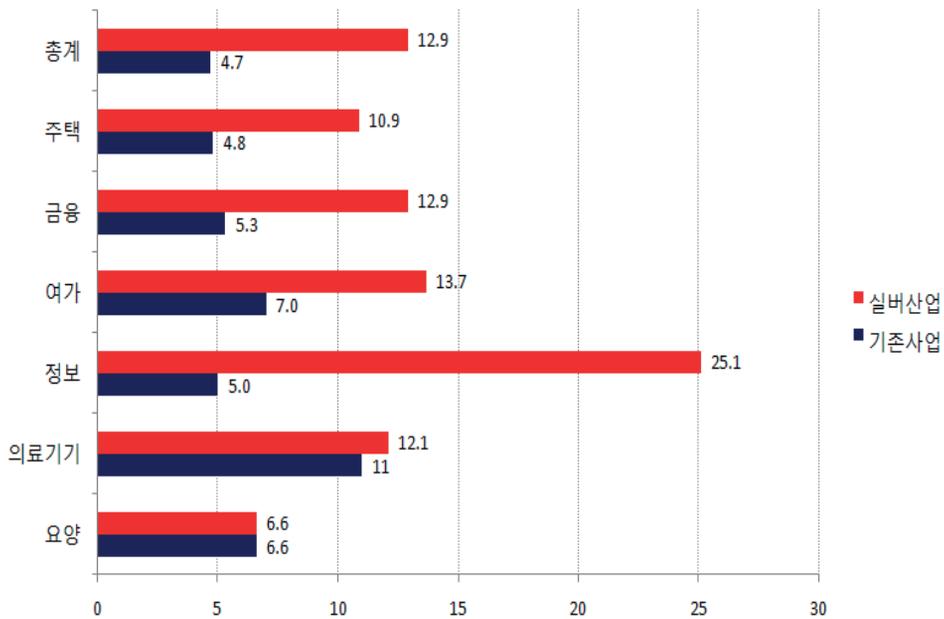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비, 통신비 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 진전 등으로(장기 경기침체 요인도 포함)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3.2%증가)가 거의 늘지 않았다. 그러나 통신비(51.6% 증가), 보건의료비(27.8%증가)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진전으로 실버산업의 성장 속도가 기존산업의 성장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II-13]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2006.

또한 고령화 진전은 도시와 지방의 경제력 격차를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표 II-18] 일본의 소비지출 항목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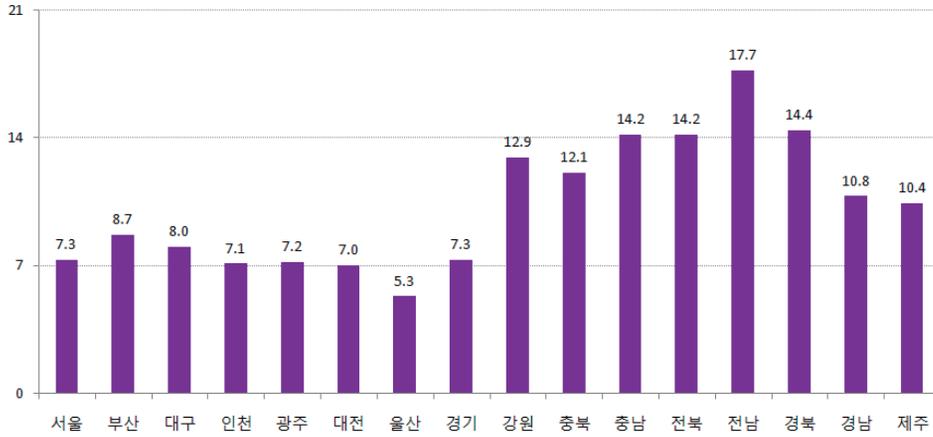
(단위: 10억엔, %)

소비 항목	1997		2002		2007		2007/ 1997
	10억엔	구성비	10억엔	구성비	10억엔	구성비	
1. 식료,비알콜음료	42,869.9	15.6	43,044.6	15.7	42,007.2	14.8	98.0
2. 알콜음료	9,002.5	3.3	9,545.9	3.5	8,759.7	3.1	97.3
3. 피복의류	16,802.7	6.1	10,669.5	3.9	10,013.1	3.5	59.6
4. 주거·전기·가스·수도	60,875.7	22.1	66,105.7	24.0	70,133.9	24.7	115.2
5. 가구·가정용기기· 가사서비스	13,198.7	4.8	10,768.3	3.9	10,451.4	3.7	79.2
6. 보건·의료	9,228.6	3.4	11,075.7	4.0	11,794.4	4.2	127.8
7. 교통	29,716.7	10.8	29,045.1	10.6	31,488.5	11.1	106.0
8. 통신	5,833.7	2.1	7,751.4	2.8	8,843.4	3.1	151.6
9. 오락·레저	29,505.4	10.7	30,412.1	11.1	29,471.4	10.4	99.9
10. 교육	6,116.9	2.2	6,027.5	2.2	6,197.0	2.2	101.3
11. 외식·숙박	20,381.9	7.4	20,742.4	7.5	22,326.4	7.9	109.5
12. 기타	31,631.6	11.5	29,764.3	10.8	32,449.5	11.4	102.6
가계 최종소비 (10억엔)	275,164.3	100.0	274,952.5	100.0	283,935.9	100.0	103.2
재화	128,314.7	46.6	121,505.5	44.2	121,060.0	42.6	94.3
서비스	146,849.6	53.4	153,447.0	55.8	162,875.9	57.4	110.9

자료: 일본 내각부.

[그림 II-14]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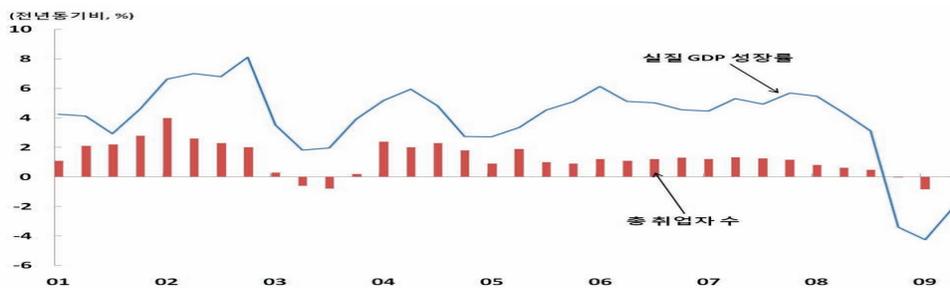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다. 고용 없는 성장

(1) 고용부진 장기화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선진국보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현저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회복 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여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림 II-15] 우리나라 취업자 수와 GDP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즉, 우리나라 경기는 2009년 1/4분기를 바닥으로 상승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취업자수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2,362만 명으로 1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19]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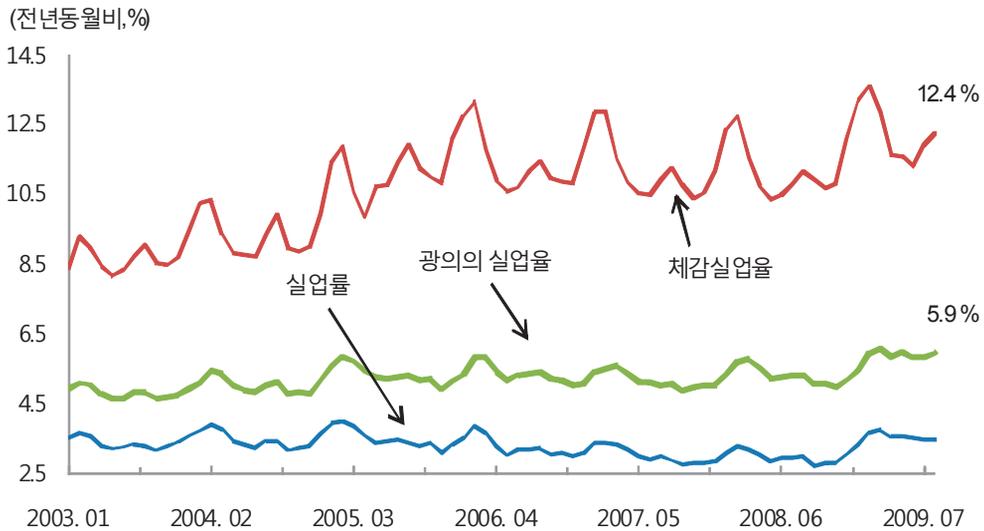
	2008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5세 이상 인구 (A)	3,960	3,986	3,990	3,994	3,998	4,003	4,008	4,013	4,017
• 경제활동인구 (B)	2,435	2,371	2,367	2,406	2,446	2,466	2,493	2,476	2,453
(경제활동참가율: B/A)	61.5	59.5	59.3	60.2	61.2	61.6	62.2	61.7	61.1
비경제활동인구	1,525	1,616	1,623	1,588	1,552	1,537	1,515	1,537	1,564
• 취업자 수 (C)	2,358	2,286	2,274	2,311	2,352	2,372	2,397	2,383	2,362
- 전년(동월)대비 증가	14.4	-10.3	-14.2	-19.5	-18.7	-21.9	0.4	-7.5	0.3
· 임시·일용직	-15.0	-26.6	-27.3	-19.4	-23.8	-22.8	5.0	-10.2	1.0
· 자영업주	-7.9	-11.2	-25.6	-22.2	-26.9	-30.1	-28.7	-22.8	27.5
· 남 성	9.6	-1.9	-0.2	-4.6	-1.3	-0.8	9.5	-0.3	0.7
30대 남성	-0.3	-2.6	-0.9	-5.6	-7.1	-6.5	-7.1	-11.3	-10.0
· 여 성	4.8	-8.4	-14.0	-14.9	-17.4	-21.1	-9.1	-7.3	-0.5
• 실업자 수 (D)	77	85	92	95	93	94	96	93	91
- 고용률 (C/A)	59.5	57.3	57.0	57.9	58.8	59.3	59.8	59.4	58.8
· 청년고용률	41.6	40.5	39.9	39.4	40.6	41.3	41.2	41.8	40.6
- 실업률 (D/B)	3.2	3.6	3.9	4.0	3.8	3.8	3.9	3.7	3.7
· 청년실업률	7.2	8.2	8.7	8.8	8.0	7.6	8.4	8.5	8.2

- 주: 1) 15세 이상 인구: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B/A): 남 73.3%, 여 49.3%, 성별 취업자 구성: 남 58.4%, 여 41.6%(2009. 8)
 3)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64.4만명, 그냥 쉬는 사람 145.2만명, 구직단념자 17.8만 명으로 합계 227.4만명(2009. 8)
 4) 청년층은 15~29세.

자료: 통계청.

피부로 느끼는 체감고용지표는 더욱 부진한 모습이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 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통학 인구나 비통학 취업준비 인구를 포함하는 광의의 실업률은 5.9%로 공식실업률(3.7%) 보다 2.2%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통학인구, 비통학 취업준비인구, 구직단념자, 기타, 쉬었음 응답인구를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은 12.4%로 공식실업률 보다 무려 8.7%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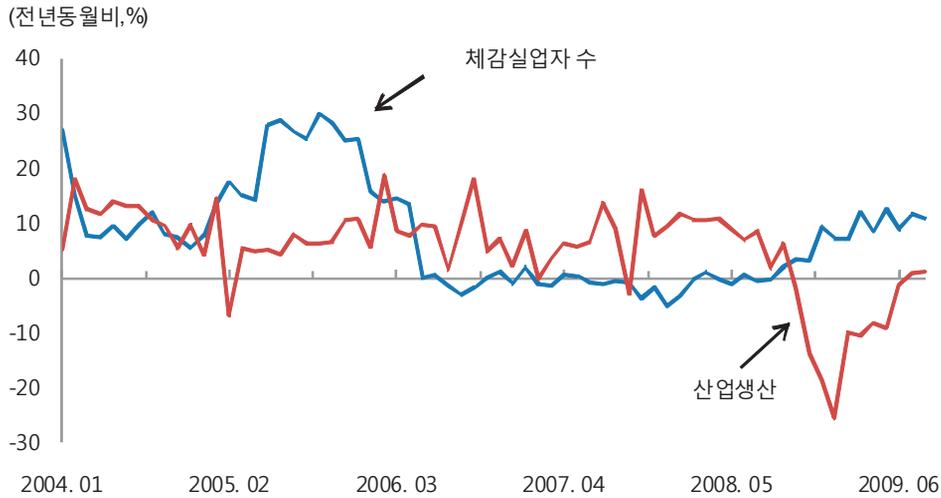
[그림 II-16] 광의의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추이



- 주: 1) 기존 통계청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 100
 2) 광의의 실업률 = 실업자수 +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인구 + 비통학 취업준비인구
 3) 체감실업률 = 실업자수 + 취업을 위한 학원통학인구 + 비통학 취업준비인구 + 기타 + 쉬었음 응답인구
 4) 기타 :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등을 포함.
 5) 광의의 실업률 = {(실업자수 +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인구 + 비통학 취업준비인구) / (경제활동인구 +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인구 + 비통학 취업준비인구)} × 100
 6) 체감실업률 = {(실업자수 +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인구 + 비통학 취업준비인구 + 기타 + 쉬었음) / (경제활동인구 +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인구 + 비통학 취업준비인구 + 기타 + 쉬었음)} ×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빠르게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체감실업자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체감고용지표를 보더라도 고용 없는 경기회복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II-17] 산업생산과 체감실업자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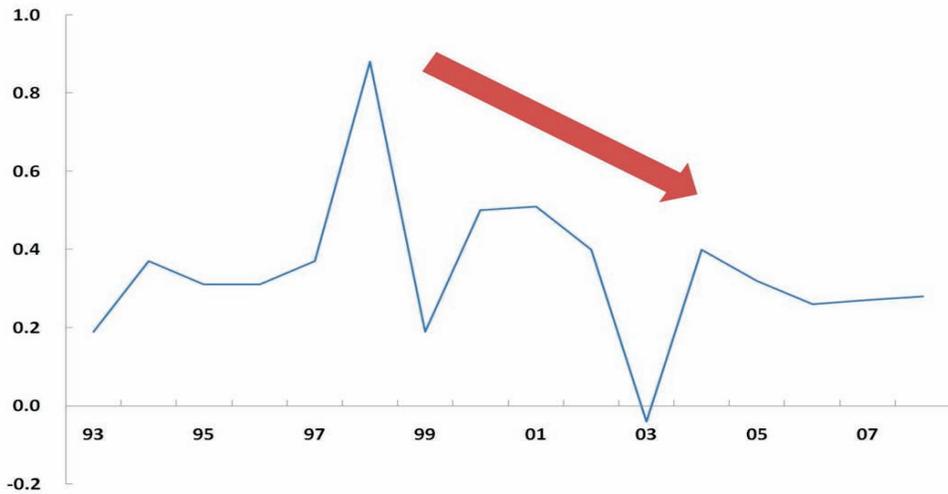
주: 체감실업자 = (광의의 실업자 수+ 구직단념자 +기타 + 쉬었음) / 응답인구 수
 자료: 통계청.

(2)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과 영향

고용 없는 성장현상을 보이는 원인은 첫째, 성장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 / 경제성장률)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현저히 하락세를 보였던 고용탄성치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탄성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어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 늘어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여타 선진국과의 고용탄성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고용지표의 개선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II-18] 우리나라 고용탄력성 추이



주: 고용탄력성=취업자수 증가율/GDP증가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표 II-20]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의 국가별 비교(1986~87, 199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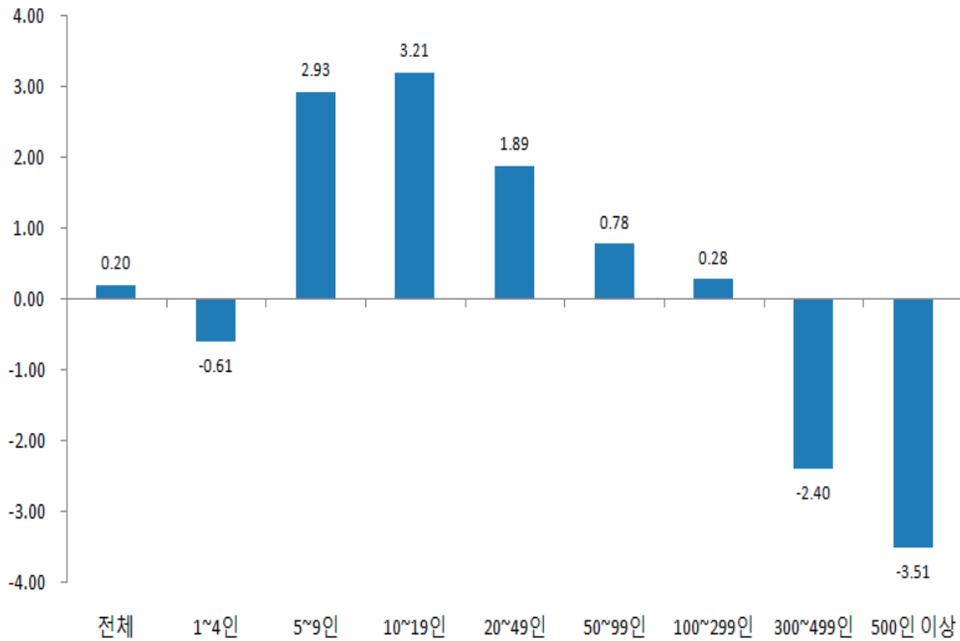
국가	1986~1997	1995~2006
EU 15국	0.813	0.599
미 국	0.610	0.629
일 본	0.270	0.310
독 일	0.719	0.833
네덜란드	0.310	0.758
프 랑 스	0.420	0.671
영 국	0.787	0.290
스 웨 덴	1.053	0.559
한 국	0.276	0.214

자료: Gunther Schmid(2008), Full Employment in Europe, Edward Elgar, UK.

둘째,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제조업 특히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대기업(노동절약적인 자동화 투자 지속 및 생산성 증가, 부품 및 원자재 수입확대 등)에 의한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이후 대기업들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세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19] 기업규모별 종업원 수 연평균 증가율(1997~2007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국제금융위기 이후 산업생산이 증가하여도 제조업부문의 취업자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림 II-20] 제조업 근로자수와 산업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최근의 제조업 업종별, 규모별 노동투입량 추이를 비교해 보면 대기업, 중화학공업, IT기업들의 생산여건이 중소기업, 경공업, 비IT업종들의 생산여건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노동투입량 감소세는 중소기업, 경공업, 비IT업종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비중이 낮은 대기업 및 IT업종 중심의 경기회복이 고용개선 속도를 가속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21] 제조업 업종별 및 규모별 노동투입량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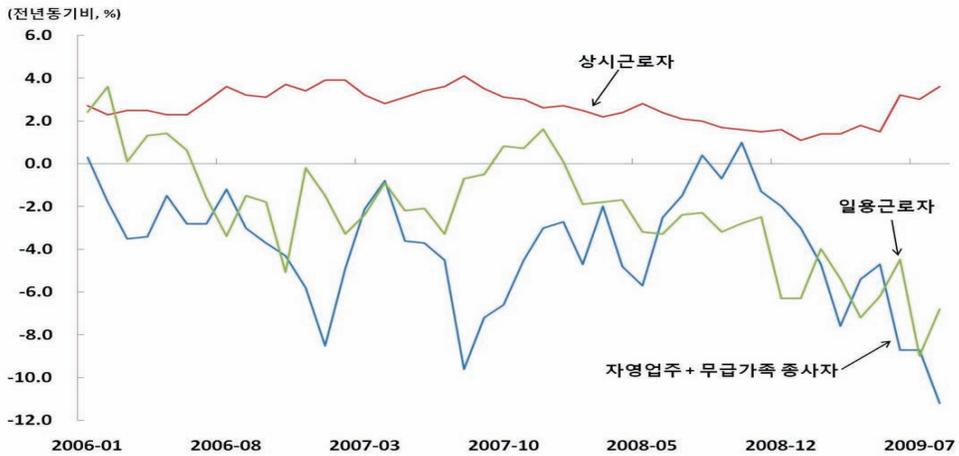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2008				2009	
	1/4	2/4	3/4	4/4	1/4	2/4
제조업	1.6	0.3	4.4	-0.5	-8.3	-4.1
중화학공업	1.1	0.7	4.3	0.5	-9.2	-5.2
경공업	-0.7	-4.4	2.2	-6.4	-7.7	-1.3
IT	0.8	9.8	9.7	9.3	-11.0	-10.1
비IT	0.5	-2.4	2.7	-3.2	-8.4	-3.1
대기업	4.7	2.4	6.8	6.3	-6.9	-1.7
중소기업	-1.7	-1.6	3.1	-4.1	-7.1	-4.0

자료: 통계청, 지식경제부.

셋째, 저수익 고비용 구조 하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의 취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수 비중(도소매업, 음식숙박업종이 주류)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대형소매점포 및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진출 확대, 정부의 자영업 보호정책 약화 등으로 고용흡수력이 높은 자영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비중 축소로 서비스업의 일자리 회복이 제약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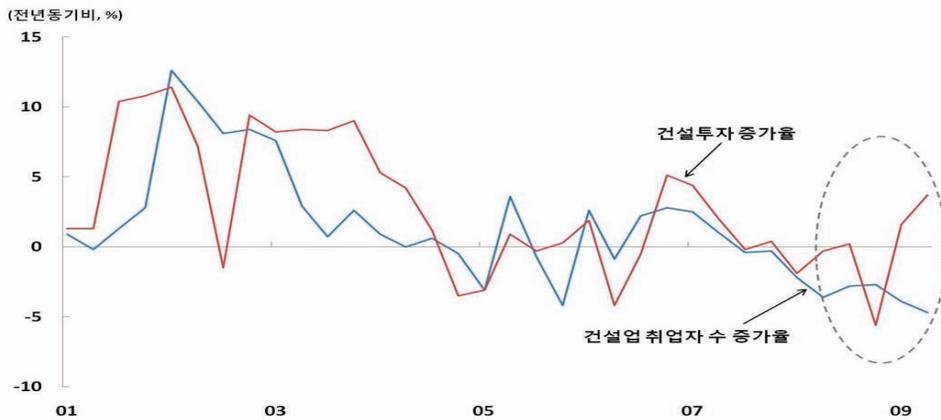
[그림 II-21]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넷째,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부문 취업자수의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기계작업 확대 등으로 건설인부 사용이 축소되면서 건설업도 고용 없는 성장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22] 건설업 투자와 취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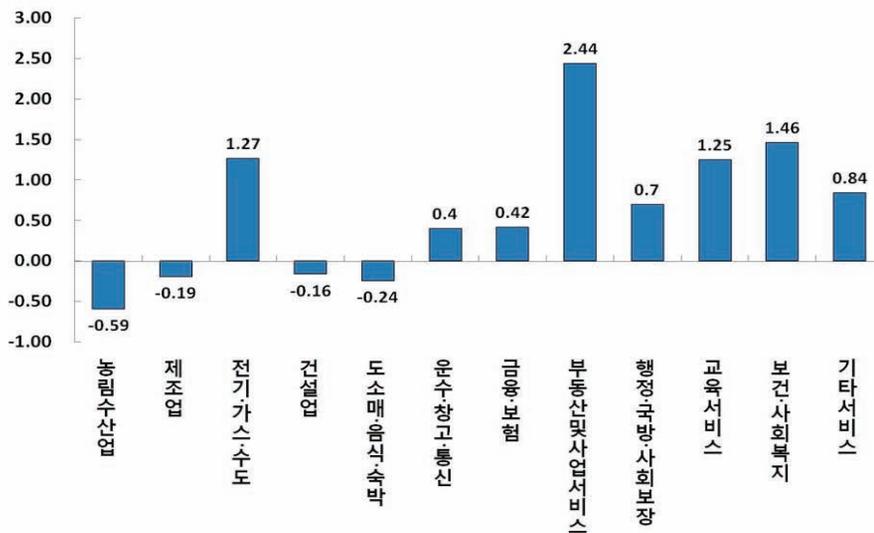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제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및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실시로 과잉고용 인력(한계 중소기업 및 건설업, 저수익성 일부 자영업자들의 퇴출지연 등)을 조정하지 못함에 따라 경기회복국면에서도 고용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민간 서비스부문의 취업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침체와 가계부부문의 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여건이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탄성치가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업종의 생산 활동 위축도 고용회복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II-23] 2004~2008년간 산업별 고용탄력성(=고용변화율/실질GDP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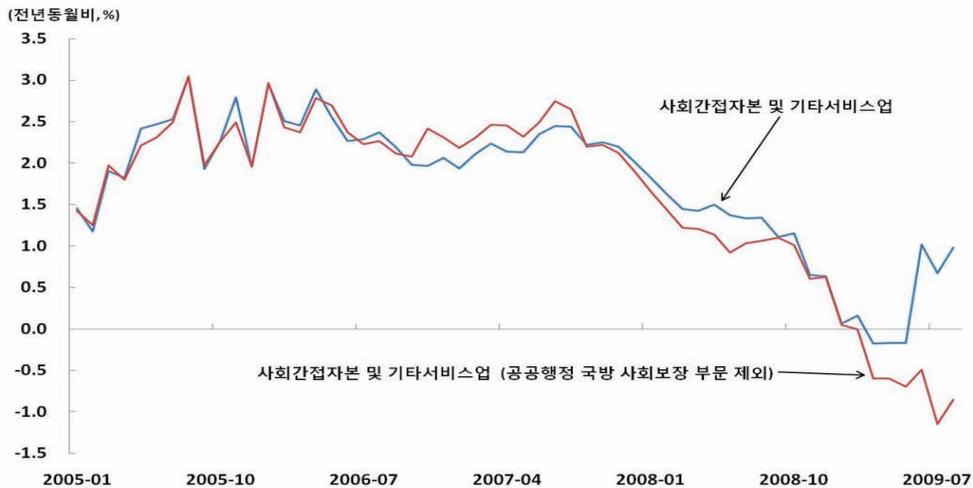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외환위기 이후 비교우위를 상실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생활기반 서비스업 등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고용변동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공공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수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근로 확대 때문이다. 민간서비스부문의 취업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축소될 경우(2010년 이후) 서비스부문 전체의 취업자수는 상승 탄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림 II-24] 서비스업 취업자(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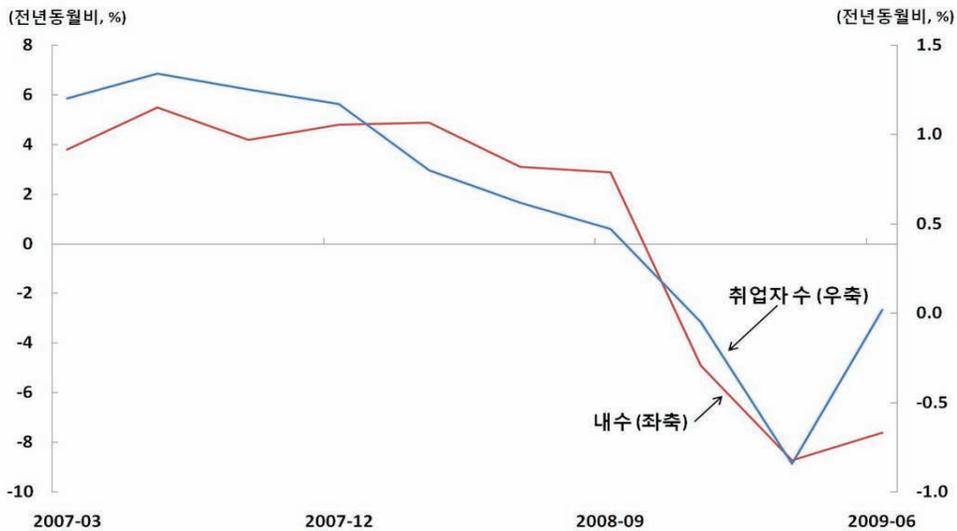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여섯째, 적시고용관행의 확산 때문이다. IT 혁신 기술의 발달, 고용지원산업 확대(고용을 중개·대행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고용지원 서비스산업이 급성장) 등에 힘입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섰음을 확인한 후 채용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구인구직절차를 온라인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필요 인력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처럼 적시고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업은 가능한 한 정규직의 고용을 늦추면서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기존직원의 초과근무, 최소 규모의 임시직 및 파트타임직 고용 등으로 수요확대에 대처하게 되었다. 즉 적기고용을 위해 정규직 채용은 최대한 미루면서 임시직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일급제, 노동생산성이 IT 기술의 발전, 컴퓨터 의존형 업무방식, 자동화 추진 등으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경기확장기에는 대체로 과잉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잠재적인 노동생산성을 전부 발휘하지 않으나 경기하강기에 인력감축이 이루어지면 기존 직원들은 잠재 생산성을 100%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 근로자가 최대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다. 실제 경기 확장기에 비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상승하는 시점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의 거품 감시 강화, 과다채무 조정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고용창출효과가 큰 내수업종은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II-25] 내수와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의한 기업투자 및 창업 환경개선, 중소기업의 R&D 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대기업과 하청계열기업간의 교차납품 확대(대기업의 부품, 소재 조달처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 환경 마련), 핵심생산시설의 국내유지 정책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조기활착, 에너지 절약 및 환경관련 산업의 투자확대, 바이오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진로 지도 및 재교육강화, 인턴 등 직장체험 확대, 학교와 노동시장간의 연계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잠재성장률

가. 잠재국내총생산(Potential GDP) 추정 방법론

①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와 ②비관측인자(UC; Unobserved Component) 모형을 이용해 성장요인을 분해하고 자연실업률을 추정하였으며, 생산투입 요소와 자연실업률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5년(2009~2013년)간의 잠재국내총생산(GDP) 및 잠재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가정 하에서 성장을 자본·노동과 같은 요소투입의 변화와 기술혁신, 인적자본 및 투자의 효율성, 정부의 효율성 등 단순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혹은 솔로우의 잔차(Solow's Residual) 부분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관측인자(UC; Unobserved Component) 모형은 어떤 시계열을 칼만필터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확률적인 장기추세(stochastic trend) 부분과 일시적인(transitory) 경기변동 부분으로 분해하는 통계적인방법이다. 본 분석에서는 자연실업률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확률추세적인 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Rate)로 정의하고 이를 경기변동적인 부분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2변수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였다.

성장회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산출량(Y_t)은 총요소생산성(A_t), 노동투입량(L_t), 자본투입량(K_t)의 함수로 아래 (1)식과 같이 정의될 수 있고, CRS(Constant Return to Scale)의 가정 하에서 α 는 노동분배율, $(1-\alpha)$ 는 자본분배율을 나타낸다.

$$Y_t = A_t L_t^\alpha K_t^{1-\alpha} \quad (1)$$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잔차항으로서 총요소생산성(A_t)을 (2)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ln A_t = \ln Y_t - \alpha \ln L_t - (1-\alpha) \ln K_t \quad (2)$$

위와 같은 생산함수 접근법을 통해 잠재산출량(Y_t^P)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3)식과 같이 잠재노동투입량(L_t^P), 잠재자본스톡(K_t^P), 잠재총요소생산성(A_t^P)을 추정해야 한다.

$$\ln(Y_t^P) = \ln A_t^P + \alpha \ln L_t^P + (1-\alpha) \ln K_t^P \quad (3)$$

자본스톡(K_t)은 순자본스톡과 감가상각률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처럼 잠재적 수준의 자본스톡이 실적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였다. 자본스톡에 관한 시계열 자료는 표학길·정선영·조정삼(2006)의 추계 결과를 원용하고 이를 연장하여 사용하였으며, 감가상각률은 원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4.8%로 가정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α)은 0.6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OECD의 ‘Productivity Manual’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영업주의 노동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피용자보수만을 이용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II-22] 피용자보수 및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단위: %)

	국민총처분가능소득대비 피용자보수	노동소득분배율(한국은행)
2000	50.0	58.1
2001	50.6	58.8
2002	50.0	58.0
2003	51.3	59.2
2004	51.3	58.7
2005	53.0	60.7
2006	53.4	61.3
2007	53.2	61.1
2008	52.7	60.6
평균	51.7	59.6

자료: 한국은행.

2) 선행연구를 보면 표학길(2003)은 87~97년 4.3%(전산업), 김원규(2004)는 1998~2002년 4.5%, 김동석(2004)은 4%, 백웅기(2007)은 5%를 가정하였다.

잠재노동투입량(L_t)은 잠재취업자수에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잠재수준의 취업자수는 잠재수준의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참가율, 그리고 자연실업률에 의해서 결정된다.³⁾ 잠재수준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전망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결과」(2006)를 원용하였고, 잠재적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호드릭-프레스콧(HP) 필터에 기초한 추세치를 사용하였다. 자연실업률은 물가와 산출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관계식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NAIRU)로 정의하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이변수 비관측인자(UC)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잠재적 수준의 총요소생산성은 실제총요소생산성의 HP 추세치를 이용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실질국내총생산 추계방법을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추계방법에 의한 2005년 지수기준년 계열은 현재 2000년부터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00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200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한 신계열을 바탕으로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관측오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이 신계열에 의한 자료를 2009년 12월 최종 발표한 이후 다시 모형을 추정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자본스톡의 추이 및 전망

2005년까지의 자본스톡은 표학길·정선영·조정삼(2006)의 추계 결과에 기초한 것이며 이후 시계열은 총자본자본형성 시계열을 이용하여 갱신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순자본스톡증가율은 2004년 5%대로 둔화된 이후(2003년 6.0%→2004년 5.7%) 2008년에는 4.6%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7년 4.2%에서 2008년 -1.7%(건설투자 -2.5%, 설비투자 -2.0%)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3) 잠재취업자수=잠재생산가능인구×잠재경제활동참가율×(1-자연실업률)

[표 II-23] 순자본스톡 증가율 및 감가상각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5
순자본스톡증가율	13.1	12.9	9.0	5.8
감가상각률	8.2	5.1	6.4	5.0

자료: 표학길·정선영·조정삼(2006)

[표 II-24] 최근의 자본스톡 추이

(단위: 전년대비, %)

	2006	2007	2008
순자본스톡증가율	5.4	5.2	4.6
건설투자	0.5	1.4	-2.5
설비투자	8.2	9.3	-2.0
총고정자본형성	3.4	4.2	-1.7

자료: 한국은행.

향후 5년(2009~2013년) 중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연평균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04~2008년) 중 연평균 증가율 5.3%에서 1.3%p 둔화된 것이다. 향후 5년간 건설투자가 연평균 2.5%(지난 5년 평균 0.1%), 설비투자가 연평균 4.5% 증가하여 총고정투자가 연평균 3.2%(지난 5년 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2009년 3.0% 증가한 이후 2010~2013년까지 연평균 2.3%로 둔화되는 반면에 설비투자는 경기회복과 함께 동기간 동안 연평균 9.2%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 연평균 6.7%)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6]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장기추세적으로 보

면 순자본스톡은 외환위기 때 5.5%까지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가 2000년 6.8% 증가를 정점으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보여 왔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 순자본스톡은 3.9% 증가에 머무르겠지만 2010년부터 지난 5년에 비해 설비투자 와 건설투자가 확대되면서 아주 완만하지만 확대된 증가추세(4.0% → 4.0% → 4.1% → 4.2%)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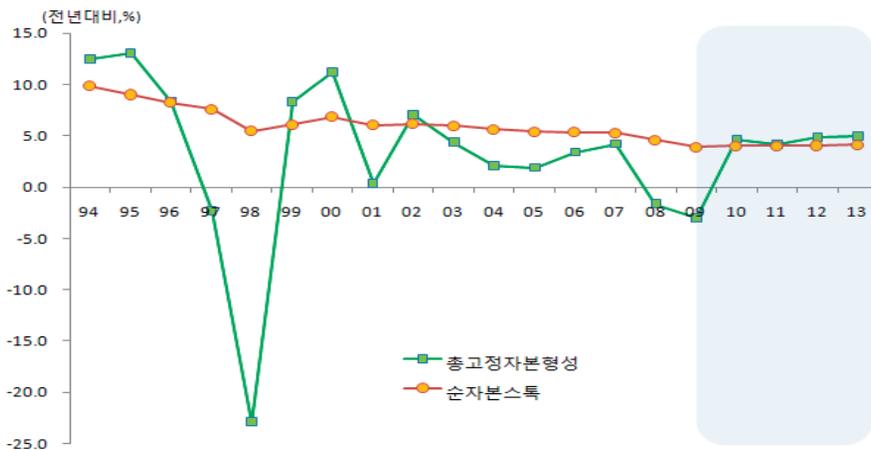
[표 II-25] 자본스톡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순자본스톡증가율	3.9	4.0	4.0	4.1	4.2
건설투자	3.0	2.7	2.9	2.0	1.8
설비투자	-14.1	9.8	7.5	9.0	10.5
총고정자본형성	-3.0	4.7	4.5	4.8	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26] 총고정자본형성, 자본스톡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 표학길·정선영·조정삼(2006)

다. 노동투입의 추이 및 전망

총노동투입은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 등에 의해 결정된다.⁴⁾ [표 II-26]의 주요 노동관련 지표 추이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는 추세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70년대 3.4%, 80년대 2.4%, 90년대 1.6%, 그리고 지난 2001~2008년 중에는 연평균 1.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성장률 감소, 출산율 하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인구 비율이 14%로 ‘고령진행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⁵⁾ 인구증가율도 2005년 0.21%, 2010년 0.26%에서 점차 둔화하여 2018년 0.02%에 도달한 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성장률 하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노동투입량을 결정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을 감소시키고, 경제활동인구 구조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연평균 1.8% 증가했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대 들어 지난 2008년까지 연평균 1.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여성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면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년대 47.9%에서 2001~2008년 평균 49.7%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년대 75.5%에서 2001~2008년 중에는 74.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90년대 40.7%에서 2001~2008년 41.6%로, 여성의 경우에는 동기간 20.2%에서 22.6%로 증가하였다.

4) 총노동투입=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참가율×(1-실업률)×주당근로시간×(365/7)
= 취업자수×주당근로시간×(365/7)

5) UN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진행사회’이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진행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림 II-27]에서처럼 경기변동에 따른 순환변동치를 제거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치의 흐름을 살펴보면 80년대 58.6%, 90년대 61.1%, 2000년대 61.7%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26] 주요 노동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대비, %)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8
생산가능인구증가율	3.4	2.4	1.6	1.1
경제활동인구증가율	3.7	2.5	1.8	1.2
경제활동참가율	58.8	58.1	61.3	61.7
실업률	4.4	3.5	3.4	3.3
취업자증가율	3.6	2.8	1.6	1.4
주당근로시간증가율	0.0	-0.7	-0.1	-1.3
총노동투입증가율	3.6	2.1	1.5	0.1

자료: 통계청, 노동부.

최근 5년간 실업률은 2004년과 2005년 3.7%, 2006년 3.5%, 2007년 3.3%, 그리고 2008년 3.2%로 나타나 금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상승한 것(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고려하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용률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2004년 59.8% → 2005~2006년 59.7% → 2007년 59.8% → 2008년 59.5%), 취업자증가율도 2004년 1.9%에서 2008년 0.6%로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된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인참가율이 2004년 62.1%에서 2008년 61.4%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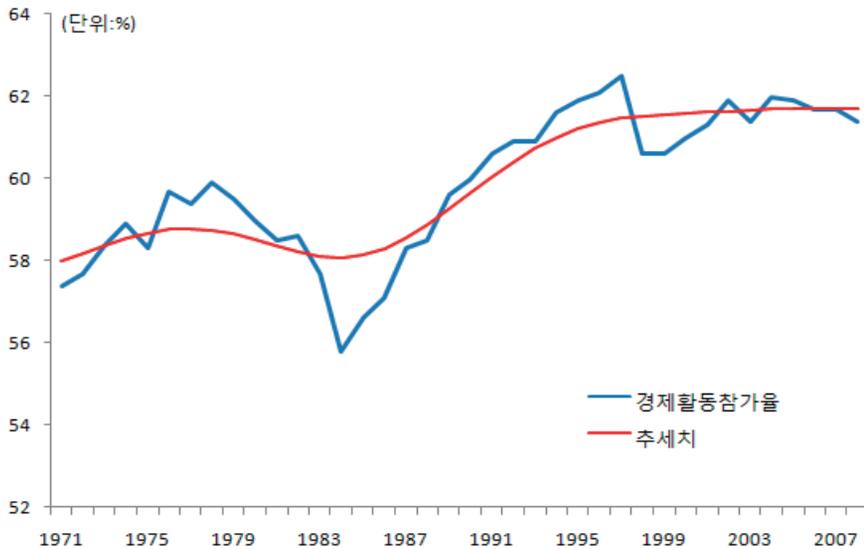
[표 II-27]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4	1.0	2.0	1.9	4.6	-0.5	62.1	59.8	3.7(3.5)
2005	1.5	1.4	1.3	2.5	1.8	62.0	59.7	3.7(3.5)
2006	1.2	1.0	1.3	-6.0	1.5	61.9	59.7	3.5(3.3)
2007	1.1	1.0	1.2	-6.4	1.2	61.8	59.8	3.3(3.0)
2008	1.1	0.6	0.6	-1.1	1.9	61.4	59.5	3.2(3.0)
2009	1.0	0.0	-0.6	18.6	2.7	60.7	58.6	3.7(3.5)

주: 2009년은 전망치이고, ()안은 1주 기준 실업률.
자료: 통계청.

[그림 II-27]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II-28] 추계인구 주요항목별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06	2010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32,240	38,123	42,869	47,008	48,297	48,874	49,325	48,634	46,343	42,342
인구증가율 ¹⁾		2.21	1.57	0.99	0.84	0.33	0.26	-0.02	-0.25	-0.67	-1.07
구 성 비	0~14	42.5	34	26.5	21.1	18.6	16.2	12.4	11.4	10.3	8.9
	15~64	54.4	62.2	69.3	71.7	71.9	72.9	72	64.4	57.2	53
	65+	3.1	3.8	5.1	7.2	9.5	11	15.6	24.3	32.5	38.2
합계출산률 ²⁾		4.53	2.83	1.59	1.47	1.13	0.83	0.92	0.95	0.97	0.97
총부양비 ³⁾		83.8	60.7	44.3	39.5	39.1	37.2	38.9	55.4	74.7	88.8
노령화지수 ⁴⁾		7.2	11.2	20	34.3	51	67.7	125.9	213.8	314.8	429.3

주: 1) 인구증가율은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임.

2)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3) 총부양비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4)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결과」, 2006. 11.

[표 II-29] 연령계층별 주요 노동투입변수의 추이

	연령층	1991	1996	2001	2006
생산 가능 인구	전체	31,535	34,274	36,579	38,762
	15~29	12,121(38)	11,743(34)	10,952(30)	9,843(25)
	30~49	12,204(39)	14,114(41)	15,749(43)	16,628(43)
	50~64	4,943(16)	5,622(16)	6,293(17)	7,555(19)
	65세 이상	2,267(7)	2,793(8)	3,584(10)	4,736(12)
경제 활동 참가율	전체	60.6	62.1	61.3	61.7
	15~29	47.9	48.4	47.5	46.9
	30~49	76.8	77.9	76.7	77.4
	50~64	67.3	67.8	64.5	66.3
	65세 이상	26.3	28.5	30.0	30.5
실 업 률 ²⁾	전체	2.4	2.0	3.8	3.3
	15~29	5.4	4.6	7.5	7.4
	30~49	1.2	1.2	2.9	2.5
	50~64	0.8	0.8	2.4	2.0
	65세 이상	0.2	0.3	0.4	0.6
고 용 률	전체	59.1	60.8	59.0	59.7
	15~29	45.3	46.2	44.0	43.4
	30~49	75.9	76.9	74.5	75.4
	50~64	66.7	67.2	62.9	64.9
	65세 이상	26.3	28.4	29.9	30.3

주: 1) ()안의 값은 전체 생산가능 인구 대비 연령계층별 백분율.

2) 구직기간 1주 기준임.

자료: 통계청.

주당평균근로시간(전산업 기준)은 70년대 50.7 시간, 80년대 51.4 시간으로 주당 0.7시간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1988년을 기점으로 뚜렷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90년대 47.3 시간(연평균 -0.1%)으로 감소하였으며,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감소세가 가속화 되면서 2008년에는 42.9시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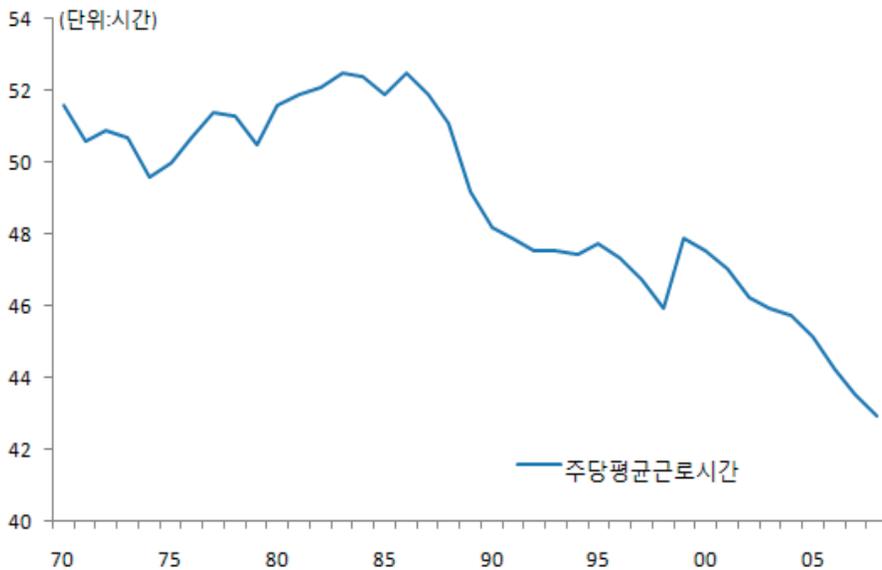
[표 II-30] 전산업 주당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8
주당평균근로시간	50.7	51.4	47.3	45.1

자료: 통계청.

[그림 II-28] 전산업 주당 근로시간 추이



자료: 통계청.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70년대 이후 노동관련변수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성장률 둔화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①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둔화, 임금수준 향상과 근로기준법 강화, 주5일제 근무제 정착 등에 따른 ②주당근로시간 감소, 여성과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③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적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총노동투입은 70년대 연평균 3.6%, 80년대 2.1%, 90년대 1.5%, 2001~2008년 0.1%로 증가폭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동향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주요 고용변수를 전망한 결과는 [표 II-31]에 요약되어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2006. 11월)의 15세 이상 인구증가율과 같은 추계치를 사용하였다.⁶⁾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지난 5년과 동일하게 추세적으로 감소하고(5년 평균 0.9%) 2013년에 이르면 0.7%로의 둔화가 예상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60.7%까지 감소하겠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완만히 추세수준으로 복귀하여 2013년에는 61.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4주 기준)도 2009년 3.7%에서 점차 낮아져서 금융위기 전의 상황처럼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세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면서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되는 현상이 지난 5년의 경우처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근로시간은 2009년 42.4시간에서 2013년에는 40.9시간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주요 고용변수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추정된 결과 총노동투입량은 2009년 1.4% 감소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면서 2010년과 2011년 각각 1.1%, 0.1% 증가하겠으나 2012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 -0.1%, 2013년에는 -0.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5년마다 추계치를 작성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의 15세 이상 인구와 6개월마다 추계되는 경제활동인구상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추계방법이 서로 다르며, 「장래인구추계 결과」의 15세 이상 인구는 5년마다 추계치가 변화되는 데 반해, 경제활동인구상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한번 추계되면 확정되어 변화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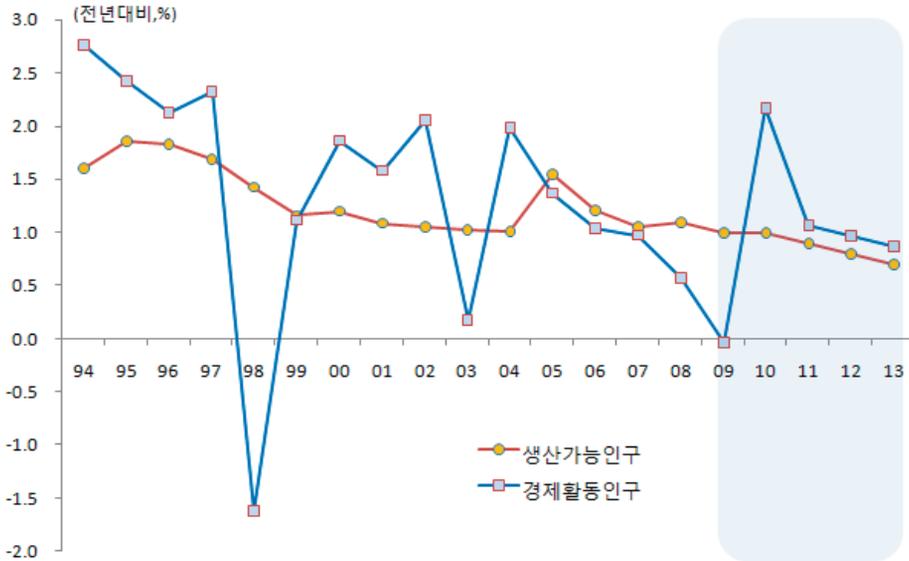
[표 II-31] 주요 노동투입변수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가능인구	1.0	1.0	0.9	0.8	0.7
경제활동참가율	60.7	61.4	61.5	61.6	61.7
실업률	3.5 (3.7)	3.4 (3.5)	3.3 (3.3)	3.3 (3.4)	3.2 (3.3)
주당근로시간	42.4	42.0	41.5	41.1	40.9
총노동투입량	-1.4	1.1	0.1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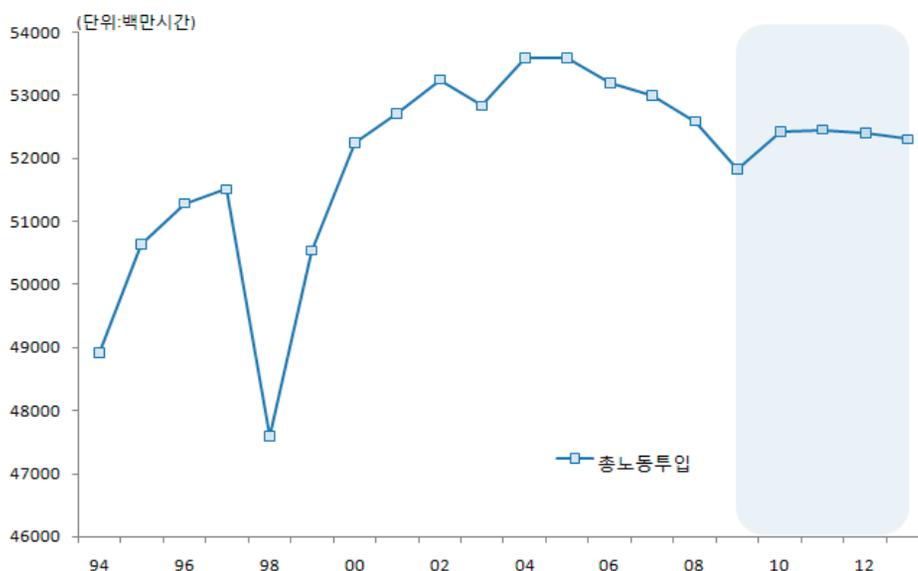
주: ()안은 4주 기준 실업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29] 생산가능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그림 II-30] 총노동투입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잠재GDP 추정을 위해서는 잠재적 수준의 총노동투입량(L^p)를 추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실업률과 잠재적 수준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초한 잠재수준의 고용, 즉 잠재취업자수가 필요하며, 여기에 추세적인 주당근로시간은 곱하여 잠재노동투입량(L^p)가 결정된다.

자연실업률은 인플레이션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지 않는 실업률의 확률추세 부분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해하는 이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추정결과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97년 3.16%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99년 3.53%로 상승하여 2008년 3.44%로 매우 완만히 하락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5년간 자연실업률은 3.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을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UR_t = UR_t^{Trend} + UR_t^{Cycle} \quad ①$$

$$UR_t^{Trend} = UR_{t-1}^{Trend} + e_{1t}, \quad e_{1t} \sim i.i.d N(0, \sigma_{e1}^2) \quad ②$$

$$UR_t^{Cycle} = \phi(L)UR_{t-1}^{Cycle} + e_{2t}, \quad e_{2t} \sim i.i.d N(0, \sigma_{e2}^2) \quad ③$$

$$\Delta\pi_t = \mu + \delta(L)UR_t^{Cycle} + \gamma(L)x_t + \theta(L)\Delta\pi_{t-1} + \rho(L)\varepsilon_t \quad ④$$

이변수 비관측인자 모형은 식①처럼 실업률을 확률추세(UR^{Trend})인 자연실업률과 순환부분(UR^{Cycle})으로 분해하는 단일변수 비관측인자모형에 필립스곡선 관계식을 결합한 것이다. 확률추세(UR^{Trend})는 임의보행(Random Walk)을 따르고(식②), 순환부분(UR^{Cycle})의 시차다항식($\phi(L)$)은 2계자기회귀(Order of AR(2))를 따른다고(식③) 가정하였다. 식④에서 보는 것처럼 π_t 는 인플레이션을, $\delta(L)UR_t^{Cycle}$ 는 실업률갭이 인플레이션을 변화에 미치는 압력, x_t 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외생적인 공급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항으로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과 근원물가상승율의 차이로 계산된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상승률과 대외부분을 고려한 수입물가지수상승률을 사용하였다. 시차연산자의 다항식인 $\theta(L)$ 과 $\rho(L)$ 은 정상성 조건을 만족하며, ARMA(p,q)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필립스 관계식이 의미하는 것처럼 실업률갭과인플레이션율의 변화는 유의적으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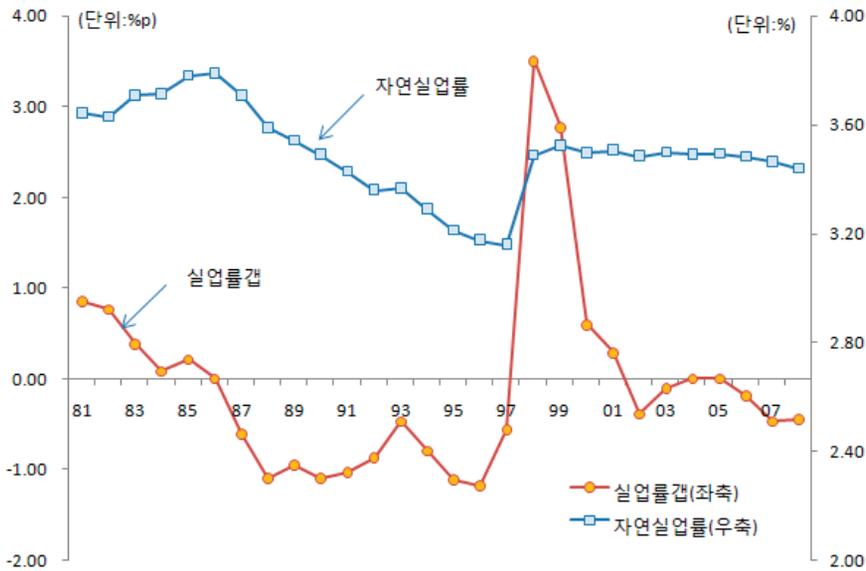
타났다. 즉, 실업률갭의 1%p 상승은 1기와 2기에 걸쳐 0.098%p($\delta_1 + \delta_2$; 연율로 보면 0.392%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공급충격을 고려하더라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mu = -0.002$), 자연실업률은 매우 평활하여(σ_a) 대부분의 실업률 변동은 순환부분(σ_e)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변수 비관측모형의 추정결과

추정모수	변수	실업률
μ		-0.002 (0.0011)
δ_1		-0.041 *** (0.0093)
δ_2		-0.057 *** (0.0068)
θ_1		-0.48 *** (0.08)
θ_2		-0.057 *** (0.019)
γ_1		0.85 *** (0.21)
γ_2		0.09 *** (0.02)
ϕ_1		1.29 *** (0.035)
ϕ_2		-0.39 *** (0.031)
σ_a		$0.5 \times 10^{-5} (0.7 \times 10^{-5})$
σ_e		0.004 (0.0024)
σ_ε		0.011 *** (0.0007)
로그우도값		1003.83

주: 분석기간은 1975. 1/4분기 ~ 2008. 4/4분기, ()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냄.

[그림 II-31] 자연실업률과 실업률갭의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잠재수준의 생산가능인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이용하고, 경제활동인구와 주당근로시간은 호드릭-프레스콧 필터의 추세치를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표 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은 61.7%, 주당근로시간의 추세치는 매년 1.1% 감소해 2013년에는 40.6시간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잠재적 수준의 경제활동인구와 자연실업률을 바탕으로 계산된 잠재적 수준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향후 5년 평균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율은 매년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갭이 비록 서서히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까지 잠재 수준의 고용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잠재수준의 총노동투입량은 5년 평균 0.4% 증가하는 데 반해 우리 경제의 실제 총노동투입량은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II-32] 노동투입변수의 잠재수준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가능인구증가율	1.0	1.0	0.9	0.8	0.7
경제활동참가율	61.7	61.7	61.7	61.7	61.7
자연실업률	3.4	3.4	3.4	3.4	3.4
주당근로시간	42.4	42.0	41.5	41.0	4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II-33] 실제 및 잠재 수준의 노동투입량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제취업자수	-0.6	0.7	0.8	0.9	1.1
잠재취업자수	1.2	1.2	1.2	1.3	1.2
실제노동투입량	-1.4	1.1	0.1	-0.1	-0.2
잠재노동투입량	0.5	0.3	0.4	0.4	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및 전망

총요소생산성 (TFP, A_t)은 노동 (L_t)과 자본 (K_t)의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 증가부분이며 한 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이용되고 있다. 선진화된 경제체제로 진입함에 따라 노동과 자본투입의 양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성장에 있어 총요소생산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진다. 즉, 단순한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장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는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80년대 2.3%, 90년대 1.6%, 2000년대 들어 2008년까지 연평균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경제성장에 대한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표 II-34])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70년대 2.1%p에서 80년대 1.3%p, 90년대 0.9%p로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연평균 0.05%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0.1%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본의 기여도는 80년대 4.8%p, 90년대 3.4%p, 2000년대 들어 2008년까지 연평균 2.2%p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자본의 기여도는 1.6%p로 지난 5년 평균 2.0%p에 비해 0.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향후 5년 평균 1.3%p로 지난 5년 평균(1.9%p)에 비해 0.6%p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34] 투입요소별 실질성장 기여도 추이 및 전망

(단위: 연평균, %, %p)

기 간	경제성장률	요인별 성장 기여도		
		노 동	자 본	총요소생산성
1981~1990	8.4	1.3	4.8	2.3
1991~2000	5.9	0.9	3.4	1.6
2001~2008	4.3	0.05	2.2	2.1
2009~2013	3.1	0.1	1.6	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질적변화를 고려한 성장회계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진희·신석하,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연구보고서 2007-5, 한국개발연구원(2007)을 참조하라. 분석결과를 보면 질적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추세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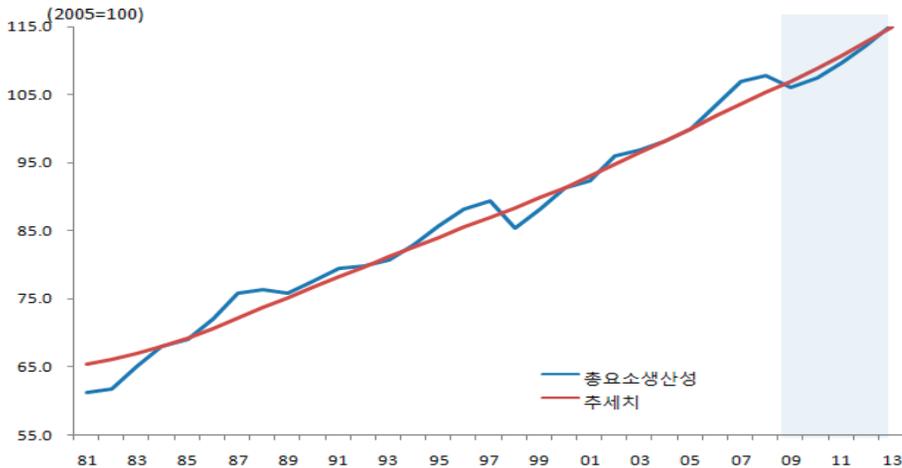
[표 II-35] 총요소생산성 전망

(단위: 연평균 %, %p)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요소생산성	-1.6	1.4	2.1	2.4	2.6
잠재총요소생산성	1.6	1.7	1.8	1.8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32] 총요소생산성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생산투입요소별 분해에 기초한 생산함수접근법과 비관측인자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을 결합하여 8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는 [표 II-36]와 [표 II-37]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II-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8년 연평균 4.3%로 동기간 실제성장률에 비해 연평균 0.1%p 낮게 추정

되었다. 지난 5년간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연평균 4.1%이며 2004년 4.2%, 2005년 4.4%, 2006년 4.2%, 2007년 4.0%로 나타나 2005년을 정점으로 완만히 둔화되고 있으며 2008년에 들어서 3%대(3.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5년(1999~2003년) 평균 4.6%에 비해 최근 5년(2004~2008년) 잠재성장률이 0.5%p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자본의 기여도 하락이다.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1999~2003년 평균 1.7%p에서 2004~2008년 1.8%p로 0.1%p 증가하고, 동기간 중 노동의 기여도는 0.4%p에서 0.3%p로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동기간 중 2.4%p에서 2.0%p로 0.4%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다른 투입요소에 비해 크게 감소한 원인은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위축으로 특징지어지는 제 8순환기의 경기수축기(2002. 12월 ~2005. 4월)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⁸⁾ 내수 위축으로 특징지어지는 제 8순환기의 경기수축기 이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지난 5년 평균 2.0%에 머물렀으며, 1999~2003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6.3%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투자가 지난 5년간 크게 위축되면서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다.

[표 II-36] 실질 성장률 및 잠재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연평균 %)

	1981~1990	1991~2000	2001~2008	2004~2008
실질성장률	8.7	6.2	4.4	4.2
잠재성장률	8.1	6.1	4.3	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통계청의 경기순환기준일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제 7순환과 제 8순환, 두 번의 경기순환기가 지나고 2005년 4월을 저점으로 제 9순환이 진행 중이다. 제 7순환기의 경기수축기는 IT경기호조에 이은 2000. 8월 ~ 2001. 7월 사이의 11개월 기간이고, 8순환기의 경기수축기(2002. 12~2005. 4)는 28개월 동안 지속된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위축으로 특징지어진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9)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잠재성장률은 3.5%로 2008년(3.9%)에 비해 0.4%p 하락하고 2010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3.8%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동기간 중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각각 0.3%p와 1.8%p로 동일하지만,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0.4%p 하락해 1.6%p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9~2013년 중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3.1%, 2009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4.1%로 전망되었으며 2010년부터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림 II-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GDP 수준과 잠재GDP수준의 퍼센티지 갭으로 정의한 GDP갭을 보면 2008년 0.3%에서 2009년 -4.2%, 2010년 -3.9%, 2011년 -3.7%, 2012년 -3.3%, 2013년 -2.7% 등으로 나타나 2013년에도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정상상태로의 복귀 과정이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잠재수준에서 크게 떨어진 실질국내총생산이 잠재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1997년과 1998년 각각 4.7%와 -6.9%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1999년과 2000년 9.5%와 8.5%를 기록하면서 1998년 -8.4%이던 GDP갭이 2000년엔 -0.4%로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IT경기호조에 힘입어 2002년 GDP갭이 1.5%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08년 2.2%에 이어 2009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와 같이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과 2011년 연평균 5.7% 성장해야 하며, 2013년까지 잠재GDP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의 성장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의 경기회복국면과 비교하면 1980년 제 2차 석유위기 이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당시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 -1.5%, 1981년과 1982년 각각 6.2%와 7.3%로 완만

9) 정부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한 5% 내외의 잠재성장률과는 상당한 차이(1.3%)가 존재한다.

하계 경제가 회복된 후, 1983~1986년 평균 성장률이 9.1%를 기록하면서 1986년에 가서야 비로서 잠재GDP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이다.

[표 II-37] 실질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대비, 연평균 %)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성장률	-1.0	3.8	3.9	4.2	4.5
잠재성장률	3.5	3.6	3.7	3.8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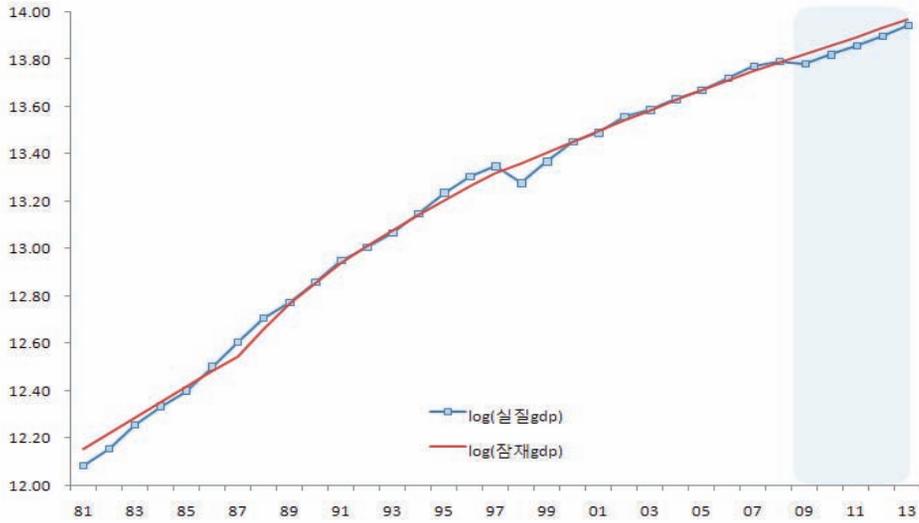
[표 II-38]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추이 및 전망

(단위: 연평균 %, %p)

기간	잠재성장률	요인별 잠재성장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1981~1990	7.8	1.3	4.8	1.6
1991~2000	6.0	0.8	3.4	1.8
2001~2008	4.2	0.3	2.2	1.8
2004~2008	4.1	0.3	2.0	1.8
2009~2013	3.7	0.3	1.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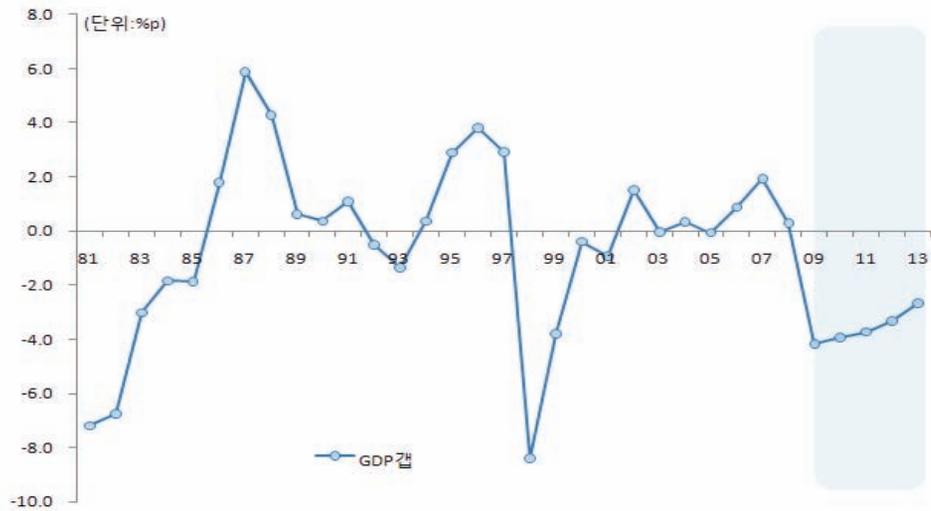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33] 실질 및 잠재GDP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34] GDP갭 추이 및 전망



주: GDP갭은 실질GDP의 잠재GDP 수준으로부터의 퍼센티지 갭으로 계산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GDP갭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총수요와 총공급에 기초한 거시경제이론에 의하면 GDP갭이 증가하면 총수요압력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본 분석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물가상승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자연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Rate)을 추정하여 잠재국내총생산을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모형을 통해 추정된 GDP갭과 물가상승률과의 관계를 그랜저 인과검정(Granger Causality Test) 해보고, 인플레이션과 GDP갭의 이변수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추정하여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GDP갭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랜저 인과검정은 아래와 같은 회귀식 ①식와 ②식을 추정하여 귀무가설인 $H_0: \beta_1 = \beta_2 = \dots = \beta_k = 0$ 을 검정하여 현재 어떤 변수값이 과거의 다른 변수값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면 다른 변수의 과거 값이 현재 어떤 변수를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y_t = \alpha_0 + \alpha_1 y_{t-1} + \alpha_2 y_{t-2} + \dots + \alpha_k y_{t-k} + \beta_1 x_{t-1} + \beta_2 x_{t-2} + \dots + \beta_k x_{t-k} + e_t \quad \text{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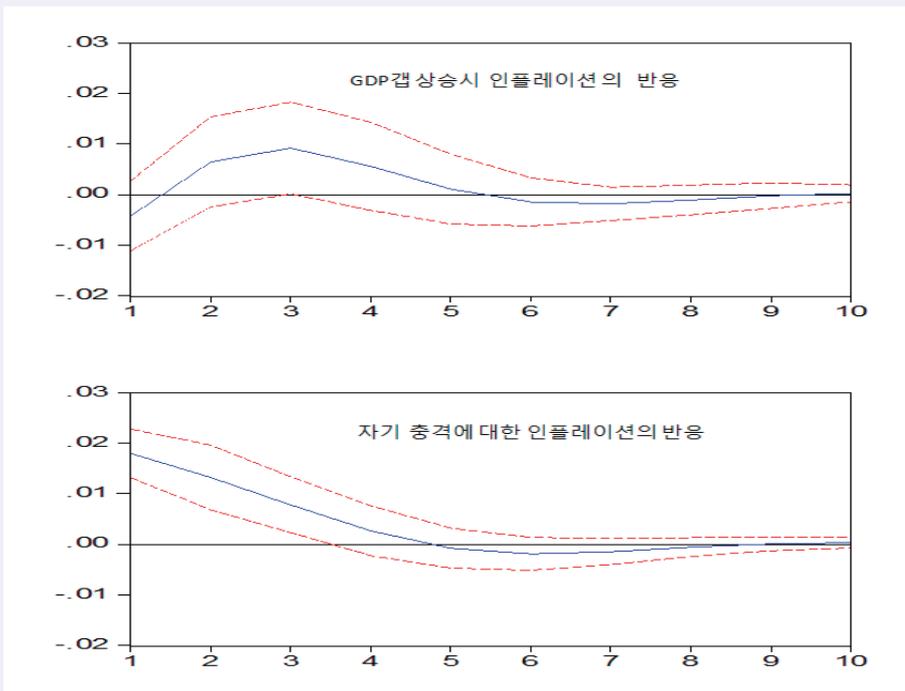
$$x_t = \alpha_0 + \alpha_1 x_{t-1} + \alpha_2 x_{t-2} + \dots + \alpha_k x_{t-k} + \beta_1 y_{t-1} + \beta_2 y_{t-2} + \dots + \beta_k y_{t-k} + e_t \quad \text{②}$$

위에서 x 와 y 는 각각 로그GDP갭과 로그차분한 소비자물가지수이다. $k=2$ 로 하여 위 식을 추정하여 F-검정을 실시한 결과 ‘GDP갭이 인플레이션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5% 유의수준하에서 기각되었으며 ($p\text{-value}=0.018$),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GDP갭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는 귀

무가설은 5% 유의수준하에서 기각할 수 없었다(p-value=0.087).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GDP갭에 단위 표준편차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3년 동안은 한계적이기는 하지만 유의하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며 그 효과는 5년 후까지 지속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갭 상승이 즉각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는 시차를 가지고 반기 후부터 나타나 2기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충격반응함수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2009년 2/4분기를 경기회복국면의 시작으로 보았을 때 경기확장으로 GDP갭이 상승하면서 본격적인 물가압력으로 작용하는 시점은 2011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율의 충격반응 함수



주: 추정결과는 1981~2008년까지의 연별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적색점선은 ± 2 표준편차 신뢰 구간을 나타냄.

3. 지출부문별

가. 경제성장률

2010년 중 3.8% 실질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국내경제는 2011년 중 3.9%, 2012년 중 4.2%, 2013년 중 4.5%의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0년 중 실질경제성장률이 4.0%, 2011년부터 5%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0.65%p(연평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4% 2011년 중 6.1%, 2012년 중 6.5%, 2013년 중 6.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정부의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6%, 2011년부터 2013년 중 7.6%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0.88%p(연평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만한 소득 증가로 2008년 19,106달러에 달했던 1인당GDP는 2013년 25,835달러(35.2%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39]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와의 전망 비교

(단위: %, %p)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성장률	국회예산처(A)	-1.0	3.8	3.9	4.2	4.5
	정부(B)	-1.5	4.0	5.0	5.0	5.0
	격차(B-A)	-0.5	0.2	1.1	0.8	0.5
경상 GDP성장률	국회예산처(A)	1.9	6.4	6.1	6.5	6.9
	정부(B)	1.1	6.6	7.6	7.6	7.6
	격차(B-A)	-0.8	0.2	1.5	1.1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정부.

[표 II-40] 경상GDP 및 1인당 GDP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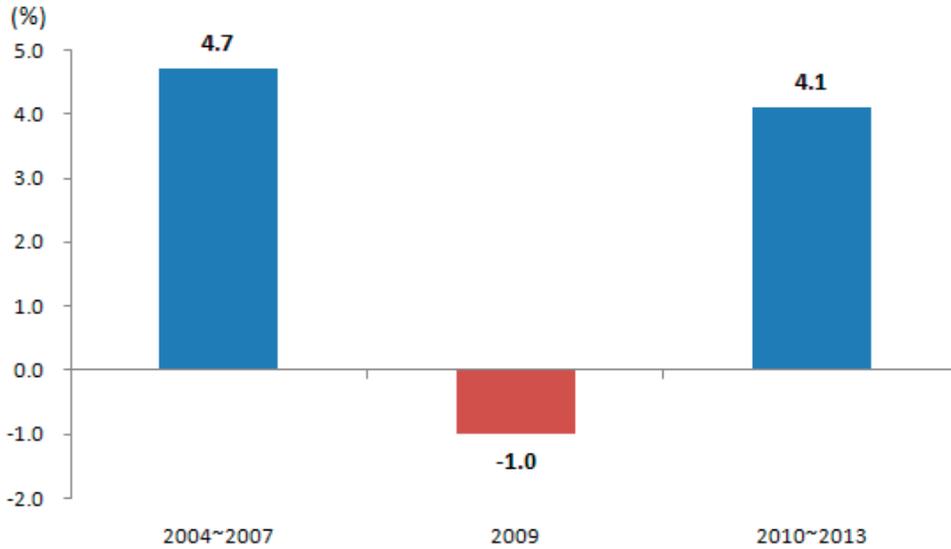
	경상GDP		1인당GDP (달러)	평균환율 (원)	인구 (천명) ¹⁾
	조원	10억달러			
2000	603	534	11,350	1,131	47,008
2001	651	505	10,656	1,291	47,357
2002	721	576	12,092	1,251	47,622
2003	767	644	13,448	1,192	47,859
2004	827	722	15,037	1,145	48,039
2005	865	845	17,548	1,024	48,138
2006	909	951	19,692	956	48,297
2007	975	1,049	21,655	929	48,456
2008	1,024	929	19,106	1,103	48,607
2009	1,043	811	16,642	1,286	48,747
2010	1,110	936	19,149	1,186	48,875
2011	1,178	1,045	21,322	1,128	48,989
2012	1,254	1,181	24,067	1,061	49,083
2013	1,340	1,270	25,835	1,055	49,163

주: 1) 인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추계인구를 이용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글로벌 금융위기기간(2008년부터 2009년)을 제외한 2010년~2013년의 국내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4.1%로 2004년~2007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4.7%)보다 0.63%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2013년 중 국내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도 낮은 성장기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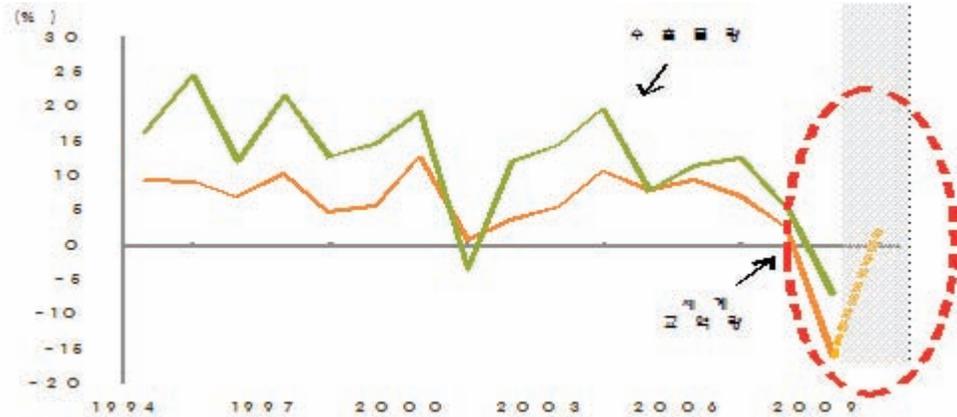
[그림 II-35]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주: 연평균성장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04년~2007년 중 1.1%p(연평균)에 달했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2010년~2013년 중 0.5%p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수출환경이 개선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이전 수준보다는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은 첫째, 선진국의 고용 없는 성장과 가계부채 축소(저축증가)로 인해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둘째, 원화강세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가격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점, 셋째, 중국 등 일부 개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한 우리나라 상품(저기술 중간재 및 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교역량 증가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3년중 세계교역량증가율이 5.2%(연평균)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년부터 2008년)의 교역증가율(연평균 8.7%)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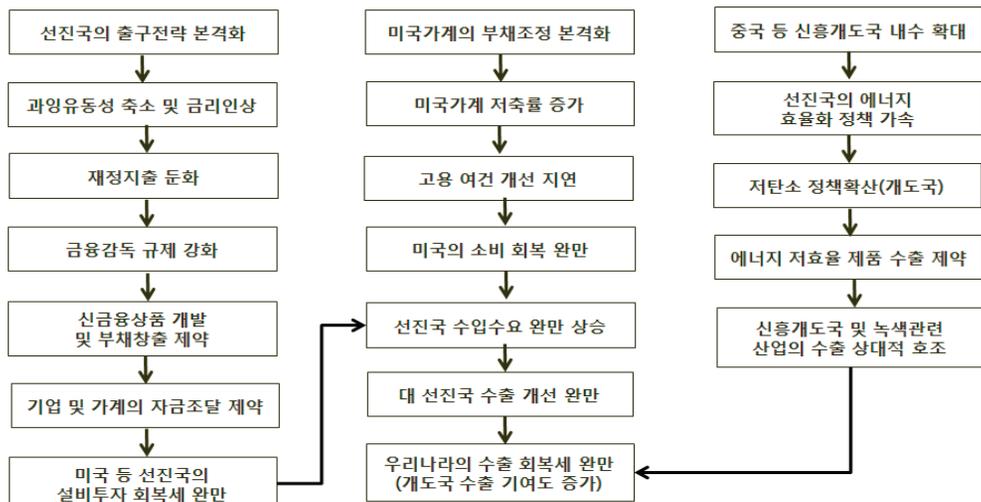
[그림 II-36] 우리나라의 수출물량과 세계교역량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09.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대개도국 수출의존도(개도국의 내수확대 정책 예상)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에 대선진국 수출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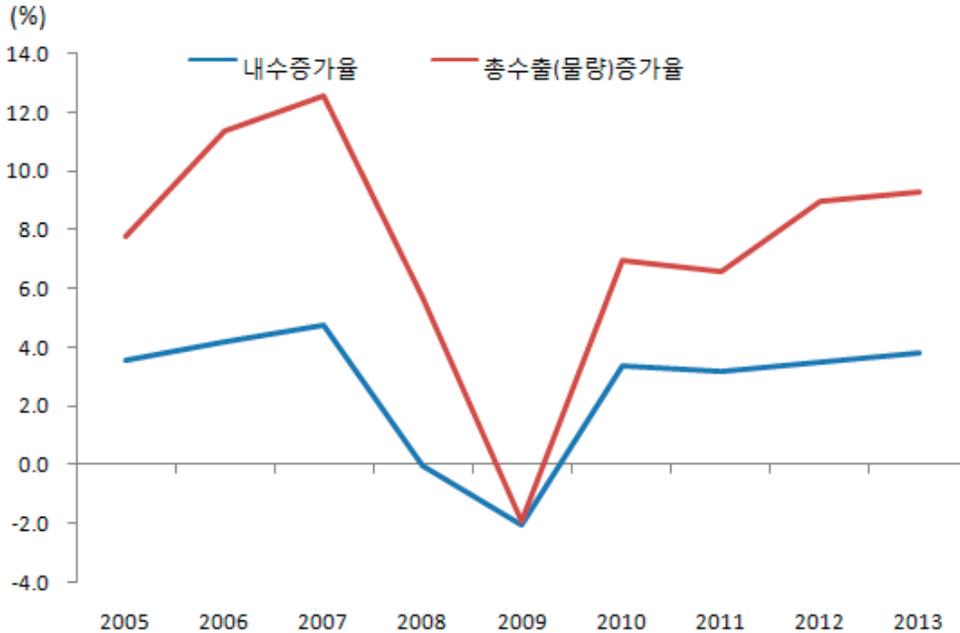
[그림 II-37] 우리나라의 수출환경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내수성장률이 수출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0~2013년 중 수출은 연평균 8.0% 증가하나 내수증가율은 동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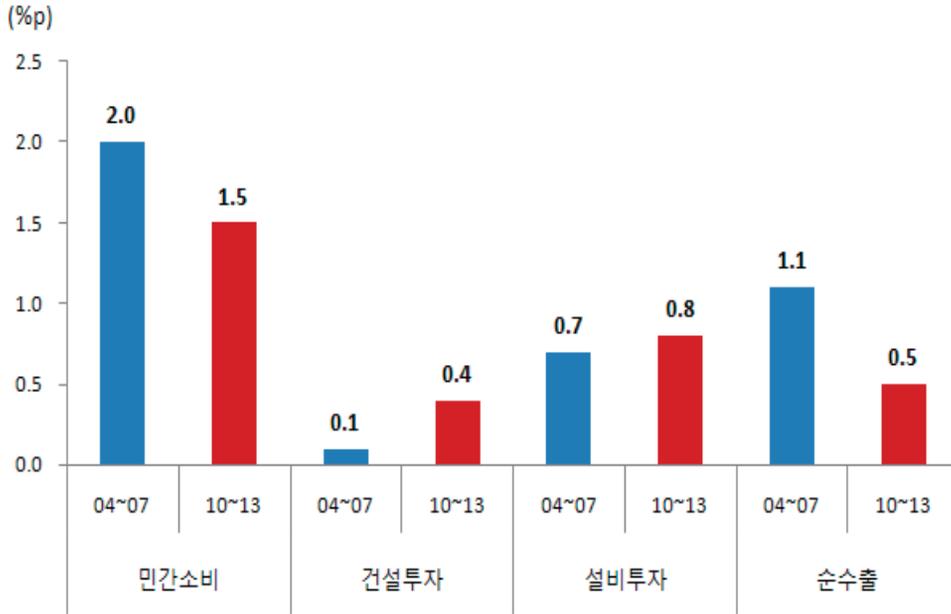
[그림 II-38] 내수 및 수출증가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내수성장에 가장 중요한 소비의 성장기여도 추이를 보면 2004년~2007년 중 2.0%p(연평균)에 달했던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2010년~2013년 중 1.5%p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진전, 출구전략 본격화로 인한 금리인상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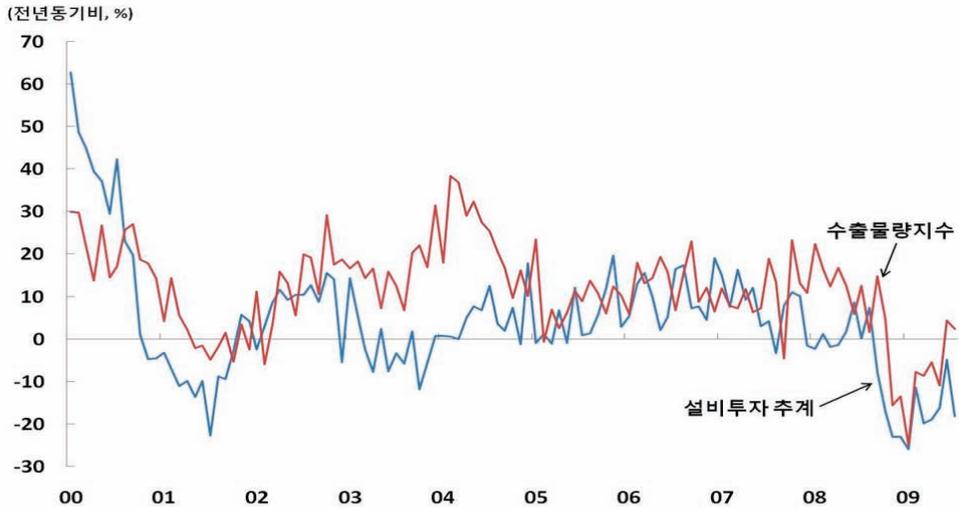
[그림 II-39] 지출부문별 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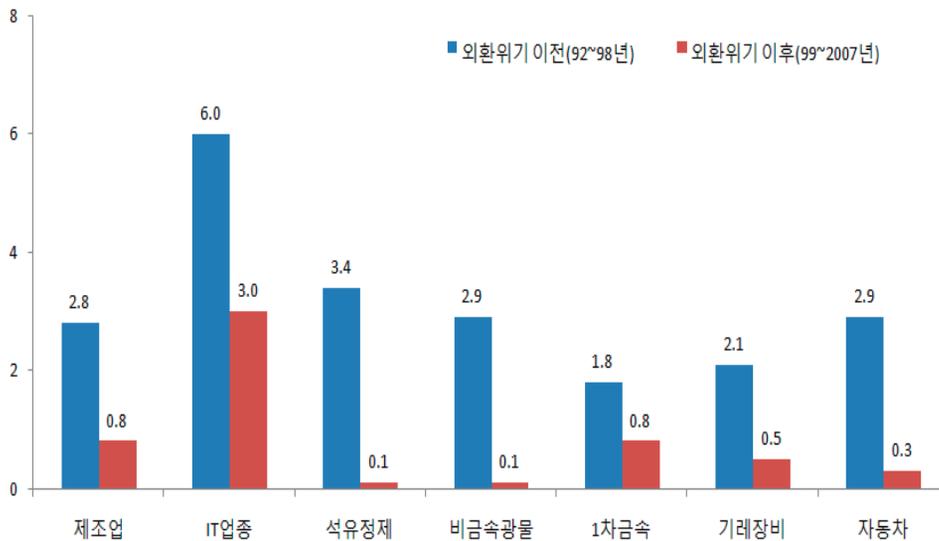
내수가 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투자 및 고용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수출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수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여 설비투자의 회복탄력이 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투자를 주도했던 IT, 자동차, 석유정제유 등 제조업들의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주요 제조업종의 자본투입 증가율이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설비투자 부진으로 설비투자가 수출 및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경제는 투자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0] 수출물량과 설비투자 추계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II-41] 외환위기 전후 주요 업종의 자본 투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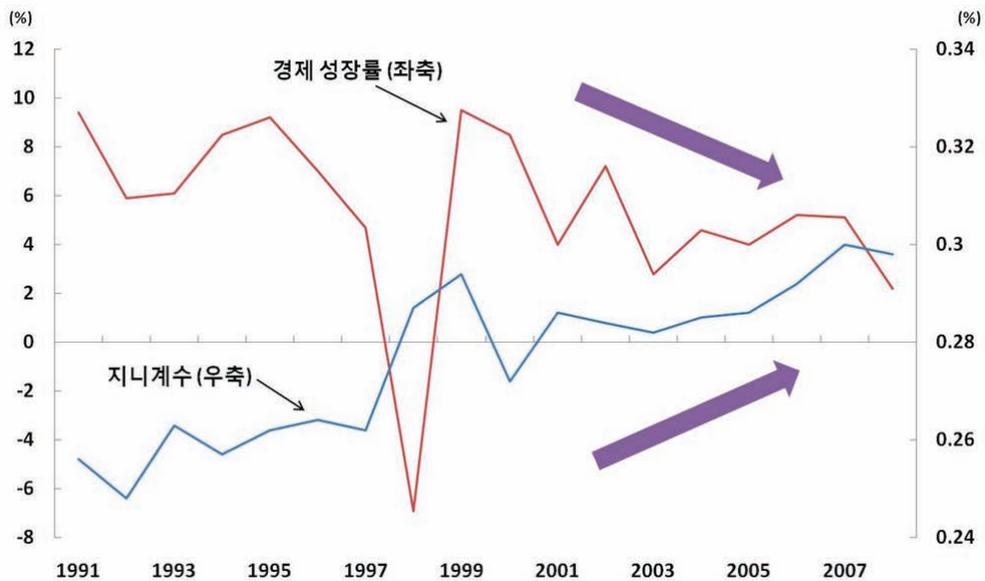


주: 연평균 증가율.

자료: 지식경제부, “전국 제조업 총요소 생산성 동향분석”, 2009. 9.

둘째,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소득간의 양극화 개선이 지연되어 경기확산 및 소득환류가 원활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개방, 규제완화, 글로벌화 등으로 업종과 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지속되어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지니계수가 상승하며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분배구조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과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여 소비와 고용여건의 뚜렷한 개선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림 II-42]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셋째,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증가와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2009년 6월말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505.2조원, 평균 대출금리

5.88%) 및 기업 저축성예금(잔액 171.9조원, 평균예금금리 4.34%)을 기준으로 볼 때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1%p 상승시 기업의 이자부담은 월 4,200억원 증가하는 반면 이자수입은 월 1,400억원 증가하여, 기업의 순 이자부담은 월 2,800억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소비여력이 약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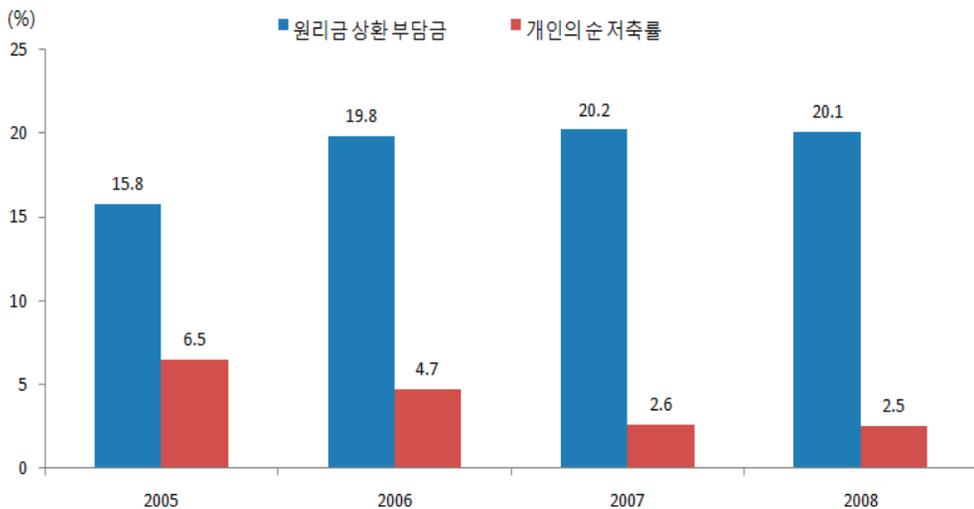
[표 II-41] 금리상승시 월 이자부담 추정

			(단위: 천억원)
	월 이자부담 증가(A)	월 이자수입 증가(B)	순 이자부담 증가(A-B)
가 계	3,300	2,500	800
기 업	4,200	1,400	2,800

주: 2009.6말 예금은행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II-43] 가계부채 부담 증가



자료: 한국은행.

또한 2008년 상장기업 재무구조를 이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시 대출금리 1%p 상승시 은행의 대출 연체율을 0.3%p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금리 1% 상승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0.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순이자이익은 2.5조원 증가하지만 보유채권 평가손 0.2조원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금 2.2조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상승 폭이 커지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급증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42]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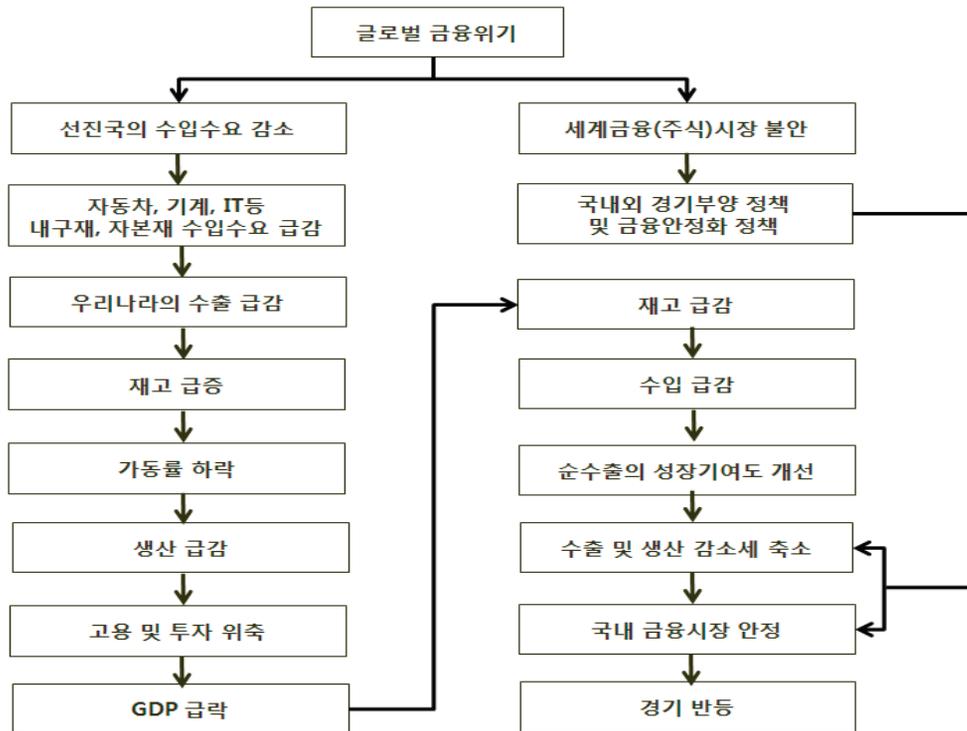
	2008				2009	
	1/4	2/4	3/4	4/4	1/4	2/4
매출액증가율(%)	18.2	24.8	28.6	-	-0.6	-4.0
영업이익률(%)	7.4	7.6	5.9	-	4.7	5.7
이자보상배율(%)	613.5	659.4	457.2	-	267.4	361.7
부채비율(%)	93.5	96.4	104.3	108.6	115.8	108.8
차입금의존도(%)	22.2	22.6	23.4	23.9	25.4	25.4

주: 상장기업(금융업 제외) 및 주요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1,500여개사 대상.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09년 2/4분기이후 급등세를 보인 국내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첫째, 2009년 중 급반등세를 보인 세계경제와 교역량이 2010년 이후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화 진전으로 선진국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의 상관관계수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미국의 수입물량과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이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출의 성장기

여율도 크게 높아졌다. 2010년 이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국내경제도 완만하게 회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44]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내경제 반등 요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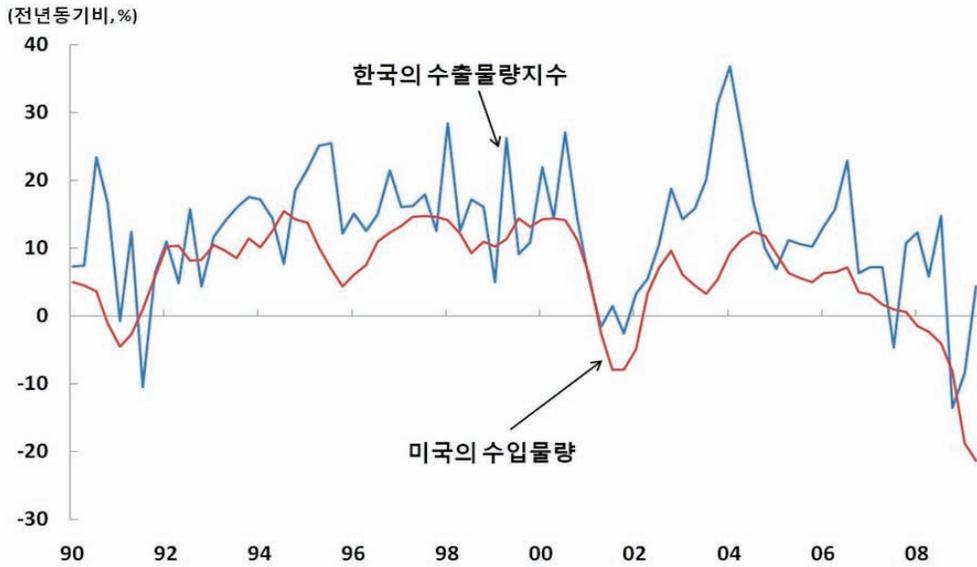
[표 II-43] 선진국 경제 성장률과 한국의 수출증가율의 상관계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	0.67	0.75	0.66	0.75
유럽	0.48	0.23	0.40	0.33
일본	0.55	0.49	0.34	0.34

주: 2000년 1/4분기~ 2009년 1/4분기동안의 상관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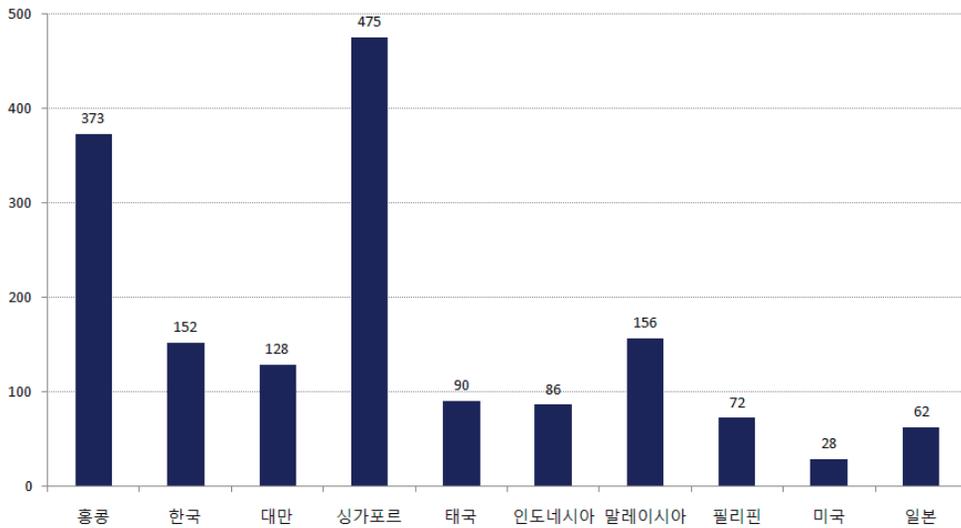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그림 II-45] 미국의 수입물량과 한국의 수출물량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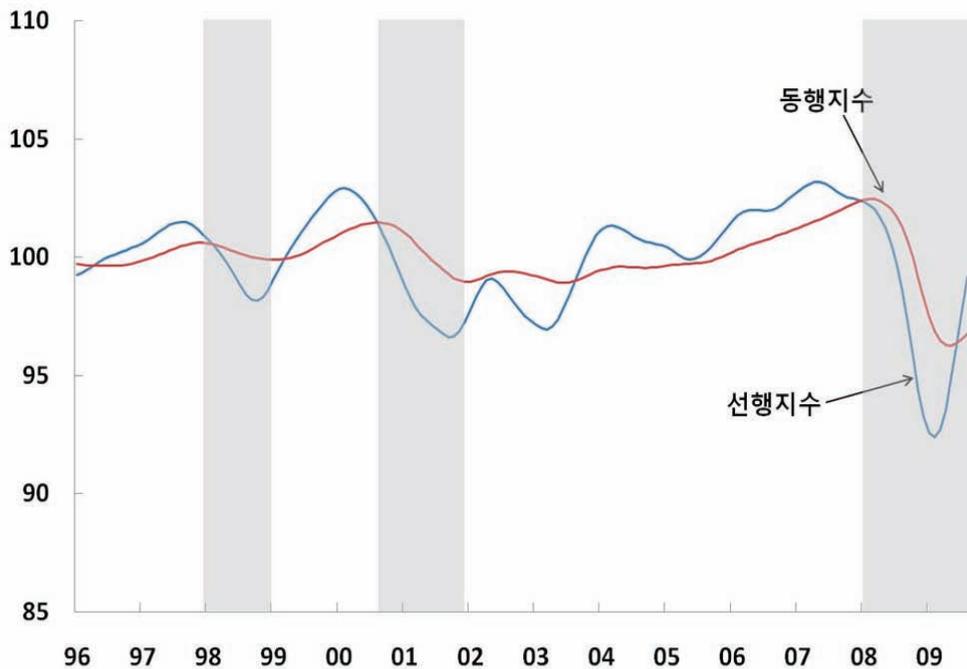
[그림 II-46] 한국 및 동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성장 기여율 비교(2003~2007)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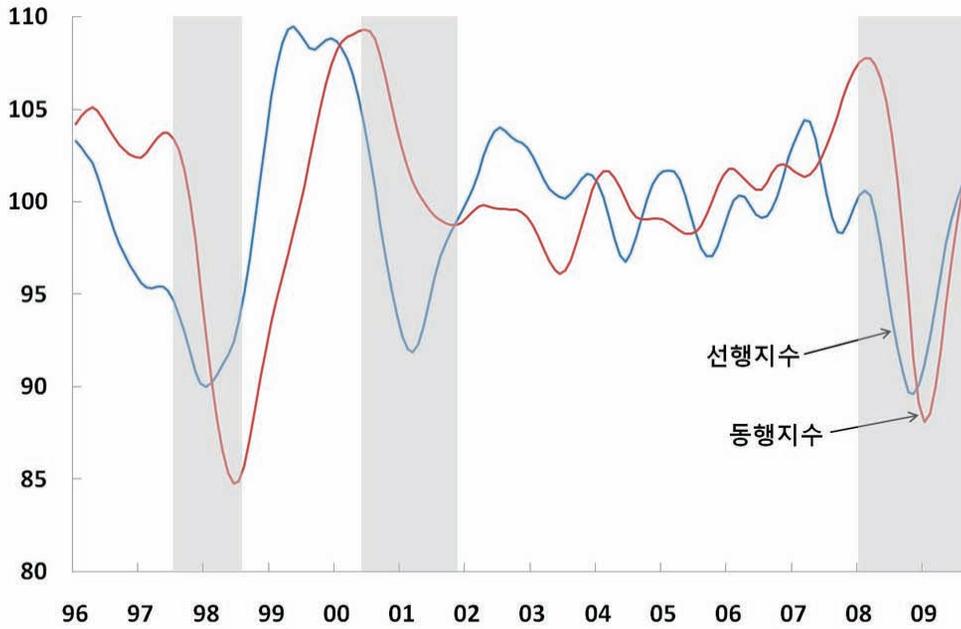
둘째, 위기 이후 OECD국가의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를 움직임을 보면 급등락 이후 상당기간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즉, 인터넷버블 붕괴 이후 OECD 경기지수는 변동 폭이 축소되면서 완만하게 장기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된 후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선진국 경기지표들도 점차 변동 폭이 축소되면서 안정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컸던 국내경제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안정되면서(동조성 강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47] OECD 국가의 경기순환과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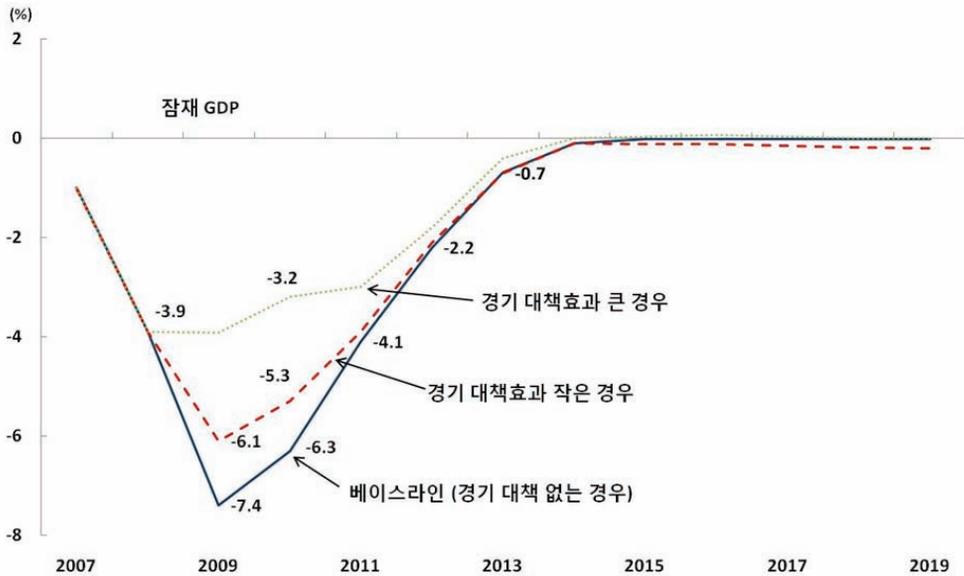
[그림 II-48] 한국의 경기순환과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OECD.

셋째, 상당기간 저물가가 유지되어 출구전략의 강도와 속도가 실물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GDP 수준이 상당기간 잠재GDP 수준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여 수요측면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의 변동 폭이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9] 미국의 GDP갭(gap) 전망



주: GDP갭 = 실제GDP / 잠재GDP

자료: IMF, Economic Outlook - Fiscal Years 2009 to 2019 (2009.1)

넷째, 외채구조 개선과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로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총외채대비 단기외채는 선진국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타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빠른 경기회복으로 외국자본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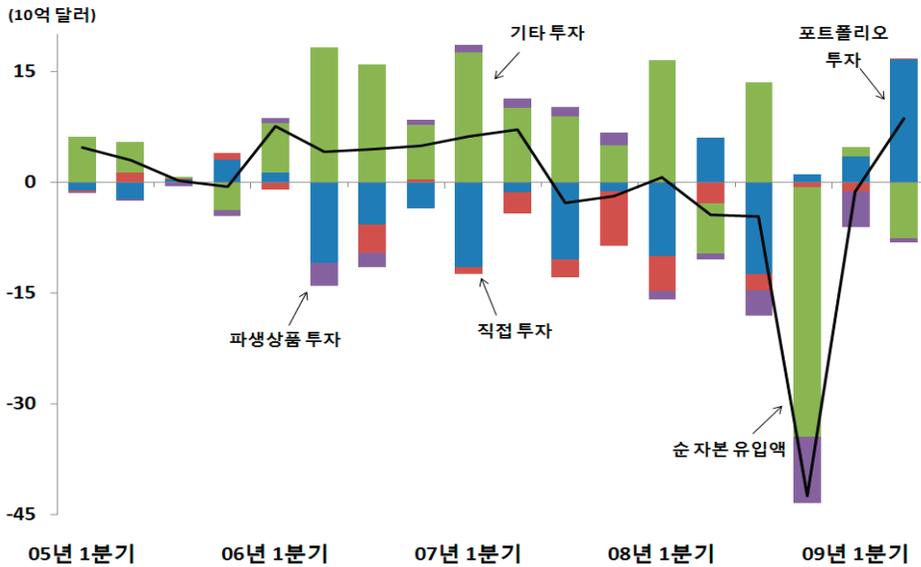
[표 II-44] 주요국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

영국	일본	중국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한국	미국	태국	호주	칠레
73.8	64.2	51.5	46.9	41.3	40.1	38.6	30.1	27.8	19.6

주: 2009년 3월말 기준.

자료: IMF, World Bank.

[그림 II-50] 우리나라의 순자본유입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Datastream.

다섯째, 가계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가계부채의 금융자산 대비 비율과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높은 편이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0%이상의 변동금리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부담요인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하의 완만한 금리인상,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사전채무조정제도 등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LTV규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가능성이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온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퇴출 등 구조조정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부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여건이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속도와 폭이 예전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45] 기업구조조정 추진여건 비교

	외환위기	현재
위기 원인	기업부실과 무역수지 적자 등 대내적 요인	글로벌 유동성 경색 등 대외적요인
부실 정도	한보, 진로, 기아 등 많은 대기업그룹 부도	건설, 조선 등 일부 업종 부실
추진 방식	기부실화된 기업을 사후적으로 정리	선제적, 예방적 차원의 구조조정

자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정부지원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일부 기업의 부도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그 대상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가 예방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46] 금리상승과 상장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단위: 개, 십억원)

금리 상승폭	금리상승 이전	1%p 상승	2%p 상승	3%p 상승
부실화 가능 기업수	574	578	581	586
부실화 가능 기업 차입금	15,230	15,366	15,383	16,528
부실화 가능 기업수 증가	-	4	7	12
차입금 증가(D-B)	-	136	153	1,298

자료: 금융연구원, 「우리나라 기업부문 부실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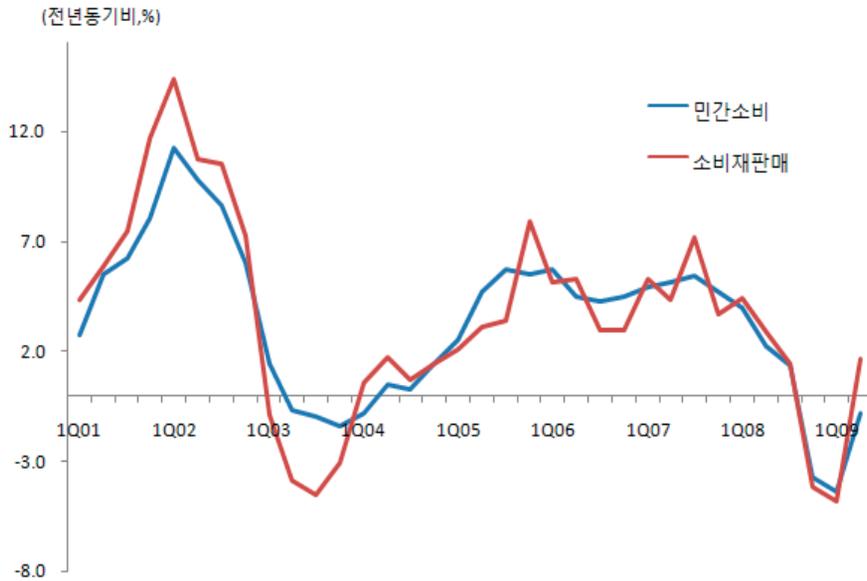
나. 민간소비

(1) 민간소비 동향

민간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민간신용이 크게 확대되자 1999~2002년 중 연평균 8.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에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각각 -0.4%와 0.3% 증가에 그쳤다.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서서히 조정되고 교역조건 개선에 따라 실질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민간소비는 2005~2007년 중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2008년 민간소비는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높은 물가상승률,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0.9% 증가에 그쳤다. 국제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화된 작년 4/4분기에는 전년동분기대비 3.7% 감소(전기대비 4.6% 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 1/4, 2/4분기에는 각각 4.4%, 0.8% 감소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둔화세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03~2004년의 카드사 부채 문제에 따른 소비위축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민간소비 중 국내소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큰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가 지난 2002~2003년 중 연평균 각각 6.0%, 3.0%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내구재와 서비스소비는 동기간 연평균 각각 -1.4%, 1.4% 증가로 둔화되는 데 그쳤다. 그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다소 진정되면서 2005~2007년 중 내구재소비는 연평균 9.5%, 비내구재소비는 3.7%로 확대되었지만 내구재소비는 2.6%, 서비스소비는 4.3%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II-51] 민간소비 추이



주: 2009년은 상반기 중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8년 들어 내구재소비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4/4분기 전년동분기대비 11.9% 감소한데 이어 2009년 1/4분기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4분기 들어 내구재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민간소비의 전년동기대비 감소 폭이 1/4분기(-4.4%)에 비해 크게 줄고 전기대비로 1/4분기(0.5%)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특히, 내구재 소비지출은 자동차세제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4%(전기대비 1% 증가) 감소에서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2%(전기대비 18.4%) 증가하였고, 2/4분기 서비스지출도 전년동기대비 0.7%(전기대비 1.6%) 증가하였다. 2009년 2/4분기 중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2.8%(전기대비 -1.1%)와 -0.3%(전기대비 0.8%)를 기록해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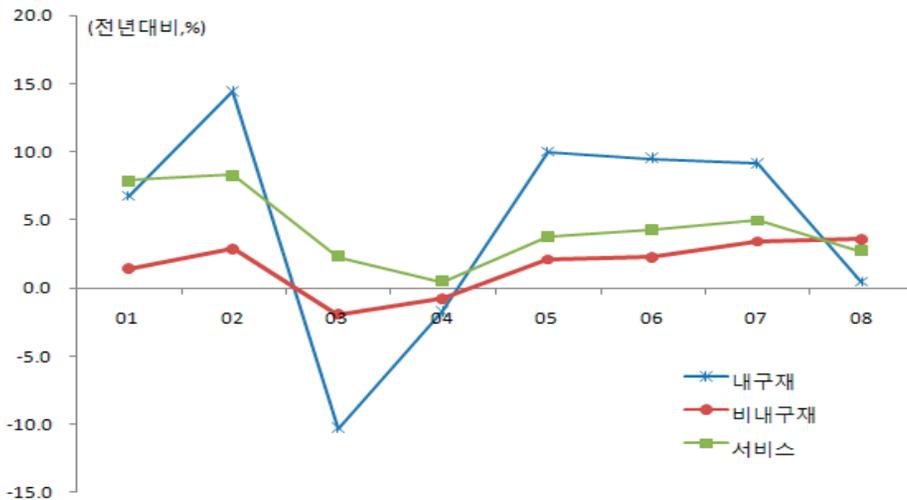
[표 II-47] 최근 민간소비 동향

(단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민간소비	5.1	0.9	4.0 (1.1)	2.3 (-0.2)	1.4 (0.0)	-3.7 (-4.6)	-4.4 (0.5)	-0.8 (3.6)	0.6 (1.4)
국내소비	4.7	2.5	4.9	3.2	2.6	-0.7	-1.8	0.3	-
-내구재	9.1	0.4	7.7	6.7	-0.3	-11.9	-14.0	3.2	-
-준내구재	3.2	-1.5	4.5	0.3	0.9	-9.8	-4.3	-2.8	-
-비내구재	3.4	3.6	6.0	2.8	3.9	1.6	-1.5	-0.3	-
-서비스	5.0	2.7	4.0	3.4	2.6	1.0	-0.2	0.7	-
국외소비	10.7	-27.3	-15.2	-20.4	-22.8	-53.1	-47.8	-26.7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52] 국내소비 부문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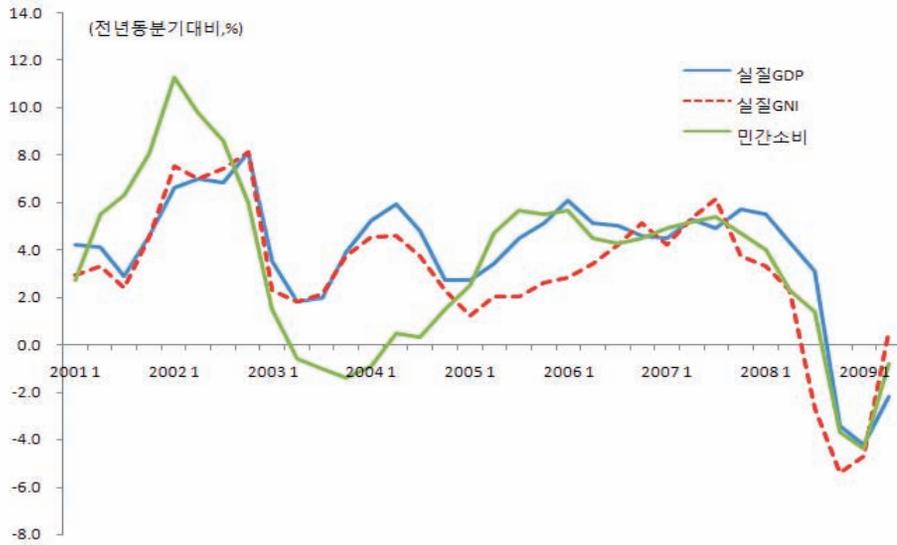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민간소비 결정요인

민간소비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①가계의 실질소득과 가계의 소비지출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②가계부채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민간소비가 둔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저성장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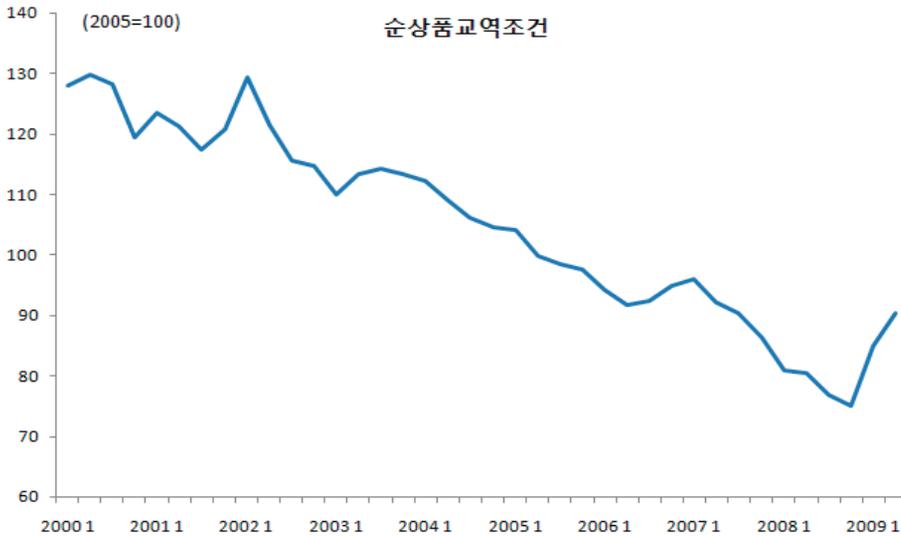
가계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우선 민간소비는 실질국내총생산(GDP)과 교역조건을 고려한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에 큰 영향을 받는다. 외환위기 이후 2001~2008년까지 실질GDP는 연평균 4.4%, 실질GNI 3.4%, 민간소비는 3.7% 증가했다. [그림 II-53]에서 보는 것처럼 2001~2003년 중 실질GDP와 실질GNI 증가율은 연평균 각각 4.6%와 4.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동기간 민간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실질GDP와 실질GNI 증가율을 조금 상회하였다. 그러나 2004~2006년 사이에 교역조건이 악화([그림 II-54])되면서 실질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4.6%인데 반해 실질GNI의 경우는 3.2%에 불과해 1.4%p의 괴리가 발생하였으며, 동기간 민간소비는 연평균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0년대 소비부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낮은 실질소득증가는 저성장과 교역조건악화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그림 II-53] 실질GDP, 실질GNI,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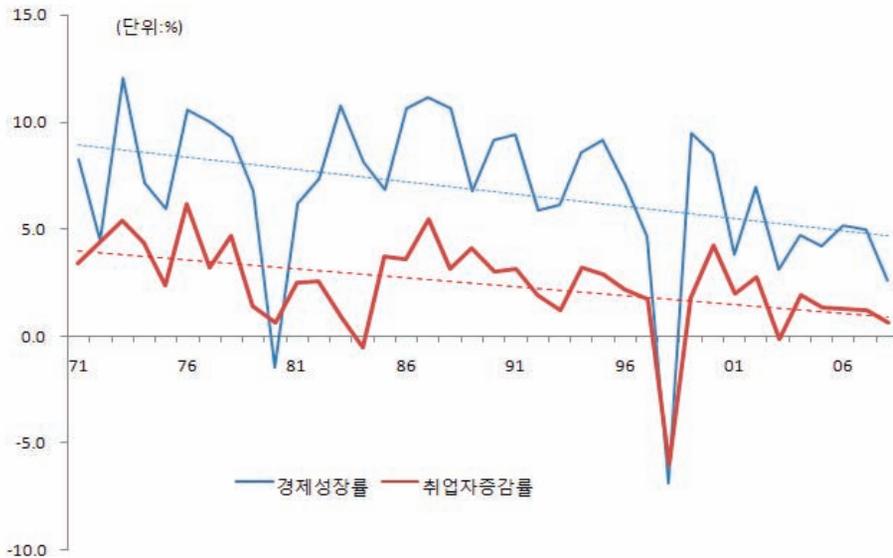
[그림 II-54] 교역조건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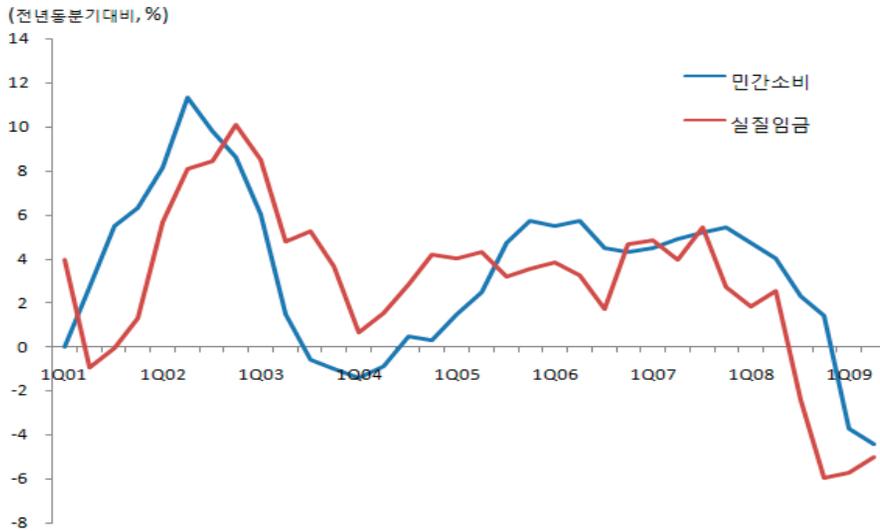
고용사정과 물가도 가계의 실질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크게 약화되어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7년 중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2.3%였으나 2001~2008년 중에는 1.2%로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최근의 동향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취업자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09년 상반기 취업자수는 수출감소와 내수침체의 여파로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심화되고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4만 여명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도 13만여명 감소(-0.6%)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해 소비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취업자수 감소와 더불어 높은 물가상승률(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 3.4%)의 영향으로 전산업평균 실질임금이 2008년 3/4분기 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전년동분기대비 2008. 3/4: -2.4%→ 4/4: -5.9%→ 2009. 1/4: -5.7%→ 2/4: -5.0%)하였다.

[그림 II-55] 실질GDP 및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II-56] 민간소비와 실질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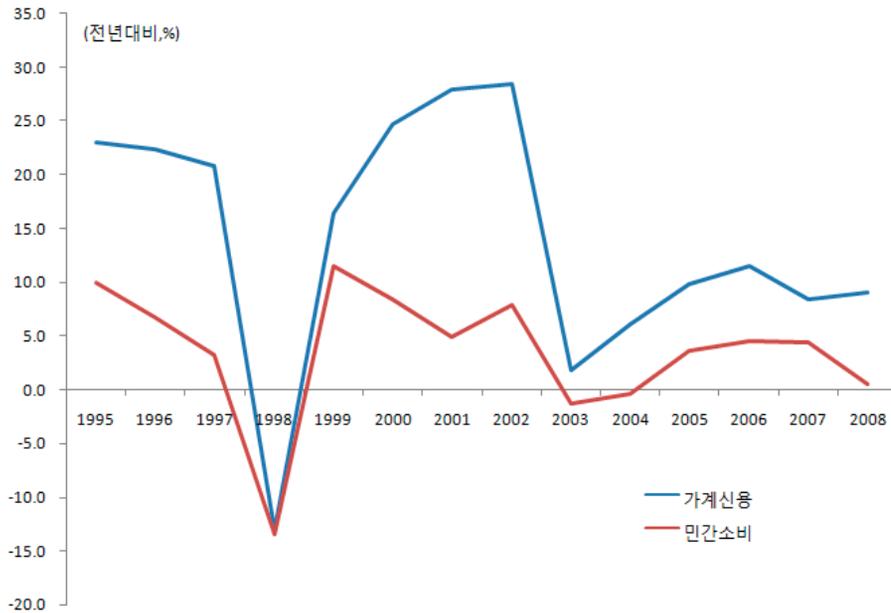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가계부채도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변동은 민간소비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가계신용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영향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부진하자 국내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 하였으며, 정부도 내수부진을 탈피하고자 소비 진작을 도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신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세 지속과 함께 부동산관련 대출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가계신용은 2000~2002년 중 연평균 27.1%의 급증세를 보였으며, 가계신용의 경상GDP대비 비중은 2000년 44.2%에서 2002년 60.9%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3년 이후 가계신용버블과 이의 경제적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가계신용이 조정과정에 접어들면서 한 자리수의

증가세로 둔화되었으나 2007년 가계신용의 GDP대비 비율은 64.7%까지 확대되었다. 2008년 들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9.1%증가하고, 가계신용의 GDP대비 비율은 67.2%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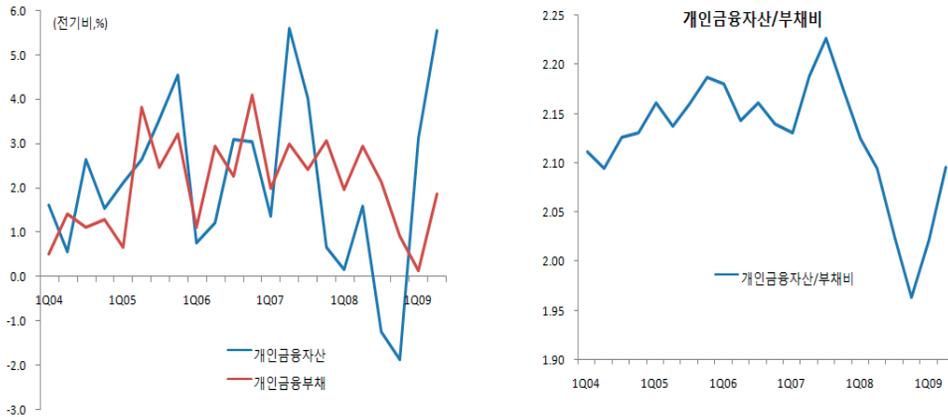
[그림 II-57] 민간소비와 가계신용 추이



자료: 한국은행.

개인금융자산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여 2008년 3/4분기 전분기대비 -1.3%, 2008년 4/4분기에는 -1.9%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 들어와 1/4분기와 2/4분기 각각 3.1%, 5.5% 증가하였다. 형태별로 보면 채권, 주식 및 출자지분, 단기저축예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개인금융부채 대비 개인금융자산 배율도 2008년 4/4분기에는 1.96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09년 1/4분기 2.02, 2/4분기 2.10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II-58]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추이(좌)와 자산/부채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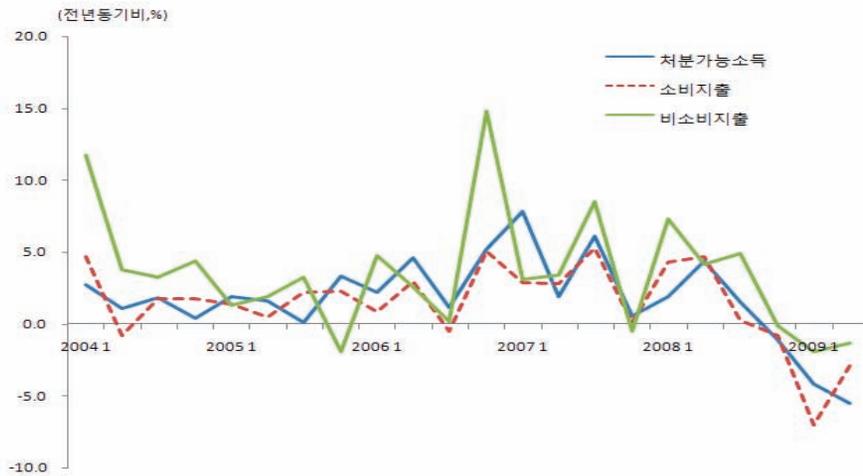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가계지출의 구성변화도 민간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¹⁰⁾로 구분되는바, 가계지출을 제약하는 비소비지출이 빠르게 확대되면 민간소비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0~2007년 기간 중 소비지출은 연평균 6.0% 증가한 반면 비소비지출은 연평균 8.5% 증가하여 소비지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지출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2000년 85.5%에서 2007년 82.7%로 하락한 반면,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14.5%에서 17.3%로 확대되었다.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확대된 데는 개인의 사회적 부담금이 커진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비소비지출 중에서 사회보험은 2000~2007년 기간 중 연평균 12.9% 증가하였으며, 조세와 공적연금도 동기간 중 각각 연평균 9.2%와 9.1% 증가하여 전체 소비지출의 증가세(6.0%)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비소비지출의 구성 항목이 전체 가계지출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조세는 지난 2000년 4.2%에서 2007년 현재 5.9%로 확대되었으며,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은 2000년 각각 3.0%와 1.7%에서 2007년 각각 3.5%와 2.7%로 커졌다. 이러한 사회보장 및 공적연금지출의 급증으로 인한 비소비지출의 확대는 가계의 소비지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사적송금 및 보조, 지급이자,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가계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1/4분기 가계수지는 전년동기대비 3.6% 개선(전국도시근로자 가구, 실질소득 기준) 되었으나 2/4분기 들어 -12.4%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2009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3.7%에서 2/4분기 -4.8%로 감소한 데 반해 동기간동안 소비지출은 1/4분기 -7.0%에서 2/4분기 -2.9%, 비소비지출은 -1.9%에서 -1.3%로 지출 둔화폭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그림 II-59] 전국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득 및 소비 추이



주: 1)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사적 송금 및 보조, 지급이자, 부담금 등.
 2)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3) 중기 민간소비 전망

2009~2013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0% 증가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 2010~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의 연평균(3.7%)보다 0.8%p 감소될 전망이다.¹¹⁾

11) 전망을 위해 사용된 모형과 주요 민간소비결정요인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 민간소비전망 모형]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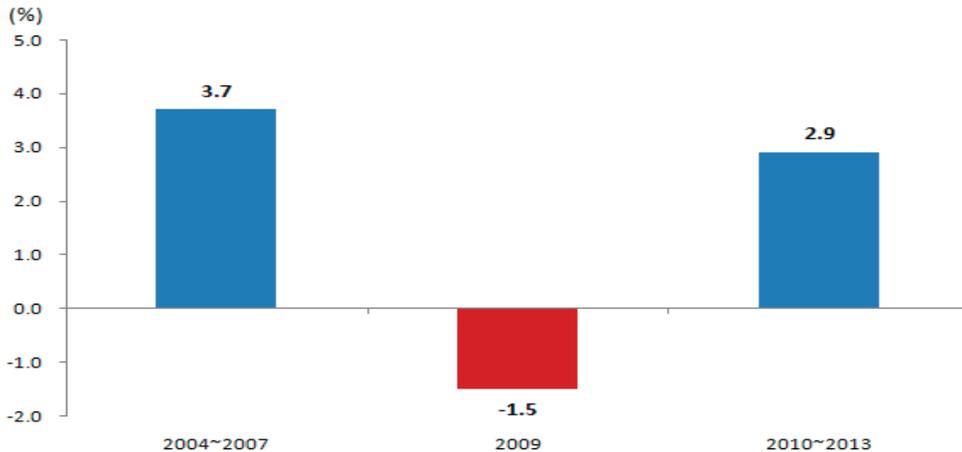
[표 II-48]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대비, %)

연도별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전5년 (04~08)	후5년 (09~13)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1.5	2.6	2.6	3.0	3.2	3.1	2.0	3.7	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60] 중기 민간소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향후 5년간 민간소비 부진의 중요한 요인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낮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구매력 증가를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2010~2013년 중 연평균 3%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전망 기간(2010~2013년) 중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0.8%로 2004~2007년(연평균 1.4%)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가 2010~2013년 중 연평균 2.6%로 비교적 안정

된다고 할지라도 명목임금상승률은 연평균 5% 내외를 기록해 실질임금상승률은 2.4% 정도로 지난 4년(2004~2007년) 중 연평균 실질임금상승률 3.5%보다 1.1%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가 예상과는 달리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자료: 민간소비전망 모형

민간소비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2000년 1/4분기 ~ 2009년 2/4분기 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을 시도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출처는 [표 II-49]에 요약되어 있다. 계절성이 있는 변수는 계절조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주택가격지수(HPI), 주가지수(SPI),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BR), 가계신용(HCD), 가계대출(HLD)은 모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다. 또한 대미 달러 환율은 양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으며, 통합재정상의 조세수입(TAX) 및 사회보장기여금(SCC)도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다. 전망을 위해서 주요 9개 변수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고려한 최소자승추정(LSE) 모형¹²⁾과 5변수(민간소비, 금리, 가계대출, 물가, 실질GNI)의 벡터자귀회귀(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12) 최소자승추정(LSE) 모형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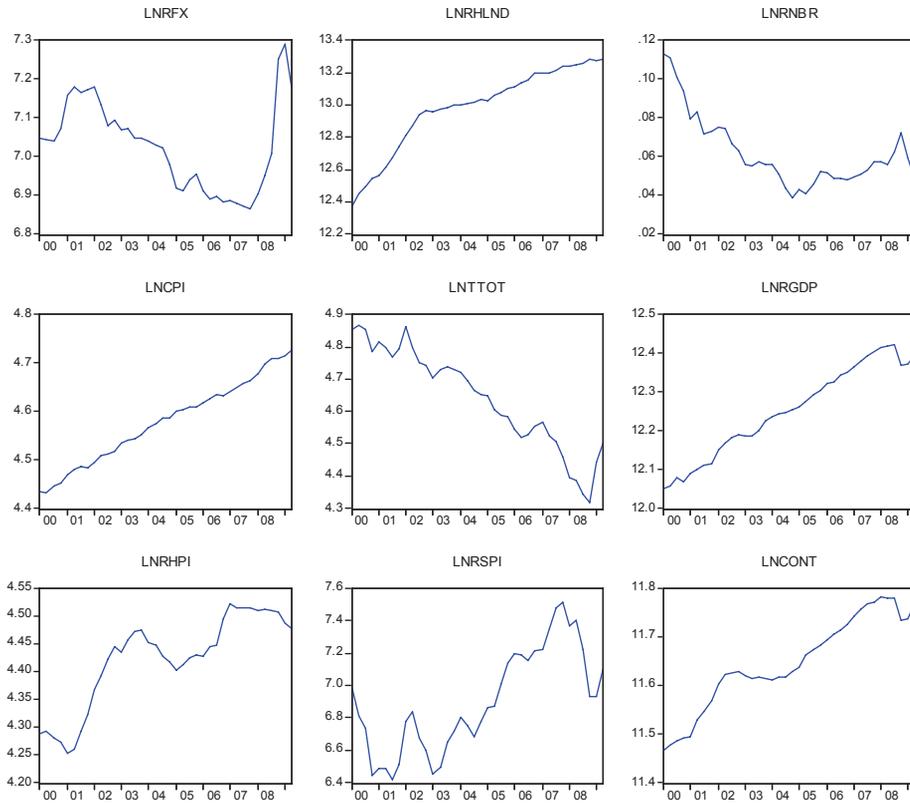
$$\begin{aligned} \log C_t = & -5.41 + 0.63 \log GDP_t - 0.03 \log SP_t - 0.37 \log HP_t + 0.15 \log HLD_t \\ & \quad (3.09) \quad (0.33) \quad (0.04) \quad (0.12) \quad (0.09) \\ & + 0.22 \log TOT_t - 0.04 \log RFX_t + 0.71 \log(1+R_t) - 0.20 \log CPI_t \\ & \quad (0.11) \quad (0.05) \quad (0.50) \quad (0.26) \\ & - 0.002 \log TXR_t + 0.006 \log SCC_t + 0.80 \log C_{t-1} \\ & \quad (0.02) \quad (0.01) \quad (0.22) \end{aligned}$$

$$R^2 = 0.99 / D.W. = 2.10$$

[표 II-49] 민간소비에 대한 주요 설명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출처
민간소비(CONT)	실질민간소비 계절조정치	한국은행 Kosis
국내총생산(GDP)	실질국내총생산 계절조정치	한국은행 Kosis
국민총소득(GNI)	실질국민총소득 계절조정치	한국은행 Kosis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100	한국은행 Kosis
주택가격지수(HPI)	주택가격지수를 CPI를 이용하여 실질화	국민은행
주가(SPI)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CPI를 이용하여 실질화	한국은행 Kosis
환율(FX)	명목대미 달러환율을 한국과 미국의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한국은행Kosis, 미국 FRB St. Louis Database
이자율(BR)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	한국은행 Kosis
교역조건(TOT)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2005=100)	한국은행 Kosis
가계신용(HCD)	가계대출+판매신용을 CPI로 실질화	한국은행 Kosis
가계대출(HLD)	가계대출을 CPI로 실질화	한국은행 Kosis
조세 수입(TAX)	통합재정상 정부조세수입을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기획재정부
사회보장기여금(SCC)	통합재정상 사회보장기여금을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기획재정부

[그림 II-61] 민간소비에 대한 주요 설명변수 추이



주: 모든변수는 로그를 취했으며 LNRFX:실질화환 대미환율, LNRHLD:실질가계대출, LNRNBR:실질이자율, LNCPI:소비자물가지수, LNTTOT:교역조건, LNRGDP:실질국내총생산, LNRHPI:실질주택가격지수, LNRSPI:실질주가지수, LNCONT:실질민간소비 등을 나타냄.

먼저 주요 설명변수와 민간소비의 시차상관관계를 살펴보면¹³⁾, 실질국내총생산(GDP)과 주가(SPI)는 민간소비와 동행하여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주택가격(HPI)은 민간소비를 2분기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HLD)은 1분기 후행하여 민간소비와 정(+)의 상관관계를, 환율은 동행하여 소비에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금리 상승은 미래소비에 대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을 상

13) 모든 변수는 로그값을 취한 것이며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를 사용해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사용하여 시차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증시커 현재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동분기 상관계수 값이 매우 적고 2분기 후에 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TOT)은 1기 선행하여 소비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0] 설명변수와 민간소비의 시차상관계수

	-3	-2	-1	동분기	+1	+2	+3
GDP	-0.09	0.10	0.44	0.72	0.63	0.37	0.13
HPI	-0.30	-0.03	0.24	0.51	0.67	0.69	0.62
SPI	-0.01	0.16	0.41	0.47	0.34	0.09	-0.12
FX	0.14	0.04	-0.15	-0.31	-0.23	-0.03	0.13
HLD	0.05	0.27	0.46	0.63	0.68	0.59	0.43
BR	-0.23	-0.18	-0.13	0.08	0.34	0.42	0.28
TOT	0.13	0.22	0.28	0.05	-0.24	-0.20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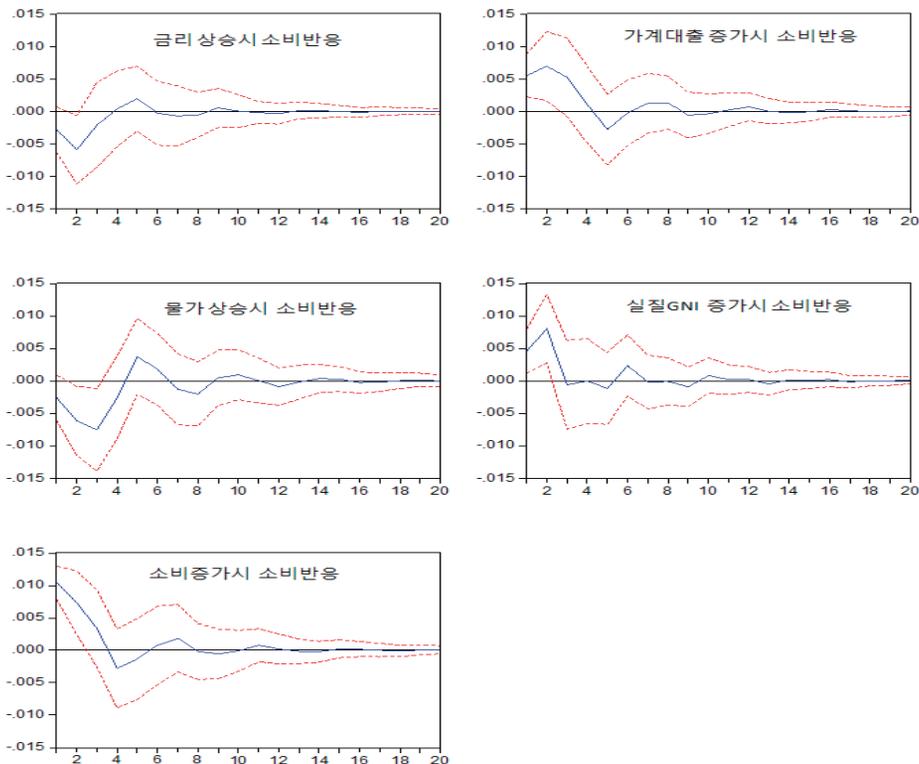
주: t기의 민간소비와 \pm t분기 설명변수의 상관계수임.

추정된 5변수 벡터자귀회귀(VAR) 모형을 통해 관련변수 충격에 대한 민간소비의 분기별 반응함수를 살펴보았다.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 검정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로그차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충격반응함수가 변수들간의 외생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콜레스키(Cholesky) 분해를 사용하는 대신 변수배열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¹⁴⁾를 사용하였다.

1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Pesaran and Shin(1998)과 E-views User's Guide를 참조하라.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질금리 상승은 2분기에 걸쳐 유의하게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시에는 3분기에 걸쳐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시에는 3분기에 걸쳐 소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며, 교역조건을 고려한 실질국내총생산도 2분기에 걸쳐 소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2010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5%대에서 유지되고, 환율과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여줄 경우에도 교역조건에 정(+)의 효과를 미쳐 실질GNI가 상승하고 민간소비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62] 주요 설명 변수가 대한 소비에 미치는 효과



다. 건설투자

(1) 중기 건설투자 여건

(가) 경기활성화수단으로 재부각 되고 있는 건설투자

2000년대 들어 건설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야기했던 요인은 바로 정부정책이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환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자 참여정부 당시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다. 참여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증과세,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강화 등 조세와 금융 등 다각도의 규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성장동력으로써 역할이 소멸되고 전체 GDP에서의 비중도 2006~2008년 기간 중 축소되는 추세였다([표 II-51]).

[표 II-51] GDP에 대한 건설투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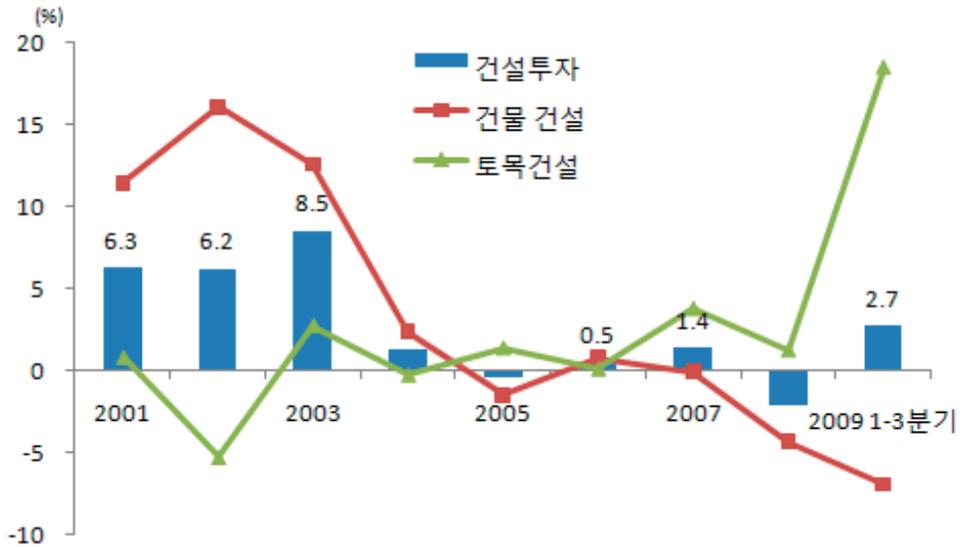
(단위: %)

	2000	2003	2006	2007	2008	2009 상
건설투자 비중	0.181	0.193	0.172	0.166	0.159	0.168

자료: 한국은행.

그런데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었는데 특히 어느 부문보다도 건설시장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건물건설투자가 2008년 전년대비 4.3% 감소하고 이중 주택건설투자는 전년대비 7.2%나 감소하였다. 2009년 상반기에도 건물건설투자가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하여 건설시장이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63] 건설투자와 부문별 추이



주: 2009년 건설투자는 1/4~3/4분기 평균, 부문별(건물, 토목)은 상반기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기활성화를 내세우며 출범한 현정부는 경기급락을 완화하고 민간건설시장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건설시장부양책을 추진하였다. 미분양주택이 기록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건설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용으로 전용하는 한편 토목투자를 적극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 말 정부는 경인운하건설 재개, 도로·철도건설투자 등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건설투자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경기부양을 위하여 정부는 2009년 SOC투자예산을 전년대비 26% 확대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대표되는 녹색뉴딜사업과 광역경제권 30대선도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정부가 단순히 건설투자를 경기부양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이후에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나) 대규모 토목건설투자의 추진

정부는 경기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대규모 국토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광역경제권에 대한 30대선도프로젝트,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대표되는 녹색뉴딜사업을 착수하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총 152조원이 소요되는 30대선도프로젝트는 2009년 4.4조원이 투자된 데 이어 2010~2013년 중 투자액은 연평균 20%씩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다([표 II-52]). 투자재원으로는 국고자금이 117조원으로 전체의 7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2013년 중에는 4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30대선도프로젝트에 국고자금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동사업의 상당 부분이 고속도로, 새만금사업, 호남고속철도 등 SOC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II-52] 30대선도사업에 대한 중기 투자계획

(단위: %)

사업 지역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09 예산	2010 정부안	2011	2012	2013
전체	전체(A)	1,520,325 (증가율)	43,985 (-)	58,607 (33.2%)	58,753 (0.2%)	79,311 (40.0%)	84,244 (6.2%)
	국고(B)	1,168,842	36,599	35,665	25,966	35,404	38,009
	기타	351,483	7,386	22,942	32,787	43,907	46,235
	비중(B/A, %)	76.9	83.2	60.9	44.2	44.6	45.1
수도권 (3건 ¹⁾)	전체	210,311	6,818	7,435	11,512	13,000	11,900
	국고	145,685	4,038	2,451	3,479	4,787	3,837
	기타	64,626	2,780	4,984	8,033	8,213	8,063
충청권 (5건 ²⁾)	전체	459,312	10,271	14,162	8,998	12,938	12,437
	국고	368,713	8,834	10,408	2,845	3,612	3,915
	기타	90,599	1,437	3,754	6,153	9,326	8,522
호남권 (5건 ³⁾)	전체	359,746	19,671	23,216	19,339	24,581	26,748
	국고	301,173	18,351	16,266	9,804	13,368	15,615
	기타	58,573	1,320	6,950	9,535	11,213	11,133
동남권 (5건 ⁴⁾)	전체	145,998	1,570	1,805	4,941	10,337	12,956
	국고	108,273	1,570	1,795	3,229	5,831	7,318
	기타	37,725	0	10	1,712	4,506	5,638
대경권 (5건 ⁵⁾)	전체	207,709	2,028	6,013	5,717	7,527	9,048
	국고	144,141	2,008	2,783	3,310	4,069	4,264
	기타	63,568	20	3,230	2,407	3,458	4,784
강원권 (4건 ⁶⁾)	전체	116,555	3,393	5,484	7,472	10,778	11,155
	국고	81,291	1,703	1,697	3,137	3,737	3,060
	기타	35,264	1,690	3,787	4,335	7,041	8,095
제주권 (3건 ⁷⁾)	전체	20,694	234	492	774	150	0
	국고	19,566	95	265	162	0	0
	기타	1,128	139	227	612	150	0

- 주: 1) 제2외곽순환도로, 원사-대곡복선전철, 인천지하철2호선 등.
 2) 행정복합도시, 서해선복선전철, 대전-행정도시-오송신교통수단 등.
 3) 새만금개발, 여수엑스포기반시설건설, 호남고속철도 등.
 4) 경전선, 부산외곽순환도로 등.
 5) 고속도로(상주-영덕등),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6) 원주-강릉 철도등.
 7) 제주해양과학관 등.

자료: 국토해양부.

또한 정부가 성장동력으로까지 확장하며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 바로 녹색뉴딜사업이다. 녹색뉴딜사업도 2009~2012년 중 총투자액이 50조원에 이르는 데, 그 중 건설 관련 투자액은 약 40조원 수준이다([표 II-53]). 녹색뉴딜사업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 투자액 중 약 72%가 국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표 II-53] 녹색뉴딜 관련 건설투자

(단위: 억원)

	재원	총투자액	2009	2010	2011	2012
전체	국비	375,411	40,677	104,285	128,673	101,776
	지방비	52,724	8,402	16,400	17,257	10,665
	민자	72,357	13,360	21,671	21,471	15,855
	계	500,492	62,439	142,356	167,401	128,296
건설 관련	국비	292,393	28,220	84,804	104,369	75,000
	지방비	40,683	5,471	13,141	14,334	7,737
	민자	70,368	13,161	21,273	20,874	15,060
	계	403,444	46,852	119,218	139,577	97,797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2009년 경제전망”, 2009. 4.

특히 개별사업으로 가장 비중이 큰 4대강살리기사업은 총사업비(22.2조원) 중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15.5조원이 토목건설투자에 반영되는 부분이다([표 II-54]). 녹색뉴딜 및 4대강살리기사업이 2010~2011년 중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토목건설투자도 이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표 II-54] 4대강살리기사업 투자일정

(단위: 억원)

재원	2009	2010	2011	2012	계
국비	9,000	35,000	30,000	1,000	75,000
수자원공사	0	32,000	38,000	10,000	80,000
총액	9,000	67,000	68,000	11,000	155,000

주: 국토해양부에 해당하는 투자예산.

자료: 국토해양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야심찬 SOC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GDP기준 실질토목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유는 중기적으로 정부의 SOC투자예산의 증가규모가 크지 않다. 앞서 30대선도프로젝트사업, 녹색뉴딜사업 추진에는 SOC에 투자되는 국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분야에는 국비투입이 2010~2013년 중 연평균 2.0% 증가하도록 수립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동기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평균 2.6%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액기준으로는 오히려 투자예산이 감소하는 결과이다. 이 때문에 30대선도프로젝트와 녹색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위해 여타 SOC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64] 정부의 중기 SOC투자계획



자료: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둘째는 이미 수립된 정부의 SOC투자에 투입될 재원의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경상GDP성장률을 전년대비 6.6%, 2011~2013년에는 7.6%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세수입을 2010~2013년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전망을 기초로 SOC에 대한 국비투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경상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SOC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SOC투자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경상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SOC투자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55]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의 중기 경상GDP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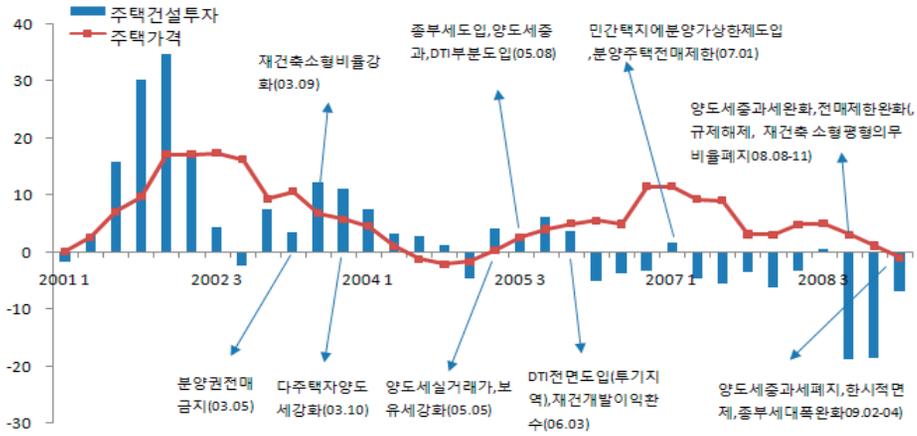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국회예산정책처	1.9	6.4	6.1	6.5	6.9
정부	1.1	6.6	7.6	7.6	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다) 주택시장규제와 주택투자

참여정부는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재건축 시 중소형의무비율 부과, 총부채상환비율 도입(DTI) 등 부동산거래억제와 투자 수익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던 2007년부터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이었다.

[그림 II-65] 2000년 이후 주요 주택시장규제, 주택가격, 주택투자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0년 이후 규제와 주택투자, 주택가격의 동향으로부터 몇 가지 사항을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었는데 첫째, 주택투자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동반할 때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택투자의 수익성과 관련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기대투자수익이 높아져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사업추진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강력한 주택시장규제를 추진하게 되면 주택가격보다 주택투자가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2006년~2007년 기간 중 비교적 높은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었음에도 주택투자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여도 시장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추진과정이 복잡해지게 되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참여정부가 주택수요의 억제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세 등 매우 강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였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대표되는 금융규제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수요에는 기대가격(혹은 기대수익)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은 신속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 우리나라 주택수요가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을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연관하여 살펴보자. 현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 및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참여정부에 실행되었던 주택 시장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 허용, 전매 제한기간의 단축,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경감, 수도권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한시적 폐지 및 신축주택매입 시 양도세 면제 혹은 감면, 부부간 증여 허용, 재건축절차의 간소화 등 주택거래 용이성과 주택투자 수익성을 높이는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주택투자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2000년대 초반~중반에 서와 같이 장기급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첫째, 현 정부가 전반적인 기존 주택의 가격의 상승은 억제한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주택규제완화 및 저금리에 힘입어 2009년 2/4분기부터 서울 재건축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은 결국 가장 강력한 통제효과가 증명된 수단을 동원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2009년 9월과 10월에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강남3구에서 수도권)적용토록 한 것이다.¹⁵⁾ 이를 통해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주택가격의 급등은 원치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둘째, 미분양주택 물량이 연초에 비해 다소 축소되기는 했지만 7월말 현재 전국 14만호, 수도권 2.4만호로 여전히 많은 물량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조성한 인기택지에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강화하고 있어서 이것도 주택수요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정부는 2009년 중에 2차에 걸쳐 그린벨트지역 등에 총 약 11만호의 주택공급(보금자리주택은 7.9만호)을 발표하였는데 강남에 11.3만호가 공급되는 등 인기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계획되고 있다.¹⁶⁾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양물량이 사전예약제로 청약은 받고 있는데 사전예약제 청약은 실제 주택공급에 1년 정도 앞서 분양되는 효과가 있어 기존

15) 은행의 경우 투기지역(강남3구)에 대해서만 대출금액에 따라 40~50%를 적용했던 것을 추가로 서울(투기지역 제외)·인천·경기지역으로 확대하여 50~60%를 적용하였다.

16) 서울 강남에만 분당(9.8만호) 보다 큰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기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를 완화시킬 것이다. 넷째, 경기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면 결국 출구전략이 실행될 것이며, 이는 주택수요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¹⁷⁾하고 있어서 출구전략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주택대출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일련의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폭이 크기는 하지만 2000년대 초반과 같은 강한 주택가격 상승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주택건설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주택공급

정부가 주택공급을 주도하고 나선 이유는 주택시장 규제에 뒤이어 나타난 민간부문에서의 공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주택문제를 주로 제2기 신도시건설에서 찾고자 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신도시건설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11개 지역에서 총 62.6만호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아산과 대전에서도 8.9만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신도시가 추진 중이다.

[표 II-56] 제2기 신도시 건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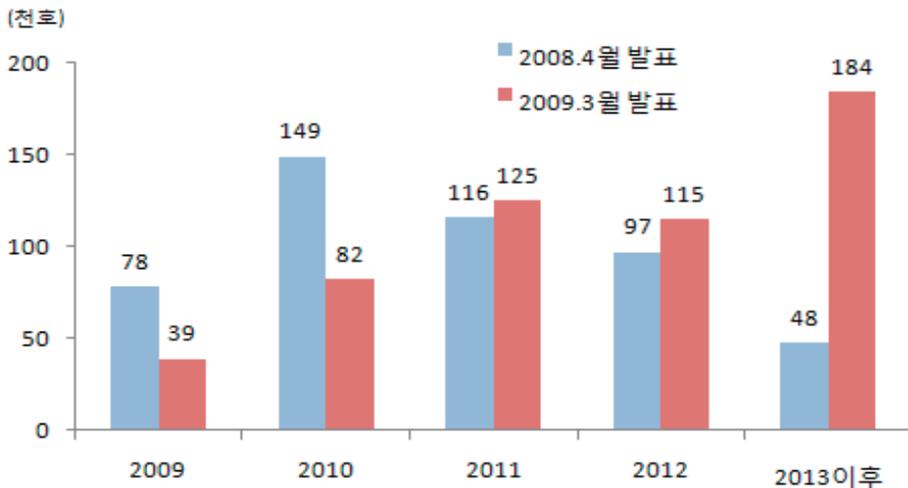
	지역	면적	공급가구 (수용인원)	사업기간
수도권	판교, 화성동탄1·2, 김포, 위례(송파), 파주(운정), 평택, 양주(옥정·회천), 인천(검단), 오산(세교), 광교	136.7km ²	62.6만가구 (165.1만명)	2001~2015년 이후
지방	아산, 대전	27.4km ²	8.9만가구 (26.5만명)	2003~2015년

자료: 국토해양부.

17) 가계주택담보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CD유통수익률에 2%후반부터 최고 4%까지 더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도시에서의 주택공급은 정부가 2009년 3월에 발표한 일정상으로 보면 2011~2012년에 각각 12.5만호, 11.5만호가 공급되어 가장 많은 주택이 분양될 전망이다. 이는 2012년에 건설투자에 반영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유의할 점은 신도시 주택공급이 2008년 4월에 발표된 공급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2009~2010년 중 주택공급은 계획에 비해 축소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공급량을 확충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이다([그림 II-66]).

[그림 II-66]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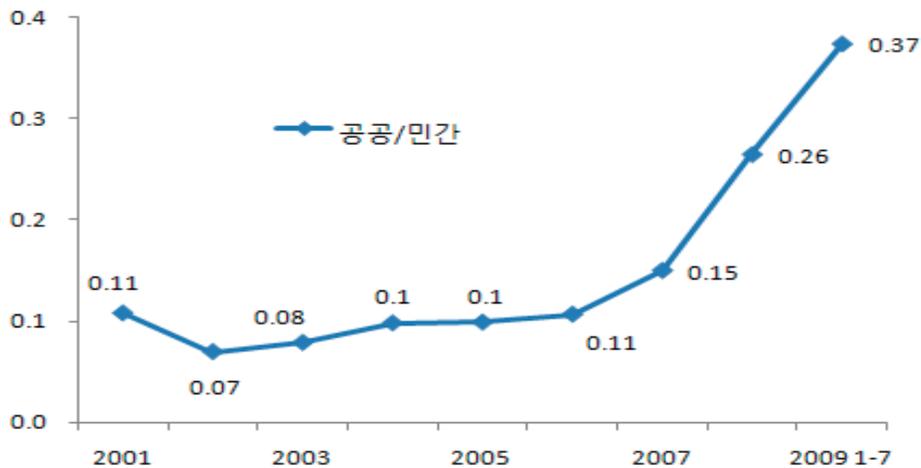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참여정부의 주택공급이 신도시건설방식이라면 현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개발,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해제, 신도시건설 등을 통해 확보된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의 주택(공공 및 민간 포함)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중 2009~2012년에 보금자리주택을 총 60만호(연평균 1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투자와 관련

하여 보면 신도시 등 공공택지(20만호) 및 도심(재개발, 재건축, 8만호) 등 기존 택지(2012년까지 총 20만호)는 이전에 공급계획이 수립된 사안이어서 사실상 공공임대를 보금자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지만 그린벨트에 공급되고 보금자리주택(2012년까지 총 32만호)은 신규 주택투자증대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공공택지 혹은 그린벨트에 공급하는 공공주택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0만호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정부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이 원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택공급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 주택건설 수주액에 대한 공공부문의 비율이 2003년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2007~2009년 기간 중 상승세가 뚜렷하여 2009년에는 2006년에 비해 비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그림 II-67]). 이 같은 현상은 주택 관련 규제,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부족, 주택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민간기업들의 주택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림 II-67] 주택건설의 공공수주액에 민간수주액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2) 중기 건설투자 전망

최근 현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완화 및 저금리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낮은 분양가,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그린벨트 내 위치함에 따라 인기가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잠재적 주택 수요¹⁸⁾가 양호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주택투자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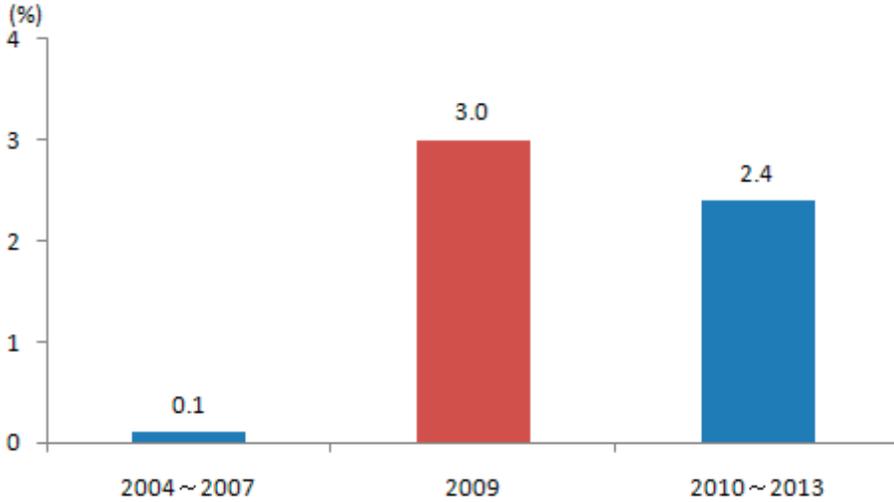
신도시건설에 따른 주택투자반영은 2011~2012년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규제완화에 힘입은 재건축·재개발에도 동기간 중 가장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정부의 핵심적 주택정책인 도심내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이중 일부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계속될 것이다.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혜택의 시한이 2009년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2009년 4/4분기에 대규모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¹⁹⁾ 이 때문에 2010년에도 주택건설투자가 뚜렷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건설의 경우에는 4대강살리기사업(총사업비 22.2조원)이 2010~2011년에 집중 투자될 것이며,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SOC 중심인 30대선프로젝트도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추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 추진에 나설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간(2010~2013년) 건설투자는 연평균 2.4% 증가하여 지난 4년(2004~2007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8)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추계가구의 추세에 따르면 주택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가구주 연령대 31세~60세인 가구가 2015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12년까지 주택수요는 연간 42~43만호(아파트 33~34만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하여 매년 3~5만호의 주택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10월 19일).

19) 언론 및 정보업체(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4~3/4분기 중 12만 6,245호가 공급됐으나 4/4분기에만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림 II-68] 중기 건설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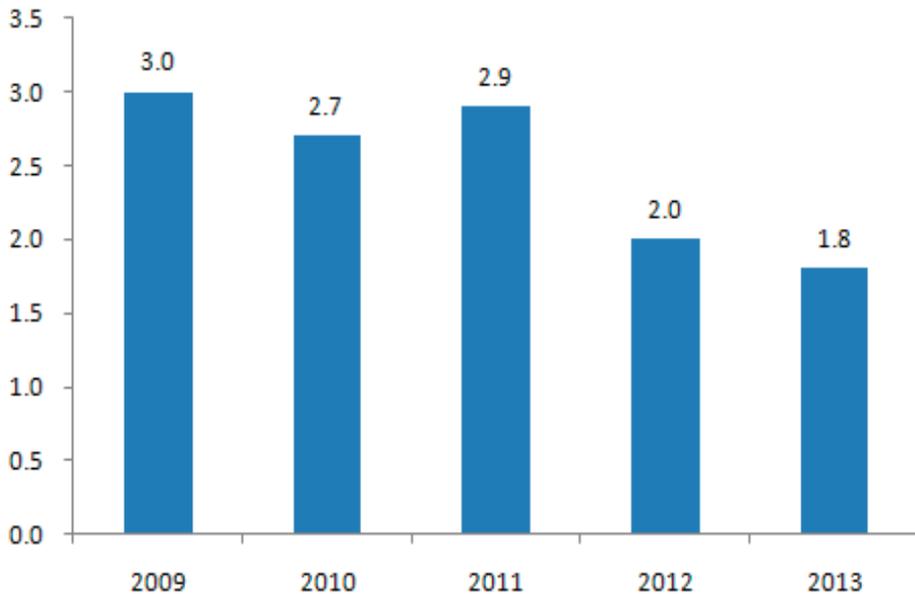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다만 주택경기의 회복과 정부의 SOC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를 선도할 정도를 강한 증가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명목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여 SOC투자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의 SOC투자재원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녹색뉴딜사업 및 30대선도프로젝트사업 이외의 SOC투자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부문에서도 매년 연평균 40~50만호 범위에서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매년 현저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여정부 당시 강력했던 규제와 2008년 이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는 효과로 주택투자가 2012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주거용 건물투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위기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기관들의 기피로 인해 대형사무실건물, 고층주상복합건물의 건설에 필수적인 PF(Project

Financing) 크게 위축되어 있고 낮은 성장으로 인해 기업의 공장건설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균형발전계획²⁰⁾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물류 등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한 잠재수요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금융부문이 안정되면 건설투자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전체 건설투자증가율은 2011년 2% 후반까지 상승하다 2012~2013년에는 2.0% 내외의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림 II-69] 중기 건설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및 자립형 지방화, 신행정수도 건설 등을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 특별법의 제정, 균특회계의 설치 등 제도를 정비하며 국토균형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에 힘입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의 행정 및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기능도시들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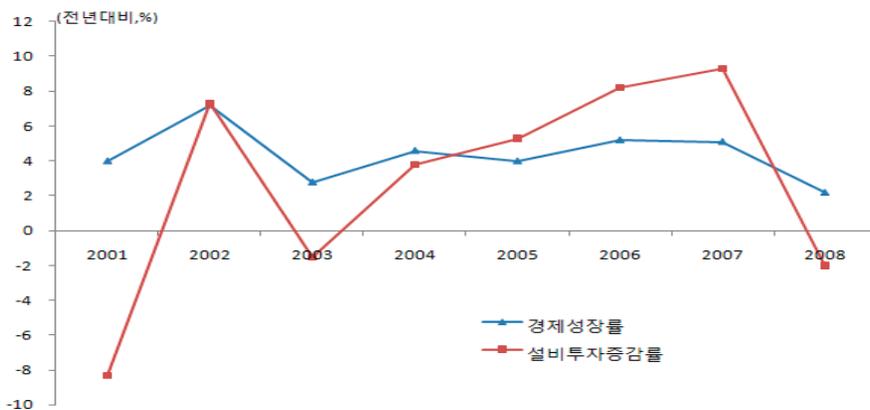
라. 설비투자

(1) 설비투자 동향

2000년대 들어 연도별 설비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1~2003년에는 설비투자의 연평균증가율이 -0.8%로 동기간 평균 경제성장률(5.0%)을 하회하는 등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4~2007년 중 설비투자는 내수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동기간 평균 경제성장률(4.7%)을 상회하여 연평균 6.7%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내수회복과 함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설비투자는 각각 8.2%, 9.3%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설비투자 동향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설비투자는 2008년 4/4분기(전년동기대비 -14.0%)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2.0% 감소한데 이어 2009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3.5% (계절조정전기대비 -11.2%), 2/4분기에는 -15.9%를 기록하여 3분기 연속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들어 2001년 세계 IT경기 침체로 인한 해외 수요감소에 기인한 투자위축(-9.0%), 2003년 카드사 부채 문제로 인한 내수 부진에 기인한 투자부진(-1.2%)에 이은 세 번째 설비투자 감소이다.

[그림 II-70]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표 II-57] 최근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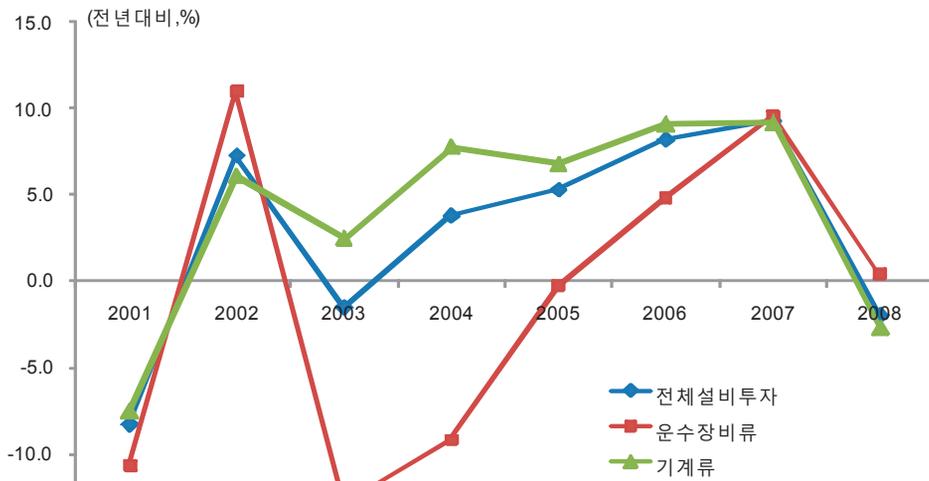
(단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설비투자(국민계정)	93	-20	1.5	1.1	4.3	-14.0	-23.5	-15.9	-8.7
(계절조정전기비)			(-0.4)	(0.4)	(0.2)	(-14.2)	(-11.2)	(10.1)	(8.9)
- 운수장비	96	0.4	12.2 (4.3)	5.1 (-2.7)	-3.6 (-7.3)	-9.9 (-4.1)	-21.8 (-9.9)	-3.2 (21.2)	-
- 기계류	92	-2.7	-1.2 (-1.7)	-0.1 (1.3)	6.5 (2.4)	-15.3 (-16.9)	-24.0 (-11.6)	-19.6 (6.7)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71] 자본재 형태별 설비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 설비투자가 급감한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부진에 빠지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내수(최종소비지출+총자본형성-재고)가 2008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전년동분기대비 -3.8% → -4.0% → -0.8%)하고 수출도 2008년 11월 이후 2009년 9월 현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 통관기준: 2008년 11월 -19.5% → 2009년 9월 -6.6%)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설비투자 수요 여건과 불확실성의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보수화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급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중기설비투자 결정 요인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수요측면과 비용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내수나 수출이 증가하거나 미래의 경기상황에 대한 기업의 전망이 좋아 기업의 투자심리가 호전될 때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비용측면에서 보면 투자기회비용인 금리, 자본재 상대가격, 수출과 수입자본재 가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등의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최근의 정체된 설비투자의 요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설비투자행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²¹⁾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구조적 변화 요인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IT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반도체 및 이동통신 산업 등의 IT산업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심화되고,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투자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5대 주력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산업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40%를 상회하였으나 외환위

2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송태정, “기업투자 결정요인 변화와 향후 전망”, LG경제연구원(2000), 임경목, “기업의 설비투자행태 변화분석”, 한국개발연구원(2005), 김성한·오승곤, “국내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변화분석”, 산은조사월보, 제599호(2005), 김성한,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동향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617호(2007) 등을 참조하라.

기 이후 34%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일어난 중요한 설비투자의 구조변화요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의 급격한 증가이다.

[표 II-58]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달러, 개, %)

	1997	2000	2003	2005	2006	2007
해외직접투자 (A)	37.6 (-16.4)	51.1 (53.8)	41.6 (8.5)	67.9 (10.7)	109.6 (61.3)	203.5 (85.7)
신규법인수	1,340 (-9.0)	2,090 (91.6)	2,810 (12.7)	4,410 (16.7)	5,205 (18.0)	5,633 (8.2)
해외직접투자/ 투자자산증가액	17.0	- 3	60.4	15.6	21.1	33.6
해외직접투자/ 유형자산증가액	6.7	84.7	25.3	20.7	33.0	52.4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해외직접투자액(달러기준)을 연평균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계산.

3) 투자자산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음수(-)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2008) 「기업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2005년 연평균 52억 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05년 이후 모든 업종에서 빠르게 늘어나 2006년 109.6억 달러(전년대비 61.3% 증가), 2007년 203.5억 달러(전년대비 85.7%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신규법인수도 2007년 5,633개로 5년 전인 2003년(2,810개)에 비해 100%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중 해외직접투자액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투자자산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6%, 유형자산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4%에 달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액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10대그룹의 매출

액 및 영업이익의 해외 발생비중도 2007년 중 각각 45.5%, 15.3%로 2000년에 비해 각각 18.0%p, 8.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9] 주요 10대그룹 국내외 매출 및 영업이익¹⁾ 비중 추이

(단위: 구성비, %)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국내	72.5	61.3	54.4	55.2	55.3	54.5
	해외	27.5	38.7	45.6	44.8	44.7	45.5
영업이익	국내	93.1	94.8	93.1	93.5	90.8	84.7
	해외	6.9	5.2	6.9	6.5	9.2	15.3

주: 1)순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발생지역 비중(해당지역/(국내+국외))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2008)

세 번째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행태변화이다.²²⁾ 외환위기 기간동안 혹독한 구조조정과정을 경험한 기업들은 과거의 공격적인 증설투자과 신규사업진출과 같은 설비투자행태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안정적인 사업에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기조를 정착시켰다. 또한 선제적인 설비투자의 위험성을 인식한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시행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외부자금보다는 내부자금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68%에 달하던 설비투자의 외부자금조달 비중이 2008년 상반기 현재 28.9%까지 축소되었으며, 제조업의 경우 그 비중이 13.0%에 불과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행태는 금리가 하락하면 금융조달비용이 절감되고 내부수익률이 증가하는 효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관계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22)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오승곤·김성환, “최근 국내설비투자 결정요인의 변화와 비대칭적 영향분석”, 산은경제연구소(2007), 임경묵,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 한국은행(2008. 8), “수익변동성 확대와 설비투자 위축”,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 제 30권 (2008) 등을 참조하라.

(3) 중기설비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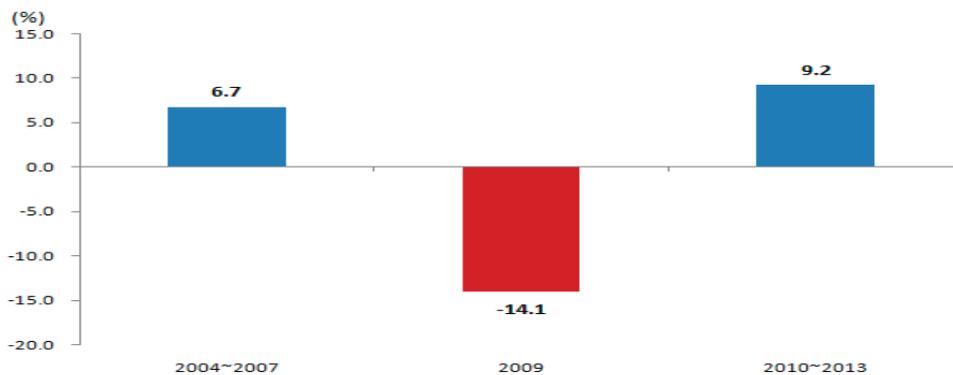
위와 같은 두 모형을 토대로 전망한 결과 향후 5년 설비투자는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5년(2004~2008년) 평균 설비투자증가율 4.9%에 비해 0.4%p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기인 2009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9.2% 증가해 위기 전 4년(2004~2008) 평균 6.7%에 비해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8.4%로 2009년 중에는 전년대비 14.1% 감소하고, 2010년 중 설비투자는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부터 경기회복이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1999년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빠른 설비투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과가 약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가 7.5%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60] 중기 설비투자 전망

연도별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14.1	9.8	7.5	9.0	10.5	4.9	4.5	6.7	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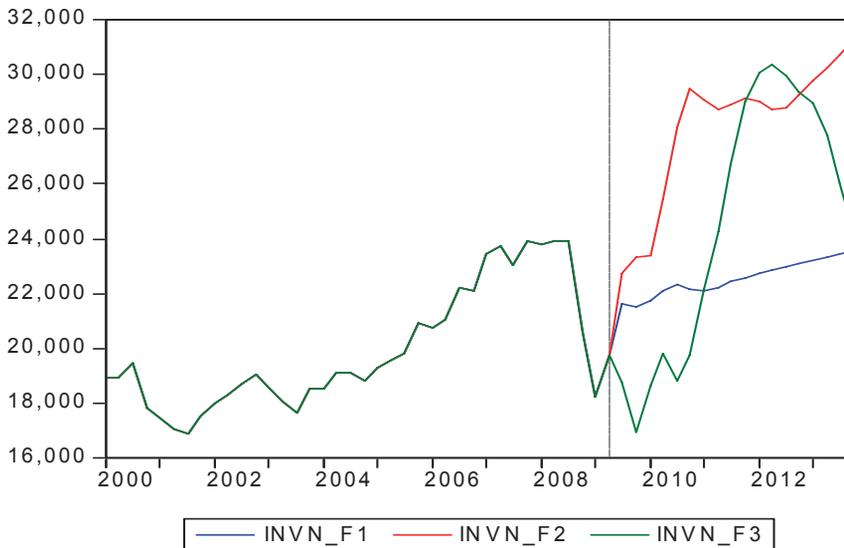
[그림 II-72] 중기 설비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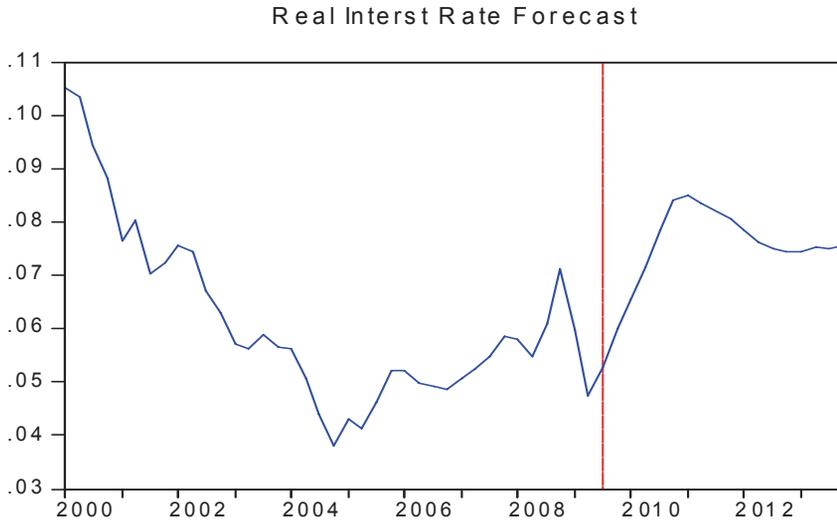
2012년과 2013년의 설비투자가 각각 9.0%와 10.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II-73]에서부터 [그림 II-78]까지는 전망에 사용된 벡터오차수정모형이 예측한 금리, 환율, 주가, 국내총생산, 자본재상대가격이 묘사되어 있다. 모형에 의하면 금리는 2011년 2/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설비투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환율도 2010년 4/4분기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중반까지 상승하다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2010년 상반기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다 2012년 상반기까지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본재상대가격은 2011년 하반기까지 빠르게 하락하다가 2013년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과 2013년의 국내총생산도 투자수요 자극하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73] 예측모형의 시나리오별 설비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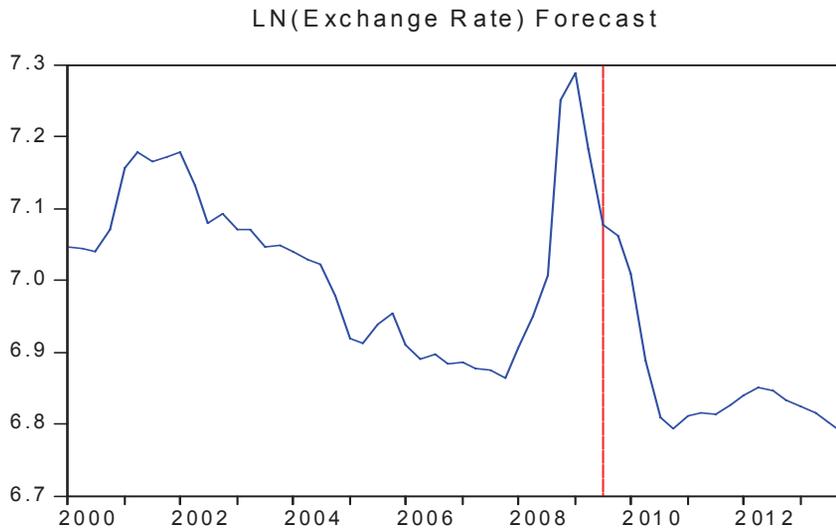


주: INV_N_F1은 단순 5변수 VAR(2)의 설비투자 예측치이고, INV_N_F2와 INV_N_F3는 6변수 VECM(2) 모형의 시나리오별 예측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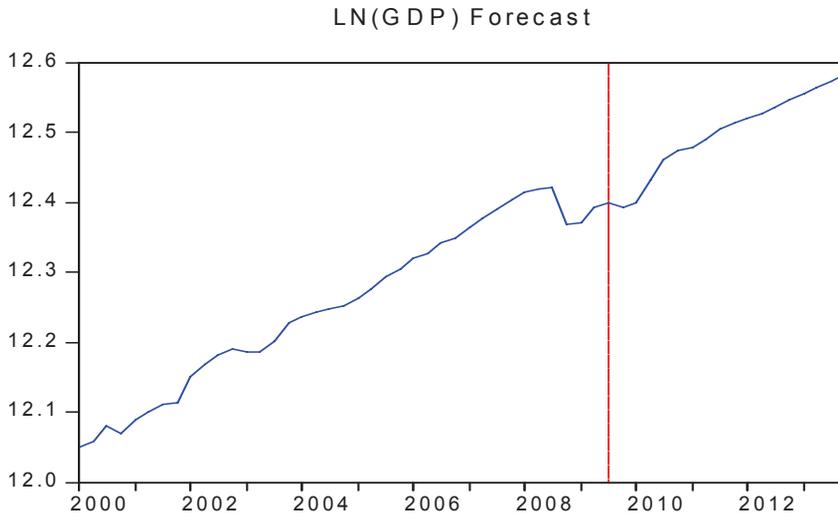
[그림 II-74] 벡터오차수정모형의 금리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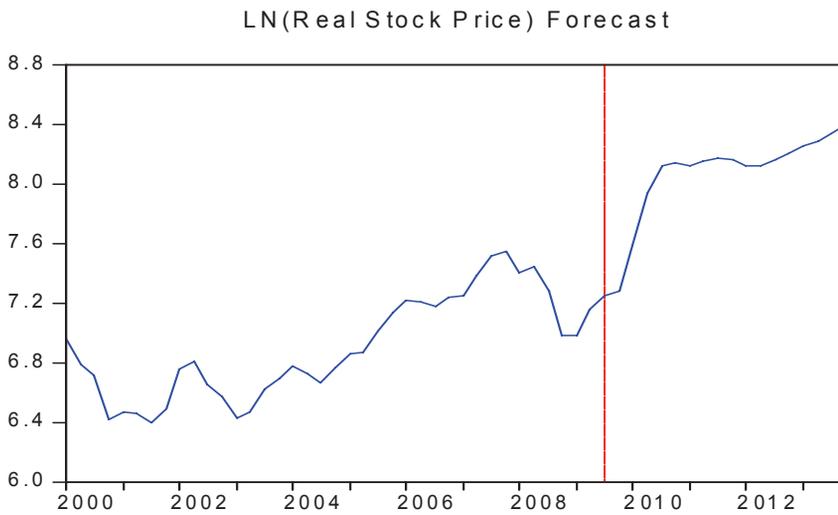
[그림 II-75] 벡터오차수정모형의 환율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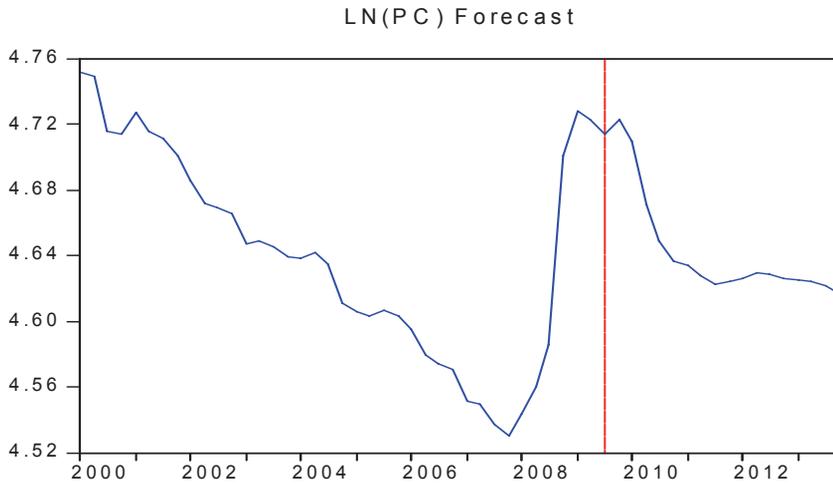
[그림 II-76] 벡터오차수정모형의 GDP 예측치



[그림 II-77]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주가 예측치



[그림 II-78]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자본재상대가격 예측치



참고자료: 중기설비투자 전망 모형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설비투자행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분석에서는 벡터자귀회귀(VAR) 모형과 변수간의 장기균형관계를 고려한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모형에 기초하여 전망을 시도하였다. 명목가격변수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화 하였으며, 2000년 1/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망에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출처는 [표 II-61]에 정리되어 있다.

설비투자 수요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는 국내총생산(GDP)과 제조업 가동률지수(MOP) 등을 포함시켰다. 주가(SP)는 경기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설비투자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자율과 자본재상대가격은 투자비용요인으로, 환율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의존형 개방경제에서 수출수요과 수입자본재 가격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를 고려하여 외국인직접투자액(FDI)과 해외직접투자액(ODI)의 차액인 자본유

출입(NCF), 설비투자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ITR)을 포함시켰으며, 투자환경의 불확실성(UCT)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BSI업황 실적치와 전망치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투자이론에 의하면 국내총생산이나 가동률의 증가는 설비투자수요를 증가시키며, 향후 경기전망이 호전되어 주가가 상승할 경우도 설비투자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해 자본유출입(NCF)이 증가할 경우에도 국내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금리나 자본재상대가격의 상승은 자본재 사용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설비투자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환경의 불확실성(UCT)이 증가도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표 II-61] 주요 설비투자 설명 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출처
설비투자(IFM)	실질설비투자 계절조정치	한국은행 Kosis
국내총생산(GDP)	실질국내총생산 계절조정치	한국은행 Kosis
자본재상대가격(RPC)	설비투자디플레이터를 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로 나눔	한국은행 Kosis
가동률지수(MOP)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 계절조정치	통계청
주가(SP)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한국은행Kosis
환율(FX)	명목대미 달러환율을 한국과 미국의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한국은행Kosis, 미국 FRB St. Louis Database
이자율(BR)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을 생산자물가지수로 실질화	한국은행 Kosis
자본유출입(NCF)	자본수지상 외국인직접투자액 - 해외직접투자액	한국은행 Kosis
IT설비투자비중(ITR)	설비투자 중 IT관련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은행 Kosis
불확실성(UCT)	BSI업황 실적치와 전망치의 차이	한국은행 Kosis

설비투자과 전망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간의 시차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62]에 요약되어 있다.²³⁾ 국내총생산(GDP)과 제조업 가동률(MOP)은 동분기의 상관계수값이 양(+)의 값으로 유의하여 설비투자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가(SP)는 설비투자를 1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재상대가격(RPC)과 환율(FX)은 동분기와 -1기의 상관계수 값이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1분기 선행하거나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은 예상과는 달리 동분기에 양(+)의 상관계수 값을 갖고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79]부터 [그림 II-82]까지는 설비투자의 순환변동치와 주요 설명변수인 GDP, 제조업가동률, 자본재상대가격, 주가, 환율, 금리, 민간소비 및 수출의 순환변동치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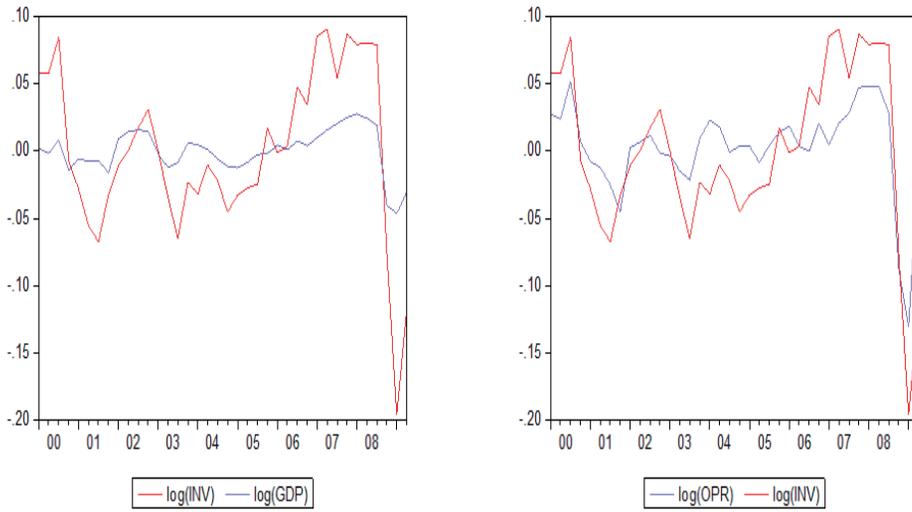
[표 II-62] 설명변수와 설비투자의 시차상관계수

	-3	-2	-1	동분기	+1	+2	+3
GDP	-0.07	0.28	0.69	0.85	0.50	0.12	-0.09
RPC	-0.06	-0.33	-0.67	-0.84	-0.60	-0.23	0.02
SP	0.23	0.57	0.80	0.75	0.38	0.06	-0.12
FX	0.05	-0.43	-0.77	-0.82	-0.50	0.17	0.24
MOP	-0.14	0.22	0.69	0.82	0.41	0.02	-0.11
BR	0.03	0.03	0.04	0.31	0.49	0.29	0.17

주: t기의 설비투자와 t-k분기 설명변수의 상관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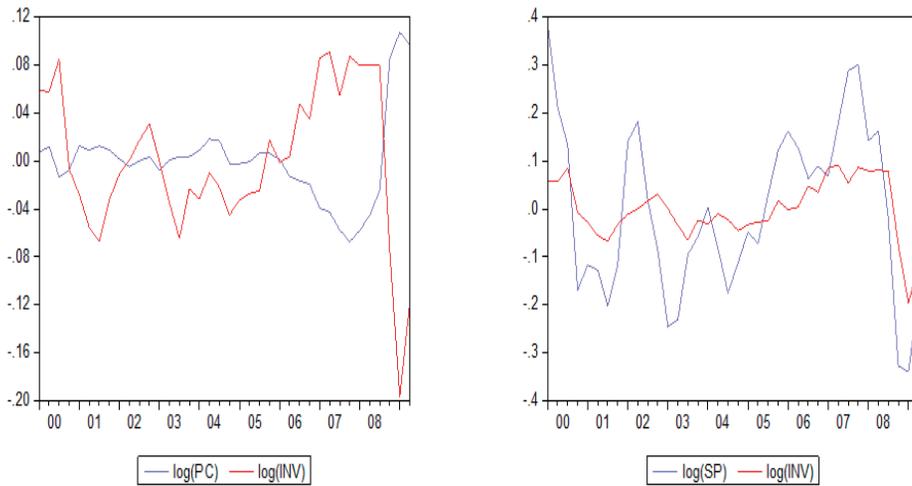
23) 모든 변수는 로그값을 취한 것이며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를 사용해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사용하여 시차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II-79] 설비투자자과 GDP, 제조업 가동률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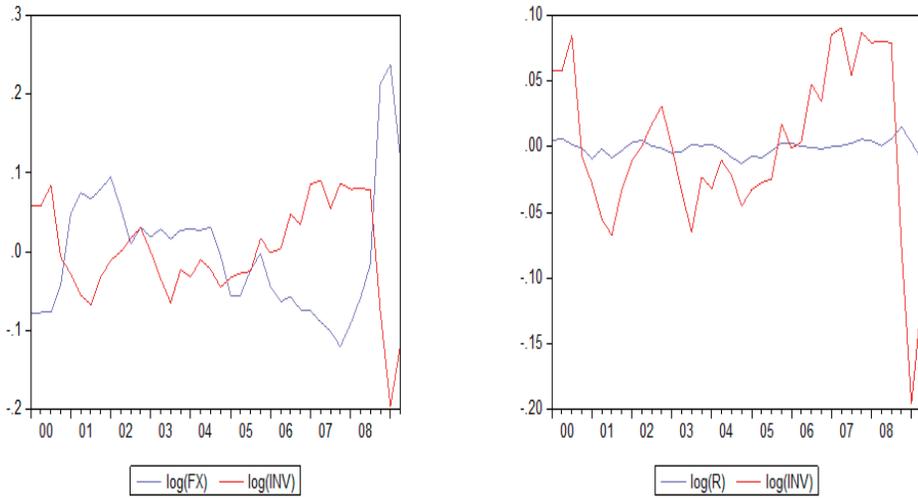
주: log(INV)와 log(GDP)는 실질설비투자자와 실질국내총생산의 로그값이고, log(OPR)은 제조업가동률지수의 로그값임.

[그림 II-80] 설비투자자과 자본재상대가격, 주가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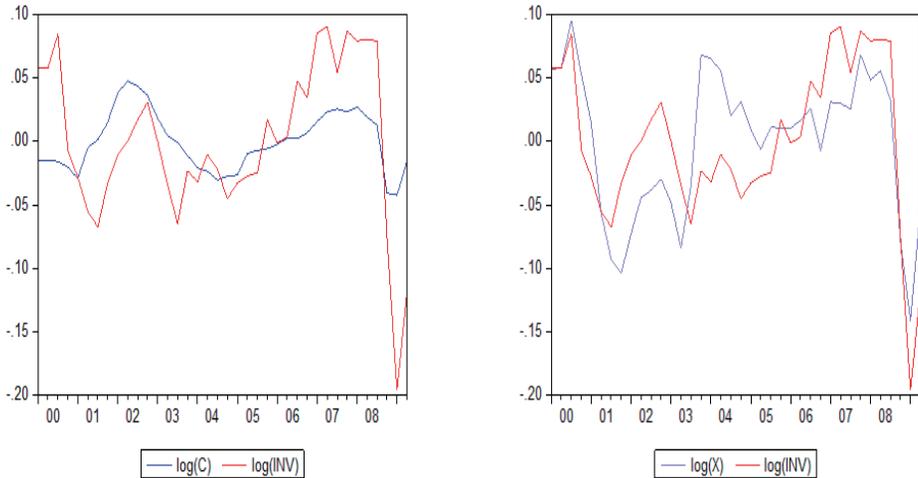
주: log(PC)와 log(SP)는 각각 자본재상대가격과 주가지수의 로그값임.

[그림 II-81] 설비투자과 환율, 금리의 순환변동치 추이



주: log(FX)와 log(R)은 각각 실질대미환율과 (1+실질이자율)의 로그값임.

[그림 II-82] 설비투자과 민간소비, 수출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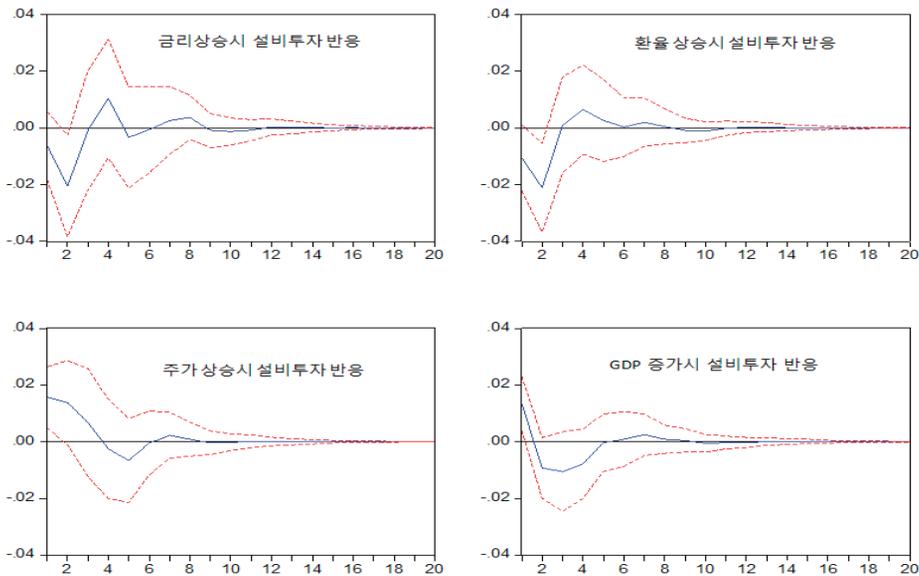


주: log(C)와 log(X)는 각각 실질민간소비와 수출의 로그값임.

최종 설비투자 전망에 사용된 모형은 5변수(설비투자, 이자율, 환율, 주가, 국내총생산) 벡터자기회귀(VAR) 모형과 자본재상대가격이 포함된 6변수 벡터오차수정(VECM) 모형이다. 모형 설정의 적절성과 주요 변수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모형을 추정하여 충격반응 함수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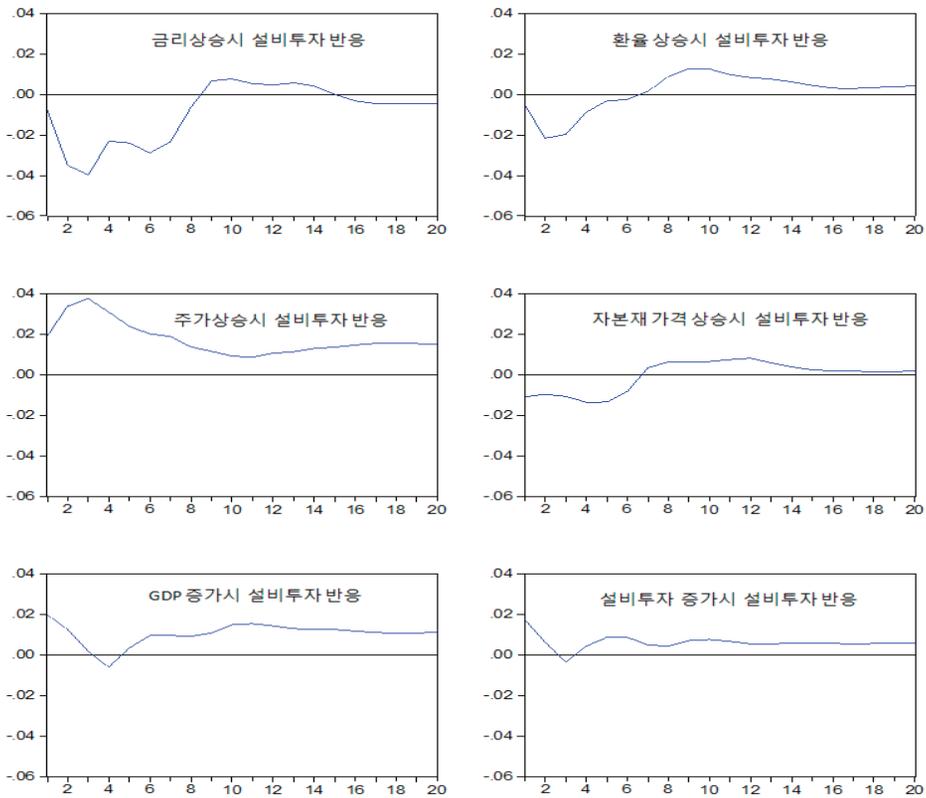
[그림 II-83]에서 보는 것처럼 5변수 VAR(2) 모형 잔차항의 출레스키분해를 통한 각 변수의 단위표준편차만큼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설비투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금리 상승은 3분기에 걸쳐 유의하게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환율 상승도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은 4분기 정도까지 설비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는 변수로서 미래 경기상황에 긍정적인 전망으로 투자를 자극하고, 기업의 가치가 제고되면서 자본조달이 용이해지는 효과 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국내총생산 증가는 2분기 정도까지 유의하게 설비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3] 주요 변수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VAR 모형)



자본재상대가격이 추가된 6변수 벡터오차수정(VECM)모형의 충격반응함수의 결과를 보면 각 변수의 충격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은 5변수 벡터자기회귀(VAR) 모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금리와 환율 상승의 효과는 VAR모형보다 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 금리 상승은 8분기까지 투자를 위축시키고, 환율 상승은 6분기까지 투자에 부(-)의 영향을 미치다가 그 이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상승은 지속적으로 설비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재가격 상승은 6분기 정도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망을 위해 사용된 주요 변수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이론에 부합되며 모형 설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84] 주요 변수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VECM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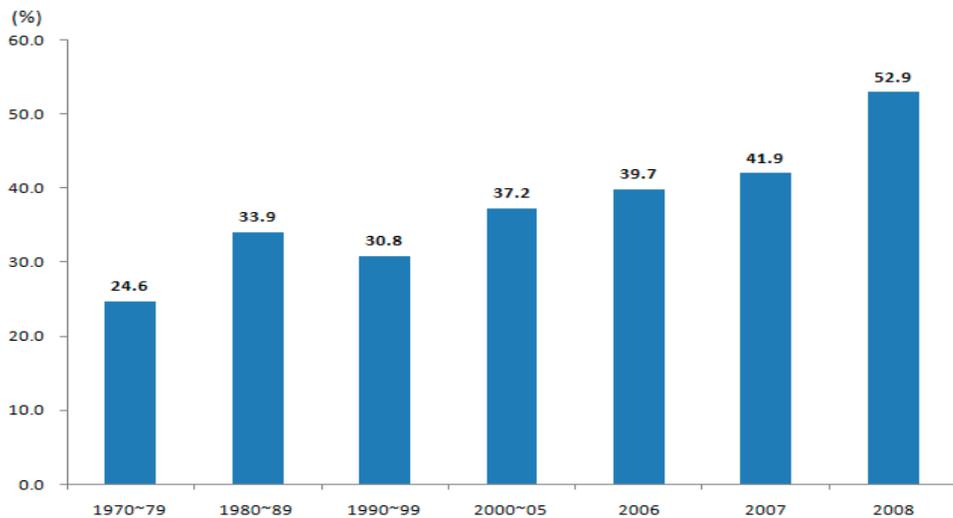


마. 대외거래

(1) 수출

빈약한 자원,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소득통계가 작성된 1970년대 GDP대비 24.6%에 불과하던 수출비중은 2008년 52.9%까지 상승하였다.²⁴⁾

[그림 II-85] GDP 대비 수출(물량)비중 추이



주: 1) 1999년까지는 구계열, 2000년부터는 신계열 기준임.

2) 경상가격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수출비중의 지속적 확대와 더불어 수출증가율 또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1년(-3.4%) IT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1990년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24) 2000년 이전자료는 구계열(고정가중지수)을 이용하였으며 2000년 이후자료는 신계열(연쇄가중지수)을 이용하였다.

있다. 1998년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기간에도 양호한 세계경제여건을 바탕으로 수출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는 1980년대 1.9%p였으나 1990년대 3.3%p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확대되어 2000~05년 연평균 4.2%p였으며 2007년 5.0%p 및 2008년 2.4%p를 기록하였다.

[표 II-63] 수출의 성장기여도 비중 추이

(단위: %, %p)

	1970~79	1980~89	1990~99	2000~05	2006	2007	2008
수출증가율	22.0	11.6	15.2	9.8	11.4	12.6	5.7
성장기여도	1.8	1.9	3.3	4.2	4.5	5.0	2.4
경제성장율	8.3	8.7	5.8	9.8	5.2	5.1	2.2

주: 1999년까지는 구계열, 2000년부터는 신계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수출주력 제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수출증가는 수입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수출+수입/GDP, 물량기준)는 1990년 41.4%에서 2006년 104.8%, 2007년 111.8% 및 2008년 114.2%로 확대되고 있다.²⁵⁾ 수출중심 성장전략의 지속적 추진 결과 확대된 대외의존도는 해외여건의 변화에 대해 국내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또한 심화시켰다.

대외여건 악화에 의해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이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시기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미국의 IT버블 붕괴 및 최근의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전의 경험에 비해 구별되는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IT버블 붕괴는 특정지역(또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이 전 세계로 전파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시작된 이번 글로벌

25) 신계열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외의존도는 2000년 61.9%, 2001년 57.1%, 2002년 60.3%, 2003년 66.2%, 2004년 73.2%, 2005년 75.8%, 2006년 80.3%, 2007년 85.7%, 87.8%이며 2009년(2/4분기 누적)은 82.1%이다.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국제화 등의 이유로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세계경제 전체가 동시적으로 침체국면에 진입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입수요 감소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급감시키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징을 반영하여 산업생산 지수의 하락폭을 크게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독일,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²⁶⁾ [그림 II-86]과 [그림 II-87]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23.1%(08 4/4) → -46.9%(09 1/4) → -38.5%(09 2/4) → -57.5%(09 3/4)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독일의 수출증가율은 -6.2%(08 4/4) → -21.0%(09 1/4) → -25.5%(09 2/4) → -47.5%(09 3/4)이며 대만은 -23.7%(08 4/4) → -32.1%(09 1/4) → -26.2%(09 2/4)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가의 산업생산은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2/4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효과 및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세계경기가 회복징후를 보이자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은 2009년 1/4분기 15.5% 감소한 뒤 2/4분기에는 -6.2%로 감소세가 축소된 뒤 3/4들어서는 1.3% 증가하였다. 일본의 산업생산(제조업)은 증가율은 -34.6%(09 1/4) → -27.9%(09 2/4) → -18.8%(09 3/4)이며, 대만의 산업생산증가율은 -32.4%(09 1/4) → -16.6%(09 2/4) → -6.8%(09 3/4)로 나타났다.

26) 일본, 독일, 대만의 대외의존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주요국가의 대외의존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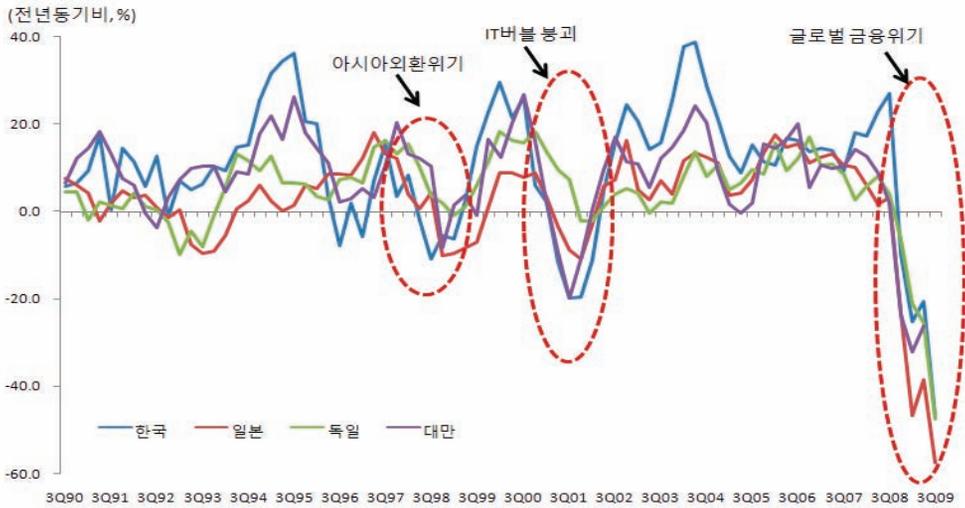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본	20.5	24.5	25.7	26.5	27.1	21.8
독일	66.4	82.3	89.8	93.1	95.1	86.8
대만	104.1	116.9	120.6	121.6	119.4	102.7

주: 1) 2009년은 2/4분기 누계임.

2) 대외의존도는 (수출+수입)/국내총생산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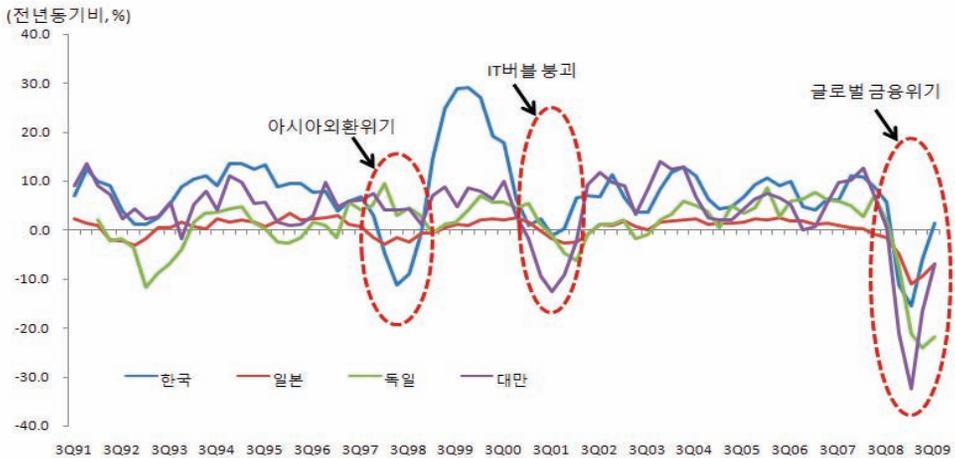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II-86] 주요 국가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87] 주요 국가의 산업생산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9~2013년 기간 중 상품수출(국제수지 기준)은 연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전 5년간(2004~2008년)의 연평균 증가율 17.2%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이다.²⁷⁾ 이러한 수출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극복하고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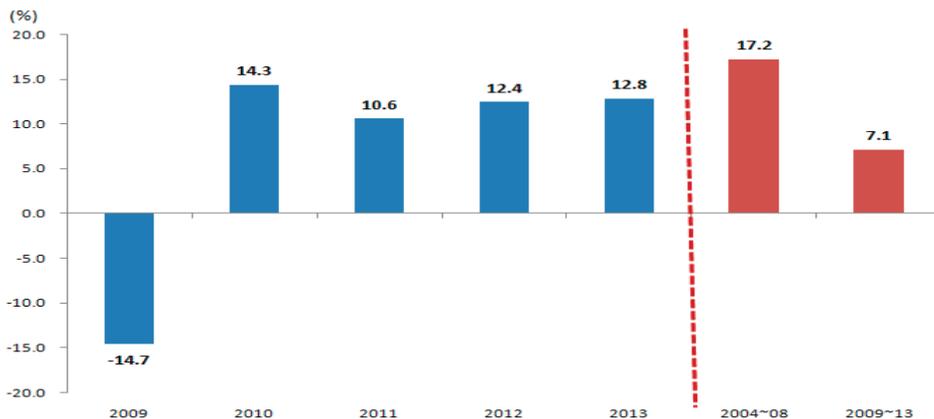
계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비 및 투자가 정상화되어야 하나 고용창출부진,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부진 등과 같은 위협요인으로 이전기간(2004~2008년)과 같은 세계경제의 호황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연차별로 살펴보면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효과로 1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기저효과(base effect)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의 수출증가율은 크게 확대될 것이나 하반기 이후 수출증가율은 둔화되어 연간 1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은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증가율은 10.6%로 2010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부터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2년 12.4%, 2013년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88] 중기 수출 전망



주: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FOB)에 대한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7)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2010~13년까지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5%로 위기 이전 4년(2004~07년)의 평균증가율 17.9% 보다 둔화된 수치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극복하고 2010년부터 수출이 두 자리 수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대규모 부양책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실물부문이 빠르게 침체국면을 탈피하여 2010년부터 완만하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IMF는 2009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경제는 2010년 3.1%, 2011년 4.2%, 2012년 4.4% 및 2013년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가그룹별로 선진국은 2009년 -3.4%에서 2010년 1.3%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뒤 2011년과 2012년 각각 2.5% 및 2.6% 성장하고 2013년에는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어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기회복세는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도국은 2009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0년 5.1%, 2011년 6.1% 성장하고 2012년과 2013년 각각 6.4%와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전망을 살펴보면 2010년 9.0%에서 2013년 9.8%까지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증가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64]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	-1.1	3.1	4.2	4.4	4.6
선진국	-3.4	1.3	2.5	2.6	2.5
미국	-2.7	1.5	2.8	2.6	2.5
일본	-5.4	1.7	2.4	2.3	2.0
유로	-4.2	0.3	1.3	1.7	2.0
개도국	1.7	5.1	6.1	6.4	6.6
중국	8.5	9.0	9.7	9.8	9.8
ASEAN5	0.7	4.0	4.7	5.4	5.9
인도	5.4	6.4	7.3	7.6	8.0
브라질	-0.7	3.5	3.5	3.5	3.7
러시아	-7.5	1.5	3.0	3.7	4.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10.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선진국중심에서 개도국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도 향후 수출전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이다. [표 II-65]를 살펴보면 1980년대 전체 수출의 53.7%를 점유하던 미국, 일본 등 대선진국 수출비중은 1990년대 38.8%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27.4%로 하락하였다. 반면 BRICs나 중국을 포함한 대중화권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980년대 8.0%에 불과하던 대중화권수출은 1990년대 20.9%로 급상승하였으며 2000년대는 31.1%까지 상승하였다. 대중화권수출이 급상승하게 된 것은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비중은 1990년대 6.3%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18.5%까지 상승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1~8월 누적)은 각각 32.9%, 34.9%까지 급등하였다.

[표 II-65]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1980~89	1990~99	2000~09	2006	2007	2008	2009
선진국	53.7	38.8	27.4	24.5	22.5	20.2	19.0
미국	33.2	21.2	15.9	13.3	12.3	11.0	10.7
일본	16.8	13.7	8.6	8.2	7.1	6.7	5.9
독일	3.7	3.9	2.9	3.1	3.1	2.5	2.4
중화권	8.0	20.9	31.1	34.1	33.8	32.9	34.9
중국	0.2	6.3	18.5	21.3	22.1	21.7	23.4
홍콩	4.8	7.5	6.0	5.8	5.0	4.7	5.4
싱가포르	1.8	4.0	3.0	2.9	3.2	3.9	3.7
대만	1.1	3.1	3.7	4.0	3.5	2.7	2.4
BRICs	1.8	8.8	22.2	25.6	27.0	27.5	28.0
브라질	0.1	0.8	1.0	0.9	0.9	1.4	1.2
러시아	-	0.7	1.2	1.6	2.2	2.3	2.1
인도	1.5	1.0	1.5	1.7	1.8	2.1	2.2

주: 2009년은 1~8월까지 누계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둘째,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다. 2008년 수출액 기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의 48.8%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3대 주력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전망은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10년 이후 두자릿수의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근거이다.

[표 II-66] 주요 품목의 수출비중 추이

(단위: 억달러, %)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부품
1999	111.7 (7.8)	24.0 (1.7)	188.5 (13.1)	52.1 (3.6)	104.4 (7.3)	76.5 (5.3)	20.3 (1.4)
2000	132.2 (7.7)	2.8 (0.2)	260.1 (15.1)	78.8 (4.6)	146.9 (8.5)	84.2 (4.9)	21.2 (1.2)
2001	133.2 (8.9)	2.2 (0.1)	142.6 (9.5)	98.5 (6.6)	112.4 (7.5)	99.1 (6.6)	22.2 (1.5)
2002	147.8 (9.1)	2.6 (0.2)	166.3 (10.2)	136.2 (8.4)	129.4 (8.0)	108.7 (6.7)	27.0 (1.7)
2003	191.2 (9.9)	7.4 (0.4)	195.4 (10.1)	187.0 (9.6)	149.8 (7.7)	113.3 (5.8)	42.3 (2.2)
2004	265.8 (10.5)	13.1 (0.5)	265.2 (10.4)	262.2 (10.3)	171.2 (6.7)	156.6 (6.2)	59.3 (2.3)
2005	295.1 (10.4)	47.8 (1.7)	299.9 (10.5)	275.0 (9.7)	141.2 (5.0)	177.3 (6.2)	84.5 (3.0)
2006	329.2 (10.1)	123.9 (3.8)	373.6 (11.5)	270.2 (8.3)	125.8 (3.9)	221.2 (6.8)	102.3 (3.1)
2007	372.8 (10.0)	169.3 (4.6)	390.4 (10.5)	304.6 (8.2)	138.1 (3.7)	277.8 (7.5)	124.4 (3.3)
2008	350.3 (8.3)	187.3 (4.4)	327.9 (7.8)	357.1 (8.5)	107.0 (2.5)	431.6 (10.2)	139.5 (3.3)
2009	146.0 (6.5)	155.0 (6.8)	174.5 (7.7)	206.3 (9.1)	49.1 (2.2)	308.2 (13.6)	66.1 (2.9)

주: 2009년은 1~8월까지 누계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9.7% 감소했던 전세계 자동차판매량은 2010년에는 2.5%증가로 전환된 후 2011년과 12년 각각 10.1%와 8.2% 성장한 뒤 2013년에는 5.5%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 전망을 살펴보면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24.0%(2008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북미지역(NAFTA)의 자동차판매량

은 2009년 21.4% 감소에서 2010년과 11년에는 6.4%, 20.9% 증가한 뒤 2013년에는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자동차 판매량의 13.0%(2008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2013년 18.0% 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09년도에도 27.6% 증가한 자동차 판매량은 2013년까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II-67] 자동차 판매량 전망

(단위: 천대, %)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	승용	44,321.9 (-8.1)	44,823.8 (1.1)	49,088.6 (9.5)	53,015.4 (8.0)	55,916.9 (5.5)
	소형상용	15,416.0 (-14.2)	16,418.7 (6.5)	18,351.2 (11.8)	19,921.3 (8.6)	21,051.7 (5.7)
	계	59,737.9 (-9.7)	61,242.5 (2.5)	67,439.8 (10.1)	72,936.8 (8.2)	76,968.6 (5.5)
NAFTA	승용	6,636.6 (-20.1)	7,134.8 (7.5)	8,777.4 (23.0)	10,017.7 (14.1)	10,735.6 (7.2)
	소형상용	5,873.0 (-22.7)	6,170.0 (5.1)	7,308.0 (18.4)	7,993.6 (9.4)	8,401.1 (5.1)
	계	12,509.6 (-21.4)	13,304.8 (6.4)	16,085.4 (20.9)	18,011.3 (12.0)	19,136.6 (6.2)
유럽	승용	2,935.5 (-42.5)	2,979.5 (1.5)	3,332.9 (11.9)	3,587.1 (7.6)	4,069.2 (13.4)
	소형상용	411.7 (-43.9)	446.8 (8.5)	516.4 (15.6)	623.3 (20.7)	714.0 (14.6)
	계	3,346.2 (-42.7)	3,426.3 (2.4)	3,849.3 (12.3)	4,210.5 (9.4)	4,783.1 (13.6)
중국	승용	7,384.1 (29.4)	7,760.5 (5.1)	8,144.8 (5.0)	8,780.4 (7.8)	9,344.7 (6.4)
	소형상용	3,581.8 (24.1)	3,821.1 (6.7)	3,992.0 (4.5)	4,284.0 (7.3)	4,530.6 (5.8)
	계	10,965.9 (27.6)	11,581.5 (5.6)	12,137.7 (4.8)	13,064.4 (7.6)	13,875.3 (6.2)

자료: IHS Global Insight, "World Car Industry Forecast Report", 2009. 9

2007년과 2008년 사상최고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던 선박수출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물동량 감소 및 공급 증가로 2010년 이후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 관련 국제기구의 세계 중장기 수요전망을 살펴보면 2011~2014년까지 연평균 2,690만 CGT를 발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2015~2018년)으로는 연평균 3,090만 CGT를 발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96-2008년간 연평균 발주량 3,510만 CGT보다 적은 수준이나 지난 2006-2007년 대량 발주된 것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2010년 이후 선박수출의 감소세는 불가피해보이나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계건조능력과 비교해볼 때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세계 조선업계 가동률이 2007년 87%에서 2014년 5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동기간 99.2%에서 67.1%로 하락 전망되고 있다.

[표 II-68] 선종별 장기 신조선 수요전망(Base case)

(단위: 백만 CGT)

	실적(연평균: 1996~2008)	2009	2010	2011~2014 (연평균)	2015~2018 (연평균)
V L C C	2.0	0.4	1.8	0.3	0.9
탱 커	9.8	2.8	7.0	5.4	6.6
벌 커	9.2	1.3	2.9	3.4	4.0
컨테이너	7.4	0.8	4.3	6.3	8.2
가 스 선	2.4	0.4	3.1	3.1	4.2
전체합계	35.1	8.1	23.6	26.9	30.9

주: 1) VLCC는 대형유조선임.

2) 탱커에는 CT와 PC를 포함.

자료: Clarkson, “장기수요전망”, 2009. 3.

[표 II-69] 시나리오별 장기 신조선 수요전망(2011-2018, 연평균)

	척 수	백만GT	백만CGT
1996-2008(연평균)	1,823	63.3	35.1
2009-2010(연평균)	798	26.5	15.8
2011-2018(연평균)			
비관적 시나리오	976	28.6	19.4
표준 시나리오	1,455	44.3	28.9
낙관적 시나리오	2,002	60.8	39.3

자료: Clarkson, “장기수요전망”, 2009. 3.

중장기 신조선 건조능력은 2010년 5,900만 CGT로 최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2010년부터 한국을 추월하여 최대 건조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대비 2014년에는 국별 건조능력은 중국만 94% 증가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유럽 48% 감소, 일본 29% 감소, 한국 3% 감소 등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II-70] 세계 조선국별 건조능력 전망

(단위: m.CGT)

연도	일본	한국	중국	유럽	기타	합계
2007	10.0	12.0	6.5	7.5	4.0	40.0
2008	10.5	15.5	8.5	7.8	4.5	46.8
2009	10.0	16.5	16.0	7.8	4.5	54.8
2010	10.0	18.0	20.0	7.0	4.0	59.0
2011	9.0	17.0	19.0	6.5	3.8	55.3
2012	8.5	16.0	17.5	5.5	3.5	51.0
2013	8.0	15.5	17.0	4.5	3.3	48.3
2014	7.5	15.0	16.5	4.0	3.0	46.0
2008~2014(%)	-29.0%	-3.0%	94.0%	-48.0%	-33.0%	-2.0%

자료: Clarkson, “장기수요전망”, 2009. 3.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 전망기관인 아이서플라이는 세계반도체시장이 2010년 12.3%, 2011년 10.4%, 2012년 7.1% 및 2013년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트너가 발표한 ‘세계 반도체소자 시장 전망’보고서에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 정도의 성장세가 예상되어 2012년 시장규모는 3,479억 달러로 전망하였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WSTS)에 따르면 2009년 반도체 시장은 2.2% 감소할 것이나 세계경기가 올해 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⁸⁾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생산의 46.2%(2009년 2/4분기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모리는 대부분의 IT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IT기기의 고기능화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71] 세계반도체시장전망

(단위: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메모리		45,579 (-21.0)	33,470 (-26.6)	41,333 (23.5)	46,959 (13.6)	50,912 (8.4)	50,876 (-0.1)
시스템 반도체	마이크로 컴포넌트	55,643 (-0.4)	45,284 (-18.6)	47,016 (3.8)	50,425 (7.3)	53,677 (6.4)	55,795 (3.9)
	로직	72,581 (-1.9)	57,804 (-20.4)	64,524 (11.6)	71,797 (11.3)	76,266 (6.2)	80,013 (4.9)
	아날로그	43,012 (-2.1)	31,518 (-26.7)	35,920 (14.0)	39,244 (9.3)	41,673 (6.2)	44,979 (7.9)
디스크리트		17,764 (-3.1)	12,511 (-29.6)	13,873 (10.9)	15,181 (9.4)	16,067 (5.8)	17,086 (6.3)
옵토반도체		19,549 (5.1)	18,379 (-6.0)	20,813 (13.2)	23,027 (10.6)	25,395 (10.3)	27,379 (7.8)
센서/액추에이터		4,176 (0.7)	3,921 (-6.1)	4,285 (9.3)	4,902 (14.4)	5,409 (10.3)	5,900 (9.1)
총합		258,304 (-5.2)	202,887 (-21.5)	227,764 (12.3)	251,535 (10.4)	269,399 (7.1)	282,028 (4.7)

자료: ISuppli, 2009. 4.

28) 디지털타임스, 2009. 9. 16.

[표 II-72] 주요 품목별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

(단위: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메모리	6,658 (42.9)	5,849 (43.5)	6,899 (45.4)	5,997 (44.4)	5,332 (43.9)	5,616 (44.0)	5,202 (42.4)	3,354 (40.2)	3,123 (43.1)	4,369 (46.2)
D램	4,694 (48.2)	3,623 (49.1)	3,990 (50.2)	3,151 (49.2)	2,927 (49.2)	3,394 (50.0)	3,312 (49.5)	2,116 (50.9)	1,862 (55.2)	2,527 (56.0)
낸드	1,536 (58.2)	1,812 (59.5)	2,473 (59.0)	2,390 (59.3)	1,967 (57.0)	1,872 (55.7)	1,565 (55.0)	1,005 (47.3)	1,089 (49.9)	1,657 (52.6)
MCU	136 (3.6)	145 (3.8)	159 (3.9)	160 (3.9)	150 (3.7)	183 (4.4)	152 (3.8)	155 (4.7)	122 (4.8)	141 (4.9)
DDI	391 (21.1)	454 (23.6)	436 (20.8)	523 (23.8)	469 (24.1)	459 (23.5)	434 (23.4)	296 (22.8)	273 (26.6)	348 (24.7)
CIS	75 (8.3)	96 (11.2)	107 (10.7)	125 (11.5)	119 (11.6)	131 (12.1)	128 (11.6)	102 (11.1)	74 (12.3)	88 (10.7)

주: 1) MCU는 네비게이션 등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CPU임.

2)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임.

3) CIS는 Cmos로 핸드폰 등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임.

자료: ISuppli, 200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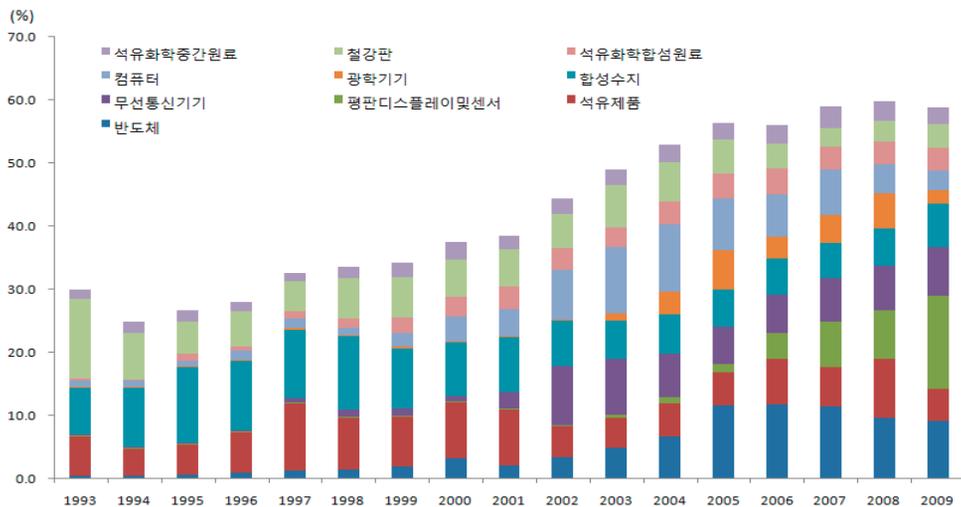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는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수출지향 성장전략에서 내수지향 성장전략으로 성장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대외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내수확대는 농촌지역의 소득증진, 서부대개발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내수확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내수부양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간

재 중심 수출에서 최종소비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최종소비재 보다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도체 등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전략은 소득증가에 따라 고급 가전제품(TV, 백색가전 등), 자동차 등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적극적 시장개척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림 II-89]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출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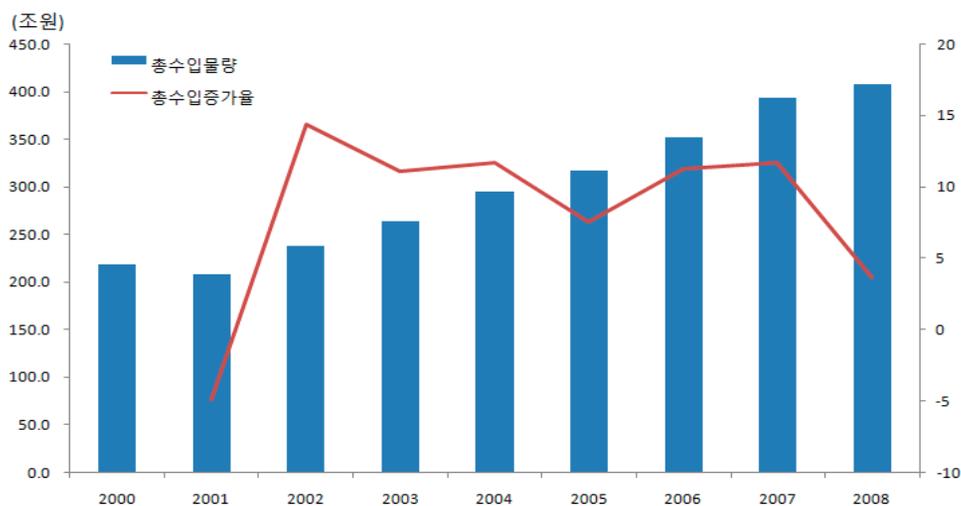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2) 수입

1998년 외환위기 및 2001년 IT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수출 및 내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총수입물량이 감소했던 두 해를 제외하면 총수출증가와 함께 총수입물량 또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II-90]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수입물량(국민계정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및 증가율 추이이다. 2002년 이후

에는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용 자본재 수입과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총수입 증가율 또한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 급감, 생산위축 및 내수위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입물량 증가율의 둔화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90] 총수입물량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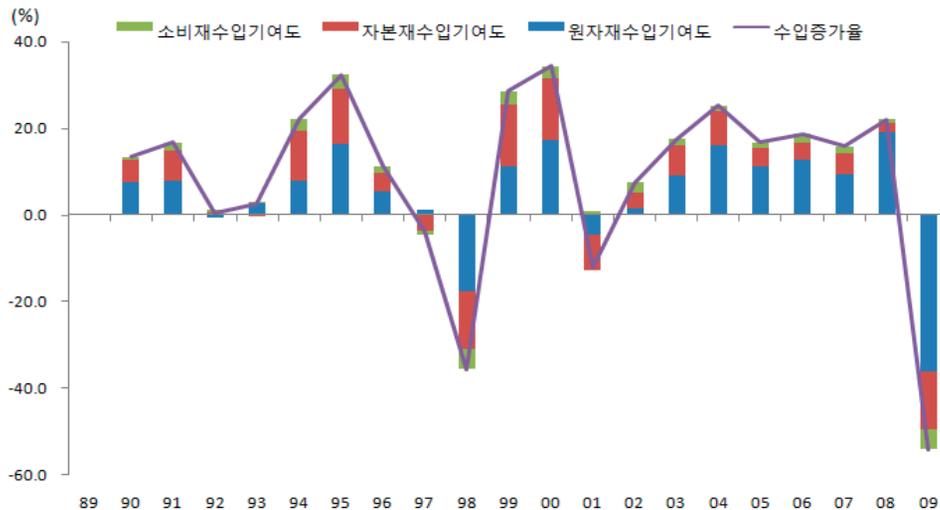
수입(통관기준) 증가율은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²⁹⁾된 1994~1995년과 1999~2000년의 경우 20%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성질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높은 해외의존도를 반영하여 원자재의 수입기여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재의 경우 자본재의 수입기여도가 확대된 해는 설비투자가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전체설비투자에서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수입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내수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둔화 및 수출둔화가 주요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에서 가장 큰

29)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4년 24.5%, 1995년 18.3%, 1999년 36.8% 및 2000년 33.6%이다.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세계적인 IT경기둔화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면서 생산 확대를 위한 신규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

[그림 II-91] 성질별 수입기여도 및 수입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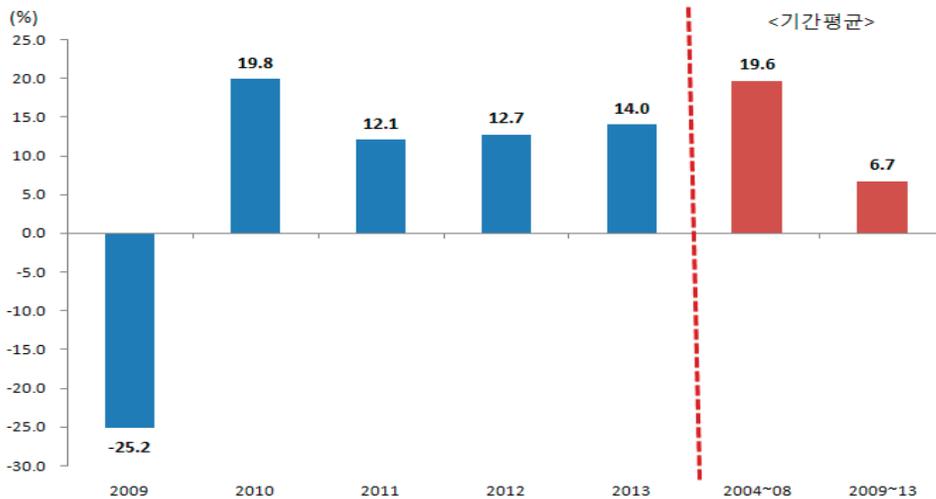
주: 2009년은 1~8월까지의 누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2009~2013년까지의 상품수입(국제수지기준)은 연평균 6.7%증가하여 전기간(2004~2008년)의 연평균 증가율 19.6%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차별로 살펴보면 2008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수입은 2008년 3/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유가상승 및 2009년 수출급감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1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이후의 수입증가율 또한 수출증가 및 내수회복세가 진행되면서 두자릿수의 증가세가 이어져 2011년 12.1%, 2012년 12.7% 및 2013년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92] 중기 수입 전망



주: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입(FOB)에 대한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첫째,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내수 부문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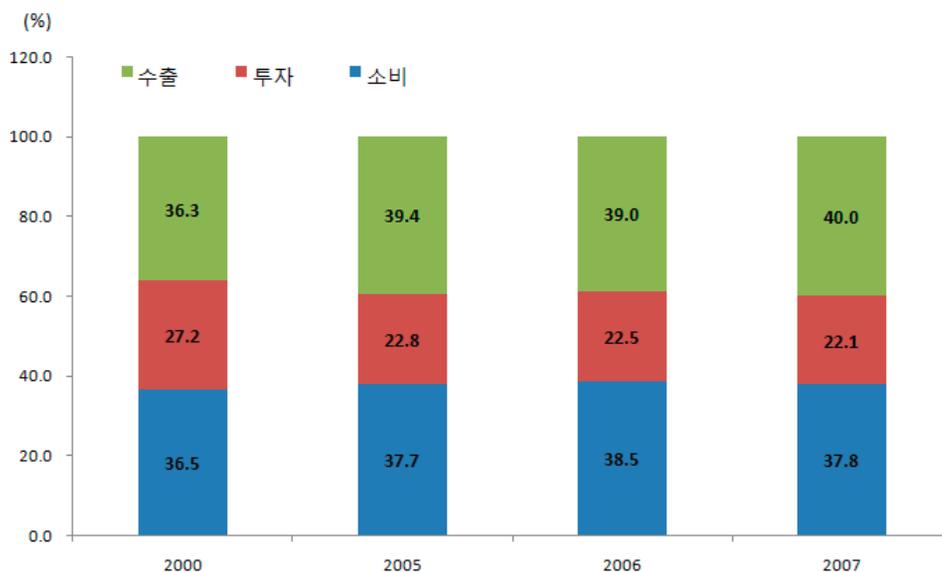
수입은 내수와 수출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수입유발 효과가 매우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이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련 부품 소재의 수입유발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07년 산업연관표³⁰⁾에 의한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구성비를 살펴보면 수출 40%, 소비 37.8%, 투자 2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38.5% → 37.8%)와 투자(22.5% → 22.1%)는 2006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수출(39.0% → 40.0%)은 상승하였다.

최종수요 1단위당 수입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는 0.301로 2006년의 0.290보다 상승하였으며 2005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내경기회복 및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경우 수입 또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0)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2007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시사점,' 계간 국민계정 2009년 제2호 통권 제37호, 2009. 7. 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그림 II-93]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효과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표 II-73]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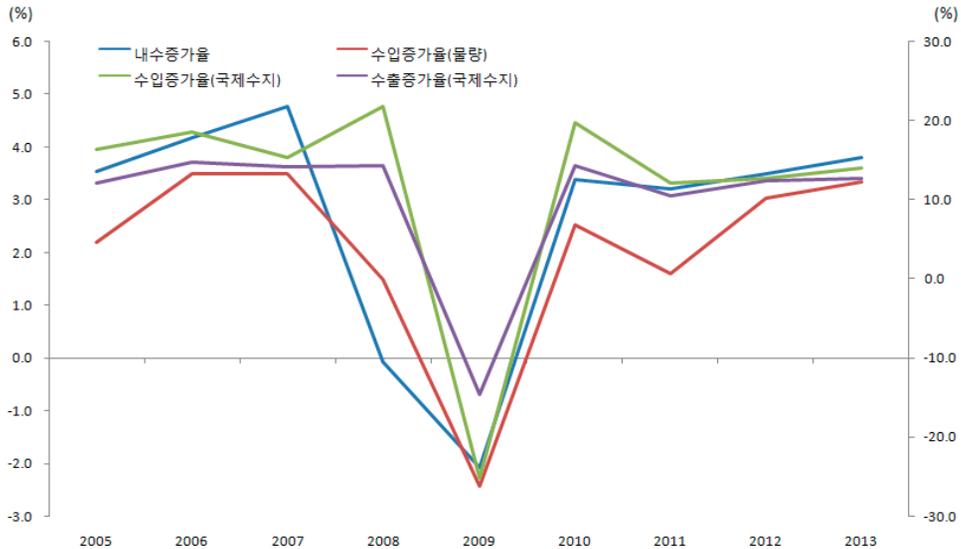
	수입유발액 (조원)				수입유발계수			
	2000	2005	2006	2007	2000	2005	2006	2007
소비	87.5	125.5	140.4	156.3	0.211	0.214	0.224	0.232
투자	65.3	75.8	82.1	91.5	0.346	0.296	0.307	0.319
수출	87.0	131.4	142.6	165.4	0.367	0.383	0.391	0.400
계	239.8	332.6	365.1	413.2	0.286	0.281	0.290	0.301

자료: 한국은행.

수출과 내수의 수입유발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은 수입을 확대시키게 된다. [그림 II-94]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입은 수출 및 내수와 매

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내수증가율을 살펴보면 2009년 -2.1%에서 2010년 3.4%, 2011년 3.2%, 2012년 3.5% 및 2013년 3.8%로 완만하지만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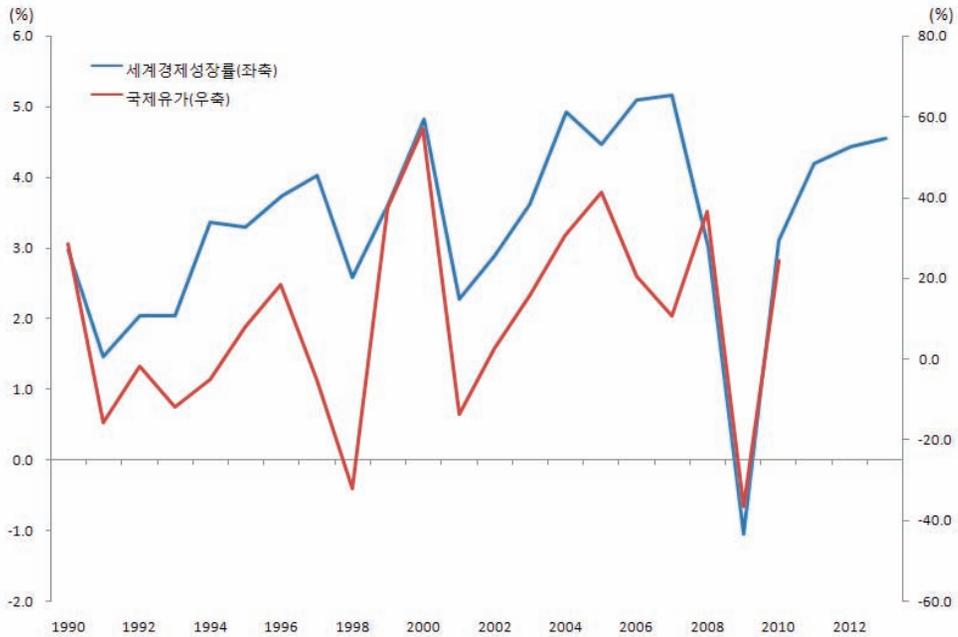
[그림 II-94] 내수와 수입의 증가율 추이



- 주: 1) 내수 실질민간소비, 실질건설투자 및 실질설비투자의 합임.
 2) 수입증가율(물량)은 국민계정상의 실질재화수입이며 수입증가율(국제수지)는 국제수지상의 상품수입(fob가격 기준)임.
 3) 2009~2013년까지는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둘째, 세계경제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로 국제원유가격 및 비원유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세계경제성장률과 국제유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양자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계경제가 호황국면에 진입할 경우 원유 및 비원유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반면 불황일 경우 수요감소에 따라 가격하락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II-95] 세계경제성장률 및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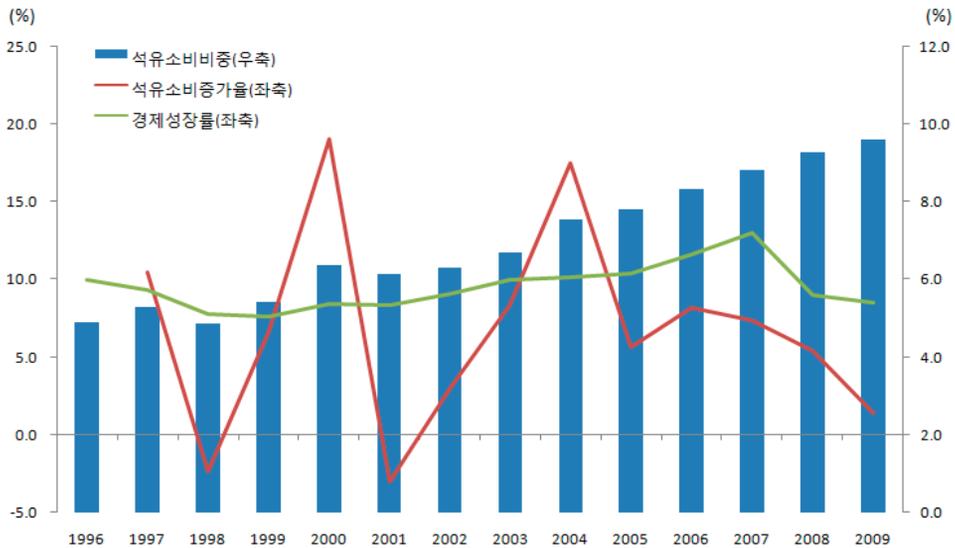
주: 국제유가는 WTI, Brent, Dubai 3개 유종의 평균가격임.

자료: IMF.

또한 세계최대의 원자재 수요국가인 중국이 2010년 이후 9%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또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전망의 주요한 요인이다. 전세계 석유소비량에서 중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1996년 4.9%에서 2000년 6.4%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1~9월 누계기준)은 각각 9.3% 및 9.6%까지 상승하였다.³¹⁾

31) 세계최대 석유소비국은 미국으로 소비비중은 2000년 25.9%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여 2005년 25.1%, 2008년 23.2%, 2009년(1~9월누계) 22.4%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II-96] 중국의 석유소비비중 및 증가율 추이



자료: IMF, 석유정보망.

(3)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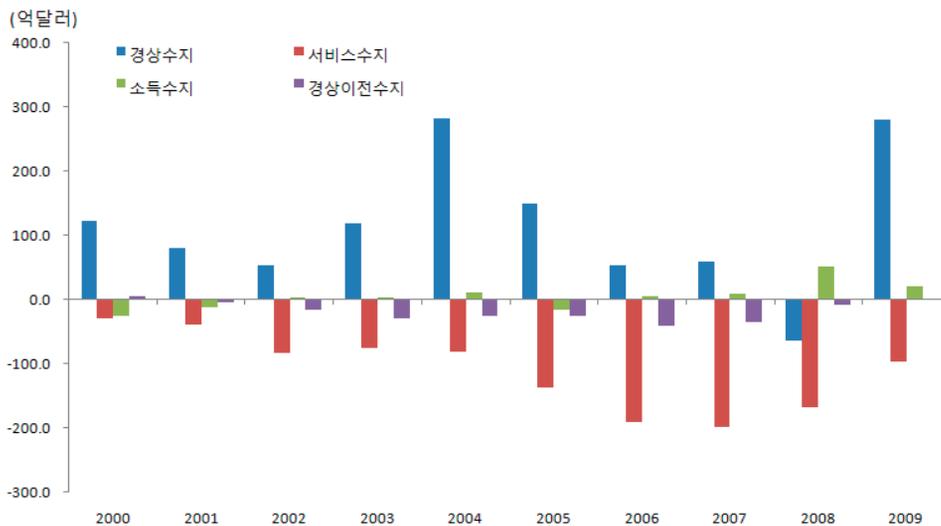
1996년 231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7년까지 흑자세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상품수입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다. 4/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경상수지는 연간 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9년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282억 달러(1~8월 누계기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적자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2007년 198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를 시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도 167억 달러 적자를 시현하였다. 2009년 들어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및 사업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96억 달러(1~8월 누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해외여행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업서비스수지 적자가 가장 큰 요인이다. 2000년 3억 달러에 불과하던 여행수지 적자는 2007년 15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소득증가세 둔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어 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사업서비스수지는 2000년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어 2008년 145억 달러로 사상최대의 적자를 시현하였다.

[그림 II-97] 경상수지 추이



주: 2009년은 1~8월까지의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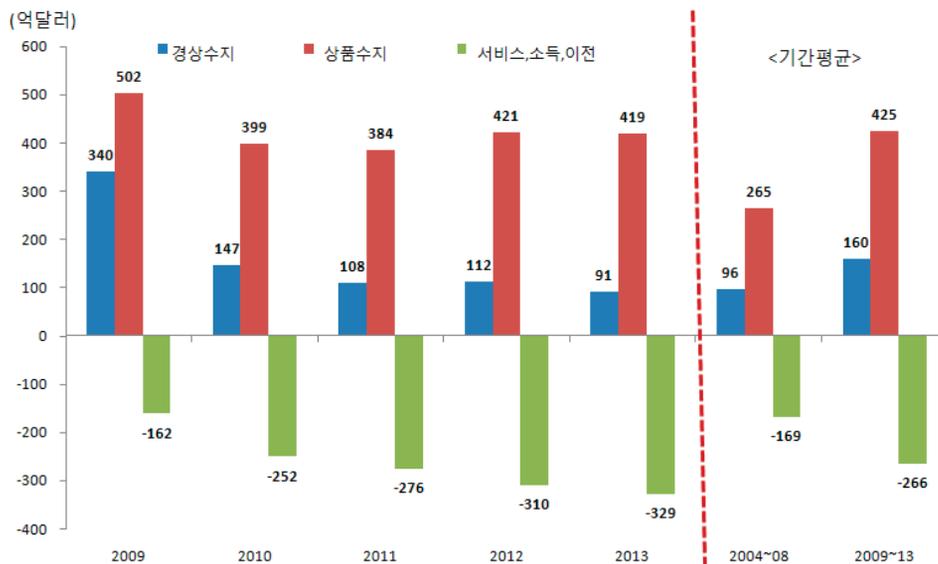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08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금액 급증으로 상품수지의 흑자 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적자로 반전된 경상수지는 2009년에는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3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국

제유가 상승, 수입증가의 효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는 연평균(2009~13년)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흑자 폭은 425억 달러로 증가하여 이전 5년(2004~08년)의 265억 달러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³²⁾

[그림 II-98] 중기 경상수지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주로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수지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여행지급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행수지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환율 또한 원화강세 기조를 보이면서 적자폭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2)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진행된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위기 전·후 4년간의 상품수지 흑자는 각각 315억 달러 및 406억 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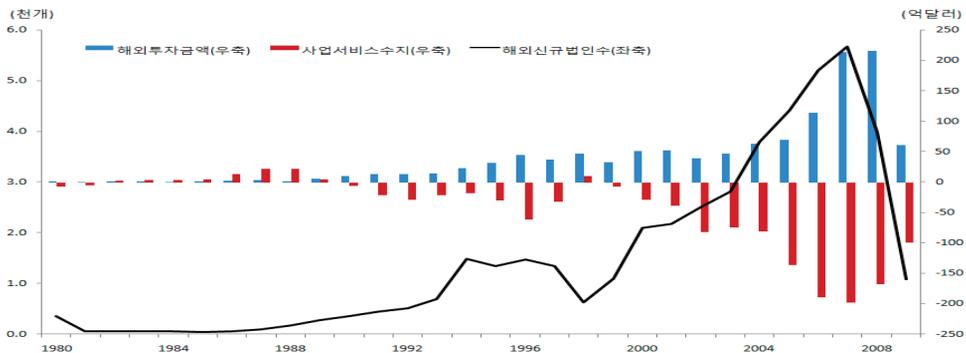
[그림 II-99] 여행수입 및 지급 추이



주: 2009년 여행수입과 여행지급은 1~8월까지의 누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100]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신규해외법인수와 투자금액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할수록 사업서비스수지 적자폭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과 2008년 급증했던 해외투자금액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보수적 경영을 지향하면서 잠시 위축되었던 해외진출은 세계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I-100] 해외신규법인, 해외투자금액 및 사업서비스 추이



주: 2009년은 1~8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고용

가. 고용 동향

지난 5년(2004~2008)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2%, 취업자는 1.3%, 실업자는 -1.1%, 비경제활동인구는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고용률은 59% 후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표 II-74]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는 점차적으로 둔화되어 2004년 2.0% 증가에서 2008년 0.6%에 그쳤으며, 취업자 증가세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2004년 1.9%에서 2008년 0.6% 증가로 둔화되었다. 이에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0.5% 감소를 제외하면 평균 1.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고용은 둔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하향 안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II-74] 지난 5년간 고용변수 추이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4	1.0	2.0	1.9	4.6	-0.5	62.1	59.8	3.7(3.5)
2005	1.5	1.4	1.3	2.5	1.8	62.0	59.7	3.7(3.5)
2006	1.2	1.0	1.3	-6.0	1.5	61.9	59.7	3.5(3.3)
2007	1.1	1.0	1.2	-6.4	1.2	61.8	59.8	3.3(3.0)
2008	1.1	0.6	0.6	-1.1	1.9	61.4	59.5	3.2(3.0)
2009	1.2	0.2	-0.4	18.0	2.9	60.9	58.6	3.8(3.5)

주: ()안은 1주기준 실업률, 2009년은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년동분기대비 7분기 연속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동분기 대비 0.5%p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9년 1/4분기 51.4만명(전년동분기대비 3.3%), 2/4분기 44.5만명(전년동분기대비 4.2%) 증가를 기록하여 2003년 2/4분기(3.2%)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수는 2009년 2/4분기 94.3만명을 정점으로 3/4분기 88.6만명을 기록해 감소하고 있으나 전년동분기대비로는 각각 23.0%와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1]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침체가 심화된 2008년 4/4분기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하락이 가속화되다가 2009년 2/4분기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의 증가세도 둔화되기 시작했다.

[표 II-75] 최근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만명,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업률	3.2	3.4	3.1	3.1	3.1	3.8	3.8	3.6
청년실업률	7.2	7.2	7.4	6.9	7.0	8.6	8.0	8.1
실업자수	76.9	80.1	76.7	75.2	75.7	90.8	94.3	88.6
고용률	59.5	58.5	60.4	59.9	59.4	57.4	59.3	59.1
취업자수	2,358	2,305	2,387	2,375	2,364	2,290	2,374	2,375
취업자증감 (증감률)	14.5 (0.6)	20.9 (0.9)	17.3 (0.7)	14.1 (0.6)	5.4 (0.2)	-14.6 (-0.6)	-13.4 (-0.6)	-0.1 (0.0)

자료: 통계청.

[표 II-76]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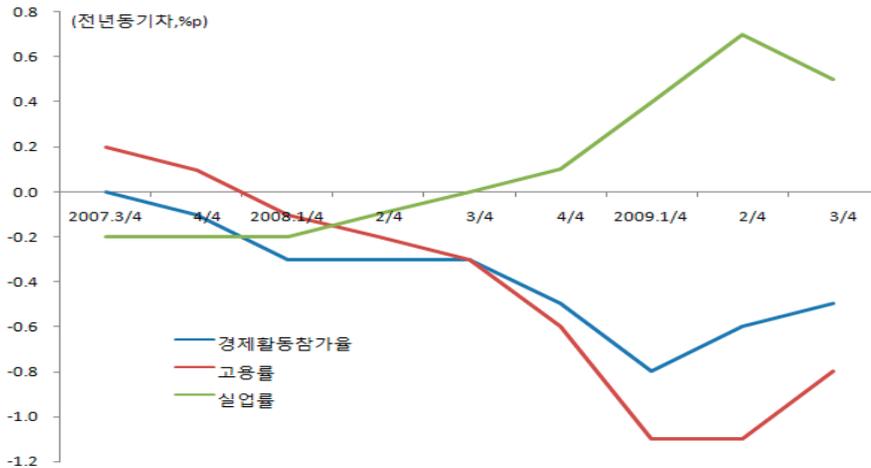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만명, %)

	2008					2009		
	연 간	1/4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435	2,385	2,464	2,450	2,439	2,381	2,468	2,464
경제활동참가율	61.5	60.5	62.3	61.8	61.3	59.7	61.7	61.3
비경제활동인구	1,525	1,558	1,490	1,515	1,537	1,609	1,535	1,553
비경제활동인구증감	29.7	27.0	25.6	28.9	37.2	51.4	44.5	37.4
－ 연 로	7.6	4.2	10.0	10.5	5.9	5.2	10.2	10.5
－ 가사, 육아	12.3	12.2	12.7	13.4	11.2	20.9	17.3	11.9
－ 쉬었음	3.1	3.6	1.4	-2.6	9.9	16.2	11.2	9.4
구직단념자 ¹⁾ 증감	1.1	-1.5	0.8	1.6	3.3	5.4	4.5	4.4

주: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

자료: 통계청.

[그림 II-101]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의 전년동기차 추이



자료: 통계청.

지난 5년간(2003~2008년)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 전체 취업자는 연평균 28.8만명(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연평균 5.3만명 감소(-2.8%), 제조업은 연평균 4.8만명(-0.6%) 일자리가 감소한 데 반해 서비스업은 연평균 38.8만명(2.2%)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고용감소를 서비스업이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대 65%, 2008년 67.3%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1980년대 25%, 1990년대 23%, 그리고 지난 5년 평균은 19%대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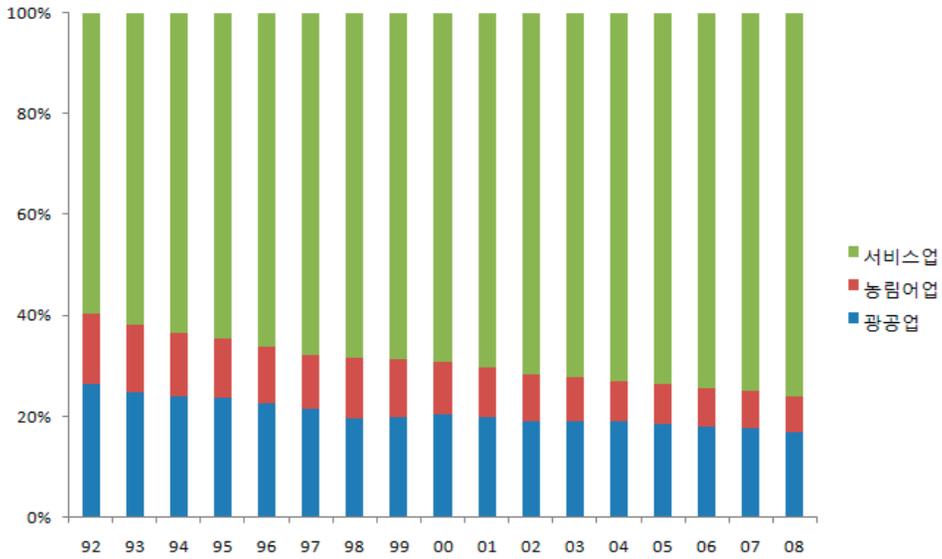
[그림 II-102] 산업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4) 한국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 실태와 특징에 관한 논의는 허재준·서환주·이영수 (2007),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서비스업 고용”(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8)을 참조.

[그림 II-103]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표 II-77]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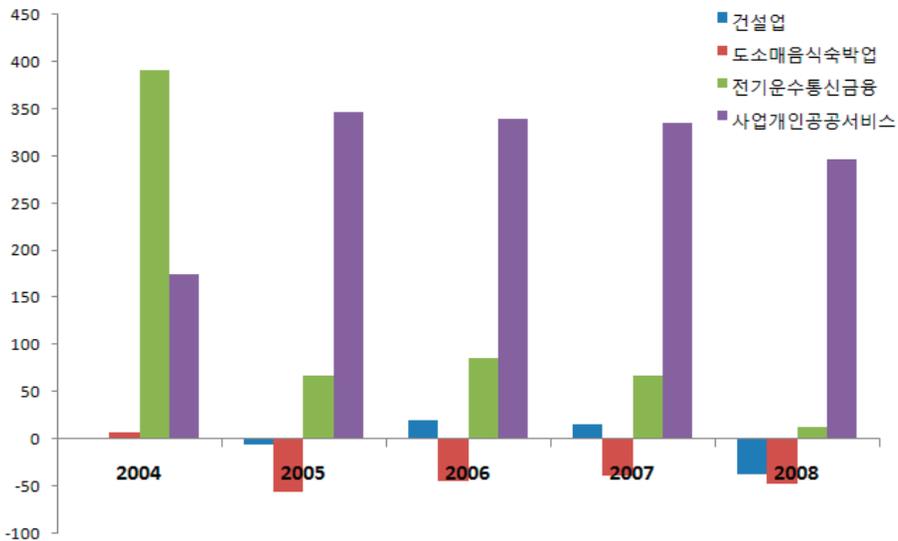
	전체 취업자	농림 어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 음식 숙박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사업·개 인·공공 서비스업	
2004	1.9	-6.4	2.0	2.0	2.9	0.2	0.2	1.2	6.8
2005	1.3	-0.5	-1.3	-1.3	2.2	-0.3	-1.0	2.7	5.6
2006	1.3	-1.7	-1.6	-1.6	2.3	1.1	-0.8	3.9	4.7
2007	1.2	-3.3	-1.1	-1.1	2.3	0.8	-0.6	2.6	4.8
2008	0.6	-2.1	-1.1	-1.3	1.3	-2.0	-0.8	0.5	4.1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지난 2004~2008년 중 서비스업의 주요 부문별 고용 증감 추이를 보면 서비스업 일자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는 연평균 3.5만명(-0.9%)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고용은 연평균 29.9만명(5.3%)로 빠르게 증가하여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운수·통신업의 고용은 연평균 4.7만명(2.0%) 증가하였다.

[그림 II-104] 서비스업 주요 부문별 취업자 증감추이

(천명)



자료: 통계청.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를 보면 전산업에 걸쳐 계속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전산업의 취업계수는 2004년 3.34명에서 2008년 2.88명으로 연평균 3.2% 감소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2004년 2.2명에서 2008년 1.59명으로 연평균 7.8%의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주었고, 농림어업 또한 지난 5년 4.1%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2004년 4.15명에서 지난 2008년 3.9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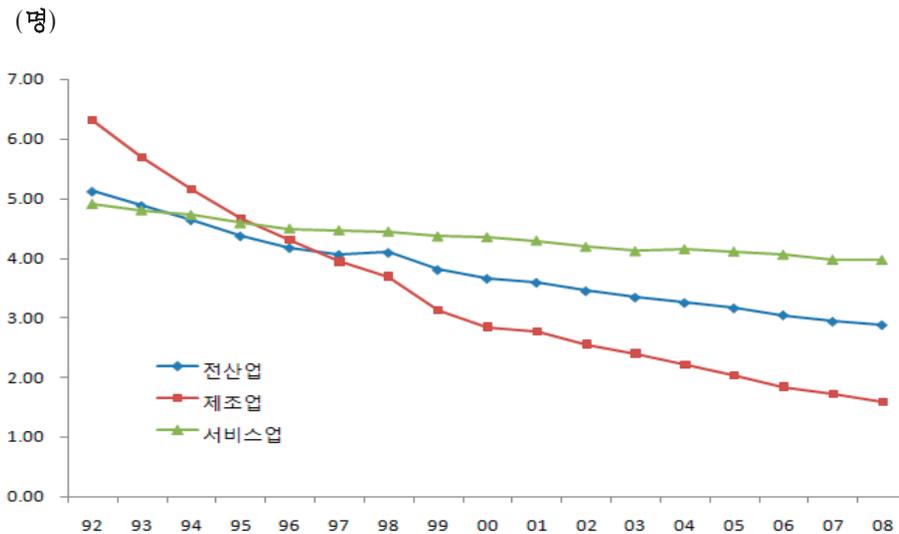
[표 II-78] 산업부문별 취업계수 추이

연도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4	3.25	7.22	0.82	2.20	4.15
2005	3.16	7.13	0.90	2.03	4.12
2006	3.05	7.12	0.93	1.84	4.06
2007	2.94	6.81	0.90	1.71	3.98
2008	2.88	6.57	1.19	1.59	3.98

주: 산업별 취업계수= 산업별 취업자수/ 산업별 실질국내총생산(1억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II-105]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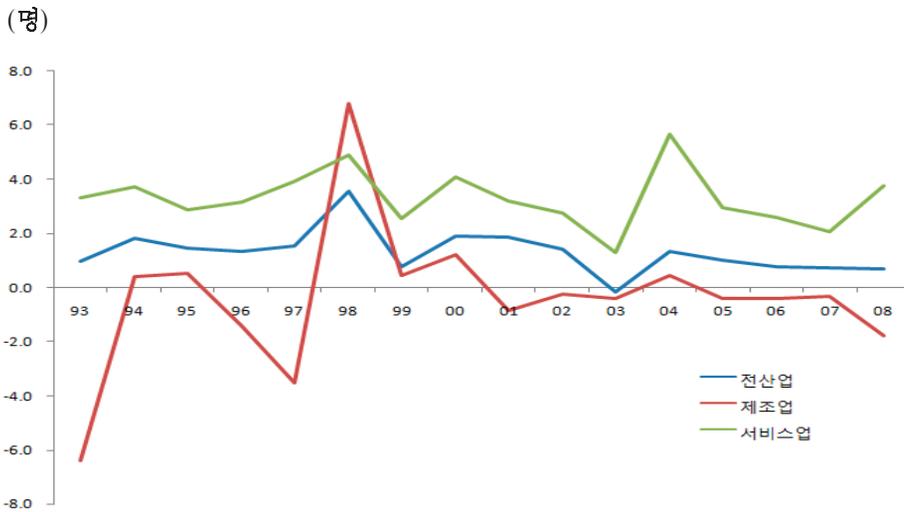
주: 취업계수= 취업자수/ 실질국내총생산(1억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실질GDP 증감에 따른 취업자증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취업의 탄력성도 전 산업의 경우 2000년 1.9명에서 2008년 0.7명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평균 2.5

명에서 1990년대 평균 1.7명으로 32% 감소하더니, 지난 5년 평균 0.9명으로 1990년대에 비해 약 50% 정도 크게 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산업별 취업탄력성을 보면 광업은 -1.4명, 제조업은 평균 -0.5를 기록하여 GDP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지난 5년 평균 취업탄력성은 3.4명이고, 각 부문별 취업탄력성을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전기가스·수도업 등에서 영의 값을 하회하였으며,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 복지 및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비교적 높은 취업탄력성을 보여 주었다.

[그림 II-106] 취업의 탄력성 추이



주: 취업탄력성= 취업자수 증감(명)/국내총생산 증감(1억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나. 중기 고용 전망

향후 5년 중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0.6%(13만 여명)로 이전 5년 연평균 1.3%에 0.7%p(15만 여명) 둔화되고, 실업률은 3.4%로 0.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한 전후 4년의 기간을 보더라도 취업자증가율은 2004~2007년 중 연평균 1.4%(32.4만명)에서 2010~2013년 중 0.9%(20만 여명)으로

0.5%p(11만 여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실업률은 3.7%(상반기 3.8%, 하반기 3.7%), 취업자는 전년대비 13.5만 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도 줄어 실업률은 3.5%, 취업자는 14.5만명(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경기침체기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활동인구로 대거 편입시 실업률이 3.5%대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다. 2011년에도 고용사정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2010년에 이어 2.6%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2010년 9.8%에서 7.5%로 둔화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4%대로 회복되면서 고용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고용 확대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 II-79] 주요 고용 지표 전망

(단위: %, 천명)

	연도별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위기전5년 (04~08)	위기후5년 (09~13)	위기전4년 (04~07)	위기후4년 (10~13)
실업률	3.7	3.5	3.3	3.4	3.3	3.5	3.4	3.5	3.4
취업자	-0.6 (-135)	0.7 (145)	0.8 (170)	0.9 (200)	1.0 (220)	1.3 (288)	0.6 (120)	1.4 (324)	0.9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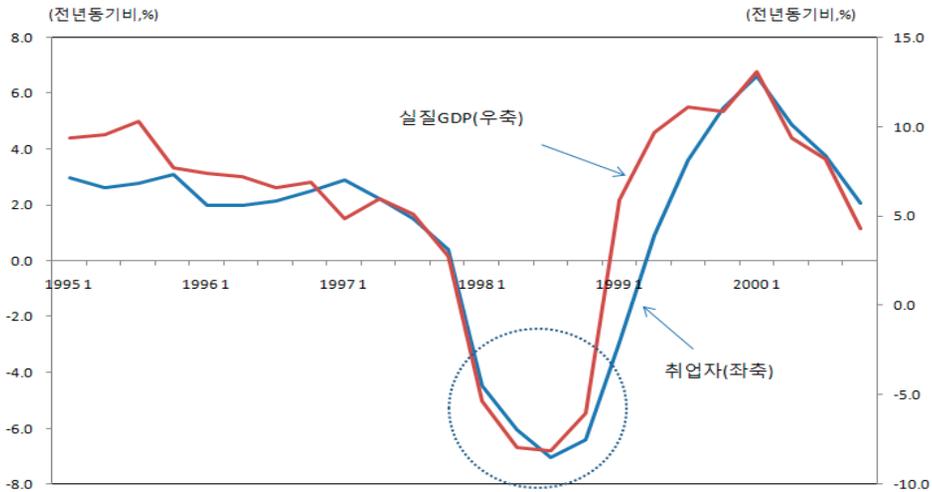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과 성장 혹은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990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 증가율과 취업자증가율의 상관관계는 0.86이

고, 이를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보면 외환위기 이전은 0.92, 이후는 0.80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0년대 들어와서 성장과 고용의 동행성이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랜저 인과검정 결과³⁴⁾를 보면 실질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증가를 그랜저 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증가는 실질국내총생산증가에 1,2분기 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4분기 들어 실질국내총생산이 전년동기대비 -2.2%(전기대비 2.6%)를 기록해 지난 1/4분기(전년동기대비 -4.4%, 전기대비 0.1%)를 저점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고용은 이번 3/4분기나 4/4분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107] 외환위기시 성장과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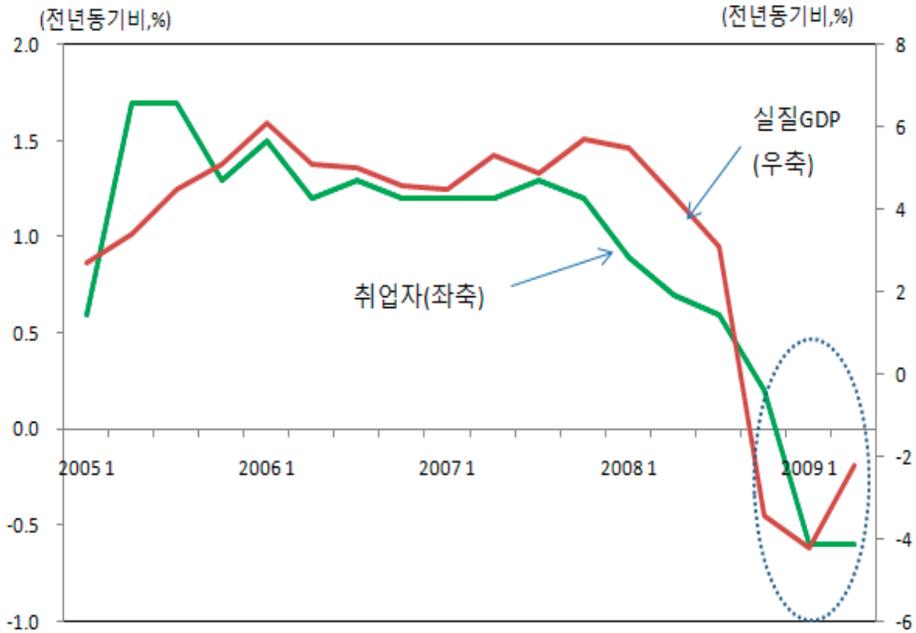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4) 그랜저 인과검정은 아래와 같은 회귀식 (a)와 (b)를 추정하여 귀무가설인 $H_0: \beta_1 = \beta_2 = \dots = \beta_k = 0$ 을 검정하여 현재의 변수값이 과거의 다른 변수값에 의해 설명되는지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k=2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추정하여 F-검정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실질GDP가 고용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 하에서 기각하였으며(p-value=0.006), 반대로 ‘고용이 실질GDP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5% 유의수준하에서 기각할 수 없었다(p-value=0.18).

$$y_t = \alpha_0 + \alpha_1 y_{t-1} + \alpha_2 y_{t-2} + \beta_1 x_{t-1} + \beta_2 x_{t-2} + e_t \quad (a)$$

$x_t = \alpha_0 + \alpha_1 x_{t-1} + \alpha_2 x_{t-2} + \beta_1 x_{t-1} + \beta_2 x_{t-2} + e_t$ (b), 여기서 x 와 y 는 각각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이다.

[그림 II-108] 최근의 성장과 고용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기준 순환일에 따르면 제 8 순환(2002년12월~2005년 4월)의 경기수축기는 내수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1,2차 석유파동과 같은 공급충격에서부터 외환 위기와 같은 금융시장 교란에 의한 수요충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기업과 가계의 노동시장에서의 최적반응 또한 다를 것이다. 신동균·전병유(2005)³⁵⁾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을 통해서 경기변동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정(+)과 부(-)의 수요충격이 임금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 임금이 하방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5) 신동균, 전병유 “이슈분석 :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최적반응 - 임금조정인가 고용조정인가”,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2005)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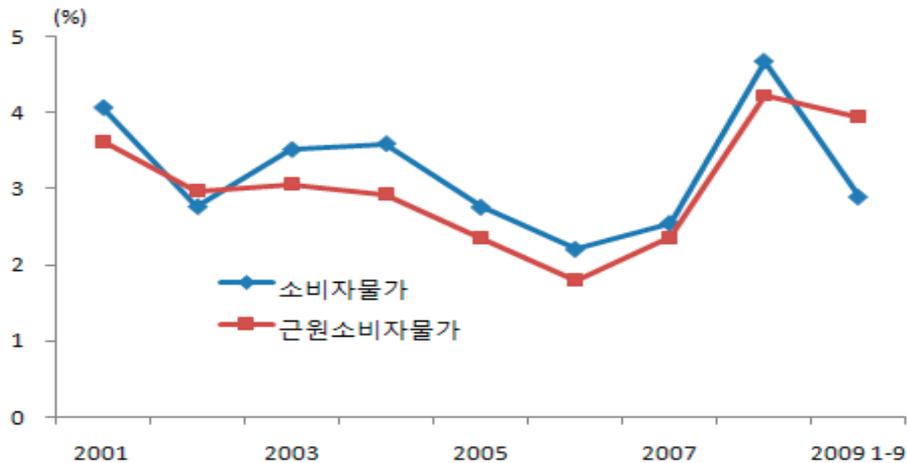
우리나라 고용변동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결과에 의하면³⁶⁾ 최근의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기술적 요인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의 심화보다는 소비, 투자 등 내수위축과 조립가공제품 및 기초소재 등 중간재와 소비재의 대외의존도가 늘어난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켜 국내투자를 활성화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부진한 것은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악화된데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투자부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진한 국내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배려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는 해외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둘째, 고용측면에서 수입대체효과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금융, 사업서비스 등을 포함한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컨텐츠 및 보건의료 서비스업종에 대한 집중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6)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1995년~2006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2008)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표의 수급균형방정식에 기초한 성장요인분해모형을 토대로 동기간 중 우리나라의 고용변동에 대해 국내최종수요(소비, 투자) 및 수출의 증감(최종재, 중간재), 기술변화 그리고 취업계수 변화 등 각 요인들이 기여한 정도를 산업별로 측정, 분석하였다.

5. 물가

소비자물가가 2006년을 저점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2008년에는 연평균 전년 대비 4.7% 급등하였다. 연평균 소비자물가가 4%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 2001년 4.1%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나타난 높은 수준이다. 2009년에는 상승세가 진정 되면서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2.9%를 나타냈으나 근원소비자물가는 3.9%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그림 II-109] 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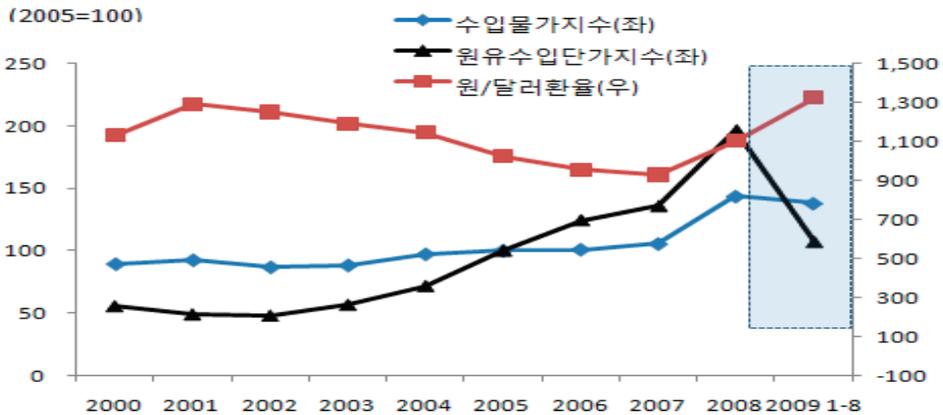


주: 2009년은 1~9월 중 평균 수치임.

자료: 통계청.

이처럼 2008~2009년에 소비자물가가 급등한 것은 국제원유가의 급등에다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중첩되면서 수입물가를 급격히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2008년 중 원유수입 단가는 연평균 44.6%, 원화가치 하락률(원/달러 환율 상승률)은 18.7%에 이르러 양효과로 인해 수입물가상승률이 36.2%를 기록하였다. 다만 2009년 들어서는 원유가격의 반락에 힘입어 수입물가지수가 다소 하락하였다.

[그림 II-110] 수입물가, 원유수입단가,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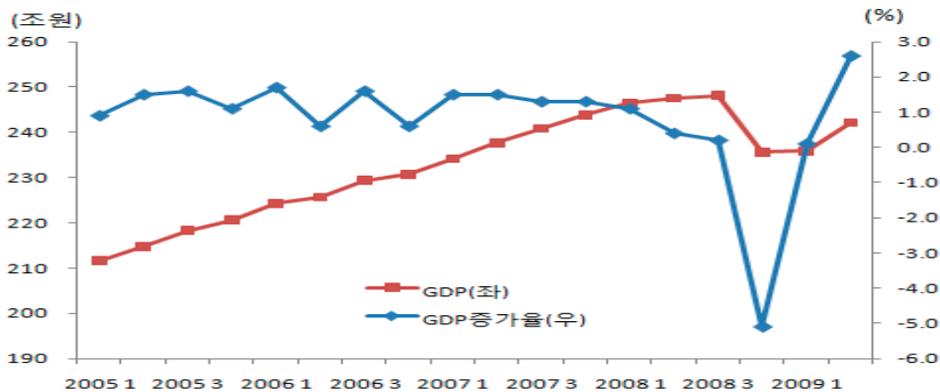


주: 2009년은 1~8월 중 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기에 뒤이어 나타난 극심한 실물경제 침체에 대처하여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자 올해 1/4분기를 저점으로 우리 경제는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GDP가 2008년 4/4분기에 전분기대비 5.1%나 감소하였으나 올해 1/4분기에는 정체를 보이다 2/4분기에는 2.6%나 큰 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GDP가 지난해 3/4분기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림 II-111]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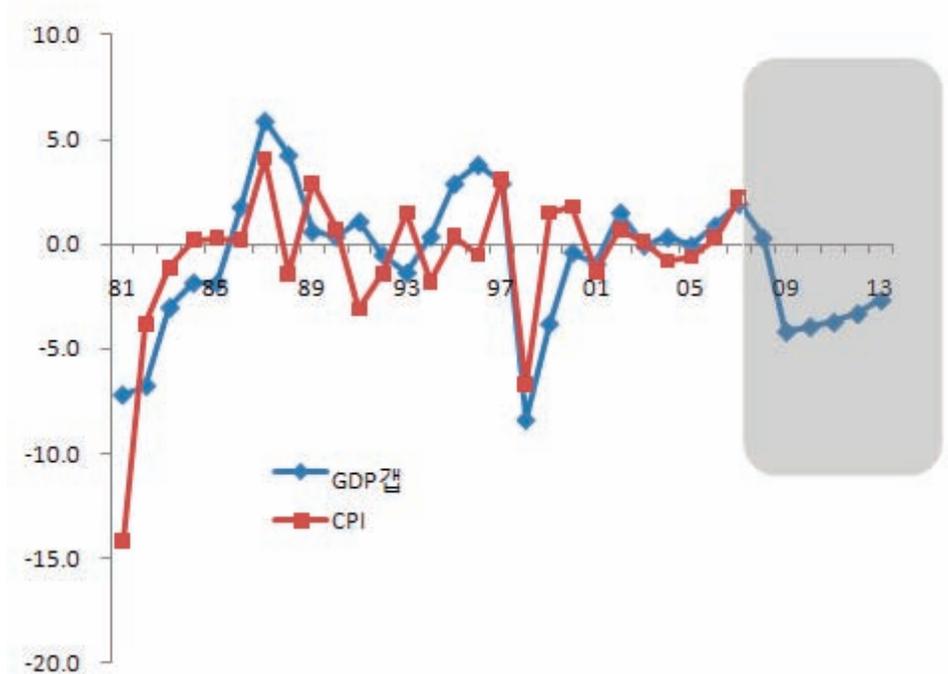


주: GDP는 계절조정치 및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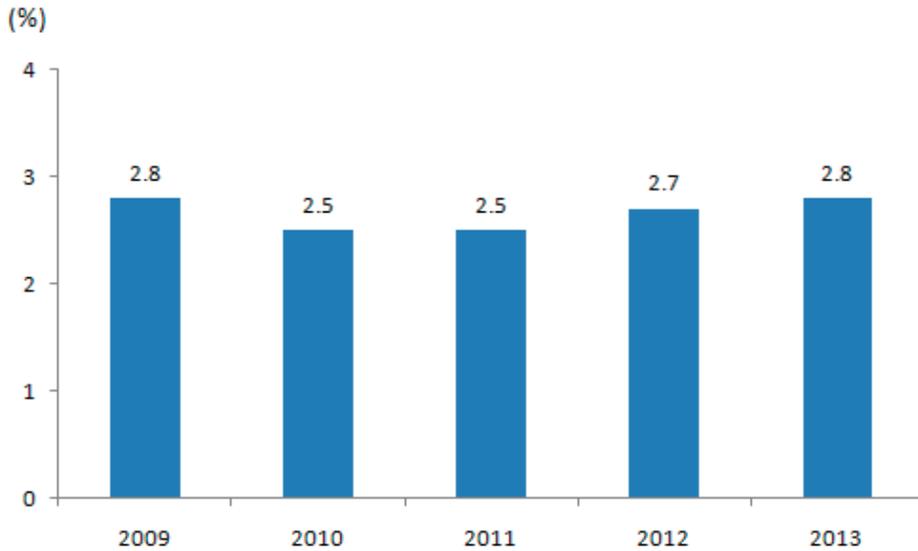
또한 금융위기 이전 정상적 GDP추세에 복귀하기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물가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되는 GDP갭을 추정한 결과 2009~2013년 중에 GDP갭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II-112). GDP갭이 하락하면 물가압력이 약됨에 따라 동행적인 추세를 보이게 되므로 향후 물가상승폭은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물가압력의 하락으로 인해 2010~2011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II-113). 다만 연도별 보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II-112] GDP갭 및 소비자물가 추이



주: GDP갭은 $\log(\text{실질GDP})$ 와 $\log(\text{잠재GDP})$ 의 차로 계산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증가율을 차분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113]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GDP갭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비록 경제적인 충격으로 새로운 성장경로가 기존의 성장경로에 비해 낮아졌다하여도 향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여 GDP갭이 축소된다면 물가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이미 외환위기 이후에 경험한 바 있는데, 1998년 GDP갭이 크게 낮아져 1999년 소비자물가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GDP갭의 감소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상승이 동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 II-80] 외환위기 당시 GDP갭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도	GDP 갭	소비자물가
1998	-8.4	7.5
1999	-3.8	0.8
2000	-0.4	2.3
2001	-0.9	4.1
평균	-3.4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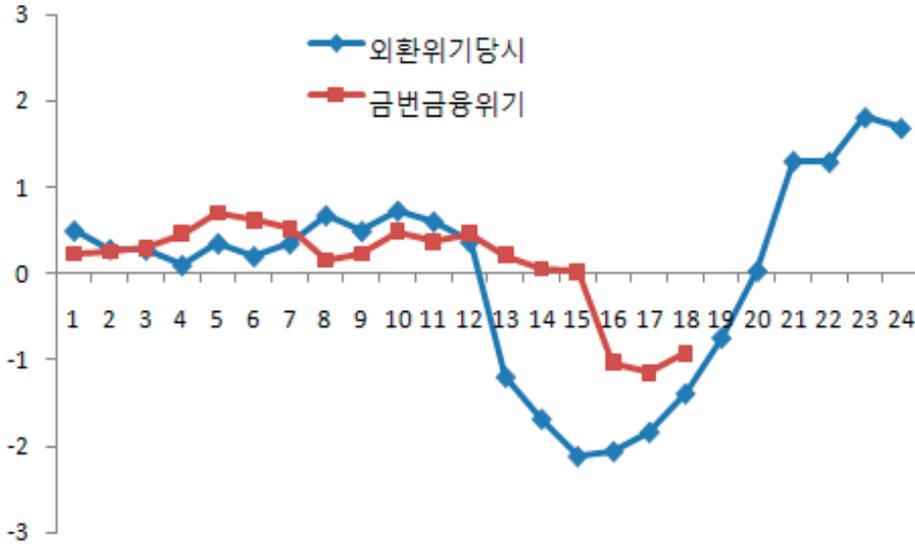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GDP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위기 전후 화폐유통속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97년에 발생했던 외환위기와 금번 금융위기에서 공통점은 결국 금융시장의 충격이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져 화폐유통속도의 급락이 나타난 점이다([그림 II-114]).³⁷⁾ 화폐유통속도는 경기침체 시 하락³⁸⁾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경기가 하락을 멈추고 회복기에 들어서게 되면 통화유통속도가 상승하게 된다. 통화유통속도의 상승은 실물경제 회복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물가를 자극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으로 보면 위기 이후 통화유통속도 순환치의 상승폭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훨씬 커짐을 추측케 한다. 금번 금융위기 시에도 경기침체와 함께 통화당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저금리 및 신용확대정책)에 따라 화폐유통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 화폐유통속도 및 물가압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37) 고전적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유통속도를 교환방정식 “통화량*화폐유통속도=물가*국민총생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38) 교환방정식으로부터 구한 화폐유통속도는 경기침체 시 하락하지만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신축적인 금융정책(통화공급 확대, 정책금리 인하)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하락하는 국면이 있게 된다.

[그림 II-114] 1997년 전후 외환위기와 금번 금융위기 전후 화폐유통속도 순환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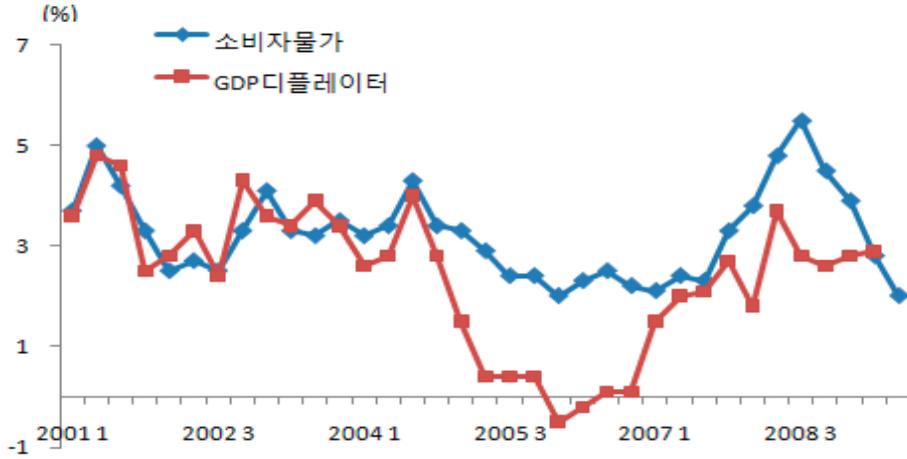
주: 1) 화폐유통속도 순환치는 화폐수량설(화폐유통속도=(소비자물가*실질GDP)/총통화)에 따라 화폐유통속도를 구한 후 이를 HP필터에 의해 계산된 추세치로 공제하여 계산

2) 외환위기 당시는 1995~2000년, 금번 금융위기는 2005~2009년의 분기자료를 첫 분기를 1로 하여 차례로 배열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GDP디플레이터는 전반적인 추세는 소비자물가와 유사하지만 기간별로 보면 소비자물가와 다소 괴리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2005~2006년에는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평균 2.1%p~2.4%p 하회하기도 하였다 ([그림 II-115]). 이와 같은 물가지표 간의 차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성, 수출주력품(전자·자동차·조선 등)과 주수입품(원자재, 중간재)의 차이 등 대외부문의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특히 수출가격변동성보다 수입가격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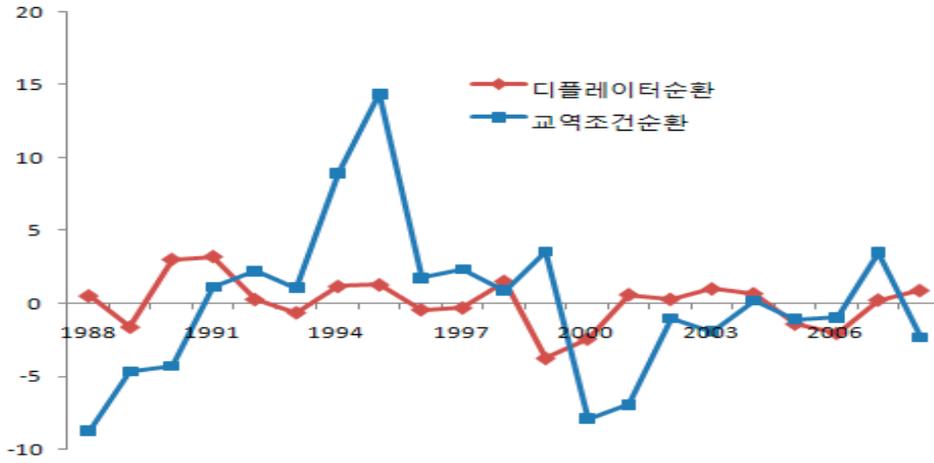
[그림 II-115]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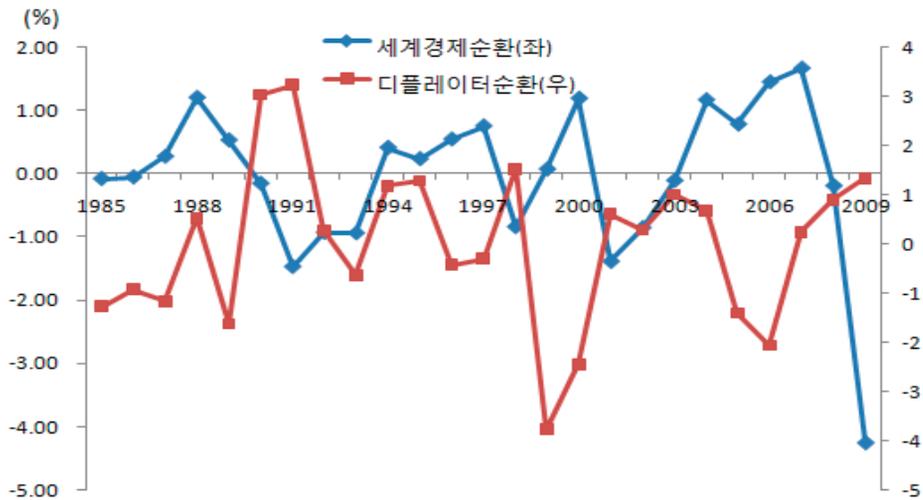
예를 들면 세계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수출가격상승률보다 수입가격상승률이 커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이것이 순수출디플레이터(=수출디플레이터-수입디플레이터)를 하락시킨다. 반대로 세계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수입가격하락률이 수출가격하락률보다 커서 교역조건을 오히려 호전시키며, 이 때문에 순수출디플레이터는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성으로 인해 교역조건 혹은 순수출디플레이터가 GDP디플레이터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교역조건 순환치와 디플레이터순환치는 정관계(세계경제성장률 순환치와 디플레이터 순환치는 역관계)가 나타난다([그림 II-116], [그림 II-117]).

[그림 II-116] 교역조건과 디플레이터의 정관계



주: 순환치는 원자료를 추세치(HP필터링)로 뺀 것.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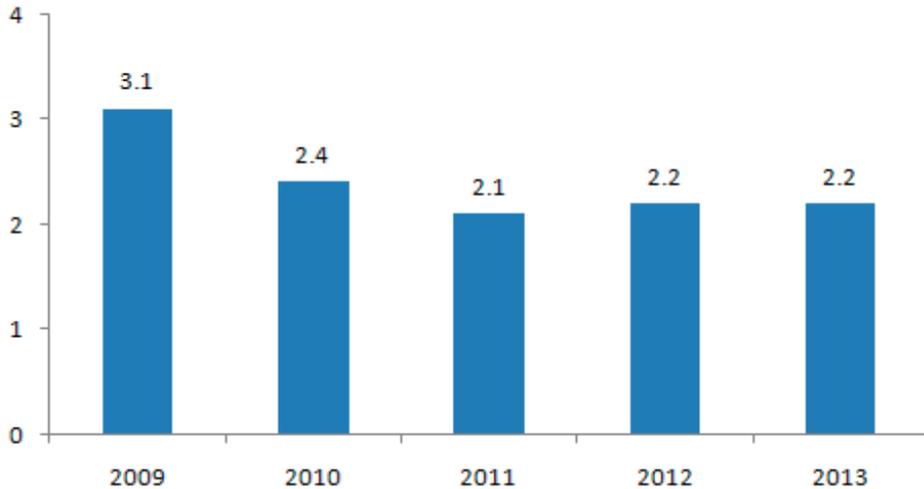
[그림 II-117] 세계경제성장률과 디플레이터의 역관계



주: 순환치는 원자료를 추세치(HP필터링)로 뺀 것.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관계를 감안할 때 2010~2013년 기간 중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2.1%~2.4%로 안정적 추이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2013년 기간 중 세계경제의 회복 및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순수출디플레이터가 세계경제동향과 역의 관계가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다소 하회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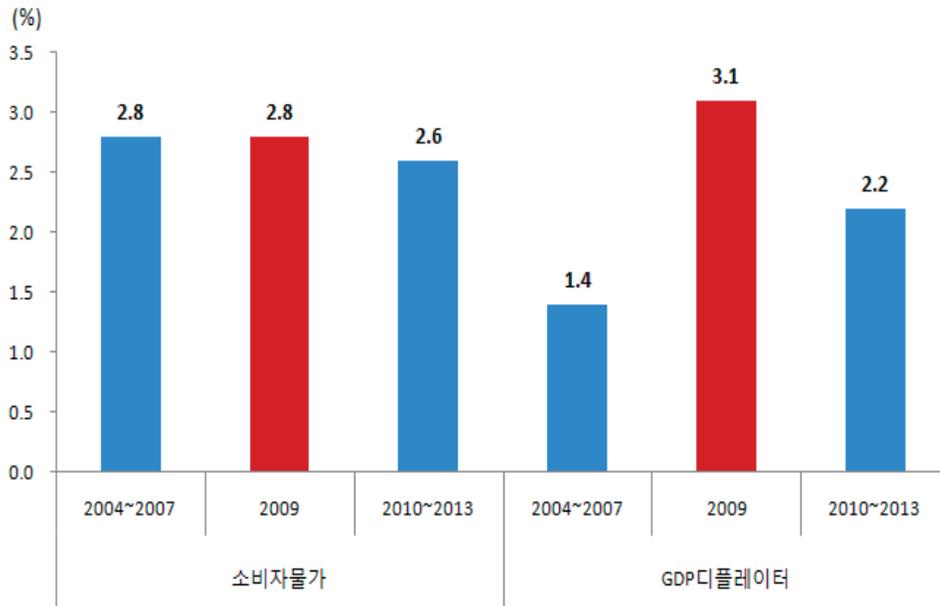
[그림 II-118] GDP디플레이터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직접적인 금융위기의 충격이 발생한 해를 제외한 위기 전 4년(2004~2007)과 향후 4년(2010~2013년)의 연평균상승률을 비교하여 보면, 향후 중기적으로 물가압력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8%에서 2.6%로 소폭 하락하지만 GDP디플레이터는 1.4%에서 2.2%로 위기 전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4~2007년 중에는 교역조건의 악화로 GDP디플레이터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2005~2006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II-119] 소비자물가와 GDP디플레이터의 중기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연 구 진

□ 연구 및 편집 총괄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신후식 (거시경제분석팀장)

□ 집필자

신후식 (거시경제분석팀장/세계경제, 생산구조, 경기)

유승선 (거시경제분석팀 경제분석관/건설투자, 물가)

연훈수 (거시경제분석팀 경제분석관/수출·입, 경상수지, 모형작성·전망)

황종률 (거시경제분석팀 경제분석관/민간소비, 설비투자, 고용, 잠재성장률)

□ 연구지원

강숙자 (거시경제분석팀)

김두연 (거시경제분석팀)

이장욱 (거시경제분석팀)

NABO 중기 경제전망

발 간 일 2009년 10월 30일
편 집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Tel 02·313·7593)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 (Tel 02·788·37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50-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